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시민권과 참여 -총괄보고서

김기헌 · 장근영 · 신인철 · 임성근



보고서 표지 디자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보고서 디자인 콘테스트』의 당선 작품을 카카오톡 이모티콘 작가(작가명 모지)로 활동하고 있는 직원이 실사한 것입니다.

*당선작 프롬프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청소년, 청소년들을 지지하는 어른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문화, 기후변화, 인공지능, 미디어, 권리”

AI 디자인_ 곽진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행정원)

실사 디자인_ 변지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인턴)

협동연구총서 23-87-01

연구보고23-일반04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Ⅲ: 시민권과 참여-총괄보고서

저 자 김기현, 장근영, 신인철, 임성근

연구진 연구책임자_김기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장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신인철(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_임성근(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연구보조원_조양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시민권과 참여”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23-87-0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시민권과 참여-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3-87-02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시민권과 참여-심층분석 보고서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김기현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자)	장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양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협력 연구 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신인철 교수 (공동연구원)	-
협력 연구 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임성근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보고서를 펴내며

우리나라 청년들은 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을 하고 부모로부터 독립해 분가를 하는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인기 이행이 원활하지 않게 바뀐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청년 고용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시작되었다.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와 2020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청년 문제는 일자리에서 삶 전반의 위기로 확대되었다.

청년들은 졸업 유예와 휴학으로 졸업을 늦추고 있으며 취업하는데 1년 가까이 소모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소득과 자산은 줄고 부채가 늘어나고 있으며 부모로부터 독립해 살아가는 경향은 줄고 있다. 성인기 이행이 늦어지고 청년 내부의 이질성이 커지면서 성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혼선이 커지고 있다.

이 연구는 3년(2021-2023년)에 걸쳐 연속과제로 이루어졌으며 청년이 생각하는 성인 기준에 따라 일자리, 자립 그리고 시민권과 참여라는 주제별로 사회 첫 출발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정책 방향과 과제가 청년의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강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연구요약

■ 연구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시민권과 참여에 초점을 맞추어 청년들의 사회 첫 출발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있음. 이 연구는 3년간(2021-2023)의 연구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세 차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청년들의 사회 첫 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음

■ 연구내용

- 청년들의 시민권과 참여, 권한강화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청년 사회 첫 출발과 시민권·참여에 대한 개념 정립, 실태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한 실태분석
- 청년 시민권과 참여에 대한 심층 분석
 - 언론기사(2013-2022) 청년정책 및 참여 분석, 세계가치조사(WVS) 100개 국가 청년 사회 및 정치 참여 군집분석, 여가권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석
- 청년들의 시민권과 참여에 대한 국내외 정책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청년 시민권과 참여 정책 추진 방향과 정책 과제 도출

■ 연구방법

- 청년 시민권과 참여, 관련 정책과 세부사업 문헌 분석
- 청년 사회 첫 출발실태조사(2,074명, 층화다단계집락표본추출, 제곱근비례배분)
- 세계가치조사 군집분석, 국내 뉴스 키워드 워드 클라우드 및 토픽모델링 분석
- 청년 심층면접(20명, 학생·취업·혼인여부 등 고려 대상 선정)
- 기타(자문회의 3회, 정책연구실무협의회 2회, 심층분석 콜로키움 1회 등)

■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

-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 결과
 - 성인 이행기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증가하고 경제적 자립 중시
 -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인권 기구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인권교육 참여 부족
 - 청년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 늘고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체계 부족
 - 자가 소유 못한다는 의견 증가, 80% 이상 “집값 걱정하지 않다”, 정신건강 악화
 - 사회·정치 참여 부족하고 정치효능감 약화, 청년 정책 인지도 및 참여율 낮음
- 청년 심층면접
 - 경제적 독립을 어려운 과제로 인식, 성인 기준으로 심리적 독립과 책임감 강조
 - 공교육의 시민교육은 내실이 없고 사회참여와 교류 통한 시민성 강화 강조
 - 어떤 일인가에 따라 차별 경험 차이, 보수와 워라밸 보장이 제일 중요
 - 수도권은 주거공간과 비용이, 비수도권은 일자리·교육 기회 부족과 교통문제 지적
 - 경제적 부담으로 적극적 사회 참여 기피, 청년정책 홍보와 접근성 강화 필요
- 2차 분석
 - 뉴스 키워드 분석에서 청년정책 논의 급증, 2014년 이후 청년 참여 이슈 부상
 - 뉴스 키워드 분석에서 지자체 논의 확대, 저출생과 수도권 인구 집중문제 부상
 - 국제비교분석에서 사회 및 참여 중간 수준, 공식적이고 공적인 참여 확대 필요
 - 여가권 심층면접에서 여가활동 비용 부담, 문화생활 수도권 편중 지적
- 국내 법·제도 및 정책분석
 - 청년기본법 청년정책 참여 선언적 규정, 참여기구 법적 근거 부재
 - 부처별로 독자적 참여기구 운영, 총괄조정기구와 참여기구간 연계 미흡
 - 정책 전달체계 미비, 중앙-지자체 느슨한 연계 수준, 국회 청년 참여 제도 부재
 - 광역-기초 지자체 연계 부재, 지자체 청년센터 기능 제각각, 종사자 처우 열악
- 해외 사례 분석
 - 국제기구 참여·권리 최우선 고려, 주요국 청년센터 참여·권리 공론장 역할 수행

핵심 정책제언

- 이 연구는 3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3년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년 사회 첫 출발에 대한 정책방향 및 과제(안)를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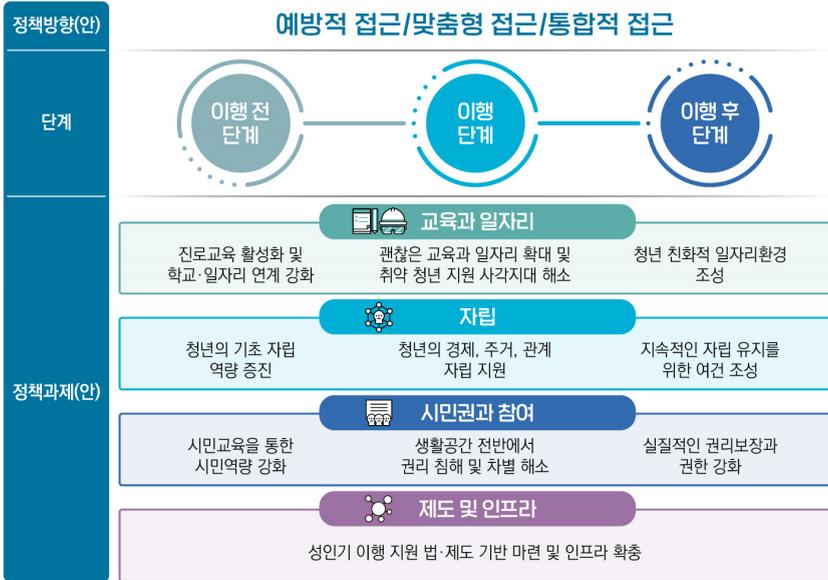


그림 II. 청년의 사회 첫 출발 정책방향과 과제(안)

- 정책방향으로는 예방적 접근, 맞춤형 접근, 통합적 접근 등 세 가지를 제안함
- 성인이 이행과 관련 세 가지 단계(이행 전 단계-이행 단계-이행 후 단계)별로 3년간의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기반이 되는 제도 및 인프라에 대한 정책과제를 추가적으로 제시함
- 3차 연도 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정책 추진 로드맵을 제안하였고 1-2차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 추진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함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Ⅲ: 시민권과 참여- 총괄보고서

협동연구총서 23-87-01
연구보고23-일반04

Ⅰ.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 2. 연구추진체계 5
- 3. 연구내용 7
- 4. 연구방법 8

Ⅱ. 연구배경

- 1. 청년 사회 첫 출발과 시민권에 대한 논의 15
- 2. 청년 참여 및 권한 강화에 대한 논의 19

Ⅲ. 우리나라 청년 시민권 및 참여 실태와 특징

- 1. 청년 시민권 및 참여 실태조사 설계 25
- 2. 실태조사 결과 33
- 3. 요약 및 시사점 136

IV. 우리나라 청년의 목소리: 심층면접

- 1. 청년 심층면접 개요 141
- 2. 심층면접 분석 결과 143
- 3. 요약 및 시사점 162

V. 우리나라 청년 시민권 및 참여 정책 현황 및 문제점

- 1. 청년 시민권 및 참여 관련 법률 현황과 문제점 167
- 2. 청년 시민권 및 참여 정책 현황과 문제점 174
- 3. 청년정책 추진체계의 청년 참여 현황과 개선점 182
- 4. 해외 청년 시민권 및 참여 정책 현황과 시사점 199
- 5. 요약 및 시사점 208

VI. 정책제언

- 1. 청년 시민권과 참여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과정 213
- 2. 청년 시민권 및 참여 정책 방향과 정책과제(안) 220
- 3. 청년 사회 첫 출발 정책추진 로드맵 및 정책방안 종합
..... 252

참고문헌 259

부 록

- 1. 설문지 269
- 2. 심층면담 가이드라인 319

Abstract 327

표 목차

표 I-1. 2023년 청년 삶 실태조사 주요 내용	9
표 I-2. 전문가 자문	10
표 I-3. 청년 참여와 권리 관련 심층면접 내용	11
표 I-4.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주요 계획	12
표 I-5. 청년 참여와 권리 관련 연구논문 콜로키움 주요 계획	12
표 II-1. 사회적 시민권의 주요 내용	17
표 III-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 시도별 표본 집계구 수	26
표 III-2.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 세부 층별 표본 집계구 현황	27
표 III-3.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 분석 문항	28
표 III-4. 교육 부문 청년 권리 침해 관련 신규 문항	30
표 III-5. 청년 사회·정치 참여 관련 신규 문항	31
표 III-6. 청년 참여정책 관련 문항	32
표 III-7.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 조사 대상 인구통계학적 특성 (19-34세)	34
표 III-8. 청년기에 대한 정의 - (1) 가능성이 많은 시기	37
표 III-9. 청년기에 대한 정의 - (2) 탐색하고 탐험하는 시기	38
표 III-10. 청년기에 대한 정의 - (3)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	39
표 III-11. 청년기에 대한 정의 - (4) 압박을 많이 받는 시기	40
표 III-12. 청년기에 대한 정의 - (5) 나를 정의하고 규정하는 시기	41
표 III-13. 청년기에 대한 정의 - (6)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결정하는 시기	42
표 III-14. 청년기에 대한 정의 - (7) 한편으로는 성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시기	43
표 III-15. 청년기에 대한 정의 - (8) 조금씩 성인이 되어가는 시기	44
표 III-16. 성인으로서 첫 출발의 상징 - (1) 부모나 타인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	47
표 III-17. 성인으로서 첫 출발의 상징 - (2) 부모(보호자)와 함께 살지 않는 것	48
표 III-18. 성인으로서 첫 출발의 상징 - (3) 학교교육을 마치는 것	49

표 III-19. 성인으로서 첫 출발의 상징 - (4) 결혼을 하는 것	50
표 III-20. 성인으로서 첫 출발의 상징 - (5) 최소한 한 명의 자녀를 두는 것	51
표 III-21. 성인으로서 첫 출발의 상징 - (6) 장기적으로 하게 될 일을 시작하는 것	52
표 III-22. 성인으로서 첫 출발의 상징 - (7) 주택 구입	53
표 III-23. 성인으로서 첫 출발의 상징 - (8)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	54
표 III-24. 성인으로서 첫 출발의 상징 - (9) 음주가 허용되는 것	55
표 III-25. 성인으로서 첫 출발의 상징 - (10) 선거에 참여하는 것	56
표 III-26.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58
표 III-27.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인권 존중받는 정도 - (1) 가정 · 60	
표 III-28.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인권 존중받는 정도 - (2) 학교 · 61	
표 III-29.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인권 존중받는 정도 - (3) 직장 · 62	
표 III-30.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인권 존중받는 정도 - (4) 우리나라 전체	63
표 III-31.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인권 존중받는 정도 - (5)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공간	64
표 III-32. 지난 1년간 차별받은 빈도 - (1)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66
표 III-33. 지난 1년간 차별받은 빈도 - (2)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67
표 III-34. 지난 1년간 차별받은 빈도 - (3) 외모나 신체조건 (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68
표 III-35. 지난 1년간 차별받은 빈도 - (4)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69
표 III-36. 지난 1년간 차별받은 빈도 - (5)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70
표 III-37. 지난 1년간 차별받은 빈도 - (6) 고향이나 사는 지역에 차별을 당했다	71
표 III-38. 지난 1년간 차별받은 빈도 -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72
표 III-39. 가장 최근에 진학한 대학에 대해 아는 부분 - (1) 학생선발 과정에서 차별적인 운영이 이루어졌다	74
표 III-40. 가장 최근에 진학한 대학에 대해 아는 부분 - (2) 학교에 범죄나 (성)폭력 신고기구(대학 인권센터 등)가 있었다	75

표 III-41. 가장 최근에 진학한 대학에 대해 아는 부분 - (3) 학교에서 정치단체 참여(정당가입 및 활동 등)를 제한하였다	76
표 III-42. 가장 최근에 진학한 대학에 대해 아는 부분 - (4) 학생자치 기구에 대한 학교당국의 제한이나 간섭이 이루어졌다	77
표 III-43. 가장 최근에 진학한 대학에 대해 아는 부분 - (5) 대학 내 의사결정 기구에 학생이 참여하였다	78
표 III-44. 가장 최근에 진학한 대학에 대해 아는 부분 - (6) 학교에 인권교육 관련 과목이 개설되었다	79
표 III-45. 가장 최근에 진학한 대학 학교에 대해 경험한 부분 - (1) 나는 수강과목 신청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하였다	81
표 III-46. 가장 최근에 진학한 대학 학교에 대해 경험한 부분 - (2) 나는 수업시간에 차별을 경험하였다	82
표 III-47. 가장 최근에 진학한 대학 학교에 대해 경험한 부분 - (3) 나는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받았다	83
표 III-48. 가장 최근에 진학한 대학 학교에 대해 경험한 부분 - (4) 나는 집회나 항의 표시(대자보 등)에 제한을 받았다	84
표 III-49. 가장 최근에 진학한 대학에 대해 경험한 부분 - (5) 나는 학교의 의사결정 참여에 제한을 받았다	85
표 III-50. 대학 미진학 사유	87
표 III-51. 한달 본인 생활비(용돈) 및 부모,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	89
표 III-52. 지난 1년간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 여부	90
표 III-53. 갚아야 할 채무 여부	91
표 III-54. 채무 발생 사유	92
표 III-55. 채무 발생 기관	93
표 III-56. 물질적 박탈 경험 여부(있다 비율만)	94
표 III-57. 현재 일자리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있다 비율만)	95
표 III-58. 현재 일자리에서의 경험 - 산업재해보험 급여(병원비, 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 보상금 등)를 받은 적이 있다	96
표 III-59.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여부	97
표 III-60. 직장내 노동자관련 조직·제도 설치여부 - (1) 노동조합	98
표 III-61. 직장내 노동자관련 조직·제도 설치여부 - (2) 노사협의회	99
표 III-62. 직장내 노동자관련 조직·제도 설치여부 - (3) 업무 관련 제안제도	100
표 III-63. 직장내 노동자관련 조직·제도 설치여부 - (4) 조직적응 프로그램	101
표 III-64. 자가 소유에 대한 생각	104

표 III-65. 현재 집값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생각	105
표 III-66. 주관적인 신체건강에 대한 인식	106
표 III-67. 규칙적인 운동 여부	107
표 III-68. 사회·정치 문제에 대한 의견 표명 행동 참여 여부 - (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109
표 III-69. 사회·정치 문제에 대한 의견 표명 행동 참여 여부 - (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बै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	110
표 III-70. 사회·정치 문제에 대한 의견 표명 행동 참여 여부 - (3) (온·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111
표 III-71. 사회·정치 문제에 대한 의견 표명 행동 참여 여부 - (4) 상품 불매 운동하기	112
표 III-72. 사회·정치 문제에 대한 의견 표명 행동 참여 여부 - (5)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113
표 III-73. 사회·정치 문제에 대한 의견 표명 행동 참여 여부 - (6) 항의 전화하기	114
표 III-74. 정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이유	116
표 III-75. 지난 대통령 선거 참여여부	118
표 III-76. 투표 관련 정치적 활동 참여 여부 - (1) 투표 참여	120
표 III-77. 투표 관련 정치적 활동 참여 여부 - (2) 투표하기 전 후보자에 대한 정보 수집	121
표 III-78. 가치 항목별 선호도 - 일 중시 VS 여가 중시	122
표 III-79. 지난 1년간 단체(모임) 참여 빈도 - (1) 여가활동(취미 및 스포츠) 모임	124
표 III-80. 지난 1년간 단체(모임) 참여 빈도 - (2) 친목 및 친교 (동창, 향우회 등) 모임	125
표 III-81. 지난 1년간 단체(모임) 참여 빈도 - (3) 자기계발 모임 및 그룹 스터디	126
표 III-82. 지난 1년간 단체(모임) 참여 빈도 - (4) 종교모임	127
표 III-83. 지난 1년간 단체(모임) 참여 빈도 - (5) 시민사회 단체 (NGO, NPO 등)	128
표 III-84. 지난 1년간 단체(모임) 참여 빈도 - (6) 지역사회 모임 (반상회, 주민협회 등)	129
표 III-85. 지난 1년간 단체(모임) 참여 빈도 - (7) 학술단체	130
표 III-86. 지난 1년간 단체(모임) 참여 빈도 - (8) 정당 및 정치단체	131
표 III-87. 지난 1년간 단체(모임) 참여 빈도 - (9) 노동조합	132

표 III-88. 청년 자율예산제(참여예산제) 인지 여부 및 참여 경험	134
표 IV-1. 청년 권리와 참여 심층면접조사 표본 구성	142
표 IV-2. 청년 권리와 참여 심층면접조사 주요내용	142
표 IV-3. 성인기 진입의 기준	145
표 IV-4. 청년들의 시민권 인식 요약	147
표 V-1. 청년기본법의 시민권과 참여 관련 조항	168
표 V-2. 청년기본법 개정법률(안) 중 시민권과 참여 관련 조항	170
표 V-3.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정무위원장 대안 중 시민권과 참여 관련 조항	171
표 V-4. 청년 관련 법률 제정안 중 시민권과 참여 관련 조항	173
표 V-5. 2023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참여 및 권리 분야 과제	178
표 V-6. 2023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참여 및 권리 분야 과제 (광역시)	180
표 V-7. 2023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참여 및 권리 분야 과제(도)	181
표 V-8.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기능	187
표 V-9. 중앙정부 청년정책 전담조직과 중간지원조직 현황	189
표 V-10.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전담조직과 중간지원조직 현황	190
표 V-11. 지방자치단체 참여/소통기구 현황	191
표 V-12. 청년지원센터의 기능	194
표 V-13. 청년지원센터 지정기준	194
표 V-14. 국제연합(UN)의 청년 계획보고서(blue paper)의 참여·권리 관련 정책 목표와 정책 방향	199
표 V-15. 유럽연합(EU)의 청년 계획보고서(blue paper)의 참여·권리 관련 정책 목표와 정책 방향	200
표 V-16. 유럽연합(EU)의 계획보고서(blue paper)의 참여·권리영역 정책 내용	201
표 V-17. 유럽연합의 청년 참여·권리 정책사업 현황	203
표 V-18. 미국의 젊은이(아동·청소년·청년) 참여·권리 정책사업 현황	204
표 V-19. 프랑스의 젊은이(아동·청소년·청년) 관련 센터별 참여·권리 프로그램	206
표 V-20. 핀란드의 젊은이(아동·청소년·청년) 관련 참여·권리 프로그램 현황	207
표 VI-1. 교육부 학생 차별 해소 및 인권교육 관련 예산 현황 (2022-2023년)	225

표 VI-2.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 - 학생 자치활동 구체화	228
표 VI-3. 중앙부처 시민교육 관련 예산 현황(2022-2023년)	229
표 VI-4.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의 차별 해소 관련 예산 현황 (2022-2023년)	232
표 VI-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 청년 친화강소기업 인증 · 235	
표 VI-6.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의 직장문화 개선 관련 예산 현황 (2022-2023년)	236
표 VI-7. 국토교통부의 청년 주거 관련 예산 현황(2022-2023년) · 240	
표 VI-8.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 장애 청년 등 취약 청년 정의 규정 마련	242
표 VI-9.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 건강 관련 예산 현황 (2022-2023년)	243
표 VI-10. 청년기본법 개정(안) - 청년참여기구 규정 신설	245
표 VI-11. 국무조정실 청년 참여기구 관련 예산 현황(2022-2023년)	246
표 VI-12. 국무조정실 청년 정책 참여 관련 예산 현황(2022-2023년)	248
표 VI-13. 국회에 제출된 청년 관련 법률 제정안	249
표 VI-14. 국무조정실 청년 법률 관련 예산 현황(2022-2023년) ...	250
표 VI-15.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전달체계 관련 예산 현황 (2022-2023년)	252
표 VI-16. 3차 연도(2023년) 청년 사회 첫출발 시민권과 참여 과제(안) 로드맵	254
표 VI-17. 1차 연도(2021년) 사회 첫 출발 일자리 제안 정책과제(안) 및 추진현황	255
표 VI-18. 2차 연도(2022년) 청년 사회 첫 출발 자립 제안 정책과제 (안) 및 추진현황	256

그림 목차

그림 Ⅰ-1. 청년들이 생각하는 사회 첫 출발 응답 결과	3
그림 Ⅰ-2. 청년 사회 첫 출발 연구의 연도별 분석 대상	4
그림 Ⅰ-3. 연도별 연구추진계획	5
그림 Ⅰ-4. 연구추진체계	6
그림 Ⅲ-1. 청년(19-34세)이 생각하는 청년의 시기	35
그림 Ⅲ-2. 청년(19-24세)이 생각하는 청년기에 대한 정의 비교 (2011/2023)	36
그림 Ⅲ-3. 청년(19-34세)이 생각하는 중요한 성인의 기준(2023)	45
그림 Ⅲ-4. 청년(19-24세)이 생각하는 중요한 성인의 기준 응답결과 비교(2011/2023)	46
그림 Ⅲ-5. 청년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의 조건	57
그림 Ⅲ-6. 청년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의 조건 주요 응답 연도별 추이	57
그림 Ⅲ-7. 청년이 생각하는 인권을 존중받는 정도	59
그림 Ⅲ-8. 청년이 차별을 받은 경험	65
그림 Ⅲ-9. 대학에서의 권리 침해	73
그림 Ⅲ-10. 대학에서의 차별 경험	80
그림 Ⅲ-11. 고등학교에서 차별 침해 및 인권교육 경험 비율	86
그림 Ⅲ-12. 대학 미진학 사유	86
그림 Ⅲ-13. 부모나 친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청년 비율 및 전체 생활비 중 비중	88
그림 Ⅲ-14. 현재 직장내 괴롭힘 상담 또는 고충처리절차 응답 비율	97
그림 Ⅲ-15. 니트(NEET)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102
그림 Ⅲ-16. 자가 소유 필수 및 자가 소유 못한다는 청년 응답 비율에 대한 연도별 비교	103
그림 Ⅲ-17. 집값이 걱정하지 않다는 청년 응답 비율에 대한 연도별 비교	104
그림 Ⅲ-18. 청년의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 응답 추이(점)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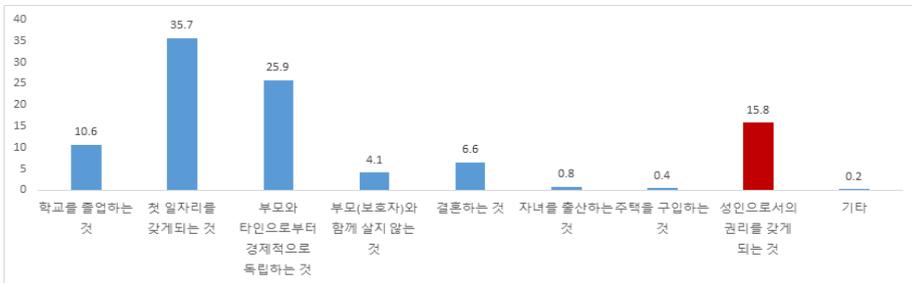
그림 Ⅲ-19. 청년의 사회, 정치 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 참여 방법	109
그림 Ⅲ-20. 청년의 정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주된 이유	115
그림 Ⅲ-21. 청년의 정치효능감 연도별 추세	117
그림 Ⅲ-22. 청년의 투표 참여 및 정보수집에 대한 의견	119
그림 Ⅲ-23. 청년의 일-여가 중시 비중 연도별 추세	122
그림 Ⅲ-24. 청년의 단체 및 여가활동 참여 비율	123
그림 Ⅲ-25. 청년 자율예산제(참여예산제) 인지율 및 참여율	133
그림 Ⅲ-26. 청년정책 및 참여정책 참여비율	135
그림 Ⅳ-1. 시민권 인식과 성인기 진입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	144
그림 Ⅳ-2. 시민권 교육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	151
그림 Ⅳ-3. 경제 및 고용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	153
그림 Ⅳ-4. 주거 영역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	156
그림 Ⅳ-5. 청년 참여정책 관련 청년 의견의 워드 클라우드	159
그림 Ⅴ-1.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청년과제	174
그림 Ⅴ-2. 중앙정부 청년정책보좌역 및 2030자문단 개요	175
그림 Ⅴ-3. 2023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분야별 과제 및 예산 비중	176
그림 Ⅴ-4. 2023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참여/권리분야 과제 및 예산 비중	177
그림 Ⅴ-5. 2023년 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분야별 과제 비중	179
그림 Ⅴ-6. 2023년 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분야별 예산 비중	179
그림 Ⅴ-7. 청년정책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185
그림 Ⅴ-8. 중앙정부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념도	186
그림 Ⅴ-9. 청년DB 홈페이지와 업무망 이미지	192
그림 Ⅴ-10.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이미지	193
그림 Ⅵ-1.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정책적 시사점	214
그림 Ⅵ-2. 청년 심층면접 결과 정책적 시사점	216
그림 Ⅵ-3. 청년 2차분석 결과 정책적 시사점	217
그림 Ⅵ-4. 청년 관련 법률 및 정책 현황 및 문제점	218
그림 Ⅵ-5. 청년 관련 해외사례 시사점	219
그림 Ⅵ-6. 청년의 시민권과 참여 정책방향과 과제(안)	221
그림 Ⅵ-7. 현장실습생 피해 구제 및 상담지원 체계	223
그림 Ⅵ-8. 청년 월세지원 사업 예산 추이(2022-2024)	239
그림 Ⅵ-9. 청년의 사회 첫 출발 정책방향과 과제(안)	253

○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추진체계
- 3. 연구내용
- 4. 연구방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청년들은 사회에서 처음으로 출발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2021년에 실시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들은 사회 첫 출발로 첫 일자리를 뽑았다.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을 보여준 것은 경제적으로 독립으로 4명 중 1명이 응답을 하였다. 세 번째로 응답률이 높았던 것은 성인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15.8%가 응답을 하였다.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원자료. 「청년기본법」의 청년 연령을 고려해 19-34세 결과를 제시하였음. 18-34세 중 18세를 제외하고 표본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분석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1,940명임.

그림 1-1. 청년들이 생각하는 사회 첫 출발 응답 결과(%)

당사자들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갖는 것을 사회 첫 출발로 보고 있듯이 최근 성인이 행기에 대한 연구에서도 시민 참여(civic engagement)나 시민으로서의 권한 강화(empowerment)를 강조하고 있다. 학교-일자리 이행과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성인기 이행에서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권리 역시 핵심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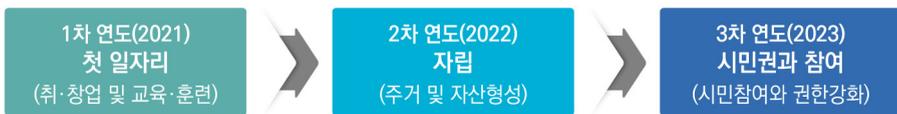
1) 이 장은 김기현 선임연구원이 작성하였음.

제시되고 있다(Wray-Lake, Arruda & Schulenberg, 2020).

이러한 주장은 성인기 이행과정의 양상이 최근 달라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첫 번째 성인기 이행과정의 변화는 학교 졸업, 취업, 자립, 결혼, 출산 등 중요한 전환 사건들이 점차 지연되어 과거보다 늦은 나이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성인기 이행이 지연되면서 의무와 권리 간의 괴리가 커졌고 10대뿐만 아니라 20대 조차도 성인이면 갖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

두 번째 변화는 중요한 전환 사건들 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세기 초 산업화시기에는 학교를 졸업하고 도시로 이동해 분가한 뒤 취업을 하고 주변에서 반려자를 만나 결혼하고 자녀를 갖는 과정이 촘촘하게 이루어졌다. 반면, 현대 사회에서는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부모로부터 분가를 하지 않고 같이 살면서 독립적인 생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취업도 늦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결혼과 출생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결혼을 해야 어른취급을 받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비혼과 만혼이 많아져서 성인으로서의 권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전환 사건들이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 청년 내부의 이질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관점에서 성인기 이행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동시에 시민권이라는 맥락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말해주고 있다. 정책적으로도 청년 참여와 권리가 중요한 정책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출처: 김기현, 배정희, 김창환, 성재민(2021: 22)에서 재인용

그림 1-2. 청년 사회 첫 출발 연구의 연도별 분석 대상

이 연구는 2021년부터 3년간 이루어지는 다년과제로 첫 일자리, 자립에 이어 시민권과 참여에 초점을 맞추어 성인기 이행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민권의 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참여를 별도로 제목에 제시한 것은 행동 측면을 강조한 것이며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정책 영역의 명칭(권리와 참여)도 고려하였다. 3차 연구에서는 시민권

을 중심으로 성인기 이행과정을 살펴보는 한편, 1-2차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청년들의 사회 첫 출발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시민권과 참여에 초점을 맞추어 청년들의 사회 첫 출발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에 있어서 시민 참여나 시민으로서의 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1차 연도의 첫 일자리, 2차 연도의 자립과 더불어서 3차 연도의 시민권과 참여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청년들의 사회 첫 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있다.

2. 연구추진체계

이 연구는 2021년에 시작되어 2023년까지 3년 과제로 추진되었다. 연속과제의 마지막 해인 올해에는 사회 첫 출발 중에서 시민권과 참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동시에 3년간의 연구를 종합하는 의미에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종합적인 제시하고자 한다.

1차 연도 (2021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청년들의 사회 첫 출발을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에 초점을 맞추어 실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청년 사회 첫 출발 개념 정의 및 정책대상 선정 · 청년 학교-일자리 이행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 실시 및 분석 (통계청 승인통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부가조사로 진행)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방향과 과제 도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실태조사, 2차 분석
2차 연도 (2022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사회 첫 출발을 자립(주거 및 자산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실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자립(주거 및 자산형성) 실태조사, 심층면접 실시 및 분석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방향과 과제 도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실태조사, 2차 분석
3차 연도 (2023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사회 첫 출발을 시민권(참여와 권한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실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참여와 권한강화 실태조사, 심층면접 실시 및 분석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방향과 과제 도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실태조사, 2차 분석

* 출처: 김기현, 배정희, 김창환, 성재민(2021: 5). [그림 1-1]을 인용함.

그림 1-3. 연도별 연구추진계획

이 연구는 협동연구로 서울시립대학교와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자가 협동연구진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청년 시민권과 참여 실태에 대한 2차 분석으로 세계가치조사를 활용해 국제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청년 참여 거버넌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청년 시민권, 참여와 관련된 정책추진체계와 정책 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림 1-4. 연구추진체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전체 연구의 총괄 역할을 담당하며 시민권과 참여 중심으로 청년 사회 첫 출발실태조사를 설계하고 실시하는 한편,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번 청년 사회 첫 출발실태조사는 2022년과 2023년 조사 간의 비교와 더불어 2011년 본원 연구과제로 수행된 성인기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와도 비교하였다(안선영, 김희진, 박현준, 2011). 이어서 청년 시민권과 참여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층 분석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안해 보았다.

3. 연구내용

1) 청년들의 시민권과 참여, 권한강화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이 연구에서는 1-2차 연도에 사회 첫 출발과 첫 일자리, 자립에 대한 개념 정의를 시도한데 이어 시민권에 대한 개념 정의를 시도하였다. 시민권은 청년들이 성인으로서의 권리를 갖는 것과 더불어 시민참여와 시민으로서의 권한을 얼마나 행사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선행 연구와 실태조사를 통해 당사자들의 의견, 면접을 통한 질문 등을 통해 청년에게 있어서 사회 첫 출발로서의 시민권의 개념을 정립해 보았다.

이어서 우리나라 청년들의 사회 첫 출발 중 시민권 및 참여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사회 첫 출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양적 자료로는 파악할 수 없는 청년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청년 사회 첫 출발실태조사는 가구 표집으로 조사구 대신 집계구를 표본틀로 삼았다. 표집방법은 다단계층화집락표집법이며 전국 17개 시도에서 290개의 표본 집계구로부터 1,938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에 대한 심층면접 역시 시도하였다. 심층면접에서는 청년들에게 성인기 진입 상황과 시민권에 인식 등을 질문하였고 정책에 관한 문제 역시 다루었다.

2) 청년들의 시민권과 참여에 대한 국내외 정책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이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시민권과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청년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수집한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시행 계획의 권리와 참여 정책 사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해외 사례는 국제연합(UN)과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와 미국, 프랑스, 핀란드 등 3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3개 국가를 선정한 이유는 OECD 국가 중에서 이들 국가가 특징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개별적인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는데 비해서 프랑스는 지역사회 기관 및 시설에서 청년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핀란드는 대의제와 대표성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3) 청년 시민권과 참여에 대한 심층 분석

이 연구에서는 2차 분석으로 청년들의 시민권 실태에 대한 2차 분석으로 세계가치조사(WVS: World Values Survey)를 활용해 국제비교 분석해 시도해 보고자 한다. 동시에 심층면접 중에서 여가권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의 심층 분석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심층분석 중 한 가지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간 네이티브뉴스에 올라온 기사를 대상으로 핵심키워드(청년거버넌스, 청년공동체, 청년정책참여 등)별 워드클라우드 및 토픽 모델링을 시도하였다.

4) 청년 시민권과 참여 정책 추진 방향과 정책 과제 도출

이 연구에서는 청년 시민권과 참여 실태 분석 및 관련 정책 분석을 통해 정책 방향을 도출하여 이에 따른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청년들의 시민참여와 권한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 내용을 제안하였다.

5) 1-3차 연도 종합과 사회 첫 출발 정책 추진방안 및 과제 도출

올해 연구는 3년 간 추진해온 연구를 마무리하는 시기로 1-2차 연도에 제안한 연구과제를 포괄해 사회 첫 출발 정책의 추진방안과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안해 보고자 한다.

4.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이 연구에서는 청년 시민권과 참여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동시에 청년 시민권과 참여에 관한 정책과 세부 사업을 파악하기 위한 문헌자료를 살펴보았다. 특히 정책진단에 있어서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시행계획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정책 중에서 참여와 권리영역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양적 연구

양적 연구로는 청년들의 참여와 권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조사는 2017년부터 통계청 승인통계로 실시되었던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는 2021년까지 이루어졌으며 「청년기본법」에 따라 새롭게 청년 삶 실태조사가 2022년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통계청의 통계 조정 과정에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는 중단되었다. 2022년부터 이 연구에서는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로 변경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2023년 조사 역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가 아닌 집계구에서 표본을 추출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1. 2023년 청년 삶 실태조사 주요 내용

주요 요소	내용	비고
모집단	전국의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청년(18-34세)	
표집틀	인구주택총조사 집계구(통계지리정보서비스)	
표본수	2,074명	
표집방법	다단계층화집락표집방법	
조사시기	6월-8월(기준일은 6월 1일)	

이 조사는 전국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표본수는 최종적으로 2,074명이었다. 표집방법으로는 다단계층화집락표집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조사방법으로는 개별방문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유치조사를 병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기본법」의 청년 연령 정의를 고려해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으며 19세 가중치를 적용했고 표본수는 1,938명이었다.

이 조사는 청년 관련 연구과제에서 공동으로 실시하는 통합조사로 이루어졌다. 이 조사에 참여한 과제는 청년 사회 첫 출발 연구 외에 2023년 고위과제 중 「청년종합연구II: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 개발」과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연구」 등이었다. 조사 문항은 각 과제별로 필요로 하는 문항들을 취합해서 이루어졌고 인구학적 배경 문항 중 공통으로 활용하는 문항들도 포함되었다.

3) 2차 자료 분석

2차 자료는 세계가치조사 자료를 활용해 청년 시민권에 대한 국제 비교 분석을 군집분석으로 시도하였다. 동시에 빅데이터 분석으로 뉴스 키워드를 선정해 워드 클라우드 및 토픽 모델링을 시도하였다.

4) 전문가 자문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4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첫 번째 자문회의는 설문지에 대한 서면자문으로 2월 8일부터 15일까지 이루어졌다. 설문지 초안에 대한 자문은 신규문항에 대한 검토와 추가문항에 대한 제안으로 이루어졌으며 관련 내용은 3장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표 1-2. 전문가 자문

자문내용	자문진	일정
설문지 초안에 대한 전문가 서면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교수(○○○○대) • □□□ 교수(□□대) • ○○○ 대표(○○○○○○) • ○○○ 연구원(○○○○○○) 	2.08-2.15
청년참여기구 발전방안에 대한 청년 활동가 서면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청년활동가(○○시) • □□□ 청년활동가(□□시) • △△△ 청년활동가(△△시) 	10.09-10.13
시민권과 참여 관련 청년정책 과제에 대한 전문가 서면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교수(○○○○대) • ○○○ 연구원(○○○○○○) • □□□ 대표(□□□□□) 	10.09-10.13

2차 자문회의는 청년참여기구 발전 방안을 중심으로 시도의 청년참여기구인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청년활동가를 대상으로 서면 자문으로 이루어졌다. 마지막 3차 자문회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시민권과 참여 관련 청년정책 과제에 대한 서면 자문으로 이루어졌다.

5) 심층면접

이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참여와 권리에 대한 시사점을 찾기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은 학생, 취업, 혼인 여부 등을 고려해 세분화하였다. 반구조화된 면접방식으로 이루어지며 1:1 개별면담으로 이루어졌다. 1인당 최대 2시간 이내에서 면접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자의 표본 구성은 성별, 지역, 연령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조사 항목은 6가지로 성인기 진입 상황과 시민권에 대한 인식, 교육 및 훈련 영역의 시민권 상황 및 정책요구, 고용 및 경제 영역의 시민권 상황 및 정책요구, 주거 및 건강 영역의 시민권 상황과 정책요구, 사회적 관계 영역의 시민권 상황과 정책요구, 참여와 권리 영역의 시민권 상황과 정책요구 항목 등으로 나누었다.

표 1-3. 청년 참여와 권리 관련 심층면접 내용

주요 요소	내 용	비 고
면접참여자 수	18명	
면접참여자 특성 개요	학생, 취업, 혼인 여부 등 세분화	
면접방식	반구조화된 면접 / 1:1 개별면접	회상 면접 병행
면접 시간 및 횟수	개인별로 1시간 이내로 1회 진행	
면접 기록 및 녹취 여부	면접 시 녹음하여 전사	
면담자	연구진	

6) 기타 연구방법

가. 정책연구실무협의회의

1차 정책연구실무협의회의는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관리팀 팀장, 팀원과 청년정책과 향후 정책 방향 논의를 주제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2022년 청년정책백서와 청년정책 연차보고서에 담긴 내용 중 청년정책추진체계와 전달체계, 그리고 참여기구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차 정책연구실무협의회의는 동남지방통계청 기술지원과 팀장, 지역통계과 팀원과 지자체의 청년통계 구축방향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지자체 청년통계(행정통계) 구축 시 참여와 권리 분야의 필요성과 문항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표 1-4.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주요 계획

차수	주요내용	참석공무원 부처(과)	개최시기
1차	청년정책 및 향후 정책 방향 논의	국무조정실(청년정책조정실)	2월 16일
2차	지자체 청년통계 구축방안 논의	통계청(동남지방통계청)	4월 12일
3차	지자체 청년참여 활성화 등 논의	서울시(미래청년기획단) 보건복지부(청년정책보좌역)	10월 13일

3차 정책연구실무협의회는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의 단장과 보건복지부의 장관정책보좌관실의 청년보좌역과 청년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청년 참여와 권리 과제 제안 내용에 대한 지자체(서울)와 중앙정부(보건복지부)의 의견과 더불어 중앙정부의 청년보좌역 관련 2024년 계획에 대한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나. 청년 참여와 권리 심층분석 발표 콜로키움

콜로키움에서는 네이버 뉴스 키워드 검색을 통해 키워드 클라우드 및 토픽 모델링 결과를 토대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2023년 8월 31일 본원 7층 대회의실에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개최되었으며 부산연구원의 김세현 부연구위원이 발표하였고 3명의 연구진과 관심 있는 본원의 8명이 참석하였다.

표 1-5 청년 참여와 권리 관련 연구논문 콜로키움 주요 계획

차수	주요내용	일시 및 장소	발표
1회	“청년정책과 참여: 1990-2022년 언론 기사 토픽모델링 분석”	2023년 8월 31일 16:00-18:00, 본원 7층 대회의실	김세현 부연구위원 (부산연구원)

다. IRB 승인

이 연구는 실태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하기 전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거쳤다. 2023년 청년 사회 첫 출발실태조사는 2023년 6월 1일에 심의를 신청했고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심의가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승인(승인번호 202306-HR-고유-013)을 받았다.

청년 대상 심층면접조사는 2023년 7월 4일에 심의를 신청했고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최종 승인(승인번호 202306-HR-고유-013)을 받았다.

○ ————— 제2장 연구배경

- 1. 청년 사회 첫 출발과 시민
 권에 대한 논의
- 2. 청년 참여 및 권한 강화에
 대한 논의

1. 청년 사회 첫 출발과 시민권에 대한 논의

시민권은 말 그대로 근대국가의 모든 '시민'에게 부여된 기본권을 의미한다. 경우에 따라 인권(人權) 민권(民權) 공권(公權)과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김은경, 2003). 행동과 사상·재산·신앙의 자유를 누릴 권리와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 행복추구권, 성·종교·신분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 그리고 침해당한 기본권에 대한 배상을 구제받을 수 있는 청구권, 그리고 교육과 노동의 권리, 안전한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포함하는 사회권 등이 이 개념의 시민권에 포함된다. 시민권은 관점에 따라 다양한 가치와 해석이 부여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시민권은 대개 신분으로서의 자격(citizenship)과 그에 따르는 의무, 혹은 시민의 권리(civic right)의 의미로 사용되곤 한다. 시민권 개념의 기반을 제시한 마셜(T.H.Marshall)은 시민권을 공민으로서의 권리(civil rights)와 정치적인 권리(political rights), 그리고 사회적인 권리(social rights)의 3대 요소로 정의했다. 특히 마셜의 시민권 이론은 서구 시민사회가 발전하면서 시민권의 규정과 범위가 확장되어온 역사를 반영하기에 시민권의 개념적 틀로 많이 인용되곤 한다.

1) 공민적 권리로서의 시민권(civil rights)

마셜은 시민권을 공민으로서의 권리와 정치적인 권리, 그리고 사회적인 권리의 3대 요소로 구성된 개념으로 정의했다(김윤태, 2013: 9). 이 중에서 공민으로서의 권리에 해당하는 시민권은 신분 혹은 지위로서의 시민권(citizenship)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주로 18세기 후반에 법적으로 명시되기 시작한 이 시민권의 주요 내용은 '자유'에 대한 보장이

2) 이 장은 장근영 선임연구원이 작성하였음.

었다. 신체적인 자유, 종교와 사상,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계약의 자유, 소유와 공정한 법적 대우의 권리 보장이 이 영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즉, 공민권으로서의 시민권은 국가가 자신의 범주에 속한 개인에게 국가의 권한으로 부여하고 보장하는 법적·정치적·사회적 자유, 그리고 그에 상응해 개인이 국가에 지는 의무라는 양방향 관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장미경, 2001; 김은경, 2003). 이러한 사회계약으로서의 시민권 개념은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려면 개인이 각종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관점과 공동체 내의 평등과 정의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는 관점으로 나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 혹은 공동체는 구성원들에게 시민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고 이에 상응하여 구성원들은 공동체에 병역이나 납세의 의무 등을 수행하도록 요구받는다. 이 공민으로서의 시민권은 일정한 살고 있는 곳에서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의 법적인 관계에서 자신의 지위가 결정된다(김덕수, 2019; 김은경, 2003: 306). 공민권으로서의 시민권은 개인에게 그것을 획득하기 위한 조건들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국민으로 인정된 개인의 자녀 혹은 배우자에게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부여된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때문에 자격으로서의 시민권은 성, 인종, 계층 등의 다양한 이유로 시민권으로부터 배척되어온 특정 개인들이 같은 국민으로서 동등한 자격을 획득해온 역사에서 핵심 주제가 되곤 했다(유동철, 2002).

2) 정치적 권리로서의 시민권(political rights)

정치적 시민권은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김윤태, 2013). 구체적으로는 투표권, 투표를 통해 공직에 선출될 피선거권을 포함하는 참정권이 주요 주제다. 정치적 시민권은 19세기 이후부터 시민권의 주요 영역으로 포함되었지만, 시민권의 역사에서 정치적 참여는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중요한 요소였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 공동체에서 구성원들은 정치적인 의사결정과 그 수행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었으며, 플라톤은 도시국가 시민의 정치적 참여는 그가 온전한 성인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보았다(김인근, 2012). 정치적 시민권은 최초에는 특정한 시민에게만 제한적이고 차별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였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1832년에 처음 개정된 선거법에서 투표권은 토지를 소유한 남자에게만 부여되었으며, 노동자의 투표권은 1867년에, 여성의 투표권은 1918년에야 30세 이상에 계만 제한적으로 인정되었다. 프랑스에서 1848년 실시된 세계최초의 보통선거에서도 여

성을 제외했으며, 미국은 1870년에 최초로 흑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3). 정치적 시민권의 차별과 배척 범위가 점차 좁아지는 과정은 시민들에 의한 시민권의 주장과 확장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권영숙, 2020; 장미경, 2001, p.61).

3) 사회적 권리로서의 시민권

사회적 권리인 시민권은 복지와 사회적 보호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교육을 받을 권리, 개인의 건강과 복지를 사회적으로 보장받을 권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회권은 모든 시민들이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평등한 환경에서 살 권리에 대한 보장이다. 이러한 사회적 권리가 처음부터 당연한 것으로 보장받은 것은 아니며 이를 획득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 1948년 공표된 ‘세계인권선언’은 사회적 권리로서의 시민권을 정의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시민권은 보편적인 인권(human right) 개념은 시민권의 개념을 확장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즉, 정치적 참여나 표현의 자유, 재산권과 생존권 등은 모든 인간이 보장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철학적 논리였다. 공민으로서의 시민권이 시민사회의 기반을 구성했고, 정치적 시민권이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었다면, 사회권은 이 두 권리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복지국가의 토대가 되었다(김윤태, 2013).

표 II-1. 사회적 시민권의 주요 내용

시민권	구분	
	내용	헌법조항
행복추구권	물질적 행복과 정신적 만족을 추구할 권리	제10조
자유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경제적 자유, 정신적 자유 등	제12조
평등권	법 앞의 평등, 성, 종교, 신분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제11조
참정권	정치적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권리, 국민투표권, 선거권, 공무담임	제24-26조
청구권	침해당한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 청원권, 재판청구권, 국가배상·보상청구권	제27조
사회권	인간답게 살 권리, 일할 권리, 노동권, 학습권, 환경권, 건강권 등	제34-35조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3c). 검색일 2023년 2월 2일. 대한민국 헌법 조항을 기초로 재구성

사회적 시민권은 법률에 의해 명확히 규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치적으로 다양한 논쟁의 대상이다.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지는 정치적인 관점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낙태, 동성 결혼, 마약 사용, 총기 보유, 안락사 등에 관한 오랜 논쟁이나, 학생인권 조례나 참정권 연령 기준의 조정 과정은 모두 이러한 정치적 관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4) 청년의 시민권

시민권의 획득과 행사는 청년이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적·정치적인 자격을 부여받고 권리를 행사하는 첫출발의 과정이기도 하다. 즉, 청년들이 시민사회와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모든 활동은 시민권의 행사라 할 수 있다. 취업은 시민권에 보장된 직업을 가질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문화생활의 영위는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청년들의 사회 정의를 위한 헌신,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시위와 커뮤니티 조직, 디지털 공간에서의 정치 사회적 참여는 청년들에게는 사회 운동이자 동시에 성인으로서 정체성 탐색 활동인 것이다. 따라서 청년들의 시민권 보장과 확장을 위한 모든 노력은 청년들의 사회 첫 출발을 지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주제인 청년들의 시민 참여(civic engagement)와 권한 강화(empowerment)는 시민권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시민 참여는 청년이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자질과 역량인 ‘시민성’(citizenship)의 성숙과 내면화의 필수 요소이며, 청년들이 스스로를 시민적 행위자로 이해하는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참여의 기반(이수정, 2022)으로서 필수적이다. 청년 시민권에 관련된 주제들은 다양하지만 특히 다음 주제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① 투표 및 정치 참여: 참정권은 가장 많이 언급되는 권리로서 단지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선거를 통해 선출될 권리로서 이 권리는 단순히 명목상의 보장을 넘어 실제 청년들이 당선된 사례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② 교육: 교육에 접근하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권리로서 특히 청년들에게 강조되는 권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권리는 청년 당사자 이외의 다른 사회적 주체들의 관점에 따라서 상이하게 이해되는 주제이기도 하다.

③ 문화와 경제적 혁신: 청년은 혁신의 주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사회변혁

운동이나 사회적 기업의 창업에서부터 기술혁신 기업의 창업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들이 혁신을 주도할 주체인 것처럼 간주된다. 그러나 실제 청년들이 혁신을 구현할 수 있는 여건이 무엇인지는 관점에 따라 크게 다르다. 이 주제 역시 한국 사회에서 원론적으로는 동의하나 실질적으로 잘 보장되지 않는 권리이기도 하다.

④ 경제적 참여의 권리: 청년들도 성인으로서 경제적인 자유와 기회에 대한 권리가 있다. 이는 특히 공정한 고용의 기회와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한다. 이 주제 역시 관점에 따라 그 해석이 크게 다를 수 있다.

⑤ 표현의 자유: 인터넷, 소셜 미디어, 집회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사회적 문제에 관여하는 권리다. 그러나 누구의 어떤 표현이나 주장을 먼저 받아들일지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크게 다를 수 있다.

2. 청년 참여 및 권한 강화에 대한 논의

한국 청년의 시민 참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독립운동과 4.19 혁명을 포함한 한국 근대사의 분기점마다 청년들의 정치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지금 청년들은 ‘탈정치화 세대’로 불릴 만큼 시민 참여가 위축된 양상을 보인다. 조철민(2013)에 따르면 청년시민단체들의 활동은 1990년대에 감시와 캠페인을 중심으로 한 시민참여로 전환되었다가 2000년대 들어 급격한 제도화와 탈동원화와 함께 쇠퇴했다. 청년의 정치참여 현황은 현재 한국 정치인들의 연령 구성에도 잘 드러난다. 현재 21대 국회의원 기준 30세 미만의 국회의원은 2명(0.7%), 40세 미만 국회의원까지 포함하면 13명으로 전체 국회의원의 4.3%에 불과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고서(정필운, 2020)에 따르면 이 40세 미만 국회의원 비율은 제2대 국회에서 26.5%로 지금의 6배 이상이었으나 갈수록 낮아져 왔다. 이러한 청년 의원 비율은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윤혜영, 2020).

청년들의 시민 참여를 통한 시민권 행사는 청년들의 사회 첫출발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이자 동시에 건강한 시민사회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이다. 따라서 청년들의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청년들의 시민 참여 및 권한 부여에 관한 논의와 노력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2019년에는 청소년들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투표권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어졌으며, 2022년에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서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기존의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추어졌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기존의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추어졌다. 법적으로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부터 정당에 가입해서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고등학교 3학년에는 총선 및 지방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청년은 다른 연령집단과 비교해서 투표 참여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대한 참여 역시 소극적이다(장선화, 김윤철, 2021). 그 이유로 청소년기 부터 제도적으로 차단된 사회 참여의 기회와 실질적인 정치 교육의 결핍,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불안정한 노동에 종사하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김윤철(2020)은 2015년 기준 상위소득 20%는 투표율이 거의 100%에 가깝지만, 하위소득 20%는 70%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낮은 소득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또한 청년할당제와 지원제도와 같은 연령에 근거한 기술적 대표성 확대는 청년 세대의 주요 이슈를 일괄되게 설명해주는 실질적 대표성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다수의 청년 국회의원들은 청년이기 보다는 기존의 사회경제적 엘리트 계층을 대표했다(장선화, 김윤철, 2021). 그러나 이와 같은 불평등은 청년들의 정치참여 동인이 되기도 한다. 최태욱(2017)은 최근 청년 정치참여의 배경에는 고령화·저성장·양극화 속에서 기성세대 중심의 분배 및 재분배 정책결정에 대한 청년세대의 저항과 반발이 있다고 보았다.

청년들의 시민권 보장은 청년들의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조창덕(2022)은 지방정부의 참여예산제도에 청년들의 참여가 청년정책예산을 실제로 증가시키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청년시민단체의 숫자는 청년정책예산의 규모 및 비중을 증가시켰지만 단순한 청년인구비율은 예산규모에만 영향을 미쳤으며, 전체 유권자 대비 청년투표자비율은 청년정책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청년 참여의 제도적인 요소에 관한 연구로 윤지소와 권수현(2020)은 정당의 청년 당원 대상 의견조사를 통해 이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고, 청년당원을 정치인으로 육성하는 정당 내부 시스템과 청년 당원의 의견수렴 통로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음을 지적했다.

청년들의 정치적 대표성과 참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로 민영(2022)은 청년들의 시민 참여, 특히 정치적 참여에 관련된 심리적 요인으로 ‘의무적 시민성’과 ‘정치지식’을 지적했다. 특히 정치 지식은 제도적, 비제도적 시민 참여 활동 모두를 촉진했다. Guerrero 등(2021)은 청년들의 시민 참여를 향한 동기와 이를 막는 장애물로 다음과 같은 요인을

지적했다. ①정치적인 분위기(political climate), ②청년 개개인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 ③사회적지지(social support), ④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접근성(proximity), ⑤가용자원에 대한 지식, ⑥개인이 보유한 자원의 수준이 그것이다. 개인적 자원 요소 중에는 자신의 참여가 실질적인 효과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인 '정치적 효능감'도 포함될 수 있다(박선영, 장근영, 2015).

청년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특히 온라인 공간을 통한 청년 참여에 주목한다. 김기현, 배정희, 김창환, 성재민(2021)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집회·시위'에 단 한 번도 참여한 적 없는 청년이 응답자 중 95.5%였던 반면, 주 1~2회 혹은 매일 소셜 미디어에 정치적 이슈에 관한 글을 쓰거나 댓글을 달았다는 청년은 10.2%였다. 응답자 중 35.3%는 1년 중 한 번 이상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치적 의사를 밝혔다. 김수정, 오지현, 최섯별(2020)도 청년들이 온라인에서는 활발한 정치 참여를, 오프라인에서는 소극적인 정치 참여라는 양면성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청년들의 온라인 정치 참여가 활발한 이유로 사이버 공간의 특성이 지적된다. 이수정(2022)은 온라인 환경에서는 누구나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생산자, 발화자, 의견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참여로부터 괴리되었던 청년들을 끌어들이었다고 보았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형성되는 느슨한 네트워크는 협력의 부담이 적어서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참여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청년들의 온라인 정치참여는 자신이 발견한 사회·정치적 문제에 관한 정보를 복사해서 자신이 활동하는 다른 커뮤니티에 전달하는, '문제의식을 증재하는 나노 인플루언서'의 형태로 나타났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자기표현과 시민참여는 다양한 가능성을 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오프라인에서 발언권이 제한된 소수집단 청년들의 의견을 발견하고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창문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다. 예를 들어, 아넷(Arnett, J. J.)은 성인기로 진입하는 청년들을 '발현성인기(Emerging Adulthood)'로 정의하며, 이 시기의 특성으로 부정적인 태도(negativity)와 심리적인 불안정성(instability), 그리고 자기에게 초점 맞추는 성향(self-focused)을 제시했다(Arnett, 1998; 안선영 외, 2011). 이와 같은 발현성인기적 특성이 끊임없는 사회적 비교와 참조를 제공하는 소셜 미디어의 속성과 맞물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우려하는 연구들이 있다. 예를 들어, 자아가 불안한 개인일수록 실제 자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자아상(ideal self)을 마치 자신인 것처럼 표현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상과 현실이 뒤섞인 자아상(identity confusion)

은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경험과 사례를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 인식하게 만들기도 한다(Michikyan, 2020). 이와 같은 활동이 온라인 커뮤니티의 편향적 정보노출과 소위 '나노 인플루언서'들을 통해 축적되면 현실과 분리된 정치적인 신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같은 맥락에서 송경재(2022)는 청년들의 디지털 정치참여가 증가했으나 토론과 숙의가 부족하며, 필터버블과 확증편향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형성되는 청년들의 정치사회적 의견은 실제 청년의 문제보다는 필터버블을 통해 왜곡되고 극단화된, 비현실적인 주장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청년의 시민권을 신분으로서의 자격과 시민의 권리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하며 특히 시민의 권리라는 맥락에서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청년의 시민권과 참여에 대한 분석은 5가지의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영역은 사회 첫 출발이라는 이행기 측면에서 성인기 진입과 시민권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는 성인의 조건에 대한 청년들의 기대와 신념, 가치체계에서 출발해 시민권 영역에 대한 우선순위와 행복한 삶의 조건에 대한 가치평가, 가정, 학교, 사회의 인권 존중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에서 네 번째 영역은 청년정책을 구성하는 정책영역이자 삶의 핵심적인 영역으로 교육·훈련, 경제·고용, 주거·건강, 참여·권리 영역을 포함한다. 이것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청년정책기본계획의 정책영역을 고려한 것이다(관계부처 합동, 2020). 다만, 기본계획의 다섯 가지 정책 영역 중 주거와 복지·문화를 포괄하여 주거 및 건강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부터 이어져 온 조사 영역을 고려한 것이다(김기현, 하형석, 신인철, 2016).

○ — 제3장 우리나라 청년 시민권 및 참여 실태와 특징

- 1. 청년 시민권 및 참여 실태
조사 설계
- 2. 실태조사 결과
- 3. 요약 및 시사점

1. 청년 시민권 및 참여 실태조사 설계

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 개요

이 연구는 2022년에 실시되었던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를 토대로 시민권과 참여에 대한 신규문항을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첫해인 2021년에는 통계청 승인통계로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가 실시되었으나 2022년부터 통계 생산이 중단되었다.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통계청 승인통계로 이루어졌는데 시도 비교가 가능한 대규모 표본조사로 2022년부터 청년 삶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국무조정실과 통계청 간 협의를 거쳐 이 조사가 중요 문항을 계승하고 일원화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2022년에 실시되었던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는 조사구가 아닌 집계구를 이용하였다(유민상, 신동훈, 신영규, 박미희, 2022: 11). 집계구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기반으로 한 공간 통계의 기본단위이며 조사구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큰 단위이다. 이 정보는 QGIS(자유오픈소스지리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표본추출과정을 살펴보면,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집계구 리스트 중에서 290개 표본 집계구 내에 청년이 있는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각 표본 집계구별로 7명을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집계구 내에서 표본추출 가구 수를 결정하였다. 표본배분방식은 제곱근 비례배분으로 서울과 7대 특·광역시와 9개 도 지역을 동과 읍면 지역으로 구분하고 26개로 1차 층화를 진행하였다. 2차 층화는 동 지역에 대해서 집계구 특성을 반영해 아파트와 일반을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3) 이 장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표 III-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 시도별 표본 집계구 수

시도	만 18세-34세 성인	%	표본 집계구 수
전국	10,551,257	100.0%	290
서울	2,259,371	21.4%	59
부산	660,753	6.3%	19
대구	488,815	4.6%	14
인천	612,841	5.8%	16
광주	326,133	3.1%	9
대전	353,107	3.3%	10
울산	217,004	2.1%	6
세종	72,009	0.7%	4
경기	2,818,248	26.7%	73
강원	278,689	2.6%	8
충북	318,807	3.0%	9
충남	402,393	3.8%	11
전북	327,324	3.1%	9
전남	279,647	2.7%	8
경북	448,969	4.3%	13
경남	566,001	5.4%	16
제주	121,146	1.1%	6

* 출처: 실태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한 조사업체에서 보내온 자료에서 가져옴.

세부 층별로 표본 집계구를 보면, 전국 집계구 중 동지역은 143개 집계구, 읍면 지역은 47개 집계구였다. 동지역의 일반 집계구는 98개였고 아파트 집계구는 145개였다. 읍면지역에서 일반 집계구는 31개였고 아파트 집계구는 16개 였다. 집계구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73개 집계구였고 이어서 서울이 59개 집계구, 부산이 19개 집계구 순이었다.

조사 대상은 18세에서 34세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청년기본법」의 청년연령과 1세 차이가 존재한다. 19세가 아닌 18세로 조사가 이루어진 이유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낮아져 향후 「청년기본법」도 하한 연령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법안 단계에서 연령 규정 변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III-2.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 세부 층별 표본 집계구 현황

행정 구역	동 지역		읍면 지역		합계
	일반 집계구	아파트 집계구 ⁴⁾	일반 집계구	아파트 집계구	
전 국	98	145	31	16	290
서울	30	29	0	0	59
부산	8	11	0	0	19
대구	5	9	0	0	14
인천	6	10	0	0	16
광주	3	6	0	0	9
대전	4	6	0	0	10
울산	2	4	0	0	6
세종	1	3	0	0	4
경기	21	40	7	5	73
강원	2	3	2	1	8
충북	2	3	2	2	9
충남	2	3	4	2	11
전북	2	4	2	1	9
전남	1	2	4	1	8
경북	3	4	4	2	13
경남	4	6	4	2	16
제주	2	2	2	0	6

* 출처: 실태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한 조사업체에서 보내온 자료에서 가져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18-34세 모집단 및 표본 가중치 외에 19-34세 모집단 및 표본 가중치를 적용하여 현행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개발하였다.

조사방법은 태블릿PC를 이용한 가구방문 대면면접조사(TAPI: Tablet pc Aided Personal Interview)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사 시기는 매년 조사 기준일로 잡았던 6월 1일에 근접해 응답할 수 있도록 6월 중순에는 실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았다.

4) 아파트 집계구는 집계구 내 일반 가구 중 아파트 가구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를 말함.

이 조사에서 분석에 활용할 예정인 문항들은 <표 III-3>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신규문항에 대한 부분은 다음 절에서 소개하고 여기에서는 기존문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영역은 시민권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5가지로 구분하였다. 6가지 분석 영역은 성인기 진입과 시민권, 교육 및 훈련 영역, 경제 및 고용 영역, 주거 및 건강 영역, 참여와 권리영역 등이다.

성인기 진입과 시민권 영역에서는 포괄적으로 시민권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성인기에 대한 정의와 진입 기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동시에 행복의 조건을 비롯하여 가정, 학교,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인권 존중 수준이 어떠한지,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차별 경험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성인기 전환 사건과 관련해서는 결혼과 출생 부분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표 III-3.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 분석 문항

구분	세부 내용	기존/수정/신규
성인기 진입과 시민권	① 성인기 정의에 대한 질문(문2) ② 성인기 진입 기준에 대한 질문(문3) ③ 행복한 삶의 조건에 대한 질문(문65) ④ 가정, 학교, 사회의 인권 존중 수준에 대한 질문(문84) ⑤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차별 경험과 시각에 대한 질문(문85-86)	수정문항 수정문항 기존문항 기존문항 기존문항
교육 및 훈련 영역	① 교육 및 훈련에서 차별 경험에 대한 질문(문10-2, 문10-3, 문14-2) ② 학교 진학 및 미진학 이유에 대한 질문(문11-문13)	신규문항 기존문항
경제 및 고용 영역	① 경제적 자립 현황에 대한 질문(문18-문21) ② 직장에서 차별 및 참여경험에 대한 질문(문33-문35)	기존문항 기존문항
주거 및 건강 영역	① 자가 소유 의견에 대한 질문(문46) ② 집 값 적정성에 대한 질문(문47) ③ 신체적, 정신적 건강 현황에 대한 질문(문58, 문62)	기존문항 기존문항 기존문항
참여와 권리 영역	① 사회, 정치문제에 대한 의견제시 방법에 대한 질문(문75) ② 정치참여를 어렵게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문76) ③ 정치효능감에 대한 질문(문77) ④ 투표 여부 및 투표 의향에 대한 질문(문78-문79) ⑤ 일과 생활의 균형 및 단체 및 여가활동에 대한 질문(문64, 문82) ⑥ 청년 자율예산제(참여예산제)에 대한 질문(문83) ⑦ 중앙부처 및 지자체 청년참여정책에 대한 질문(문88)	기존문항 신규문항 기존문항 신규문항 기존/신규문항 신규문항 신규문항

* 출처: 유인상, 신동훈, 신영규, 박미희(2022), 김기현, 배정희, 김창환, 성재민(2021). 기존문항은 이전 실태조사의 문항을 가져옴.

교육 및 훈련 영역에서는 교육에 대한 접근의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 진학 및 미진학 사유와 성인이 전환 사건으로 학교 졸업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교육 및 훈련 과정에서의 차별 경험은 신규 문항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경제 및 고용 영역에서는 경제적 자립 현황에 대한 질문과 직장에서의 차별 경험,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등을 통한 참여 경험에 대한 질문을 분석하고자 한다. 성인이 전환 사건으로는 취업 여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주거 및 건강 영역에서는 자가 소유에 대한 질문을 통해 주거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집 값 적정성에 대한 응답 결과를 통해 주거 부담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어서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을 통해 건강권 문제를 살펴보고 성인이 전환 사건으로는 주거 및 분가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참여 및 권리 영역은 대부분 신규문항으로 통해 분석할 예정이며 기존 문항 중에서 사회, 정치문제에 대한 의견제시 방법 문항과 정치효능감에 대한 문항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 신규 문항

설문지 초안에는 사회 첫 출발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아넷(Arnett, J. J.) 등이 개발한 성인발현기 차원 문항(IDEA: Inventory of the Dimensions of Emerging Adulthood)과 성인이 이정표 문항(MoA: Makers of Adulthood)을 포함(문2, 문3)하였다(부록 1 예비조사 설문지 참고). 여기에서 문항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질문한 내용을 핵심 질문으로 추리는 수정작업을 거쳤다.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청년기에 대한 인식 문항(문2에 “준비하는 시기, 의지하는 시기, 무기력한 시기, 좌절하는 시기”와 같이 부정적인 인식을 묻는 내용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무엇을 성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항(문3)에 대해서 개념화하여 법률적 측면, 사회통념적 측면, 주관적 측면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다만, 이 문항은 2022년도 결과와 비교가 필요하고 척도 문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문항을 유지하였다.

교육 부문에서 시민권과 차별 경험에 대한 질문(문10-2, 문10-3, 문14-2)을 추가하였다. 문항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조사 문항(김영지, 최홍일, 2022)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에서 인권 영역에 대한 항목(문용린, 문미희, 전종희, 장희선, 김영주, 김호현, 2009) 등을 참고하였다.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이 문항에서 좀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표 III-4. 교육 부문 청년 권리 침해 관련 신규 문항

구분	문항																												
대학	문10-2) 가장 최근에 진학한 2-3년제 및 4-6년제 대학(대학원은 포함되지 않음)에 대해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그렇다</th> <th>아니다</th> <th>모르겠다</th> </tr> </thead> <tbody> <tr> <td>(1) 학생선발 과정에서 차별적인 운영이 이루어졌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r> <tr> <td>(2) 학교에 범죄나 (성)폭력 신고기구(대학 인권센터 등)가 있었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r> <tr> <td>(3) 학교에서 정치단체 참여(정당가입 및 활동 등)를 제한하였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r> <tr> <td>(4)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학교당국의 제한이나 간섭이 이루어졌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r> <tr> <td>(5) 대학 내 의사결정 기구에 학생이 참여하였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r> <tr> <td>(6) 학교에 인권교육 관련 과목이 개설되었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r> </tbody> </table>	항목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1) 학생선발 과정에서 차별적인 운영이 이루어졌다	①	②	③	(2) 학교에 범죄나 (성)폭력 신고기구(대학 인권센터 등)가 있었다	①	②	③	(3) 학교에서 정치단체 참여(정당가입 및 활동 등)를 제한하였다	①	②	③	(4)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학교당국의 제한이나 간섭이 이루어졌다	①	②	③	(5) 대학 내 의사결정 기구에 학생이 참여하였다	①	②	③	(6) 학교에 인권교육 관련 과목이 개설되었다	①	②	③
	항목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1) 학생선발 과정에서 차별적인 운영이 이루어졌다	①	②	③																									
	(2) 학교에 범죄나 (성)폭력 신고기구(대학 인권센터 등)가 있었다	①	②	③																									
	(3) 학교에서 정치단체 참여(정당가입 및 활동 등)를 제한하였다	①	②	③																									
	(4)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학교당국의 제한이나 간섭이 이루어졌다	①	②	③																									
	(5) 대학 내 의사결정 기구에 학생이 참여하였다	①	②	③																									
	(6) 학교에 인권교육 관련 과목이 개설되었다	①	②	③																									
	문10-3) 가장 최근에 진학한 2-3년제 및 4-6년제 대학(대학원은 포함되지 않음)에서 경험하신 부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있다</th> <th>없다</th> <th>해당 사항 없음</th> </tr> </thead> <tbody> <tr> <td>(1) 나는 수강과목 신청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하였다</td> <td>①</td> <td>②</td> <td>/</td> </tr> <tr> <td>(2) 나는 수업시간에 차별을 경험하였다</td> <td>①</td> <td>②</td> <td>/</td> </tr> <tr> <td>(3) 나는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받았다</td> <td>①</td> <td>②</td> <td>/</td> </tr> <tr> <td>(4) 나는 집회나 향의 표시(대자보 등)에 제한을 받았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r> <tr> <td>(5) 나는 학교의 의사결정 참여에 제한을 받았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r> </tbody> </table>	항목	있다	없다	해당 사항 없음	(1) 나는 수강과목 신청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하였다	①	②	/	(2) 나는 수업시간에 차별을 경험하였다	①	②	/	(3) 나는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받았다	①	②	/	(4) 나는 집회나 향의 표시(대자보 등)에 제한을 받았다	①	②	③	(5) 나는 학교의 의사결정 참여에 제한을 받았다	①	②	③				
	항목	있다	없다	해당 사항 없음																									
(1) 나는 수강과목 신청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하였다	①	②	/																										
(2) 나는 수업시간에 차별을 경험하였다	①	②	/																										
(3) 나는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받았다	①	②	/																										
(4) 나는 집회나 향의 표시(대자보 등)에 제한을 받았다	①	②	③																										
(5) 나는 학교의 의사결정 참여에 제한을 받았다	①	②	③																										
고등학교	문14-2) 다니셨던(혹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경험했던 부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있다</th> <th>없다</th> <th>해당 사항 없음</th> </tr> </thead> <tbody> <tr> <td>(1) 나는 수업시간에 차별을 경험하였다</td> <td>①</td> <td>②</td> <td>/</td> </tr> <tr> <td>(2) 나는 수업시간 외에 학교생활 중에 차별을 경험하였다</td> <td>①</td> <td>②</td> <td>/</td> </tr> <tr> <td>(3) 나는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받았다</td> <td>①</td> <td>②</td> <td>/</td> </tr> <tr> <td>(4) 나는 집회나 향의 표시(대자보 등)에 제한을 받았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r> <tr> <td>(5) 나는 학교의 의사결정 참여에 제한을 받았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r> </tbody> </table>	항목	있다	없다	해당 사항 없음	(1) 나는 수업시간에 차별을 경험하였다	①	②	/	(2) 나는 수업시간 외에 학교생활 중에 차별을 경험하였다	①	②	/	(3) 나는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받았다	①	②	/	(4) 나는 집회나 향의 표시(대자보 등)에 제한을 받았다	①	②	③	(5) 나는 학교의 의사결정 참여에 제한을 받았다	①	②	③				
	항목	있다	없다	해당 사항 없음																									
	(1) 나는 수업시간에 차별을 경험하였다	①	②	/																									
	(2) 나는 수업시간 외에 학교생활 중에 차별을 경험하였다	①	②	/																									
	(3) 나는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받았다	①	②	/																									
(4) 나는 집회나 향의 표시(대자보 등)에 제한을 받았다	①	②	③																										
(5) 나는 학교의 의사결정 참여에 제한을 받았다	①	②	③																										

* 출처: 자체 작성. 문항 개발에 있어서 김영지, 최홍일(2022), 문용린, 문미희, 전종희, 장희선, 김영주, 김호현(2009)의 인권 영역과 설문지 항목을 참고하였음.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권리 침해 문항은 기존 문항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직장내 괴롭힘과 산업안전과 경험을 묻는 문항(문33, 문34)과 노사협의회 및 업무 관련 제안제도, 조직 적응 프로그램을 묻는 문항(문35)이 이에 해당한다.

참여와 관련된 추가문항(문76~문86)은 국제시민성 및 시민교육조사(ICCS: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2019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22년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가져왔다. ICCS는 국제교육성취도평가

협의회(IEA: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에서 24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시민성 및 시민교육에 대해서 94,000여 명의 8학년 학생(우리나라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16년에 실시한 조사이다. 이것은 2009년에 이어 두 번째 조사이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한국 조사를 실시하였다(장근영, 2018).

청년 정치 참여와 관련된 신규 문항은 기존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에 관한 문항(문75)과 정치효능감을 측정하는 문항(문77) 외에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에 관한 문항(문76)과 대통령 선거 투표 여부(문78), 향후 투표 참여 및 투표하기 전 후보자에 대한 정보 수집 여부(문79) 등이었다.

기관의 신뢰도를 묻는 문항(문90)도 추가되었는데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외에 사법부의 신뢰도를 묻는 문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를 반영해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표 III-5. 청년 사회·정치 참여 관련 신규 문항

구분	문항															
사회·정치 참여	문76) 귀하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7자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시간이 부족해서 ② 정치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 ③ 정치 문제들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④ 나의 진로나 스펙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⑤ 정치 문제들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서 ⑥ 정부 및 국회, 공공기관에 대해 신뢰하지 않아서 ⑦ 청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⑧ 기타(적을 것: _____)															
	문78) 귀하는 지난 2022년(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십니까? ① 참여했다 ② 참여하지 않았다 ③ 투표권 없었다															
	문79) 귀하는 아래에 제시된 정치적 활동에 앞으로 참여할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 이 문항에서의 투표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교육감 선거 등을 포함합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문항</th> <th>절대로 참여하지 않음</th> <th>아마도 참여하지 않음</th> <th>아마도 참여함</th> <th>확실히 참여함</th> </tr> </thead> <tbody> <tr> <td>(1) 투표 참여</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r> <tr> <td>(2) 투표하기 전 후보자에 대한 정보 수집</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r> </tbody> </table>	문항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1) 투표 참여	①	②	③	④	(2) 투표하기 전 후보자에 대한 정보 수집	①	②	③	④
문항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1) 투표 참여	①	②	③	④												
(2) 투표하기 전 후보자에 대한 정보 수집	①	②	③	④												

* 출처: 김영지, 최홍일(2022), 장근영(201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와 IEA의 ICCS의 설문지 항목을 가져와서 문항을 구성하였음.

정책 참여를 묻는 신규 문항은 청년 참여예산제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자율예산제에 대한 질문(문83)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청년정책 참여에 대한 질문(문88) 등이었다. 먼저 청년 참여예산제 혹은 자율예산제는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을 넘어서 실제 청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청년 예산을 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표 III-6. 청년 참여정책 관련 문항

구분	문항																																																												
참여정책	문83) 귀하는 청년 자율예산제(참여예산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p>☞ 청년 자율예산제(참여예산제)는 지역사회(시도, 시군구)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p> <p>① 모른다 → 문84으로 이동 ② 안다 → 문83-1로 이동</p>																																																												
	문83-1) (문83에서 ② 응답자만) 귀하는 청년 자율예산제(참여예산제)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문88) 귀하는 다음과 같은 청년 활동에 지난 1년간(2022년 6월-2023년 5월)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table border="1"> <thead> <tr> <th>문항</th> <th>한 번도 없음</th> <th>1년에 1~2회</th> <th>2~3 개월에 1~2회</th> <th>한 달에 1~2회</th> <th>1주일에 1~2회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1) 중앙정부 청년참여기구(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보좌역, 청년참여단, 온라인청년패널, 2030청년저문단 등) 참여</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2) 국민청원, 국민동의청원, 국민제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의견 제안 및 동의</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3) 중앙정부 청년 온라인플랫폼(온라인청년센터, 청년포털 등) 접속 및 상담, 참여</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4) 정부 주최 청년공모사업 참여</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5) 지자체 청년참여기구(시도·시군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해트워크, 청년문톡하의 등) 참여</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6) 지자체 청년 온라인플랫폼(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경기청년포털 등) 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7) 지자체 청년센터(청년 공간) 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8) 청년 지역공동체 사업(청년 지역공동체, 청년마을 만들기, 청년두레, 청년 자립마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터 등)참여</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9) 지자체 주최 청년공모사업에 참여</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body> </table>	문항	한 번도 없음	1년에 1~2회	2~3 개월에 1~2회	한 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이상	(1) 중앙정부 청년참여기구(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보좌역, 청년참여단, 온라인청년패널, 2030청년저문단 등) 참여	①	②	③	④	⑤	(2) 국민청원, 국민동의청원, 국민제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의견 제안 및 동의	①	②	③	④	⑤	(3) 중앙정부 청년 온라인플랫폼(온라인청년센터, 청년포털 등) 접속 및 상담, 참여	①	②	③	④	⑤	(4) 정부 주최 청년공모사업 참여	①	②	③	④	⑤	(5) 지자체 청년참여기구(시도·시군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해트워크, 청년문톡하의 등) 참여	①	②	③	④	⑤	(6) 지자체 청년 온라인플랫폼(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경기청년포털 등) 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	①	②	③	④	⑤	(7) 지자체 청년센터(청년 공간) 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	①	②	③	④	⑤	(8) 청년 지역공동체 사업(청년 지역공동체, 청년마을 만들기, 청년두레, 청년 자립마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터 등)참여	①	②	③	④	⑤	(9) 지자체 주최 청년공모사업에 참여	①	②	③	④	⑤
	문항	한 번도 없음	1년에 1~2회	2~3 개월에 1~2회	한 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이상																																																							
	(1) 중앙정부 청년참여기구(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보좌역, 청년참여단, 온라인청년패널, 2030청년저문단 등) 참여	①	②	③	④	⑤																																																							
	(2) 국민청원, 국민동의청원, 국민제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의견 제안 및 동의	①	②	③	④	⑤																																																							
	(3) 중앙정부 청년 온라인플랫폼(온라인청년센터, 청년포털 등) 접속 및 상담, 참여	①	②	③	④	⑤																																																							
(4) 정부 주최 청년공모사업 참여	①	②	③	④	⑤																																																								
(5) 지자체 청년참여기구(시도·시군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해트워크, 청년문톡하의 등) 참여	①	②	③	④	⑤																																																								
(6) 지자체 청년 온라인플랫폼(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경기청년포털 등) 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	①	②	③	④	⑤																																																								
(7) 지자체 청년센터(청년 공간) 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	①	②	③	④	⑤																																																								
(8) 청년 지역공동체 사업(청년 지역공동체, 청년마을 만들기, 청년두레, 청년 자립마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터 등)참여	①	②	③	④	⑤																																																								
(9) 지자체 주최 청년공모사업에 참여	①	②	③	④	⑤																																																								
* 출처: 윤민중, 정은진, 정건희(2016), 김형주, 김기현, 배정희, 신선미, 기현주(2022)의 설문지 항목을 참고하여 신규문항을 개발하였음.																																																													

큰 틀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시작해 세종시와 제주시에서 청년자율 예산제라는 이름으로 독자적인 참여예산제도를 추진 중이다. 경기도 등에서는 별도의 제도로 운영하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일부 비율을 정해 청년참여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서 윤민중, 정은진, 정건희(2016)의 설문 문항을 참조하여 신규문항을 개발하였다.

참여 정책 참여는 청년 참여기구, 온라인 플랫폼, 청년센터, 지역공동체 사업 등으로 구분했다.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각종 정부, 지자체 주최 청년 공모사업이나 정책에 참여”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반영해 청년 공모사업 참여를 추가하였다. 정책 참여에 대한 항목은 김형주, 김기현, 배정희, 신선미, 기현주(2022)의 온라인 설문조사 항목을 참조하여 신규문항을 개발하였다.

청년 정책 참여는 참여기구에 참여하는 방식과 국민청원 등을 통한 의견 제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참여, 청년 공모사업 참여 등이며 지자체의 경우 청년 지역공동체 사업 참여를 추가하여 질문하였다.

2. 실태조사 결과

1) 조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는 18세에서 34세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이 연구에서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연령을 적용해 19세에서 34세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조사는 18세에서 34세에 대한 가중치와 함께 19세에서 34세에 대한 모집단과 표본가중치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19-34세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를 토대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표 III-7.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 조사 대상 인구통계학적 특성(19-34세)

구분		사례 수	%
전체		(1,938)	100.0
성별	남 자	(1,002)	52.9
	여 자	(936)	47.1
연령	만 19 ~ 24 세	(634)	32.5
	만 25 ~ 29 세	(663)	34.1
	만 30 ~ 34 세	(641)	33.4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60.7
	중 소 도 시	(434)	22.5
	농 어 촌	(321)	16.8
학력	고 졸 이 하	(494)	26.7
	대 학 / 대 학 원 재 학	(445)	22.9
	대 졸 이 상	(999)	50.4
장애 여부	예	(10)	0.5
	아 니 오	(1,928)	99.5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14.3
	보 통	(1,032)	53.6
	잘 산 다	(652)	32.1
주거 형태	동 거	(1,160)	59.2
	비 동 거	(778)	40.8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576)	29.4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12.1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51.0
	비 임금 근로자	(142)	7.5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1,580)	82.1
	배 우 자 있 음	(358)	17.9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조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본다. 여기에서 제공한 수치는 19세 이상 표본 가중치를 적용한 값이다. <표 III-7>은 조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전체 응답 사례수는 1,938명으로 18세를 포함할 경우 2,074명이다. 성별을 보면, 남자가 52.9%였고 여자가 47.1%였다. 연령을 보면, 19-24세가 32.5%, 25-29세가 34.1%, 마지막으로 30-34세가 33.4%였다. 도시규모별로 보면, 대도시가 60.7%였고 중소도시가 22.5%, 농어촌이 16.8%였다. 학력별로 보면 대졸 이상이 50.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경제수준을 보면 보통이라는 응답이 53.6%로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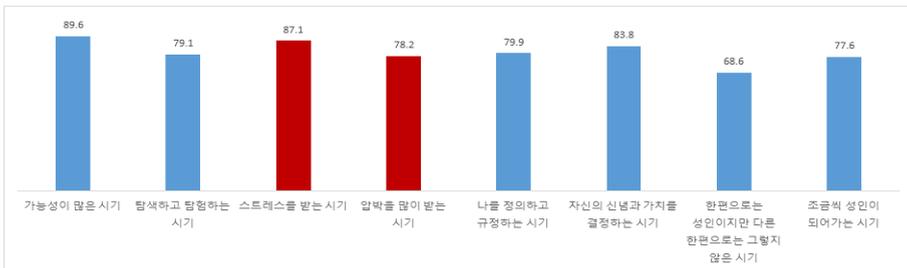
많았다. 주거형태는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59.2%였고 독립해서 거주하는 경우가 40.8%였다. 일자리형태를 보면, 비임금 근로자가 7.5%였고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인 경우가 51.0%, 비정규직이 12.1%였고 일자리가 없는 경우가 29.4%였다.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17.9%로 나타났다.

2) 청년들의 시민권과 참여 실태

이 절에서는 청년들의 시민권과 참여 실태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성인기 이행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청년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가능성이 많은 시기”라고 보는 응답(약간 동의함+매우 동의함)이 89.6%로 가장 높았다. 이것은 아넷(Arnett, 2011)이 청년기를 삶의 방식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기로 보는 긍정적인 관점에 해당하는 질문이다.

이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라는 응답이 87.1%로 뒤를 이었다. 이것은 아넷이 청년기를 불안정(instability)한 시기로 보는 관점에 해당하는 질문이다.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불안과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청년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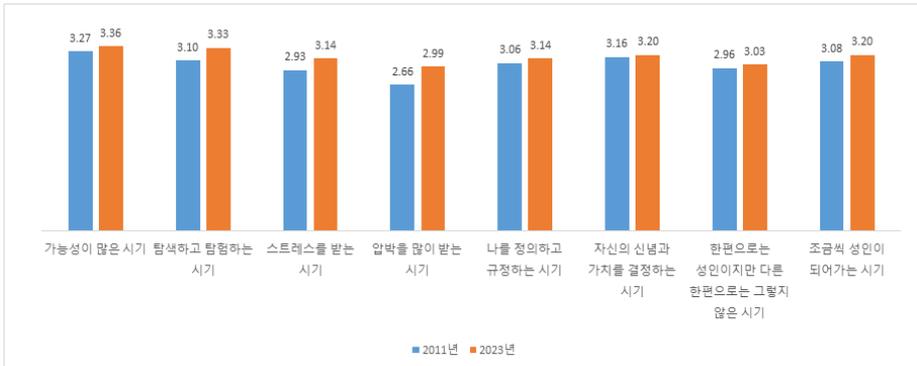
다음으로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결정하는 시기”라는 응답이 83.8%로 뒤를 이었다. 이것은 아넷이 청년기를 자기에 초점을 맞추는 시기(self-focused period)로 본 것에 해당하는 질문이다. 청년기에서 자기중심성은 이기주의나 자기만 생각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이 파악하고 앞날을 계획하는데 집중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주) 약간 및 매우 동의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임.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그림 Ⅲ-1. 청년(19-34세)이 생각하는 청년의 시기(%)

안선영 외(2011) 연구에서는 같은 질문을 청년에게 물어보았는데 이 결과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19세에서 24세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도 같은 연령집단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 문항은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어서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보았다.



주) 2011년 조사 대상은 19-24세로 연령을 통일하였으며 4점 척도의 평균값임

그림 Ⅲ-2. 청년(19-24세)이 생각하는 청년기에 대한 정의 비교(% , 2011/2023)

먼저 일관된 결과는 “가능성이 많은 시기”라는 응답 점수가 두 조사 모두 가장 높았다.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결정하는 시기”는 2순위에서 3순위로 바뀌었지만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반면, 부정적인 관점인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라는 응답은 3점 미만이었지만 3점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압박을 많이 받는 시기”라는 응답도 2011년 2.66점에서 2023년 2.99점으로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각각의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 역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가능성이 많은 시기”에 대해서 응답결과를 보면, 성별로는 차이가 크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전반에서 동의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학력별로는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이 동의비율이 높았고 부모와 동거한 경우에 동의비율이 높았다. 일자리 형태에서 비임금 근로자가 동의비율이 낮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동의비율이 높았다.

표 III-8. 청년기에 대한 정의 - (1) 가능성이 많은 시기(명, %)

구분	사례수	시기 상 현재 삶의 의미				평균 (점/4점 만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	거의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전체	(1,938)	0.7	9.8	58.5	31.1	3.2	
성별	남 자	(1,002)	0.9	9.1	58.7	31.3	3.2
	여 자	(936)	0.5	10.4	58.2	30.9	3.2
연령	만 19 ~ 24 세	(634)	0.0	4.7	55.1	40.2	3.4
	만 25 ~ 29 세	(663)	0.4	8.0	60.2	31.4	3.2
	만 30 ~ 34 세	(641)	1.6	16.5	60.0	21.8	3.0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0.6	7.7	61.1	30.6	3.2
	중 소 도 시	(434)	0.5	11.3	57.8	30.4	3.2
	농 어 촌	(321)	1.2	15.2	49.8	33.8	3.2
학력	고 졸 이 하	(494)	0.9	10.5	58.5	30.1	3.2
	대학/대학원 재학	(445)	0.0	4.9	52.2	43.0	3.4
	대 졸 이 상	(999)	0.9	11.6	61.3	26.2	3.1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0.3	9.7	54.8	35.2	3.3
	보 통	(1,032)	0.7	11.6	58.0	29.7	3.2
	잘 산 다	(652)	0.7	6.7	60.9	31.6	3.2
주거 형태	동 거	(1,160)	0.4	7.8	57.1	34.7	3.3
	비 동 거 / 독 립	(778)	1.1	12.6	60.4	25.9	3.1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576)	0.0	9.7	53.4	36.9	3.3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0.7	6.7	54.5	38.1	3.3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0.9	10.4	61.8	26.9	3.2
	비 임 금 근 로 자	(142)	2.0	10.2	62.3	25.4	3.1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1,580)	0.6	7.6	58.4	33.5	3.3
	배 우 자 있 음	(358)	1.2	19.8	58.8	20.2	3.0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이 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은 연령별 추세이다.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시각은 젊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삶의 선택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30대 초반은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응답비율이 18.1%로 20대 초반(4.7%), 20대 후반(8.4%)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9. 청년기에 대한 정의 - (2) 탐색하고 탐험하는 시기(명, %)

구분	사례수	시기 상 현재 삶의 의미				평균 (점/4점 만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	거의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전체	(1,938)	1.3	19.6	47.6	31.5	3.1
성별	남 자 (1,002)	1.0	19.8	47.8	31.3	3.1
	여 자 (936)	1.6	19.3	47.3	31.8	3.1
연령	만 19 ~ 24 세 (634)	0.4	7.0	51.7	40.9	3.3
	만 25 ~ 29 세 (663)	0.8	19.4	48.2	31.6	3.1
	만 30 ~ 34 세 (641)	2.6	32.1	42.9	22.3	2.9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1.0	17.6	46.0	35.5	3.2
	중 소 도 시 (434)	1.4	21.1	48.6	28.8	3.1
	농 어 촌 (321)	2.0	24.9	52.0	21.0	2.9
학력	고 졸 이 하 (494)	1.5	24.0	42.7	31.8	3.1
	대학/대학원 재학 (445)	0.5	6.8	51.2	41.4	3.3
	대 졸 이 상 (999)	1.5	23.1	48.5	26.9	3.0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1.3	17.6	49.6	31.4	3.1
	보 통 (1,032)	1.2	23.0	46.3	29.5	3.0
	잘 산 다 (652)	1.3	14.9	48.8	35.0	3.2
주거 형태	동 거 (1,160)	0.7	13.9	49.8	35.6	3.2
	비 동 거 / 독 립 (778)	2.2	27.9	44.3	25.7	2.9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576)	1.0	11.8	49.6	37.7	3.2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1.5	11.9	53.1	33.5	3.2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1.2	24.2	45.8	28.8	3.0
	비 임금 근로자 (142)	2.7	31.5	43.0	22.9	2.9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1,580)	0.9	15.9	49.2	34.0	3.2
	배 우 자 있 음 (358)	3.1	36.6	40.2	20.1	2.8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이어서 비슷한 질문으로 청년기를 “탐색하고 탐험하는 시기”로 보는 응답 결과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 질문은 “가능성이 많은 시기”로 보는 결과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성별 차이가 거의 없었고 연령집단별로 보면 동의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생의 동의비율이 높았고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에 동의비율이 높았고 임금 근로자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동의비율이 높았다.

두 질문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도시규모와 경제수준이었다. 도시규모를 살펴 보면, 대도시인 경우 동의비율이 높았고 잘 산다고 응답한 경우 동의비율이 높았다. 경제수준 응답 결과가 흥미로운데 가능성이라는 응답은 못 산다고 응답한 경우에 높았고 탐색과

탐험이라는 응답은 잘 산다고 응답한 경우에 높았다, 유사한 관점을 물어본 질문이지만 하위소득계층에서는 가능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는데 비해서 상위소득계층에서는 탐색과 탐험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II-10. 청년기에 대한 정의 - (3)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명, %)

구분		사례수	시기 상 현재 삶의 의미				평균 (점/4점 만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	거의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전체		(1,938)	0.7	12.2	52.4	34.7	3.2
성별	남 자	(1,002)	0.6	13.0	51.9	34.5	3.2
	여 자	(936)	0.7	11.4	53.0	34.9	3.2
연령	만 19 ~ 24 세	(634)	0.5	15.5	53.5	30.5	3.1
	만 25 ~ 29 세	(663)	0.8	12.7	51.4	35.2	3.2
	만 30 ~ 34 세	(641)	0.7	8.6	52.4	38.2	3.3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0.6	11.5	50.4	37.5	3.3
	중 소 도 시	(434)	0.8	11.5	61.2	26.5	3.1
	농 어 촌	(321)	1.0	15.8	47.8	35.4	3.2
학력	고 졸 이 하	(494)	0.5	10.9	54.2	34.4	3.2
	대학/대학원 재학	(445)	0.8	14.1	53.2	32.0	3.2
	대 졸 이 상	(999)	0.7	12.1	51.1	36.1	3.2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0.3	14.7	48.5	36.5	3.2
	보 통	(1,032)	0.8	12.2	54.3	32.8	3.2
	잘 산 다	(652)	0.7	11.3	51.0	37.1	3.2
주거 형태	동 거	(1,160)	0.6	13.6	50.8	35.0	3.2
	비 동 거 / 독 립	(778)	0.8	10.3	54.7	34.2	3.2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576)	0.8	13.7	54.2	31.3	3.2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0.4	14.6	50.2	34.9	3.2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0.6	11.0	53.2	35.2	3.2
	비 임금 근로자	(142)	1.3	10.9	43.4	44.4	3.3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1,580)	0.5	13.1	51.2	35.2	3.2
	배 우 자 있 음	(358)	1.4	8.5	57.6	32.5	3.2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이어서 청년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청년기를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로 응답한 결과를 보면, 성별이나 학력별, 경제수준이나 주거형태, 혼인상태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고 연령별로는 나이가 들수록 높게 나타났다. 도시규모별로는 대도시인 경우에, 일자리형태별로는 비임금근로자인 경우에 동의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압박을 받는 시기”는 같은 부정적인 질문이지만 조금은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의 동의비율이 높았고 도시 규모별로는 대도시보다는 농어촌이 높았다. 경제수준별로는 ‘잘산다’로 응답한 청년의 동의비율이 높았고 주거형태별로는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에 동의비율이 높았다.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표 III-11. 청년기에 대한 정의 - (4) 압박을 많이 받는 시기(명, %)

구분	사례수	시기 상 현재 삶의 의미				평균 (점/4점 만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	거의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전체	(1,938)	1.6	20.2	50.4	27.9	3.1
성별	남 자 (1,002)	1.2	20.1	49.5	29.2	3.1
	여 자 (936)	2.0	20.2	51.4	26.4	3.0
연령	만 19 ~ 24 세 (634)	1.5	23.4	49.2	25.8	3.0
	만 25 ~ 29 세 (663)	2.0	19.8	50.7	27.5	3.0
	만 30 ~ 34 세 (641)	1.2	17.4	51.1	30.3	3.1
도시규모	대 도시 (1,183)	1.9	19.5	51.2	27.4	3.0
	중 소 도시 (434)	1.0	20.4	54.0	24.7	3.0
	농 어 촌 (321)	1.4	22.1	42.5	34.0	3.1
학력	고 졸 이 하 (494)	1.7	18.2	48.6	31.6	3.1
	대학/대학원 재학 (445)	1.4	23.3	47.1	28.2	3.0
	대 졸 이 상 (999)	1.6	19.8	52.7	25.8	3.0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1.3	21.7	47.1	30.0	3.1
	보 통 (1,032)	1.5	22.0	51.3	25.2	3.0
	잘 산 다 (652)	1.8	16.5	50.2	31.5	3.1
주거 형태	동 거 (1,160)	1.5	20.2	50.2	28.0	3.1
	비 동 거 / 독 립 (778)	1.7	20.1	50.5	27.7	3.0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576)	2.3	21.5	50.0	26.1	3.0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1.4	15.5	53.1	29.9	3.1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1.0	21.4	49.6	28.0	3.1
혼인상태	비 임 금 근 로 자 (142)	2.9	14.0	52.4	30.7	3.1
	배 우 자 없 음 (1,580)	1.5	20.5	50.0	27.9	3.0
	배 우 자 있 음 (358)	1.8	18.7	51.8	27.7	3.1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다음으로 청년기를 불확실한 것을 결정하는 시기로 보는 관점에 대한 질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나를 정의하고 규정하는 시기”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20대 초반인 경우에 동의비율이 높았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

중인 경우, 잘 산다고 응답했거나 부모와 동거 중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자리가 없거나 비정규직인 경우 동의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자리가 없는 학생이거나 아르바이트와 같이 아직 본업을 정하지 못한 청년일수록 나를 정의하고 규정하는 시기로 청년기를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Ⅲ-12. 청년기에 대한 정의 - (5) 나를 정의하고 규정하는 시기(명, %)

구분	사례수	시기 상 현재 삶의 의미				평균 (점/4점 만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	거의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전체	(1,938)	1.0	19.1	53.6	26.3	3.1
성별	남 자 (1,002)	1.0	19.7	53.0	26.3	3.1
	여 자 (936)	1.0	18.6	54.1	26.3	3.1
연령	만 19 ~ 24 세 (634)	0.5	14.4	56.3	28.9	3.1
	만 25 ~ 29 세 (663)	0.8	20.2	54.7	24.3	3.0
	만 30 ~ 34 세 (641)	1.6	22.7	49.8	25.9	3.0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1.1	16.2	52.6	30.2	3.1
	중 소 도 시 (434)	1.1	27.6	52.3	18.9	2.9
	농 어 촌 (321)	0.6	18.6	58.7	22.2	3.0
학력	고 졸 이 하 (494)	1.4	18.0	57.4	23.2	3.0
	대학/대학원 재학 (445)	0.7	13.6	54.2	31.5	3.2
	대 졸 이 상 (999)	0.9	22.3	51.2	25.6	3.0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0.9	20.6	55.5	23.0	3.0
	보 통 (1,032)	1.1	19.8	55.4	23.7	3.0
	잘 산 다 (652)	0.8	17.4	49.6	32.1	3.1
주거 형태	동 거 (1,160)	0.7	16.7	56.0	26.7	3.1
	비 동 거 / 독 립 (778)	1.5	22.7	50.1	25.8	3.0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576)	0.4	17.3	54.5	27.8	3.1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1.6	14.1	59.1	25.2	3.1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1.0	21.3	52.1	25.6	3.0
혼인상태	비 임 금 근 로 자 (142)	2.2	20.1	50.8	26.9	3.0
	배 우 자 없 음 (1,580)	0.7	17.3	54.6	27.4	3.1
	배 우 자 있 음 (358)	2.2	27.6	49.0	21.2	2.9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정하는 시기”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이 어릴수록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잘 산다고 응답한 경우, 부모와 동거 중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동의비율이 높았다. 일자리형태를 보면,

임금근로자로 비정규직인 경우에 동의비율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나를 정의하고 규정하는 시기”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Ⅲ-13. 청년기에 대한 정의 - (6)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결정하는 시기(명, %)

구분	사례수	시기 상 현재 삶의 의미				평균 (점/4점 만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	거의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전체	(1,938)	1.1	15.1	53.8	30.0	3.1
성별	남 자 (1,002)	1.0	16.9	52.3	29.8	3.1
	여 자 (936)	1.1	13.1	55.5	30.3	3.2
연령	만 19 ~ 24 세 (634)	0.5	10.7	57.2	31.6	3.2
	만 25 ~ 29 세 (663)	1.3	15.3	54.7	28.7	3.1
	만 30 ~ 34 세 (641)	1.4	19.1	49.6	29.9	3.1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1.1	11.6	52.5	34.8	3.2
	중 소 도 시 (434)	1.0	23.5	55.4	20.1	3.0
	농 어 촌 (321)	0.9	16.3	56.4	26.4	3.1
학력	고 졸 이 하 (494)	1.1	16.6	54.0	28.2	3.1
	대학/대학원 재학 (445)	0.5	10.2	53.2	36.1	3.3
	대 졸 이 상 (999)	1.3	16.5	54.0	28.2	3.1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0.4	18.3	59.5	21.7	3.0
	보 통 (1,032)	1.3	14.8	55.9	28.0	3.1
	잘 산 다 (652)	0.9	14.2	47.8	37.1	3.2
주거 형태	동 거 (1,160)	0.8	12.9	53.9	32.4	3.2
	비 동 거 / 독 립 (778)	1.4	18.3	53.7	26.6	3.1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576)	1.2	14.2	54.3	30.4	3.1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2.1	10.2	57.1	30.5	3.2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0.8	16.6	52.9	29.8	3.1
혼인상태	비 임 금 근 로 자 (142)	0.5	16.7	52.8	30.0	3.1
	배 우 자 없 음 (1,580)	0.8	13.6	54.2	31.4	3.2
	배 우 자 있 음 (358)	2.1	22.1	52.0	23.9	3.0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마지막으로 청년기를 이행기의 특성으로 보는 관점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부분은 “한편으로 성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렇지 않은 시기”라는 질문과 “조금 씩 성인이 되어가는 시기”라는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의 질문은 청년기의 경계에 존재한다는 정적인 관점을, 뒤의 질문은 점차 성인으로 바뀌어 간다는 동적인 관점을 대변한다.

먼저 정적인 관점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연령집단별로 어릴수록 동의비율이 높았고 대도시인 경우,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못산다고 응답한 경우,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일자리가 없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동의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20대 초반 청년기에 진입하는 학생이자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인 경우 경계에 위치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를 졸업하고 아직 사회초년생으로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계성으로 보는 시각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14. 청년기에 대한 정의 - (7) 한편으로는 성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시기(%)

구분		사례수	시기 상 현재 삶의 의미				평균 (점/4점 만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	거의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전체		(1,938)	5.1	26.3	48.6	20.0	2.8
성별	남 자	(1,002)	5.6	27.0	47.8	19.6	2.8
	여 자	(936)	4.6	25.5	49.6	20.4	2.9
연령	만 19 ~ 24 세	(634)	1.9	19.1	52.8	26.1	3.0
	만 25 ~ 29 세	(663)	3.4	27.0	52.0	17.6	2.8
	만 30 ~ 34 세	(641)	10.0	32.5	41.1	16.4	2.6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5.4	22.1	50.5	22.0	2.9
	중 소 도 시	(434)	4.2	34.0	46.5	15.3	2.7
	농 어 촌	(321)	5.3	30.9	44.8	19.0	2.8
학력	고 졸 이 하	(494)	7.1	26.5	47.1	19.2	2.8
	대학/대학원 재학	(445)	2.5	16.8	51.1	29.6	3.1
	대 졸 이 상	(999)	5.3	30.4	48.3	16.0	2.8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5.8	21.9	52.1	20.2	2.9
	보 통	(1,032)	5.9	27.1	48.9	18.1	2.8
	잘 산 다	(652)	3.5	26.9	46.7	22.9	2.9
주거 형태	동 거	(1,160)	3.8	22.3	51.2	22.6	2.9
	비 동 거 / 독 립	(778)	7.0	32.0	44.9	16.1	2.7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576)	2.8	20.6	51.6	25.0	3.0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2.4	25.2	49.9	22.5	2.9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6.8	28.9	47.8	16.6	2.7
	비 임금 근로자	(142)	7.4	32.7	40.3	19.6	2.7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1,580)	3.9	23.7	51.0	21.4	2.9
	배 우 자 있 음	(358)	10.6	38.1	37.8	13.5	2.5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표 III-15. 청년기에 대한 정의 - (8) 조금씩 성인이 되어가는 시기(명, %)

구분	사례수	시기 상 현재 삶의 의미				평균 (점/4점 만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	거의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전체	(1,938)	4.6	17.8	52.4	25.2	3.0
성별	남 자 (1,002)	5.2	18.9	51.9	24.0	3.0
	여 자 (936)	4.0	16.5	53.0	26.6	3.0
연령	만 19 ~ 24 세 (634)	1.3	9.2	57.8	31.6	3.2
	만 25 ~ 29 세 (663)	2.8	19.9	53.0	24.3	3.0
	만 30 ~ 34 세 (641)	9.6	23.9	46.4	20.0	2.8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4.9	15.1	53.5	26.5	3.0
	중 소 도 시 (434)	4.2	24.2	50.4	21.3	2.9
	농 어 촌 (321)	3.9	18.9	51.1	26.1	3.0
학력	고 졸 이 하 (494)	6.1	18.5	51.9	23.5	2.9
	대학/대학원 재학 (445)	1.7	9.2	54.0	35.1	3.2
	대 졸 이 상 (999)	5.1	21.3	51.9	21.7	2.9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4.2	13.9	55.7	26.2	3.0
	보 통 (1,032)	5.1	18.7	52.5	23.8	3.0
	잘 산 다 (652)	3.9	18.0	50.8	27.3	3.0
주거 형태	동 거 (1,160)	3.3	13.5	55.2	27.9	3.1
	비 동 거 / 독 립 (778)	6.4	23.9	48.3	21.4	2.9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576)	2.2	12.3	54.6	30.9	3.1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1.9	14.8	52.6	30.7	3.1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6.3	20.5	52.1	21.1	2.9
	비 임금 근로자 (142)	6.9	25.3	45.4	22.4	2.8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1,580)	3.5	15.3	54.2	26.9	3.0
	배 우 자 있 음 (358)	9.4	28.9	43.9	17.8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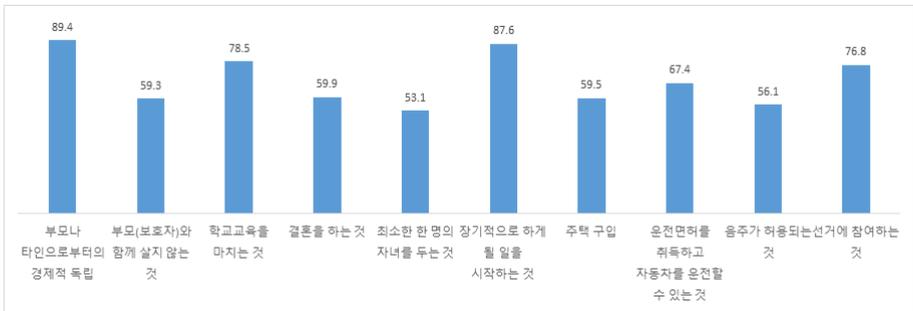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이어서 동적인 관점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응답결과가 정적인 관점에 대한 응답과 유사했다. 정적이든, 동적이든 이행기로 보는 시각은 20대 초반으로 아직 사회 첫 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 있는 청년의 관점을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얻고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부모로부터 분가를 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시점에서 자신의 현 상태를 이행기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국제적으로 볼 때 청년정책은 이행기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20대 초반이 정책의 핵심 대상임을 알 수 있고 이행기로 보는 시각은 20대 초반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각각의 이행기 사건인 졸업, 취업, 분가, 결혼,

출산 등은 개인별로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행을 핵심으로 다룬다고 해도 대상 연령을 20대 초반으로 국한하기 어렵다. 10대 후반기에 취업을 하는 직업계고 졸업생이 있는가 하면 20대 후반에 대학원 석사를 마치고 취업을 하려는 대학원생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년정책의 연령 정의를 생물학적 연령이 아니라 사회적 연령(social age)으로 보아야 한다는 지적도 존재한다(김기현, 2018).

아넷 등이 측정한 문항 중에서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성인의 기준을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2021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준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했는데 2022년과 2023년 청년 사회 첫 출발실태조사에서는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했다.

10가지 성인의 기준에 대해서 약간 중요하다고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로 살펴보면, “부모나 타인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비율이 89.4%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장기적으로 하게 될 일을 시작하는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87.6%로 두 번째로 높았다. 성인으로서 권리를 갖는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에서는 아넷 등이 제안한 문항과 함께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추가하였는데 이 질문에 대한 응답비율이 76.8%로 “학교교육을 마치는 것”에 이어서 네 번째로 높았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응답비율은 67.4%였고 “음주가 허용되는 것”은 56.1%로 “최소한 한 명의 자녀를 갖는 것”(53.1%)에 이어 두 번째로 응답비율이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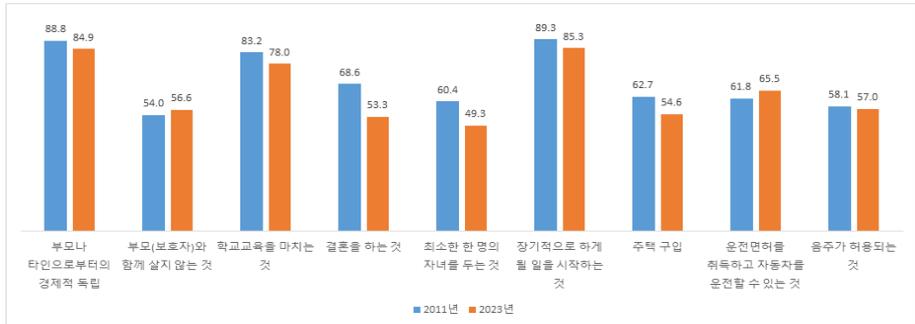


주) 약간 및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임.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그림 III-3. 청년(19-34세)이 생각하는 중요한 성인의 기준(% , 2023)

이 질문 역시 안선영 외(2011)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어 2011년과 2023년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2011년에 비해서 2023년 응답비율이 증가한 것은 “부모(보호자)와 함께 살지 않는 것”(54.0%→56.6%)과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61.8%→65.5%)의 두 가지 질문이었고 나머지 질문들은 2011년도에 비해 2023년에 중요하다는 응답비율이 낮아졌다. 성인으로서의 권리와 관련된 또 다른 질문인 “음주가 허용되는 것”이라는 응답비율은 2011년(58.1%)과 2023년(57.0%) 큰 차이가 없었다.

가장 크게 응답비율이 낮아진 것은 “결혼을 하는 것”으로 68.6%에서 53.3%로 15.3%p나 낮아졌다. 이어서 응답비율이 낮아진 것은 “최소한 한 명의 자녀를 갖는 것”으로 11.1%p나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더 이상 청년들이 결혼이나 출산을 의무적인 성인기 이행 과정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해준다.



주) 2011년 조사 대상은 19-24세로 연령을 통일하였으며 4점 척도의 평균값임.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그림 Ⅲ-4. 청년(19-24세)이 생각하는 중요한 성인의 기준 응답결과 비교(% , 2011/2023)

이 질문들에 대해서 각 질문 문항별로 응답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중요하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던 “부모나 타인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에 대한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들수록 응답비율이 높아졌고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대졸 이상인 경우,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응답한 경우, 부모와 함께 살지 않거나 독립해서 생활하는 경우, 임금근로자로 정규직으로 일하거나 비임금근로자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응답비율이 높았다. 대체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성인으로서 경제적 독립을 하는 것을 중요한 성인의 기준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6. 성인으로서 첫 출발의 상징 - (1) 부모나 타인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명, %)

구분	사례수	성인으로서 첫 출발의 상징				평균 (점/4점 만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약간 중요함	매우 중요함	
전체	(1,938)	0.8	9.8	54.7	34.7	3.2
성별	남 자 (1,002)	0.9	10.5	52.5	36.0	3.2
	여 자 (936)	0.6	9.0	57.2	33.2	3.2
연령	만 19 ~ 24 세 (634)	1.3	13.8	56.2	28.7	3.1
	만 25 ~ 29 세 (663)	0.6	9.5	58.3	31.6	3.2
	만 30 ~ 34 세 (641)	0.4	6.2	49.6	43.8	3.4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0.8	8.6	56.9	33.8	3.2
	중 소 도 시 (434)	0.8	11.6	54.1	33.4	3.2
	농 소 촌 (321)	0.8	11.7	47.7	39.7	3.3
학력	고 졸 이 하 (494)	1.1	12.0	51.2	35.7	3.2
	대학/대학원 재학 (445)	1.1	12.1	56.2	30.7	3.2
	대 졸 이 상 (999)	0.5	7.6	56.0	36.0	3.3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0.4	13.7	50.8	35.1	3.2
	보 통 (1,032)	0.8	10.2	55.6	33.4	3.2
	잘 산 다 (652)	0.9	7.4	55.0	36.7	3.3
주거 형태	동 거 (1,160)	1.2	12.1	58.0	28.6	3.1
	비 동 거 / 독 립 (778)	0.1	6.4	49.9	43.6	3.4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576)	1.0	11.3	52.9	34.8	3.2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1.2	14.7	54.8	29.4	3.1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0.7	7.8	56.0	35.6	3.3
	비 임금 근로자 (142)	0.0	9.6	53.4	37.0	3.3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1,580)	0.9	10.8	56.4	31.9	3.2
	배 우 자 있 음 (358)	0.3	5.1	47.1	47.5	3.4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것”이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30대 초반이거나 대졸이상인 경우, 경제 수준이 잘 산다고 응답한 경우,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거나 독립해서 생활하는 경우, 비임금 근로자인 경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독립과 관련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문제와 거주 공간을 달리해 분가하는 문제로 나누어서 물어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문항에 대한 청년들의 답변 결과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역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모와 같이 거주하지 않고 결혼을 해서 분가한 경우에 중요하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III-17. 성인으로서 첫 출발의 상징 - (2) 부모(보호자)와 함께 살지 않는 것(명, %)

구분	사례수	성인으로서 첫 출발의 상징				평균 (점/4점 만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약간 중요함	매우 중요함	
전체	(1,938)	4.7	35.9	36.9	22.5	2.8
성별	남 자 (1,002)	5.0	36.3	37.6	21.0	2.8
	여 자 (936)	4.4	35.5	36.1	24.1	2.8
연령	만 19 ~ 24 세 (634)	6.5	36.9	37.1	19.5	2.7
	만 25 ~ 29 세 (663)	4.8	38.1	35.0	22.2	2.7
	만 30 ~ 34 세 (641)	2.9	32.8	38.6	25.7	2.9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3.8	32.6	38.9	24.6	2.8
	중 소 도 시 (434)	7.6	46.3	28.8	17.3	2.6
	농 어 촌 (321)	4.1	34.1	40.3	21.5	2.8
학력	고 졸 이 하 (494)	4.0	32.9	37.5	25.6	2.9
	대학/대학원 재학 (445)	6.7	36.4	38.9	18.0	2.7
	대 졸 이 상 (999)	4.2	37.3	35.6	22.8	2.8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5.5	35.6	38.6	20.3	2.7
	보 통 (1,032)	5.2	37.9	36.8	20.1	2.7
	잘 산 다 (652)	3.6	32.8	36.2	27.4	2.9
주거 형태	동 거 (1,160)	5.9	39.3	35.4	19.4	2.7
	비 동 거 / 독 립 (778)	3.0	31.0	39.1	26.9	2.9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576)	5.9	35.9	35.5	22.7	2.8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8.2	39.9	33.7	18.2	2.6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3.4	36.2	37.3	23.0	2.8
	비 임 금 근 로 자 (142)	3.1	27.8	44.7	24.5	2.9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1,580)	5.3	37.2	36.4	21.1	2.7
	배 우 자 있 음 (358)	2.1	30.0	39.1	28.8	3.0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성인기 이행의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인 학교 졸업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자인 경우에 중요하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집단별 차이는 크지 않았고 도시규모별로는 농어촌인 경우에 응답비율이 높았다. 학력별로는 고졸보다는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 혹은 대졸인 경우에 응답비율이 높았다. 경제수준별로는 못 산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낮았고 잘 산다고 응답한 경우에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일자리형태별로는 일자리가 없는 청년의 경우에 응답비율이 높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없는 경우보다 응답비율이 높았다.

표 III-18. 성인으로서 첫 출발의 상징 - (3) 학교교육을 마치는 것(명, %)

구분	사례수	성인으로서 첫 출발의 상징				평균 (점/4점 만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약간 중요함	매우 중요함	
전체	(1,938)	2.4	19.1	43.1	35.4	3.1
성별	남 자 (1,002)	3.0	20.6	41.1	35.2	3.1
	여 자 (936)	1.7	17.5	45.3	35.5	3.2
연령	만 19 ~ 24 세 (634)	2.7	19.3	41.8	36.1	3.1
	만 25 ~ 29 세 (663)	2.9	19.7	43.2	34.2	3.1
	만 30 ~ 34 세 (641)	1.6	18.4	44.2	35.9	3.1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2.1	14.0	42.0	41.8	3.2
	중 소 도 시 (434)	3.0	29.2	44.1	23.7	2.9
	농 소 촌 (321)	2.6	24.0	45.6	27.8	3.0
학력	고 졸 이 하 (494)	3.7	24.8	40.3	31.2	3.0
	대학/대학원 재학 (445)	3.1	15.5	41.1	40.2	3.2
	대 졸 이 상 (999)	1.4	17.8	45.4	35.4	3.2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4.7	24.5	38.2	32.6	3.0
	보 통 (1,032)	2.2	18.9	45.1	33.9	3.1
	잘 산 다 (652)	1.8	17.2	41.9	39.1	3.2
주거 형태	동 거 (1,160)	2.6	17.7	44.3	35.4	3.1
	비 동 거 / 독 립 (778)	2.1	21.3	41.3	35.3	3.1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576)	2.8	15.6	41.3	40.3	3.2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3.1	24.0	44.6	28.3	3.0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2.0	19.6	44.3	34.1	3.1
	비 임금 근로자 (142)	2.3	21.9	39.5	36.2	3.1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1,580)	2.8	19.3	43.3	34.7	3.1
	배 우 자 있 음 (358)	0.7	18.6	42.0	38.7	3.2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이어서 최근 들어 성인의 기준으로 잘 보지 않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결혼과 관련하여 성별로 보면, 평균점수는 2.7점으로 동일했으나 약간과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자의 경우 61.5%였고 여자의 경우 58.1%로 남자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초반이 2.6점으로 가장 낮았고 30대 초반이 2.8점으로 가장 높았다. 도시규모별로는 대도시에서 중요하다는 응답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났고 잘 산다고 응답한 경우에,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에, 일자리가 정규직이거나 비임금근로자인 경우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표 III-19. 성인으로서 첫 출발의 상징 - (4) 결혼을 하는 것(명, %)

구분	사례수	성인으로서 첫 출발의 상징				평균 (점/4점 만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약간 중요함	매우 중요함	
전체	(1,938)	10.1	30.0	40.3	19.6	2.7
성별	남 자 (1,002)	9.2	29.3	41.3	20.2	2.7
	여 자 (936)	11.1	30.8	39.2	18.9	2.7
연령	만 19 ~ 24 세 (634)	12.5	34.2	37.8	15.5	2.6
	만 25 ~ 29 세 (663)	10.6	30.2	40.2	18.9	2.7
	만 30 ~ 34 세 (641)	7.2	25.7	42.9	24.2	2.8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8.4	28.0	42.0	21.6	2.8
	중 소 도 시 (434)	12.0	34.5	39.9	13.6	2.6
	농 소 촌 (321)	13.7	31.1	34.7	20.5	2.6
학력	고 졸 이 하 (494)	9.4	26.8	42.8	21.0	2.8
	대학/대학원 재학 (445)	13.2	34.0	36.6	16.3	2.6
	대 졸 이 상 (999)	9.1	29.9	40.7	20.4	2.7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15.5	32.2	33.6	18.7	2.6
	보 통 (1,032)	10.2	30.6	40.5	18.7	2.7
	잘 산 다 (652)	7.6	27.9	43.0	21.5	2.8
주거 형태	동 거 (1,160)	10.6	32.9	39.5	17.0	2.6
	비 동 거 / 독 립 (778)	9.5	25.7	41.4	23.4	2.8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576)	13.0	31.4	38.8	16.8	2.6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13.8	30.9	33.1	22.2	2.6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7.9	29.5	41.7	20.9	2.8
	비 임 금 근 로 자 (142)	7.8	26.5	48.4	17.3	2.8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1,580)	11.3	33.1	38.8	16.8	2.6
	배 우 자 있 음 (358)	4.7	15.9	47.1	32.2	3.1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출산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최소한 한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비율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높았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들수록 응답비율이 높았고 도시 규모별로는 대도시인 경우, 학력별로는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 중인 경우, 경제수준이 보통이거나 잘 산다고 응답한 경우,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정규직이거나 비임금 근로자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응답비율이 높았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응답 결과를 비교해 보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0. 성인으로서 첫 출발의 상징 - (5) 최소한 한 명의 자녀를 두는 것(명, %)

구분	사례수	성인으로서 첫 출발의 상징				평균 (점/4점 만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약간 중요함	매우 중요함	
전체	(1,938)	12.9	34.0	36.6	16.5	2.6
성별	남 자 (1,002)	11.9	34.4	36.7	17.0	2.6
	여 자 (936)	14.1	33.4	36.5	16.0	2.5
연령	만 19 ~ 24 세 (634)	14.8	35.9	35.7	13.5	2.5
	만 25 ~ 29 세 (663)	13.7	34.5	35.2	16.6	2.6
	만 30 ~ 34 세 (641)	10.3	31.5	38.8	19.4	2.7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11.5	31.2	38.9	18.3	2.6
	중 소 도 시 (434)	14.3	41.8	30.2	13.8	2.4
	농 소 촌 (321)	16.0	33.3	36.8	13.9	2.5
학력	고 졸 이 하 (494)	10.8	31.3	38.7	19.3	2.7
	대학/대학원 재학 (445)	15.8	35.2	35.7	13.2	2.5
	대 졸 이 상 (999)	12.7	34.8	35.9	16.6	2.6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19.8	35.5	30.9	13.8	2.4
	보 통 (1,032)	12.6	34.0	37.1	16.3	2.6
	잘 산 다 (652)	10.3	33.3	38.3	18.1	2.6
주거 형태	동 거 (1,160)	13.8	34.7	36.8	14.8	2.5
	비 동 거 / 독 립 (778)	11.7	32.9	36.3	19.1	2.6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576)	16.2	33.9	35.8	14.2	2.5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15.8	34.1	35.4	14.7	2.5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10.7	33.5	37.7	18.1	2.6
	비 임금 근로자 (142)	10.2	37.4	34.4	18.0	2.6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1,580)	14.5	35.4	35.3	14.8	2.5
	배 우 자 있 음 (358)	5.7	27.4	42.4	24.4	2.9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첫 취업은 20대 초반에게 질문했을 때 가장 중요한 성인의 기준이었고 2011년이나 2023년이나 이러한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여기에서는 “장기적으로 하게 될 일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물었는데 성별이나 결혼 유무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 반면 연령별로는 20대 초반의 응답비율이 낮았다. 도시 규모별로는 대도시인 경우에 응답비율이 높았다. 학력별로는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가 고졸이나 대졸보다 응답비율이 낮았다. 경제수준별로는 못 산다고 응답한 경우 중요하다는 응답비율이 낮았다. 일자리형태별로는 정규직이거나 비임금 근로자인 경우 응답비율이 높았다.

표 III-21. 성인으로서 첫 출발의 상징 - (6) 장기적으로 하게 될 일을 시작하는 것(명, %)

구분	사례수	성인으로서 첫 출발의 상징				평균 (점/4점 만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약간 중요함	매우 중요함	
전체	(1,938)	1.7	10.7	45.9	41.7	3.3
성별	남 자 (1,002)	1.7	9.3	46.0	43.0	3.3
	여 자 (936)	1.8	12.2	45.8	40.2	3.3
연령	만 19 ~ 24 세 (634)	2.2	12.4	46.1	39.2	3.2
	만 25 ~ 29 세 (663)	1.5	9.7	47.3	41.5	3.3
	만 30 ~ 34 세 (641)	1.5	9.8	44.3	44.3	3.3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1.1	9.4	43.9	45.5	3.3
	중 소 도 시 (434)	2.7	12.8	50.9	33.6	3.2
	농 어 촌 (321)	2.6	12.1	46.5	38.8	3.2
학력	고 졸 이 하 (494)	1.6	11.1	46.1	41.1	3.3
	대학/대학원 재학 (445)	2.9	10.5	45.6	40.9	3.2
	대 졸 이 상 (999)	1.2	10.5	45.9	42.4	3.3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2.6	13.2	43.8	40.5	3.2
	보 통 (1,032)	2.0	8.3	47.5	42.2	3.3
	잘 산 다 (652)	0.8	13.5	44.3	41.3	3.3
주거 형태	동 거 (1,160)	2.0	11.2	45.8	41.0	3.3
	비 동 거 / 독 립 (778)	1.4	9.9	46.1	42.6	3.3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576)	2.7	11.5	47.7	38.1	3.2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2.5	11.9	45.2	40.4	3.2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0.8	9.8	45.7	43.8	3.3
	비 임금 근로자 (142)	3.2	11.2	42.2	43.4	3.3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1,580)	1.9	11.0	45.9	41.2	3.3
	배 우 자 있 음 (358)	1.0	9.2	46.0	43.8	3.3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이어서 “주택 구입”을 중요한 성인의 기준으로 보는 질문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택 구입은 결혼이나 출산에 이어 2011년과 비교해 가장 크게 응답비율이 감소한 경우인데 이는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구입 자체가 더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들수록 주택 구입이 중요하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도시규모별로는 대도시인 경우에,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인 경우에 응답비율이 높았다. 경제수준별로는 잘 산다고 응답한 경우에, 주거 형태별로는 부모와 독립한 경우에 응답비율이 높았다. 일자리 형태별로는 임금 근로자로 정규직인 경우나 비임금 근로자인 경우에 높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응답비율이 높았다.

표 III-22. 성인으로서 첫 출발의 상징 - (7) 주택 구입(명, %)

구분		사례수	성인으로서 첫 출발의 상징				평균 (점/4점 만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약간 중요함	매우 중요함	
전체		(1,938)	7.1	33.4	39.4	20.1	2.7
성별	남 자	(1,002)	7.2	33.4	37.4	21.9	2.7
	여 자	(936)	6.9	33.4	41.6	18.1	2.7
연령	만 19 ~ 24 세	(634)	7.9	37.5	37.5	17.1	2.6
	만 25 ~ 29 세	(663)	8.6	33.6	38.3	19.5	2.7
	만 30 ~ 34 세	(641)	4.7	29.3	42.2	23.8	2.9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5.2	28.9	44.1	21.8	2.8
	중 소 도 시	(434)	10.0	46.1	30.6	13.4	2.5
	농 어 촌	(321)	10.0	32.9	34.1	23.1	2.7
학력	고 졸 이 하	(494)	6.8	29.6	40.7	22.9	2.8
	대학/대학원 재학	(445)	8.8	36.8	36.4	18.0	2.6
	대 졸 이 상	(999)	6.4	33.9	40.0	19.7	2.7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10.8	36.6	36.4	16.2	2.6
	보 통	(1,032)	7.5	33.8	38.9	19.8	2.7
	잘 산 다	(652)	4.8	31.3	41.5	22.4	2.8
주거 형태	동 거	(1,160)	7.4	34.5	38.0	20.1	2.7
	비 동 거 / 독 립	(778)	6.6	31.8	41.3	20.2	2.8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576)	8.8	32.9	39.8	18.4	2.7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11.3	42.2	30.2	16.3	2.5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5.0	31.6	42.3	21.1	2.8
	비 임금 근로자	(142)	7.7	33.3	32.6	26.4	2.8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1,580)	7.8	34.9	38.0	19.2	2.7
	배 우 자 있 음	(358)	3.7	26.5	45.5	24.3	2.9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성인으로서의 권리와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결과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이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여자보다는 남자가 응답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 초반의 응답결과가 높았으며 도시규모별로는 중소도시인 경우에 응답비율이 낮았다. 학력별로는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 응답비율이 낮았다. 주거형태별로는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에 응답비율이 높았다. 경제수준별로는 잘 산다고 응답한 경우에, 일자리형태별로는 정규직이거나 비임금 근로자인 경우에, 마지막으로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응답비율이 높았다.

표 III-23. 성인으로서 첫 출발의 상징 - (8)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명, %)

구분	사례수	성인으로서 첫 출발의 상징				평균 (점/4점 만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약간 중요함	매우 중요함		
전체	(1,938)	4.6	28.1	45.8	21.6	2.8	
성별	남자	(1,002)	5.3	26.1	44.9	23.7	2.9
	여자	(936)	3.7	30.3	46.8	19.2	2.8
연령	만19~24세	(634)	5.5	29.0	45.7	19.8	2.8
	만25~29세	(663)	5.6	28.5	45.0	21.0	2.8
	만30~34세	(641)	2.6	26.6	46.7	24.0	2.9
도시규모	대도시	(1,183)	4.6	23.1	49.4	23.0	2.9
	중소도시	(434)	4.5	43.2	37.3	14.9	2.6
	농어촌	(321)	4.5	25.8	43.9	25.7	2.9
학력	고졸이하	(494)	3.8	29.5	44.2	22.6	2.9
	대학/대학원 재학	(445)	7.9	23.8	45.6	22.7	2.8
	대졸이상	(999)	3.4	29.2	46.7	20.7	2.9
경제 수준	못산다	(254)	5.2	36.7	39.5	18.5	2.7
	보통	(1,032)	4.8	28.3	47.1	19.8	2.8
	잘산다	(652)	3.9	23.9	46.3	25.9	2.9
주거 형태	동거	(1,160)	5.0	27.9	45.7	21.4	2.8
	비동거/독립	(778)	3.9	28.3	45.9	21.9	2.9
일자리 형태	일자리없음	(576)	6.3	28.5	44.6	20.6	2.8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5.7	30.7	43.7	19.9	2.8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3.7	26.8	47.5	21.9	2.9
	비임금근로자	(142)	1.2	30.3	42.2	26.3	2.9
혼인상태	배우자없음	(1,580)	5.1	27.9	45.9	21.1	2.8
	배우자있음	(358)	1.9	28.9	45.3	24.0	2.9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이어서 “음주가 허용되는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 살펴보면, 운전과 마찬가지로 여자보다는 남자의 응답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중반의 응답비율이 낮았고 이 질문 역시 30대 전반의 응답비율이 높았다. 도시규모별로 이 경우에도 중소도시인 경우에 응답비율이 낮았다. 경제수준이나 일자리형태, 혼인상태별 응답 결과는 운전과 동일했는데 주거 형태에서는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 응답비율이 높았다. 이처럼 운전 여부와 음주 여부처럼 특정 연령 때부터 허용여부가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경우 비슷한 응답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24. 성인으로서 첫 출발의 상징 - (9) 음주가 허용되는 것(명, %)

구분	사례수	성인으로서 첫 출발의 상징				평균 (점/4점 만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약간 중요함	매우 중요함	
전체	(1,938)	6.0	37.8	40.9	15.2	2.7
성별	남 자 (1,002)	6.8	36.2	40.5	16.4	2.7
	여 자 (936)	5.2	39.6	41.3	13.9	2.6
연령	만 19 ~ 24 세 (634)	6.3	36.7	41.9	15.1	2.7
	만 25 ~ 29 세 (663)	6.6	39.3	39.3	14.9	2.6
	만 30 ~ 34 세 (641)	5.2	37.5	41.5	15.8	2.7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6.2	35.9	41.3	16.6	2.7
	중 소 도 시 (434)	5.9	44.8	40.5	8.7	2.5
	농 어 촌 (321)	5.8	35.5	39.8	18.9	2.7
학력	고 졸 이 하 (494)	6.5	34.9	39.4	19.1	2.7
	대학/대학원 재학 (445)	6.8	36.9	42.2	14.2	2.6
	대 졸 이 상 (999)	5.5	39.8	41.1	13.7	2.6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8.6	38.1	38.2	15.1	2.6
	보 통 (1,032)	5.6	37.7	42.9	13.8	2.7
	잘 산 다 (652)	5.7	38.0	38.7	17.6	2.7
주거 형태	동 거 (1,160)	6.3	37.0	40.8	15.8	2.7
	비 동 거 / 독 립 (778)	5.7	39.0	40.9	14.4	2.6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576)	5.8	39.8	39.7	14.7	2.6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8.6	36.1	42.0	13.2	2.6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6.2	36.5	41.7	15.6	2.7
	비 임금 근로자 (142)	1.8	42.2	38.0	18.0	2.7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1,580)	6.5	37.3	41.2	15.1	2.7
	배 우 자 있 음 (358)	4.2	40.5	39.6	15.7	2.7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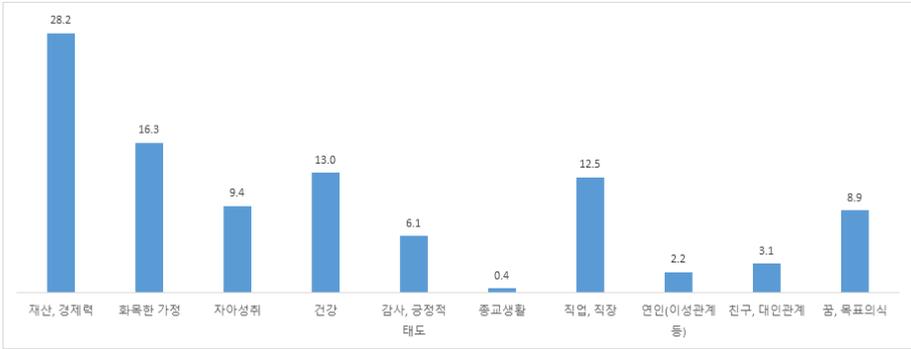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운전이나 음주처럼 특정 연령이 되면 주어지는 권리와는 달리 직접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권리로 차이가 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성별로는 앞선 운전이나 음주와는 달리 여자가 남자보다 중요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초반의 응답비율이 낮았다. 도시규모별로는 농어촌인 경우에 응답비율이 높았다. 학력별로는 재학 중인 경우보다 졸업한 경우에 응답비율이 높았다. 경제수준별로는 못 산다고 응답한 경우에 중요하다는 응답비율이 낮았다. 일자리형태별로는 일자리가 없는 경우에 응답비율이 낮았다.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응답비율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응답경향은 운전이나 음주와 유사했으나 성별 결과만 달랐다.

표 III-25. 성인으로서 첫 출발의 상징 - (10) 선거에 참여하는 것(명, %)

구분	사례수	성인으로서 첫 출발의 상징				평균 (점/4점 만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약간 중요함	매우 중요함	
전체	(1,938)	2.2	21.0	56.3	20.5	3.0
성별	남 자 (1,002)	2.4	21.8	55.5	20.3	2.9
	여 자 (936)	2.0	20.1	57.1	20.8	3.0
연령	만 19 ~ 24 세 (634)	2.3	23.5	54.5	19.7	2.9
	만 25 ~ 29 세 (663)	2.4	20.4	56.9	20.3	3.0
	만 30 ~ 34 세 (641)	1.9	19.2	57.3	21.6	3.0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2.1	19.6	56.0	22.3	3.0
	중 소 도 시 (434)	1.9	29.2	55.9	13.0	2.8
	농 어 촌 (321)	2.8	15.2	57.5	24.4	3.0
학력	고 졸 이 하 (494)	2.5	19.2	54.6	23.7	3.0
	대학/대학원 재학 (445)	2.5	22.9	55.5	19.1	2.9
	대 졸 이 상 (999)	1.9	21.1	57.4	19.5	3.0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1.6	25.8	50.1	22.5	2.9
	보 통 (1,032)	2.3	19.4	59.0	19.3	3.0
	잘 산 다 (652)	2.2	21.6	54.3	21.8	3.0
주거 형태	동 거 (1,160)	2.5	22.3	54.6	20.6	2.9
	비 동 거 / 독 립 (778)	1.8	19.1	58.7	20.4	3.0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576)	2.6	24.6	51.6	21.2	2.9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1.8	21.9	55.4	21.0	3.0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2.1	19.1	59.1	19.8	3.0
혼인상태	비 임 금 근 로 자 (142)	2.4	18.8	56.7	22.0	3.0
	배 우 자 없 음 (1,580)	2.4	21.6	56.1	19.9	2.9
	배 우 자 있 음 (358)	1.2	18.2	57.1	23.6	3.0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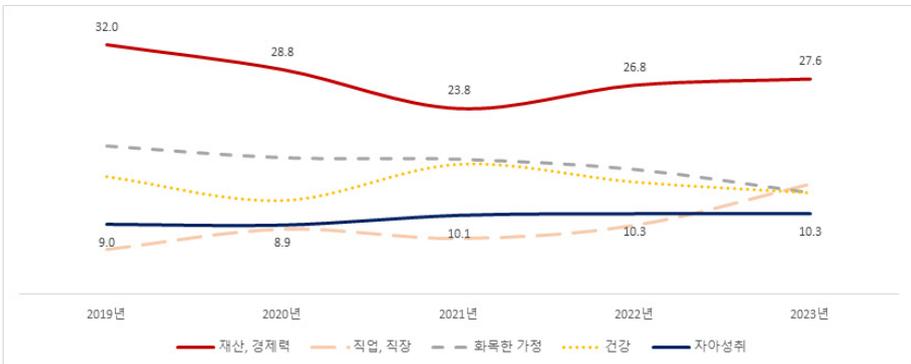
다음으로 청년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의 조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의 조건은 10가지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했다. 19-34세 청년들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재산, 경제력이라는 응답이 28.2%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화목한 가정이 16.3%였고 건강(13.0%)에 이어 직업, 직장(12.5%), 꿈, 목표의식(8.9%) 순이었다. 이 결과는 청년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는 얼마나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가가 더 행복한 조건으로 보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에서 소득불평등보다는 자산불평등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진정되고 있으나 대표적인 자산 축적 수단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청년들은 자기 집을 가지고 살아가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정도이다.



주) 행복한 삶의 조건에 대한 1순위 응답비율임.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그림 III-5. 청년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의 조건(%)

이 질문은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부터 포함되었다. 장기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19-34세 청년들의 재산, 경제력이라는 응답은 2019년 32.0%에서 꾸준히 낮아졌으나 2022년 들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 2023년에도 27.6%로 높아졌다. 재산, 경제력과 대비되는 행복조건이 자아성취의 경우 9.0%에서 10.0% 전후로 큰 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있으며 행복한 가정이나 건강은 감소세인데 반해 직업, 직장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주) 2023년 5가지 상위 응답을 기준으로 했으며 표본조사 대상 연령을 고려하여 19-29세 결과를 비교해 제시하였음.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그림 III-6. 청년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의 조건 주요 응답 연도별 추이(%)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에 대해서 성별로 보면, 재산·경제력이라는 응답은 남자가 여자보다 응답비율이 높았고 직업·직장이라는 응답 역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여자 청년은 남자 청년보다 화목한 가정이나 자아성취, 건강, 감사·긍정적 태도, 꿈·목표의식 등에서 더 높게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 초반의 경우 꿈·목표의식이라는 응답이 높았고 20대 중반은 자아성취 건강, 연인(이성관계 등)에 대한 응답이, 30대 초반은 화목한 가정과 재산·경제력과 감사·긍정적인 태도라는 응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II-26.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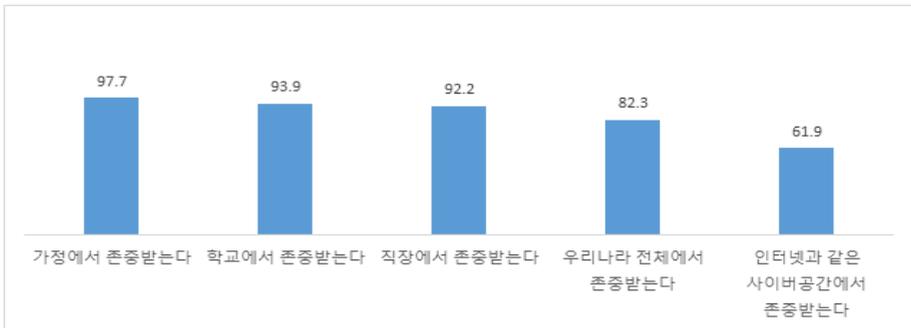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재산·경제력	화목한 가정	자아성취	건강	감사·긍정적 태도	종교생활	직업·직장	연인(이성관계 등)	친구·대인관계	꿈·목표의식	
전체	(1,938)	28.2	16.3	9.4	13.0	6.1	0.4	12.5	2.1	3.1	8.9	
성별	남 자	(1,002)	30.7	14.1	8.6	12.8	4.5	0.3	14.2	2.2	3.7	8.7
	여 자	(936)	25.3	18.6	10.3	13.2	8.0	0.5	10.6	2.1	2.4	9.1
연령	만 19 ~ 24 세	(634)	28.7	12.2	9.7	12.5	6.4	0.5	14.2	1.8	3.1	11.0
	만 25 ~ 29 세	(663)	26.6	13.7	11.0	13.6	4.9	0.5	14.2	2.7	3.9	9.0
	만 30 ~ 34 세	(641)	29.3	22.9	7.5	12.9	7.1	0.1	9.2	1.9	2.4	6.8
도시 규모	대 도 시	(1,183)	27.5	15.3	9.8	13.9	6.4	0.5	12.2	1.9	2.8	9.6
	중 소 도 시	(434)	25.3	16.4	11.0	12.4	5.2	0.2	14.9	2.6	3.4	8.5
	농 어 촌	(321)	34.2	19.7	5.7	10.3	6.3	0.0	10.6	2.5	3.8	6.9
학력	고 출 이 하	(494)	35.1	16.0	6.6	12.0	4.8	0.5	13.6	2.7	3.4	5.1
	대학/대학원 재학	(445)	26.2	12.8	10.8	13.3	6.7	0.6	12.6	1.6	3.2	12.2
	대 출 이 상	(999)	25.4	18.0	10.2	13.4	6.6	0.2	11.9	2.1	2.9	9.4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44.8	12.2	6.5	9.9	4.4	0.6	11.2	1.8	2.7	6.0
	보 통	(1,032)	27.6	17.5	8.9	12.3	6.8	0.6	12.8	1.8	3.7	8.0
	잘 산 다	(652)	21.6	16.1	11.5	15.5	5.8	0.0	12.6	2.8	2.4	11.7
주거 형태	동 거	(1,160)	27.4	11.1	9.7	12.6	6.4	0.5	15.0	2.7	3.8	10.8
	비 동 거 / 독 립	(778)	29.3	23.8	8.9	13.6	5.8	0.2	8.9	1.2	2.1	6.1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576)	27.6	15.6	9.1	15.5	6.2	0.4	10.8	1.4	2.9	10.3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29.4	11.1	11.6	10.5	5.2	1.0	18.1	2.0	3.3	7.8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26.5	17.7	9.5	12.6	6.2	0.3	12.3	2.8	3.4	8.6
혼인 상태	비 임 금 근 로 자	(142)	39.1	17.2	6.3	9.6	6.5	0.0	11.9	0.6	1.3	7.5
	배 우 자 없 음	(1,580)	28.6	10.5	10.7	13.3	6.2	0.4	14.1	2.5	3.6	10.3
	배 우 자 있 음	(358)	26.3	42.7	3.6	11.5	5.8	0.4	5.4	0.5	1.1	2.6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행복한 삶을 위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을 도시규모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의 경우 건강과 감사·긍정적 태도와 꿈·목표의식에 대한 응답이 높았고 중소도시는 자아성취와 직업·직장, 연인(이성관계 등)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농어촌 청년들은 재산·경제력을 비롯하여 화목한 가정, 친구·대인관계라는 응답이 높았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는 재산·경제력과 직업·직장, 친구·대인관계라는 응답이 높았고 대학과 대학원 재학생은 자아성취와 감사·긍정적 태도, 직업·직장, 꿈·목표의식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반면, 대졸 이상은 화목한 가정과 건강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경제수준별로는 못 산다고 응답한 청년의 경우 재산·경제력에 대한 응답 비중이 매우 높았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청년들은 화목한 가정, 감사·긍정적 태도, 직업·직장, 친구·대인관계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았다. 반면, 잘 산다고 응답한 청년들은 자아성취, 건강, 연인(이성관계 등), 꿈·목표의식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았다. 주거형태별로는 부모와 동거 중인 청년의 경우 독립한 청년과 비교해 직업·직장과 꿈·목표의식, 감사·긍정적 태도를 비롯해 친구와 연인과 같은 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형태별로는 비임금 근로자인 경우 재산·경제력을, 임금근로자로 정규직인 경우 화목한 가정과 건강, 연인을, 비정규직인 경우 직업·직장을, 일자리가 없는 경우 자아성취와 꿈·목표의식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청년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청년에 비해 화목한 가정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 응답비율이 높았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추가 문항으로 청년이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와 사이버 공간에서 얼마나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현재 학생인 경우에만 학교에 대해서, 현재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만 직장에 대해 응답하도록 했다.



주) 존중받는 편이라고 매우 존중받는 편이라고 응답한 결과임.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그림 III-7. 청년이 생각하는 인권을 존중받는 정도

19세에서 34세 청년들은 다른 공간보다 가정에서 존중받는다(존중받는 편이다+매우 존중받는 편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학교에서 존중받는다는 응답비율은 93.9%로 높았고 직장이라는 응답비율이 92.2%, 우리나라 전체에서 존중받는다는 응답비율이 82.3%로 나타났다. 사이버공간에서 존중받는다는 응답비율은 61.9%로 가장 낮은 응답비율을 보여주었다.

먼저 가정에서 존중받는 정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사회인구학적 배경 별로 차이가 없었다. 다만, 경제수준별로는 못 산다고 응답한 경우와 비교해 보통이나 잘 산다고 응답한 경우에 존중받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I-27.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인권 존중받는 정도 - (1) 가정(명, %)

구분		사례수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인권 존중받는 정도				평균 (점/4점)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받는 편이다	
전체		(1,938)	0.1	2.2	56.9	40.8	3.4
성별	남 자	(1,002)	0.2	2.3	59.8	37.6	3.4
	여 자	(936)	0.0	2.0	53.6	44.4	3.4
연령	만 19 ~ 24 세	(634)	0.0	1.9	58.9	39.2	3.4
	만 25 ~ 29 세	(663)	0.4	2.3	57.3	40.0	3.4
	만 30 ~ 34 세	(641)	0.0	2.3	54.5	43.2	3.4
도시 규모	대 도 시	(1,183)	0.1	1.5	56.7	41.7	3.4
	중 소 도 시	(434)	0.3	3.2	59.6	36.9	3.3
	농 어 촌	(321)	0.0	3.2	53.9	42.8	3.4
학력	고 졸 이 하	(494)	0.2	3.5	66.0	30.2	3.3
	대학/대학원 재학	(445)	0.3	0.6	54.2	44.9	3.4
	대 졸 이 상	(999)	0.0	2.2	53.2	44.6	3.4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0.9	5.1	68.9	25.1	3.2
	보 통	(1,032)	0.0	1.8	59.9	38.2	3.4
	잘 산 다	(652)	0.0	1.4	46.4	52.1	3.5
주거 형태	동 거	(1,160)	0.2	2.3	56.3	41.2	3.4
	비 동 거 / 독 립	(778)	0.0	2.1	57.7	40.2	3.4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576)	0.2	2.2	55.5	42.1	3.4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0.0	2.3	64.2	33.5	3.3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0.1	2.1	55.5	42.3	3.4
혼인 상태	비 임 금 근 로 자	(142)	0.0	2.6	60.0	37.4	3.4
	배 우 자 없 음	(1,580)	0.2	2.3	57.8	39.7	3.4
	배 우 자 있 음	(358)	0.0	1.5	52.4	46.1	3.5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다음으로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는 정도를 물어본 결과, 성별로는 차이가 없었고 연령별로는 30대 초반의 평균 점수가 낮았다. 도시규모별로는 중소도시인 경우의 평균 점수가 낮았고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의 평균 점수가 낮았다. 경제수준별로는 잘 산다고 응답한 경우가 높은 평균 점수를 보여주었다. 일자리 형태별로는 임금근로자로 비정규직인 경우, 혼상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높은 평균 점수를 보여주었다. 일자리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자리형태가 취업 중인 경우에도 응답이 있는 것은 휴학 중에 일을 하거나 재학 중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III-28.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인권 존중받는 정도 - (2) 학교(명, %)

구분		사례수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인권 존중받는 정도					평균 (점/4점)
			전혀 존중 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 편이다	해당사항 없음	
전체		(1,938)	0.1	3.0	35.9	12.4	48.5	3.2
성별	남 자	(1,002)	0.1	3.5	38.0	12.0	46.5	3.2
	여 자	(936)	0.1	2.5	33.6	12.9	50.8	3.2
연령	만 19 ~ 24 세	(634)	0.0	2.7	51.2	17.5	28.6	3.2
	만 25 ~ 29 세	(663)	0.1	3.1	30.6	11.2	55.0	3.2
	만 30 ~ 34 세	(641)	0.2	3.2	26.5	8.8	61.3	3.1
도시 규모	대 도 시	(1,183)	0.1	3.0	37.8	13.2	46.0	3.2
	중 소 도 시	(434)	0.0	3.0	36.0	7.4	53.6	3.1
	농 어 촌	(321)	0.4	3.1	29.2	16.4	51.0	3.3
학력	고 졸 이 하	(494)	0.2	3.6	22.0	7.4	66.8	3.1
	대학/대학원 재학	(445)	0.0	3.9	67.5	23.1	5.5	3.2
	대 졸 이 상	(999)	0.1	2.3	29.0	10.2	58.4	3.2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0.3	6.1	37.0	10.2	46.4	3.1
	보 통	(1,032)	0.1	2.5	35.5	9.5	52.4	3.1
	잘 산 다	(652)	0.0	2.4	36.2	18.3	43.0	3.3
주거 형태	동 거	(1,160)	0.1	3.1	40.5	14.0	42.3	3.2
	비 동 거 / 독 립	(778)	0.2	2.9	29.3	10.1	57.5	3.2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576)	0.2	2.9	51.3	17.4	28.1	3.2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0.4	5.5	35.9	10.6	47.6	3.1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0.0	2.5	28.1	10.6	58.8	3.2
	비 임금 근로자	(142)	0.0	3.0	29.0	7.6	60.3	3.1
혼인 상태	배 우 자 없 음	(1,580)	0.1	3.3	38.7	12.8	45.0	3.2
	배 우 자 있 음	(358)	0.0	1.5	23.4	10.6	64.5	3.3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다음으로 직장에서 인권을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경우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의 평균 점수가 낮았다. 연령별로는 30대 초반의 평균 점수가 20대 초반이나 중반보다 높게 나타났다. 도시규모별로는 중소도시의 평균 점수가 낮았고 학력별 차이는 없었다. 재학 중인 경우 이 질문에 응답한 것은 휴학 중에 직장에 다니거나 재학 중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수준별로는 잘 산다고 응답한 경우 평균 점수가 높았다. 주거 형태별로는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에 평균 점수가 높았다. 일자리형태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인 경우 평균 점수가 낮았다.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평균 점수가 높았다.

표 III-29.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인권 존중받는 정도 - (3) 직장(명, %)

구분		사례수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인권 존중받는 정도					평균 (점/4점)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받는 편이다	해당사항 없음	
전체		(1,938)	0.4	5.6	54.6	17.0	22.4	3.1
성별	남 자	(1,002)	0.7	6.6	54.5	15.9	22.3	3.1
	여 자	(936)	0.1	4.6	54.7	18.2	22.5	3.2
연령	만 19 ~ 24 세	(634)	0.3	5.8	39.5	12.3	42.1	3.1
	만 25 ~ 29 세	(663)	0.5	6.5	61.0	18.0	13.9	3.1
	만 30 ~ 34 세	(641)	0.4	4.5	62.7	20.5	11.8	3.2
도시 규모	대 도 시	(1,183)	0.4	5.0	52.4	17.7	24.6	3.2
	중 소 도 시	(434)	0.3	6.9	61.0	11.4	20.3	3.1
	농 어 촌	(321)	0.8	6.3	53.9	21.9	17.2	3.2
학력	고 졸 이 하	(494)	0.3	6.8	59.3	17.6	15.9	3.1
	대학/대학원 재학	(445)	0.7	4.7	26.4	12.1	56.1	3.1
	대 졸 이 상	(999)	0.4	5.4	64.8	18.8	10.5	3.1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0.8	10.7	52.6	12.9	23.0	3.0
	보 통	(1,032)	0.2	5.2	58.6	14.6	21.4	3.1
	잘 산 다	(652)	0.6	4.1	48.8	22.7	23.9	3.2
주거 형태	동 거	(1,160)	0.4	6.1	49.9	16.1	27.5	3.1
	비 동 거 / 독 립	(778)	0.5	4.9	61.4	18.3	15.0	3.2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576)	0.7	3.0	18.4	8.2	69.7	3.1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0.0	10.5	69.6	13.0	6.9	3.0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0.4	5.9	70.6	22.2	0.9	3.2
	비 임금 근로자	(142)	0.0	6.6	63.3	22.4	7.6	3.2
혼인 상태	배 우 자 없 음	(1,580)	0.5	5.9	53.9	16.4	23.2	3.1
	배 우 자 있 음	(358)	0.0	4.2	57.8	19.4	18.6	3.2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이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인권 존중 정도를 물어본 결과, 성별로는 남자보다는 여자의 평균 점수가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초반의 평균 점수가 높았고 도시규모별로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청년의 평균 점수가 높았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의 청년의 평균 점수가 낮았다. 경제 수준별로는 잘 산다고 응답할수록 평균 점수가 높았다. 주거형태별로는 부모와 동거 중인 경우에 평균 점수가 높았으며 일자리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이나 비임금 근로자인 경우 평균 점수가 낮았다.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평균 점수가 높았다.

표 III-30.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인권 존중받는 정도 - (4) 우리나라 전체(명, %)

구분		사례수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인권 존중받는 정도				평균 (점/4점)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받는 편이다	
전체		(1,938)	0.7	17.1	69.4	12.9	3.0
성별	남 자	(1,002)	0.7	19.3	68.4	11.6	2.9
	여 자	(936)	0.6	14.6	70.4	14.3	3.0
연령	만 19 ~ 24 세	(634)	0.9	15.0	70.1	14.1	3.0
	만 25 ~ 29 세	(663)	0.6	17.3	70.3	11.8	2.9
	만 30 ~ 34 세	(641)	0.4	18.9	67.8	12.8	2.9
도시 규모	대 도 시	(1,183)	0.7	16.7	68.5	14.1	3.0
	중 소 도 시	(434)	0.7	21.5	72.3	5.4	2.8
	농 어 촌	(321)	0.4	12.6	68.5	18.6	3.1
학력	고 졸 이 하	(494)	0.7	25.5	61.9	11.8	2.9
	대 학 / 대 학 원 재 학	(445)	0.9	11.1	73.3	14.7	3.0
	대 졸 이 상	(999)	0.5	15.3	71.5	12.6	3.0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1.4	28.4	62.2	8.1	2.8
	보 통	(1,032)	0.7	17.4	69.9	11.9	2.9
	잘 산 다	(652)	0.3	11.5	71.6	16.6	3.1
주거 형태	동 거	(1,160)	0.6	16.3	69.5	13.6	3.0
	비 동 거 / 독 립	(778)	0.7	18.2	69.2	11.9	2.9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576)	0.5	15.1	71.6	12.7	3.0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0.9	21.4	67.1	10.6	2.9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0.5	16.8	68.3	14.3	3.0
	비 임금 근로자	(142)	1.4	19.6	71.3	7.6	2.9
혼인 상태	배 우 자 없 음	(1,580)	0.7	17.6	68.8	12.9	2.9
	배 우 자 있 음	(358)	0.6	14.5	71.8	13.1	3.0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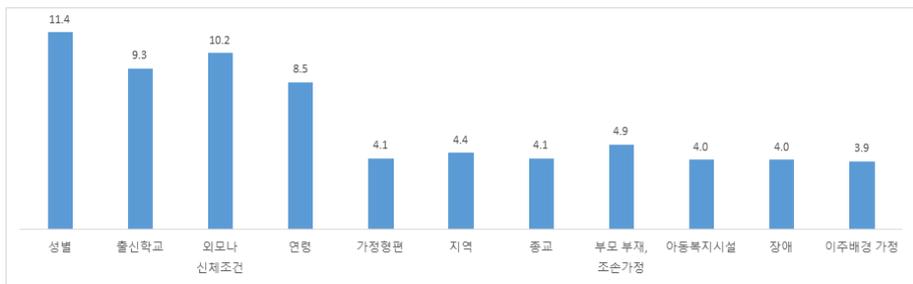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공간에서 청년이 인권을 존중받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중반의 평균 점수가 낮았다. 도시규모별로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청년의 평균 점수가 높았다. 학력별로는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청년의 평균 점수가 높았다. 경제수준별로는 잘 산다고 응답한 청년의 경우 평균 점수가 높았다. 주거형태별로는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평균 점수가 높았다. 일자리형태별로는 비임금 근로자의 경우 평균 점수가 가장 낮았고 비정규직인 경우에도 평균 점수가 낮았다. 혼인상태별로는 평균 점수의 차이가 없었다.

표 III-31.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인권 존중받는 정도 - (5)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공간(명, %)

구분		사례수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인권 존중받는 정도				평균 (점/4점)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받는 편이다	
전체		(1,938)	5.6	32.4	53.3	8.6	2.7
성별	남 자	(1,002)	6.9	33.7	51.9	7.5	2.6
	여 자	(936)	4.2	31.0	55.0	9.8	2.7
연령	만 19 ~ 24 세	(634)	6.6	30.1	54.2	9.1	2.7
	만 25 ~ 29 세	(663)	4.9	34.1	53.0	8.0	2.6
	만 30 ~ 34 세	(641)	5.4	33.0	52.8	8.8	2.7
도시 규모	대 도 시	(1,183)	7.1	32.7	51.1	9.1	2.6
	중 소 도 시	(434)	4.3	37.3	54.4	4.0	2.6
	농 어 촌	(321)	2.0	25.1	59.8	13.1	2.8
학력	고 졸 이 하	(494)	6.2	34.0	49.8	10.0	2.6
	대 학 / 대 학 원 재 학	(445)	7.5	25.8	57.7	9.0	2.7
	대 졸 이 상	(999)	4.5	34.7	53.2	7.7	2.6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8.2	30.9	55.0	5.9	2.6
	보 통	(1,032)	5.2	33.6	53.8	7.4	2.6
	잘 산 다	(652)	5.3	31.2	51.8	11.8	2.7
주거 형태	동 거	(1,160)	5.9	30.3	54.5	9.2	2.7
	비 동 거 / 독 립	(778)	5.2	35.5	51.6	7.7	2.6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576)	6.2	30.4	55.1	8.3	2.7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6.2	33.7	52.7	7.4	2.6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5.0	32.6	52.9	9.6	2.7
혼인 상태	비 임 금 근 로 자	(142)	6.8	37.5	50.2	5.5	2.5
	배 우 자 없 음	(1,580)	5.9	32.2	53.3	8.6	2.7
	배 우 자 있 음	(358)	4.3	33.7	53.2	8.8	2.7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인권 존중과 더불어서 차별 경험에 대해서 11가지 영역별로 질문 문항이 추가되었다. 이 조사문항에서 부모 부재, 조손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장애, 이주배경 가정 차별 경험은 당사자만 응답하도록 했다.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성차별이 11.4%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외모나 신체조건에 대한 차별(10.2%), 출신학교에 대한 차별(9.3%), 연령 차별(8.5%)로 나타났다. 가정형편이나 지역, 종교, 부모 부재, 조손가정에 대한 차별,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차별, 장애 및 이주배경 가정에 대한 차별은 4.0% 내외로 나타났다.



주) 차별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라고 응답한 결과임.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그림 Ⅲ-8. 청년이 차별을 받은 경험(%)

한국행정연구원에서 통계청 승인통계로 조사를 하고 있는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차별 경험 여부를 묻고 있는데 이 결과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2023). 이 조사는 19세 이상 성인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22년 결과를 보면, 성차별 경험 비율은 전체 8.1%였고 19세에서 29세는 12.2%, 30세에서 39세는 10.1%로 이번 조사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신체조건에 대한 차별은 전체 6.2%, 19-29세 9.3%, 30-39세 7.5%였다. 이번 조사 결과보다 낮은 수준인데 이는 이번 조사에서 신체조건 외에 외모를 명시적으로 차별 경험의 대상으로 제시한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연령차별을 살펴보면,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전체 15.5%였고 19-29세는 12.9%, 30-39세는 9.5%로 이 역시 이번 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학력이나 학벌에 대한 차별로 묻고 있는데 전체 응답자의 10.0%, 19-29세의 14.2%, 30-39세의 12.0%가 차별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은 이번 조사에서 출신학교로 묻고 있는데 9.3%로 다소 낮게 추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성차별 경험을 살펴보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성차별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어릴수록 성차별 경험 비율이 높았다. 도시규모별로는 중소도시에서 성차별 경험 비율이 높았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에서 성차별 경험 비율이 높았다. 경제 수준별로는 못 산다고 응답한 청년의 성차별 경험 비율이 높았다. 주거형태별로는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 성차별 경험 비율이 높았다. 일자리형태별로는 정규직인 경우 성차별 경험비율이 높았고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성차별 경험 비율이 높았다.

표 III-32. 지난 1년간 차별받은 빈도 - (1)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명, %)

구분		사례수	지난 1년간 차별받은 빈도				
			한번도 없음	1년에 1~2회	2~3개월에 1~2회	한 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		(1,938)	88.6	7.3	1.3	2.2	0.6
성별	남 자	(1,002)	91.0	5.6	1.0	1.9	0.5
	여 자	(936)	85.9	9.1	1.7	2.6	0.7
연령	만 19 ~ 24 세	(634)	88.2	7.5	2.2	1.6	0.5
	만 25 ~ 29 세	(663)	88.6	7.3	0.9	2.6	0.6
	만 30 ~ 34 세	(641)	88.9	7.1	1.0	2.4	0.7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91.0	4.5	1.2	2.7	0.6
	중 소 도 시	(434)	83.4	13.5	2.1	0.7	0.3
	농 어 촌	(321)	86.8	9.0	0.7	2.6	0.9
학력	고 졸 이 하	(494)	90.7	4.7	1.0	2.8	0.7
	대 학 / 대 학 원 재 학	(445)	88.3	7.9	1.9	1.5	0.5
	대 졸 이 상	(999)	87.6	8.4	1.2	2.3	0.5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87.0	7.2	2.3	2.8	0.6
	보 통	(1,032)	89.2	7.7	1.3	1.7	0.1
	잘 산 다	(652)	88.3	6.7	0.9	2.7	1.3
주거 형태	동 거	(1,160)	88.1	8.4	1.2	1.6	0.7
	비 동 거 / 독 립	(778)	89.2	5.6	1.5	3.2	0.4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576)	88.8	7.3	1.4	1.9	0.6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90.4	6.1	1.3	1.9	0.4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87.9	7.8	1.2	2.5	0.6
	비 임금 근로자	(142)	89.5	5.9	2.1	1.9	0.6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1,580)	88.2	7.5	1.5	2.3	0.5
	배 우 자 있 음	(358)	90.4	6.4	0.7	1.9	0.7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이어서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 경험에 대해서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차별 경험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도시규모별로는 중소도시에 사는 청년의 차별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인 청년의 차별 경험 비율이 높았다. 경제수준별로는 못 산다고 응답한 청년의 차별 경험 비율이 높았다. 주거형태별로는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차별 경험 비율이 높았다. 일자리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인 경우에 차별 경험 비율이 낮았다. 마지막으로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차별 경험 비율이 높았다.

표 III-33. 지난 1년간 차별받은 빈도 - (2)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명, %)

구분		사례수	지난 1년간 차별받은 빈도				
			한번도 없음	1년에 1~2회	2~3개월에 1~2회	한 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		(1,938)	90.7	6.7	1.5	1.0	0.1
성별	남 자	(1,002)	89.8	7.3	1.8	1.0	0.1
	여 자	(936)	91.6	5.9	1.3	1.1	0.1
연령	만 19 ~ 24 세	(634)	90.8	6.7	1.5	0.9	0.2
	만 25 ~ 29 세	(663)	90.4	7.2	1.3	1.1	0.0
	만 30 ~ 34 세	(641)	90.9	6.1	1.8	1.1	0.2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92.9	4.5	1.3	1.2	0.1
	중 소 도 시	(434)	85.5	12.4	1.5	0.5	0.0
	농 어 촌	(321)	89.6	6.8	2.3	0.9	0.3
학력	고 졸 이 하	(494)	91.2	6.0	1.7	1.1	0.0
	대학/대학원 재학	(445)	91.3	6.1	1.4	1.1	0.0
	대 졸 이 상	(999)	90.1	7.3	1.5	0.9	0.2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84.6	10.9	3.5	1.1	0.0
	보 통	(1,032)	91.7	6.3	1.2	0.7	0.0
	잘 산 다	(652)	91.7	5.3	1.1	1.6	0.4
주거 형태	동 거	(1,160)	89.3	7.7	1.6	1.2	0.1
	비 동 거 / 독 립	(778)	92.6	5.1	1.4	0.8	0.1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576)	90.2	7.2	2.0	0.7	0.0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93.8	4.5	0.8	0.3	0.5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90.2	7.0	1.5	1.1	0.1
	비 임금 근로자	(142)	90.6	5.6	0.6	3.3	0.0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1,580)	90.4	6.7	1.6	1.1	0.1
	배 우 자 있 음	(358)	92.0	6.3	1.1	0.6	0.0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다음으로 외모나 키, 몸무게 등 신체조건 때문에 차별 받은 경험을 물어본 결과,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차별 경험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후반이, 도시규모별로는 중소도시에 사는 청년인 경우,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인 경우, 경제수준별로는 못 산다고 응답한 청년인 경우 차별 경험 비율이 높았다. 주거형태별로는 부모와 동거 중인 청년인 경우, 일자리형태별로는 비임금 근로자인 경우 차별 경험 비율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차별 경험 비율이 높았다.

표 III-34. 지난 1년간 차별받은 빈도 - (3)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명, %)

구분		사례수	지난 1년간 차별받은 빈도				
			한번도 없음	1년에 1~2회	2~3개월에 1~2회	한 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		(1,938)	89.8	6.8	1.6	1.5	0.3
성별	남 자	(1,002)	90.2	6.8	1.3	1.4	0.2
	여 자	(936)	89.4	6.8	1.9	1.5	0.4
연령	만 19 ~ 24 세	(634)	90.4	6.7	1.2	1.5	0.1
	만 25 ~ 29 세	(663)	89.2	7.6	1.9	1.1	0.3
	만 30 ~ 34 세	(641)	90.0	6.1	1.6	1.8	0.5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92.7	4.4	1.3	1.3	0.4
	중 소 도 시	(434)	83.9	12.5	1.8	1.9	0.0
	농 어 촌	(321)	87.6	7.9	2.4	1.7	0.4
학력	고 졸 이 하	(494)	90.4	6.5	1.8	1.0	0.2
	대 학 / 대 학 원 재 학	(445)	90.4	7.0	1.1	1.2	0.2
	대 졸 이 상	(999)	89.3	6.8	1.7	1.8	0.4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83.1	12.4	2.3	1.8	0.4
	보 통	(1,032)	91.1	5.9	1.7	1.1	0.2
	잘 산 다	(652)	90.7	5.8	1.2	1.9	0.5
주거 형태	동 거	(1,160)	88.8	7.2	1.8	1.9	0.2
	비 동 거 / 독 립	(778)	91.3	6.2	1.3	0.9	0.4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576)	89.7	6.9	1.3	1.9	0.2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90.9	5.3	1.8	1.2	0.8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90.3	6.4	1.7	1.3	0.2
	비 임 금 근 로 자	(142)	85.4	11.0	1.5	1.3	0.6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1,580)	89.2	7.2	1.7	1.7	0.2
	배 우 자 있 음	(358)	92.9	5.0	1.2	0.3	0.7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다음으로 연령 차별 경험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차이가 크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20대 후반인 경우에 연령 차별 경험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에 취업이 이루어지고 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한 경우가 있어 더 높은 경험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규모별로는 중소도시에 사는 청년인 경우,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인 경우, 경제수준별로는 못 산다고 응답한 청년인 경우에 연령 차별 경험비율이 높았다. 주거형태별로는 부모와 동거한 경우, 일자리형태별로는 비임금 근로자인 경우,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연령 차별 경험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5. 지난 1년간 차별받은 빈도 - (4)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명, %)

구분		사례수	지난 1년간 차별받은 빈도				
			한번도 없음	1년에 1~2회	2~3개월에 1~2회	한 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		(1,938)	91.5	5.6	1.2	1.2	0.5
성별	남 자	(1,002)	91.8	5.4	1.2	1.2	0.4
	여 자	(936)	91.2	5.8	1.3	1.1	0.7
연령	만 19 ~ 24 세	(634)	91.7	4.6	2.2	1.4	0.1
	만 25 ~ 29 세	(663)	90.7	6.8	1.0	0.8	0.7
	만 30 ~ 34 세	(641)	92.2	5.3	0.5	1.3	0.7
도시규모	대 도시	(1,183)	93.3	3.9	1.2	1.0	0.5
	중 소 도시	(434)	87.8	10.3	0.7	0.9	0.3
	농 어 촌	(321)	89.9	5.4	2.1	1.9	0.8
학력	고 졸 이 하	(494)	93.5	3.9	1.1	0.8	0.7
	대학/대학원 재학	(445)	91.5	5.5	2.0	1.1	0.0
	대 졸 이 상	(999)	90.5	6.5	1.0	1.4	0.6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87.4	8.6	1.9	1.8	0.3
	보 통	(1,032)	93.0	4.9	1.1	0.8	0.3
	잘 산 다	(652)	90.9	5.4	1.1	1.5	1.0
주거 형태	동 거	(1,160)	90.4	6.6	1.4	1.1	0.5
	비 동 거 / 독 립	(778)	93.2	4.0	1.0	1.2	0.6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576)	91.5	5.6	1.3	1.1	0.5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92.2	4.2	2.4	1.2	0.0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91.6	5.8	0.8	1.1	0.7
	비 임 금 근 로 자	(142)	90.1	6.3	2.2	1.3	0.0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1,580)	91.0	5.9	1.4	1.2	0.5
	배 우 자 있 음	(358)	94.0	4.3	0.3	0.9	0.6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이어서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경우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후반이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20대 후반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이 시기가 주로 사회 진출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시규모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차별 경험 비율이 낮았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인 경우가 차별 경험 비율이 높았다. 경제 수준별로는 못산다고 응답한 경우 차별 경험 비율이 높았다. 주거형태별로는 부모와 동거 중인 청년이, 일자리형태별로는 임금 근로자로 정규직인 경우에,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차별 경험 비율이 높았다.

표 III-36. 지난 1년간 차별받은 빈도 - (5)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명, %)

구분		사례수	지난 1년간 차별받은 빈도				
			한번도 없음	1년에 1~2회	2~3개월에 1~2회	한 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		(1,938)	95.9	2.0	1.0	0.7	0.4
성별	남 자	(1,002)	95.5	2.4	1.0	0.7	0.4
	여 자	(936)	96.3	1.7	0.9	0.7	0.5
연령	만 19 ~ 24 세	(634)	96.5	1.3	0.9	0.5	0.8
	만 25 ~ 29 세	(663)	95.0	2.9	1.3	0.7	0.1
	만 30 ~ 34 세	(641)	96.2	1.9	0.6	1.0	0.4
도시규모	대 도시	(1,183)	96.2	1.5	0.8	1.0	0.5
	중 소 도시	(434)	95.4	3.3	1.3	0.0	0.0
	농 어 촌	(321)	95.3	2.4	1.0	0.7	0.6
학력	고 졸 이 하	(494)	95.0	2.3	1.5	1.0	0.2
	대학/대학원 재학	(445)	96.8	1.5	1.0	0.3	0.5
	대 졸 이 상	(999)	95.9	2.1	0.7	0.8	0.5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92.0	4.4	1.8	1.5	0.3
	보 통	(1,032)	96.9	1.8	0.6	0.6	0.2
	잘 산 다	(652)	95.8	1.4	1.2	0.7	0.9
주거 형태	동 거	(1,160)	95.3	2.3	1.2	0.6	0.6
	비 동 거 / 독 립	(778)	96.6	1.6	0.7	0.9	0.1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576)	96.5	1.4	0.8	0.6	0.7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97.0	1.6	1.0	0.0	0.5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95.2	2.5	1.2	0.9	0.2
	비 임금 근로자	(142)	96.4	2.2	0.0	0.7	0.6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1,580)	95.5	2.2	1.1	0.6	0.5
	배 우 자 있 음	(358)	97.4	1.2	0.3	1.1	0.0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고 응답한 경우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 초반이 2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과 비교해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30대 초반의 지역 차별 비율이 높게 나온 것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20대의 학교 입학으로 인한 경우와는 달리 취업으로 인한 이전이 더 많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지역 차별에 대한 경험을 더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시 규모별로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청년인 경우,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인 경우에, 경제수준별로는 잘 산다고 응답한 경우, 일자리형태별로는 비임금근로자인 경우에 차별 경험 비율이 높았다.

표 Ⅲ-37. 지난 1년간 차별받은 빈도 - (6)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명, %)

구분		사례수	지난 1년간 차별받은 빈도				
			한번도 없음	1년에 1~2회	2~3개월에 1~2회	한 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		(1,938)	95.6	2.2	1.2	1.0	0.1
성별	남 자	(1,002)	96.0	2.2	0.7	1.0	0.1
	여 자	(936)	95.1	2.2	1.8	1.0	0.0
연령	만 19 ~ 24 세	(634)	96.3	1.9	0.9	0.9	0.0
	만 25 ~ 29 세	(663)	95.8	2.2	0.9	0.9	0.2
	만 30 ~ 34 세	(641)	94.5	2.5	1.8	1.2	0.0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95.8	1.4	1.6	1.3	0.0
	중 소 도 시	(434)	95.9	3.6	0.5	0.0	0.0
	농 어 촌	(321)	94.4	3.3	0.7	1.2	0.4
학력	고 졸 이 하	(494)	96.3	1.7	0.9	1.1	0.0
	대학/대학원 재학	(445)	96.7	1.9	0.8	0.7	0.0
	대 졸 이 상	(999)	94.7	2.6	1.6	1.0	0.1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95.6	2.1	0.4	1.9	0.0
	보 통	(1,032)	96.3	1.9	1.4	0.4	0.0
	잘 산 다	(652)	94.3	2.8	1.2	1.5	0.2
주거 형태	동 거	(1,160)	95.7	2.4	0.9	1.1	0.0
	비 동 거 / 독 립	(778)	95.4	2.0	1.7	0.8	0.2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576)	95.8	2.1	0.9	1.1	0.0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97.1	2.4	0.5	0.0	0.0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95.2	1.9	1.6	1.1	0.1
	비 임금 근로자	(142)	94.2	3.9	0.6	1.3	0.0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1,580)	95.6	2.1	1.3	0.9	0.1
	배 우 자 있 음	(358)	95.2	2.5	0.8	1.5	0.0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 경험에 대해서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차별 경험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들수록 차별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나이가 들수록 차별 경험이 증가한 것은 사회생활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도시규모별로는 중소도시에 사는 청년인 경우,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인 경우, 경제수준별로는 잘 산다고 응답한 청년인 경우 차별 경험 비율이 높았다. 경제수준별로 보통이라고 생각한 청년이 차별 경험 비율이 가장 낮아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종교적인 차별 경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주지는 않았다.

주거형태별로는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일자리형태별로는 임금 근로자로 정규직인 경우에 차별 경험 비율이 높았다.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차별경험비율이 높았다.

표 III-38. 지난 1년간 차별받은 빈도 -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명, %)

구분	사례수	지난 1년간 차별받은 빈도					
		한번도 없음	1년에 1~2회	2~3개월에 1~2회	한 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	(1,938)	95.9	2.2	1.1	0.4	0.4	
성별	남 자	(1,002)	96.2	2.4	0.8	0.2	0.5
	여 자	(936)	95.5	2.1	1.4	0.6	0.3
연령	만 19 ~ 24 세	(634)	96.4	1.5	0.9	0.6	0.6
	만 25 ~ 29 세	(663)	95.8	2.3	1.5	0.0	0.4
	만 30 ~ 34 세	(641)	95.5	2.9	0.8	0.6	0.2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95.9	1.8	1.5	0.4	0.4
	중 소 도 시	(434)	95.7	3.4	0.9	0.0	0.0
	농 어 촌	(321)	96.2	2.2	0.0	0.9	0.7
학력	고 졸 이 하	(494)	95.8	2.6	0.7	0.3	0.5
	대학/대학원 재학	(445)	96.4	1.7	1.3	0.4	0.2
	대 졸 이 상	(999)	95.7	2.3	1.2	0.4	0.4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95.8	2.7	0.8	0.3	0.4
	보 통	(1,032)	96.7	1.8	1.1	0.1	0.3
	잘 산 다	(652)	94.5	2.8	1.3	0.9	0.5
주거 형태	동 거	(1,160)	95.9	1.8	1.3	0.5	0.5
	비 동 거 / 독 립	(778)	95.9	2.9	0.8	0.3	0.2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576)	95.6	2.6	0.7	0.6	0.5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97.9	0.4	0.8	0.5	0.4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95.4	2.6	1.4	0.3	0.2
	비 임금 근로자	(142)	97.2	0.9	0.6	0.0	1.3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1,580)	95.8	2.1	1.3	0.4	0.4
	배 우 자 있 음	(358)	96.2	2.9	0.3	0.3	0.3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학교, 직장에서 권리 침해나 차별 경험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거나 다루었다. 먼저 학교에서의 권리 침해와 차별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에서의 권리 침해는 신규 문항으로 6가지로 이루어졌다. 대학과 고등학교로 나누어서 질문이 이루어졌다. 우선 대학에서 권리 침해가 이루어졌는지를 묻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학생선발 과정에서 차별적인 운영이 이루어졌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16.3%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학교에서 정치단체 참여를 제한하였다”(8.0%), “학생자치 기구에 대한 학교당국의 제한이나 간섭이 이루어졌다”(7.1%) 순이었다.

권리 침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학교에 범죄나 폭력, 성폭력 신고기구(대학 인권센터)가 있었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7.2%였고 “대학 내 의사결정 기구에 학생이 참여하였다”는 응답 비율은 24.3%, “학교에 인권교육 관련 과목이 개설되었다”는 응답 비율은 20.4%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권에 관한 대학 내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그림 III-9. 대학에서의 권리 침해(%)

대학에 진학한 경험이 있는 청년에게 가장 최근에 다닌 대학에서 학생 선발 과정에서 차별적인 운영을 한 적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후반이 17.5%로 가장 높았고 20대 초반이 14.5%로 가장 낮았다. 도시규모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19.4%로 가장 높았고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제수준별로는 잘 산다고 응답한 청년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주거형태별로는 차이가 없었고 일자리형태별로는 임금근

로자로 정규직인 경우 차별 경험 비율이 높았다.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차별 경험 비율이 높았다.

표 III-39. 가장 최근에 진학한 대학에 대해 아는 부분 - (1) 학생선발 과정에서 차별적인 운영이 이루어졌다(명, %)

구분		사례수	가장 최근에 진학한 대학 학교에 대해 아는 부분		
			모르겠다	그렇다	아니다
전체		(1,444)	11.6	16.2	72.2
성별	남 자	(701)	11.8	13.6	74.6
	여 자	(743)	11.3	18.8	69.9
연령	만 19 ~ 24 세	(491)	15.6	14.5	69.8
	만 25 ~ 29 세	(484)	9.4	17.5	73.1
	만 30 ~ 34 세	(469)	9.7	16.7	73.7
도시규모	대 도 시	(899)	11.1	19.4	69.5
	중 소 도 시	(315)	12.4	14.6	73.0
	농 어 촌	(230)	12.1	6.4	81.5
학력	대 학 / 대 학 원 재 학	(445)	17.3	12.7	70.0
	대 출 이 상	(999)	9.0	17.8	73.2
경제 수준	못 산 다	(147)	20.8	13.8	65.4
	보 통	(763)	9.8	14.1	76.1
	잘 산 다	(534)	11.4	20.2	68.4
주거 형태	동 거	(901)	11.5	16.0	72.5
	비 동 거 / 독 립	(543)	11.7	16.6	71.7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486)	17.1	13.2	69.8
	임금근로자-비정규직	(176)	12.9	13.9	73.1
	임금근로자-정규직	(695)	7.8	19.2	73.0
	비 임금 근로자	(87)	9.2	14.0	76.8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1,198)	11.9	16.0	72.1
	배 우 자 있 음	(246)	9.9	17.4	72.7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대학에 범죄나 폭력, 성폭력 신고기구가 있었는지를 물어본 결과, 남자가 여자보다는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초반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최근으로 올수록 대학인권센터 설치 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도시규모별로는 중소도시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학력별로는 대학이나 대학원의 재학생인 경우 졸업생보다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이 역시 최근 들어 대학인권센터 등의 설치가 증가한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경제수준별로는 잘 산다고 응답한 경우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주거형태별로는 부모와 동거 중인 경우가 높게 나타났는데 연령이 어릴수록 동거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다른 결과와 마찬가지로 연령효과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일자리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인 경우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 역시 학생 시기에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높게 나타났다.

표 III-40. 가장 최근에 진학한 대학에 대해 아는 부분 - (2) 학교에 범죄나 (성)폭력 신고기구(대학 인권센터 등)가 있었다(명, %)

구분		사례수	가장 최근에 진학한 대학 학교에 대해 아는 부분		
			모르겠다	그렇다	아니다
전체		(1,444)	18.8	27.2	54.0
성별	남 자	(701)	17.4	29.2	53.4
	여 자	(743)	20.1	25.3	54.6
연령	만 1 9 ~ 2 4 세	(491)	20.3	35.7	44.1
	만 2 5 ~ 2 9 세	(484)	17.4	24.7	57.8
	만 3 0 ~ 3 4 세	(469)	18.6	21.1	60.3
도시규모	대 도 시	(899)	19.2	26.6	54.2
	중 소 도 시	(315)	19.3	30.0	50.7
	농 어 촌	(230)	16.5	25.8	57.8
학력	대 학 / 대 학 원 재 학	(445)	21.5	37.7	40.8
	대 졸 이 상	(999)	17.6	22.5	60.0
경제 수준	못 산 다	(147)	19.6	29.6	50.9
	보 통	(763)	20.6	23.3	56.1
	잘 산 다	(534)	15.8	32.4	51.8
주거 형태	동 거	(901)	18.6	29.6	51.7
	비 동 거 / 독 립	(543)	19.0	23.4	57.6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486)	22.5	31.7	45.8
	임금근로자-비정규직	(176)	18.6	34.1	47.3
	임금근로자-정규직	(695)	17.0	22.7	60.3
	비 임 금 근 로 자	(87)	12.6	25.3	62.1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1,198)	18.7	29.0	52.3
	배 우 자 있 음	(246)	19.2	18.4	62.4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대학에서 정치단체 참여를 제한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초반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아

최근 들어 정치활동에 대한 권리침해가 다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규모별로는 대도시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에서 재학생보다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는 연령별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보인다. 경제 수준별로는 잘 산다고 응답한 청년인 경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주거 형태별로는 독립해서 생활하는 청년인 경우, 일자리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인 경우,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III-41. 가장 최근에 진학한 대학에 대해 아는 부분 - (3) 학교에서 정치단체 참여(정당가입 및 활동 등)를 제한하였다(명, %)

구분		사례수	가장 최근에 진학한 대학 학교에 대해 아는 부분		
			모르겠다	그렇다	아니다
전체		(1,444)	15.1	8.0	76.8
성별	남 자	(701)	13.8	6.8	79.4
	여 자	(743)	16.5	9.2	74.3
연령	만 19 ~ 24 세	(491)	16.7	7.0	76.3
	만 25 ~ 29 세	(484)	14.9	8.8	76.3
	만 30 ~ 34 세	(469)	13.8	8.4	77.8
도시규모	대 도 시	(899)	14.4	10.0	75.6
	중 소 도 시	(315)	16.3	5.4	78.3
	농 어 촌	(230)	16.5	4.0	79.5
학력	대학 / 대학원 재학	(445)	17.9	7.0	75.1
	대 졸 이 상	(999)	13.9	8.5	77.6
경제 수준	못 산 다	(147)	15.2	8.0	76.7
	보 통	(763)	15.4	5.6	79.0
	잘 산 다	(534)	14.8	11.6	73.6
주거 형태	동 거	(901)	15.1	7.9	77.0
	비 동 거 / 독 립	(543)	15.2	8.3	76.5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486)	19.3	7.3	73.4
	임금근로자-비정규직	(176)	12.7	8.6	78.7
	임금근로자-정규직	(695)	13.1	8.5	78.4
	비 임금 근로자	(87)	13.2	7.5	79.3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1,198)	15.7	7.8	76.5
	배 우 자 있 음	(246)	12.5	9.4	78.1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대학에서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학교당국의 제한이나 간섭이 이루어졌는지를 질문한 결과, 성별로는 남자가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초반의 권리 침해 경험 비율이 낮았는데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해석에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도시규모별로는 중소도시에서 권리 침해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경제 수준별로는 잘 산다고 응답한 경우에 권리 침해 경험 비율이 높았다. 주거형태별로는 부모와 동거 중인 청년의 경우에, 일자리형태별로는 비임금 근로자인 경우에,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권리 침해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42. 가장 최근에 진학한 대학에 대해 아는 부분 - (4)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학교당국의 제한이나 간섭이 이루어졌다(명, %)

구분		사례수	가장 최근에 진학한 대학 학교에 대해 아는 부분		
			모르겠다	그렇다	아니다
전체		(1,444)	15.3	7.1	77.6
성별	남 자	(701)	13.7	7.5	78.8
	여 자	(743)	16.8	6.6	76.5
연령	만 19 ~ 24 세	(491)	18.1	5.3	76.6
	만 25 ~ 29 세	(484)	16.0	8.4	75.6
	만 30 ~ 34 세	(469)	11.7	7.5	80.8
도시규모	대 도 시	(899)	14.7	6.7	78.6
	중 소 도 시	(315)	18.6	8.4	73.1
	농 어 촌	(230)	13.2	6.7	80.1
학력	대학 / 대학원 재학	(445)	20.1	5.9	73.9
	대 졸 이 상	(999)	13.1	7.6	79.3
경제 수준	못 산 다	(147)	17.7	6.3	76.0
	보 통	(763)	14.0	5.6	80.4
	잘 산 다	(534)	16.5	9.5	74.0
주거 형태	동 거	(901)	16.0	7.3	76.8
	비 동 거 / 독 립	(543)	14.2	6.8	79.0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486)	19.9	6.1	74.0
	임금근로자-비정규직	(176)	16.4	6.6	77.0
	임금근로자-정규직	(695)	12.6	7.7	79.7
	비 임금 근로자	(87)	9.4	8.4	82.2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1,198)	15.7	7.4	76.9
	배 우 자 있 음	(246)	13.0	5.3	81.6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대학 내 의사결정 기구에 학생이 참여했는지를 물어본 결과 남자가 여자보다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초반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도시규모별로는 대도시에서, 학력별로는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인 경우, 경제 수준별로는 못 산다고 응답한 경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주거형태별로는 동거 중인 경우에, 일자리형태별로는 일자리가 없는 경우에,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표 III-43. 가장 최근에 진학한 대학에 대해 아는 부분 - (5) 대학 내 의사결정 기구에 학생이 참여하였다(명, %)

구분		사례수	가장 최근에 진학한 대학 학교에 대해 아는 부분		
			모르겠다	그렇다	아니다
전체		(1,444)	15.5	24.3	60.2
성별	남 자	(701)	13.5	26.9	59.6
	여 자	(743)	17.4	21.7	60.9
연령	만 19 ~ 24 세	(491)	19.6	28.9	51.5
	만 25 ~ 29 세	(484)	15.9	22.3	61.8
	만 30 ~ 34 세	(469)	10.8	21.6	67.6
도시규모	대 도시	(899)	15.2	26.7	58.1
	중 소 도시	(315)	16.1	21.3	62.7
	농 어 촌	(230)	15.7	19.0	65.3
학력	대 학 / 대 학 원 재 학	(445)	20.7	31.6	47.7
	대 졸 이 상	(999)	13.1	20.9	65.9
경제 수준	못 산 다	(147)	17.9	28.4	53.7
	보 통	(763)	14.9	23.8	61.3
	잘 산 다	(534)	15.7	23.7	60.6
주거 형태	동 거	(901)	16.8	25.4	57.8
	비 동 거 / 독 립	(543)	13.4	22.4	64.2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486)	20.6	28.9	50.4
	임금근로자-비정규직	(176)	17.4	23.2	59.4
	임금근로자-정규직	(695)	12.9	21.3	65.9
	비 임금 근로자	(87)	4.5	24.8	70.7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1,198)	16.3	25.2	58.4
	배 우 자 있 음	(246)	11.2	19.6	69.2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마지막으로 대학에서 인권교육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모르겠다는 응답이 23.9%로 다른 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청년들 스스로 인권 관련 주제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성별로는 응답 결과에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로는 큰 차이가 있었는데 20대 초반의 경우 30.8%가 그렇다고 응답한데 비해 20대 후반은 17.7%에 그쳤고 30대 초반은 12.3%로 대학에서 진행되는 인권교육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 재학생이, 주거형태별로 부모와 동거 중인 경우에, 일자리형태별로 비정규직이 높고 혼인상태별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이것은 연령별 결과에 대한 해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표 III-44. 가장 최근에 진학한 대학에 대해 아는 부분 - (6) 학교에 인권교육 관련 과목이 개설되었다(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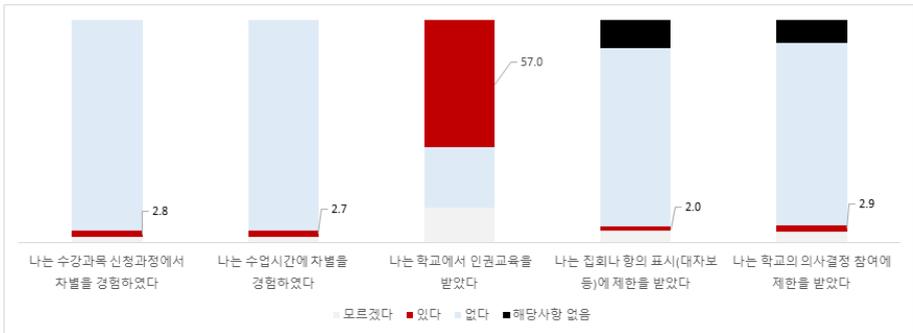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가장 최근에 진학한 대학 학교에 대해 아는 부분		
			모르겠다	그렇다	아니다
전체		(1,444)	23.9	20.4	55.7
성별	남 자	(701)	23.4	20.3	56.3
	여 자	(743)	24.5	20.4	55.2
연령	만 19 ~ 24 세	(491)	24.0	30.8	45.2
	만 25 ~ 29 세	(484)	24.4	17.7	57.9
	만 30 ~ 34 세	(469)	23.4	12.3	64.3
도시규모	대 도 시	(899)	24.8	22.1	53.0
	중 소 도 시	(315)	24.1	17.6	58.3
	농 어 촌	(230)	20.1	17.4	62.5
학력	대 학 / 대 학 원 재 학	(445)	26.2	32.6	41.2
	대 졸 이 상	(999)	22.9	14.8	62.3
경제 수준	못 산 다	(147)	25.9	18.3	55.8
	보 통	(763)	26.9	16.8	56.3
	잘 산 다	(534)	18.9	26.3	54.8
주거 형태	동 거	(901)	23.7	24.1	52.2
	비 동 거 / 독 립	(543)	24.4	14.3	61.3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486)	27.1	25.5	47.3
	임금근로자-비정규직	(176)	23.9	26.8	49.3
	임금근로자-정규직	(695)	22.7	15.7	61.6
	비 임 금 근 로 자	(87)	16.0	16.6	67.4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1,198)	24.4	22.8	52.8
	배 우 자 있 음	(246)	21.7	8.2	70.1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이번에는 대학에서의 차별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차별 경험 여부를 묻는 4가지 질문과 학교에서 인권 교육을 받았는지를 물어보는 1가지 질문을 던졌다. 4가지 차별 경험 중에서 집회나 향의 표시에 대한 제한과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

를 제한받은 경험은 모든 학생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활동을 한 경우에만 응답이 가능하므로 “해당사항 없음”을 추가해서 질문하였다. 모든 질문에는 “모르겠다”는 항목을 추가하였는데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하는지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15.7%로 이러한 응답결과는 청년들이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4가지 차별 경험에 대해서 학교에서 의사결정 참여에 제한을 받았다는 응답비율이 2.9%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수강과목 신청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2.8%, 수업시간에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2.7%였다. 학교에서 인권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7.0%로 나타났다.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그림 III-10. 대학에서의 차별 경험(%)

대학에서 수강신청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질문한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모르겠다”는 응답은 2.6%로 이 결과는 대다수 응답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경험 여부를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답변하였음을 보여준다. 각 항목별로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인권교육 경험 여부에 대한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 집회나 향의 표시에 대한 제한 여부에 대한 응답비율이 5.4%로 높았다. 이어서 학교의 의사결정 참여에 제한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모르겠다는 응답이 5.1%였고 수업시간에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2.9%로 낮은 응답비율을 보여주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차별 경험 비율이 높았다. 일부 대학에서 수강신청 시에 특정 성별을 우대하는 결정을 내리고 수강 철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여학생을 우선 선발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많은데 남자의 차별경험 비율이 높은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20대 초반의 차별 경험 비율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차별 경험 여부를 묻는 문항과 마찬가지로 최근으로 올수록 차별적인 조치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시 규모별로는 대도시에서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고 학력별로는 재학생이 경우, 경제 수준별로는 못 산다고 응답한 경우에, 주거형태별로는 부모와 동거 중인 경우에, 일자리형태별로는 일자리가 없는 경우에,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차별 경험 비율이 높았다.

표 III-45. 가장 최근에 진학한 대학 학교에 대해 경험한 부분 - (1) 나는 수강과목 신청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하였다(명, %)

구분		사례수	가장 최근에 진학한 대학 학교에 대해 경험한 부분		
			모르겠다	있다	없다
전체		(1,444)	2.6	2.8	94.7
성별	남 자	(701)	2.9	2.9	94.2
	여 자	(743)	2.3	2.6	95.1
연령	만 19 ~ 24 세	(491)	3.3	2.4	94.3
	만 25 ~ 29 세	(484)	1.9	3.0	95.1
	만 30 ~ 34 세	(469)	2.5	2.9	94.7
도시규모	대 도 시	(899)	2.7	3.0	94.4
	중 소 도 시	(315)	2.5	2.6	94.9
	농 어 촌	(230)	2.3	2.2	95.6
학력	대학/대학원 재학	(445)	4.5	3.1	92.4
	대 졸 이 상	(999)	1.7	2.6	95.7
경제 수준	못 산 다	(147)	5.3	5.5	89.2
	보 통	(763)	2.2	2.4	95.4
	잘 산 다	(534)	2.3	2.4	95.2
주거 형태	동 거	(901)	2.2	3.0	94.9
	비 동 거 / 독 립	(543)	3.2	2.4	94.4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486)	4.0	3.1	93.0
	임금근로자-비정규직	(176)	3.3	2.4	94.3
	임금근로자-정규직	(695)	1.7	2.8	95.4
	비 임금 근로자	(87)	0.0	1.1	98.9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1,198)	2.3	2.9	94.8
	배 우 자 있 음	(246)	3.7	2.1	94.2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수업시간에 차별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후반이 높아 최근으로 올수록 약화되기

나 강화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 차별 경험에 관한 질문은 연령이 낮을수록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도시규모별로는 대도시에서 차별 경험 비율이 높았다. 학력별로는 재학생의 경험 비중이 높았다. 경제 수준별로는 못 산다고 응답한 청년인 경우 차별 경험 비율이 높았다. 주거형태별로는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 일자리형태별로는 일자리가 없다고 응답한 청년인 경우,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높게 나타났다.

표 III-46. 가장 최근에 진학한 대학 학교에 대해 경험한 부분 - (2) 나는 수업시간에 차별을 경험하였다(명, %)

구분	사례수	가장 최근에 진학한 대학 학교에 대해 경험한 부분		
		모르겠다	있다	없다
전체	(1,444)	2.9	2.7	94.3
성별	남 자 (701)	3.3	1.9	94.8
	여 자 (743)	2.6	3.6	93.8
연령	만 19 ~ 24 세 (491)	3.5	2.7	93.8
	만 25 ~ 29 세 (484)	2.4	3.3	94.4
	만 30 ~ 34 세 (469)	2.9	2.3	94.8
도시규모	대 도 시 (899)	2.7	3.3	94.0
	중 소 도 시 (315)	3.3	1.8	94.9
	농 어 촌 (230)	3.4	1.9	94.7
학력	대학/대학원 재학 (445)	4.9	3.0	92.2
	대 출 이 상 (999)	2.1	2.6	95.3
경제 수준	못 산 다 (147)	2.9	6.6	90.5
	보 통 (763)	2.6	2.6	94.8
	잘 산 다 (534)	3.4	1.8	94.8
주거 형태	동 거 (901)	2.5	2.8	94.7
	비 동 거 / 독 립 (543)	3.7	2.6	93.7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486)	4.5	3.4	92.1
	임금근로자-비정규직 (176)	2.2	2.8	95.0
	임금근로자-정규직 (695)	1.9	2.3	95.7
	비 임 금 근 로 자 (87)	3.8	2.1	94.1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1,198)	2.8	3.0	94.2
	배 우 자 있 음 (246)	3.8	1.3	94.9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15.7%로 높았고 성별로는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별로는 30대 초반의 비율이 낮았다. 도시 규모별로는 농어촌에서 살고 있는 청년인 경우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인 경우가, 경제수준별로는 잘 산다고 응답한 경우가, 부모로부터 독립했거나

일자리형태가 비정규직인 경우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모르겠다의 응답이 높았다. 이것은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고 학교를 졸업한지 시간이 경과한 뒤에 해당 사항에 대한 확실한 기억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인권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차이가 크지 않았고 연령별로는 나이가 어릴수록 인권교육을 받았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들어 대학인권센터가 설치되고 인권교육이 확대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도시규모별로는 농어촌에 비해 중소도시가, 중소도시에 비해 대도시에서 인권교육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재학중인 경우에, 경제 수준별로는 잘 산다고 응답한 청년인 경우, 주거형태별로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일자리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인 경우에,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표 III-47. 가장 최근에 진학한 대학 학교에 대해 경험한 부분 - (3) 나는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받았다(명, %)

구분	사례수	가장 최근에 진학한 대학 학교에 대해 경험한 부분		
		모르겠다	있다	없다
전체	(1,444)	15.7	27.3	57.0
성별	남 자 (701)	15.7	27.1	57.2
	여 자 (743)	15.6	27.6	56.8
연령	만 19 ~ 24 세 (491)	16.0	36.9	47.1
	만 25 ~ 29 세 (484)	16.0	24.5	59.5
	만 30 ~ 34 세 (469)	15.1	20.3	64.6
도시규모	대 도 시 (899)	15.8	28.0	56.2
	중 소 도 시 (315)	17.0	26.8	56.2
	농 어 촌 (230)	13.3	25.6	61.2
학력	대학/대학원 재학 (445)	17.9	38.5	43.6
	대 졸 이 상 (999)	14.7	22.3	63.1
경제 수준	못 산 다 (147)	15.2	27.9	56.9
	보 통 (763)	17.0	21.3	61.7
	잘 산 다 (534)	13.8	36.1	50.0
주거 형태	동 거 (901)	16.0	29.3	54.8
	비 동 거 / 독 립 (543)	15.1	24.3	60.6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486)	18.0	31.9	50.1
	임금근로자-비정규직 (176)	14.3	35.2	50.5
	임금근로자-정규직 (695)	14.5	22.1	63.5
	비 임금 근로자 (87)	15.1	29.1	55.8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1,198)	16.2	28.5	55.3
	배 우 자 있 음 (246)	13.2	21.4	65.4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대학에서 집회나 향의 표시에 대해 제한을 받았던 경험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권리 침해 경험 비율이 높았다. 도시 규모별로는 중소도시에 살고 있는 청년인 경우 권리 침해 경험 비율이 높았다. 학력별로는 재학생이 더 높았고 경제수준별로는 보통인 경우가 높았으며 주거형태별로는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인 경우, 일자리형태별로는 임금 근로자로 정규직인 경우에,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권리 침해 경험 비율이 높았다.

표 III-48. 가장 최근에 진학한 대학 학교에 대해 경험한 부분 - (4) 나는 집회나 향의 표시(대자보 등)에 제한을 받았다(명, %)

구분		사례수	가장 최근에 진학한 대학 학교에 대해 경험한 부분			
			모르겠다	있다	없다	해당사항 없음
전체		(1,444)	5.4	2.0	80.2	12.5
성별	남 자	(701)	5.2	2.4	81.6	10.7
	여 자	(743)	5.5	1.6	78.7	14.2
연령	만 19 ~ 24 세	(491)	5.9	1.4	82.1	10.6
	만 25 ~ 29 세	(484)	4.4	2.1	78.1	15.4
	만 30 ~ 34 세	(469)	5.9	2.4	80.1	11.5
도시규모	대 도 시	(899)	5.8	1.3	80.1	12.7
	중 소 도 시	(315)	5.5	3.3	75.4	15.7
	농 어 촌	(230)	3.4	2.8	86.6	7.3
학력	대학/대학원 재학	(445)	6.7	2.3	80.6	10.4
	대 졸 이 상	(999)	4.8	1.8	80.0	13.4
경제 수준	못 산 다	(147)	7.3	1.2	80.5	11.0
	보 통	(763)	4.4	2.1	78.4	15.1
	잘 산 다	(534)	6.2	2.0	82.7	9.1
주거 형태	동 거	(901)	4.8	2.0	80.2	12.9
	비 동 거 / 독 립	(543)	6.3	1.9	80.0	11.8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486)	6.7	1.7	80.2	11.4
	임금근로자-비정규직	(176)	5.1	1.7	84.5	8.6
	임금근로자-정규직	(695)	4.8	2.5	78.1	14.6
	비 임금 근로자	(87)	3.2	0.0	87.4	9.4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1,198)	5.0	2.1	80.0	12.9
	배 우 자 있 음	(246)	7.4	1.4	80.9	10.3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대학에서 학교의 의사결정 참여에 제한을 받은 경우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권리 침해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초반이 권리 침해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권리 침해나 차별 경험 등에 있어서 최근으로 올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20대 초반의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나 다른 경향을 보여주었다.

도시규모별로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청년인 경우, 학력별로는 재학 중인 경우, 경제수준별로는 못 산다고 응답한 경우에, 주거형태별로는 독립해서 생활하는 청년인 경우, 일자리 형태별로는 임금근로자로 비정규직인 경우,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권리 침해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49. 가장 최근에 진학한 대학에 대해 경험한 부분 - (5) 나는 학교의 의사결정 참여에 제한을 받았다(명, %)

구분		사례수	가장 최근에 진학한 대학 학교에 대해 경험한 부분			
			모르겠다	있다	없다	해당사항 없음
전체		(1,444)	5.1	2.9	81.9	10.1
성별	남 자	(701)	4.6	2.8	83.6	9.0
	여 자	(743)	5.5	3.1	80.3	11.1
연령	만 19 ~ 24 세	(491)	5.1	3.7	81.0	10.2
	만 25 ~ 29 세	(484)	4.5	2.3	82.0	11.2
	만 30 ~ 34 세	(469)	5.7	2.8	82.8	8.7
도시규모	대 도 시	(899)	5.2	2.6	80.7	11.5
	중 소 도 시	(315)	6.6	2.9	81.2	9.3
	농 어 촌	(230)	2.6	4.3	87.5	5.5
학력	대학/대학원 재학	(445)	6.3	3.6	80.6	9.5
	대 졸 이 상	(999)	4.5	2.7	82.5	10.3
경제 수준	못 산 다	(147)	5.4	3.6	82.1	9.0
	보 통	(763)	4.6	3.1	80.2	12.1
	잘 산 다	(534)	5.6	2.5	84.5	7.4
주거 형태	동 거	(901)	4.7	2.8	81.5	11.0
	비 동 거 / 독 립	(543)	5.6	3.2	82.6	8.6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486)	6.4	3.1	81.0	9.5
	임금근로자-비정규직	(176)	5.3	4.8	80.8	9.1
	임금근로자-정규직	(695)	4.5	2.4	82.0	11.1
혼인상태	비 임금 근 로 자	(87)	1.9	2.6	88.9	6.5
	배 우 자 없 음	(1,198)	4.6	3.1	81.6	10.8
	배 우 자 있 음	(246)	7.5	2.4	83.7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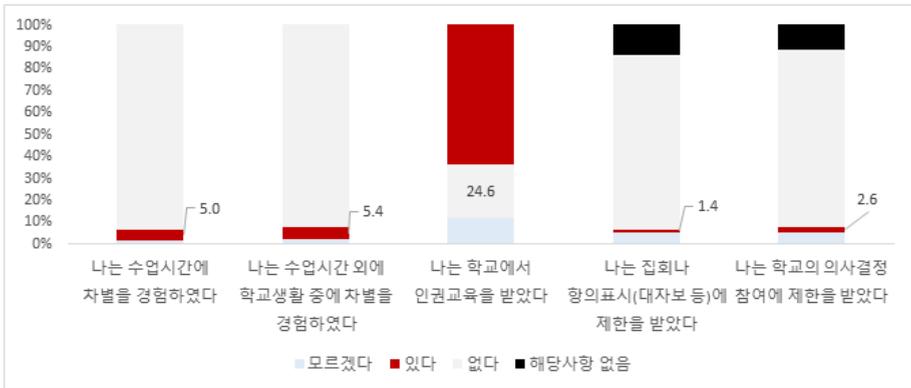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이어서 고등학교 시기에 차별 침해 및 인권교육 경험 비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조사에서는 이 부분에서 “나는 수업시간에 차별을 경험하였다”와 “나는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집회나 항의표시(대자보 등)에 제한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학교의 의사결정 참여에 제한을 받았다”는 대학 재학 시 경험을 질문하는 내용과 동일하게 질문을 던졌다.

먼저 “수업시간에 차별을 경험하였다”는 응답 비율은 5.0%로 나타났는데 대학 시의 같은 차별 경험 비율(2.7%)보다 높았다. 고교 단계에서는 수업시간 외에 차별을 경험하였는지를 물어보았는데 5.4%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해 수업시간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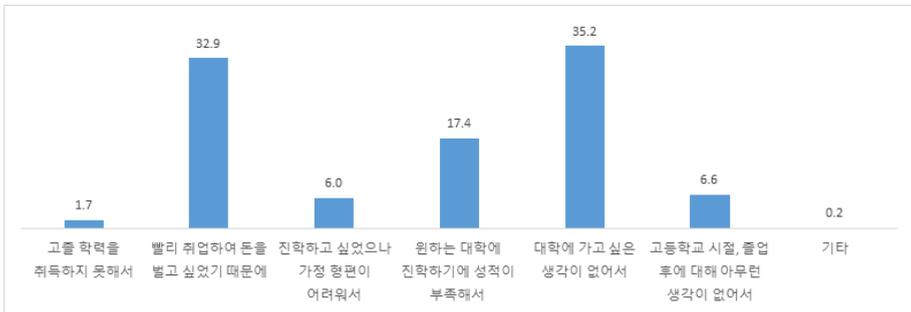
인권교육을 살펴보면, 24.6%가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63.6%가 받지 않았다고 응답해 대다수가 고교 단계에서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학 단계에서 인권교육을 받았다는 비율(27.3%)보다 낮은 수치이다.

집회나 항의 표시에 대해 제한을 받았다는 응답은 1.4%였고 학교의 의사결정 참여에 제한을 받았다는 응답은 2.6%였다. 이것은 집회나 항의 표시에 대한 제한(2.0%)이나 의사결정 참여 제한(2.9%)은 대학 단계보다 낮은 결과이다.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그림 Ⅲ-11. 고등학교에서 차별 침해 및 인권교육 경험 비율(%)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그림 Ⅲ-12. 대학 미진학 사유(%)

교육 기회 차원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을 대상으로 사유를 물어본 결과,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가 35.2%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32.9%로 뒤를 이었다. 권리 침해나 차별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는 답변 중 "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라는 응답은 6.0%였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가 여자보다 높게 나왔으며 여자의 경우 "고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해서", "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져서"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고등학교 시절, 졸업 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가 높게 나왔다.

표 III-50. 대학 미진학 사유(명, %)

구분		사례수	대학 미진학 사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424)	1.7	32.9	6.0	17.4	35.2	6.6	0.2
성별	남 자	(252)	1.2	34.3	5.6	16.3	37.0	5.7	0.0
	여 자	(172)	2.4	30.7	6.6	19.3	32.2	8.3	0.5
연령	만 19 ~ 24 세	(134)	1.5	28.5	2.7	28.2	33.8	5.4	0.0
	만 25 ~ 29 세	(155)	2.1	29.3	9.6	11.9	40.1	6.5	0.5
	만 30 ~ 34 세	(135)	1.3	41.6	5.0	13.0	30.9	8.1	0.0
도시규모	대 도 시	(239)	2.6	33.1	4.2	20.5	31.9	7.4	0.3
	중 소 도 시	(102)	0.0	34.6	8.8	18.4	34.1	4.1	0.0
학력	농 어 촌 이 하	(83)	1.1	30.2	7.2	7.7	46.0	7.9	0.0
	고 졸 이 하	(424)	1.7	32.9	6.0	17.4	35.2	6.6	0.2
경제 수준	못 산 다	(95)	3.2	35.4	14.5	15.4	23.2	7.5	0.7
	보 통	(231)	1.6	30.4	3.6	18.0	41.2	5.1	0.0
주거 형태	잘 산 다	(98)	0.0	36.6	2.4	18.2	33.5	9.4	0.0
	동 거	(230)	1.0	27.8	6.2	20.3	37.5	7.1	0.0
일자리 형태	비 동 거 / 독 립	(194)	2.5	39.0	5.7	14.0	32.4	6.1	0.4
	일 자 리 없 음	(83)	4.7	22.4	4.4	26.8	31.8	9.1	0.9
	임금근로자-비정규직	(52)	1.9	28.9	5.1	13.7	48.4	1.9	0.0
혼인상태	임금근로자-정규직	(245)	0.4	35.3	7.4	16.4	33.7	7.0	0.0
	비 임 금 근 로 자	(44)	2.7	44.7	2.2	10.1	34.2	6.1	0.0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332)	1.2	31.6	6.0	18.9	36.0	6.2	0.0
	배 우 자 있 음	(92)	3.3	38.0	5.8	11.9	32.0	8.2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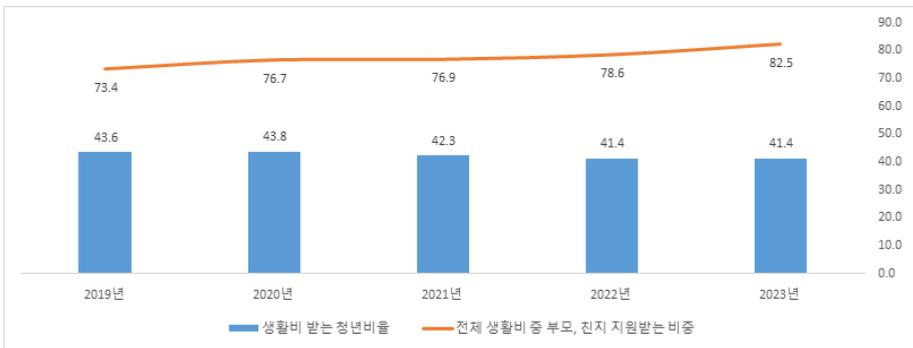
① 고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해서 ②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③ 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④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⑤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⑥ 고등학교 시절, 졸업 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⑦ 기타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가정형편 때문에 진학을 하지 못한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20대 후반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도시규모별로는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응답 비율이, 경제수준별로는 못 산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주거형태별로는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인 경우, 일자리형태가 비임금 근로자인 경우, 배우자 없는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경제적인 자립과 관련하여 기존 문항을 통해 청년들의 권리문제를 살펴 보고자 한다. 연도별로 부모나 친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았다는 청년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9년 43.6%에서 2020년 43.8%로 소폭 증가한 후 2021년부터 소폭 감소해 2023년 41.4%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다소나마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모나 친지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지를 물어본 결과를 보면, 2019년 생활비의 73.4%를 지원받고 있었으나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 2023년 82.5%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호자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의존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 표본조사 대상 연령을 고려하여 19-29세 결과를 비교해 제시하였음.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그림 III-13. 부모나 친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청년 비율 및 전체 생활비 중 비중(%)

이 결과는 비교 차원에서 19세에서 29세를 대상으로 한 결과이며 2023년 응답 결과는 19세에서 34세까지를 포괄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 달 동안 본인의 생활비를 물어본 결과 98.7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생활비가 많이 들었고 연령별로는 나이가 들수록 생활비가 많이 들었다. 도시규모별로 대도시인 경우에,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생활비가 컸다.

경제 수준별로는 못 산다고 응답한 경우가 생활비가 많이 들었다. 경제 수준별로 잘 산다고 응답한 경우가 못 산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생활비가 적게 들었는데 이는 부모,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의 차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거 형태별로는 독립해서 생활하는 청년인 경우, 일자리형태별로는 비임금 근로자인 경우,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더 많은 생활비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9-34세 청년들의 부모, 친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비율을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지원받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초반인 경우에, 도시규모별로는 대도시인 경우에, 학력별로는 재학생인 경우에, 경제수준별로는 잘 산다고 응답한 경우에, 주거형태별로는 부모로부터 동거하는 경우에, 일자리형태별로는 일자리가 없는 경우에,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표 III-51. 한달 본인 생활비(용돈) 및 부모,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명, %)

구분	사례수	한달 본인 생활비(용돈) 정도	부모, 친지로부터 지원 받는 비율	
		평균(만원)	평균(%)	
전체	(1,938)	98.7	24.0	
성별	남 자	(1,002)	100.4	26.7
	여 자	(936)	96.7	21.0
연령	만 19 ~ 24 세	(634)	77.9	54.8
	만 25 ~ 29 세	(663)	102.2	14.5
	만 30 ~ 34 세	(641)	115.2	3.6
도시규모	대 도시	(1,183)	104.1	25.3
	중 소 도시	(434)	90.6	22.4
	농 어 촌	(321)	89.9	21.4
학력	고 졸 이 하	(494)	106.0	11.3
	대학/대학원 재학	(445)	72.8	74.5
	대 졸 이 상	(999)	106.5	7.8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107.1	24.9
	보 통	(1,032)	95.5	20.6
주거 형태	잘 산 다	(652)	100.2	29.2
	동 거	(1,160)	84.6	34.6
일자리 형태	비 동 거 / 독 립	(778)	119.1	8.6
	일 자 리 없 음	(576)	72.3	70.2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89.2	14.8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112.6	1.7
혼인상태	비 임 금 근 로 자	(142)	122.6	9.2
	배 우 자 없 음	(1,580)	96.6	28.8
	배 우 자 있 음	(358)	108.3	1.9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지난 1년간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19-34세 응답자 중 35.1%가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간 지원 받은 액수는 평균 811.6만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부모로부터 지난 1년 간 지원받은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초반인 경우에, 도시규모별로는 대도시에 사는 청년인 경우에, 학력별로는 재학생인 경우에, 경제 수준별로는 잘 산다고 응답한 경우에, 주거형태별로는 부모와 동거 중인 경우에, 일자리형태별로는 일자리가 없는 경우에,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지원 비율이 높았다.

표 III-52. 지난 1년간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 여부(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1년간 전체 소득	
					평균(만원)	지원 받은 액수 평균(만원)
전체		(1,938)	64.9	35.1	847.2	811.6
성별	남 자	(1,002)	62.1	37.9	850.7	809.5
	여 자	(936)	67.9	32.1	842.5	814.3
연령	만 19 ~ 24 세	(634)	30.7	69.3	453.0	873.1
	만 25 ~ 29 세	(663)	74.6	25.4	1126.7	718.6
	만 30 ~ 34 세	(641)	88.2	11.8	2486.7	665.3
도시규모	대 도시	(1,183)	63.5	36.5	878.0	851.6
	중 소 도시	(434)	66.3	33.7	812.4	760.1
	농 어 촌	(321)	68.0	32.0	769.3	719.2
학력	고 졸 이 하	(494)	79.5	20.5	1253.0	486.1
	대학/대학원 재학	(445)	11.0	89.0	400.2	939.7
	대 졸 이 상	(999)	81.5	18.5	1584.4	722.9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61.1	38.9	920.5	885.7
	보 통	(1,032)	69.8	30.2	763.9	703.9
	잘 산 다	(652)	58.2	41.8	917.2	911.0
주거 형태	동 거	(1,160)	52.4	47.6	694.2	746.3
	비 동 거 / 독 립	(778)	82.9	17.1	1465.6	1075.1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576)	20.7	79.3	375.7	923.8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59.1	40.9	883.4	530.7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89.2	10.8	2672.6	482.0
	비 임금 근로자	(142)	81.7	18.3	1427.6	1223.9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1,580)	59.2	40.8	744.3	806.5
	배 우 자 있 음	(358)	90.7	9.3	2908.3	913.9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19-34세 청년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18.1%가 있다고 답변했다. 성별로는 남자의 채무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 초반의 채무비율이 크게 높았다. 도시규모별로는 중소도시의 채무비율이 높았고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경제 수준별로는 못 산다고 응답한 경우에, 주거 형태별로는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에, 일자리형태별로는 비임금 근로자인 경우에, 혼인상태별로 배우자 있는 경우에 채무 비율이 높았다.

표 III-53. 갚아야 할 채무 여부(명, %)

구분		사례수	갚아야 할 채무 여부	
			있다	없다
전체		(1,938)	18.1	81.9
성별	남 자	(1,002)	18.6	81.4
	여 자	(936)	17.6	82.4
연령	만 19 ~ 24 세	(634)	12.2	87.8
	만 25 ~ 29 세	(663)	15.0	85.0
	만 30 ~ 34 세	(641)	27.0	73.0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17.2	82.8
	중 소 도 시	(434)	21.6	78.4
	농 어 촌	(321)	16.5	83.5
학력	고 졸 이 하	(494)	15.6	84.4
	대 학 / 대 학 원 재 학	(445)	14.7	85.3
	대 졸 이 상	(999)	21.0	79.0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24.9	75.1
	보 통	(1,032)	17.4	82.6
	잘 산 다	(652)	16.2	83.8
주거 형태	동 거	(1,160)	12.1	87.9
	비 동 거 / 독 립	(778)	26.8	73.2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576)	12.7	87.3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16.2	83.8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20.5	79.5
	비 임 금 근 로 자	(142)	25.6	74.4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1,580)	14.5	85.5
	배 우 자 있 음	(358)	34.4	65.6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채무가 발생한 이유를 살펴보면, 주거비 마련이 47.5%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학자금 마련이 38.9%, 창업 자금 마련이 6.3%, 생활비 마련이 6.1%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자의 경우 학자금 마련이라는 응답비율만 높았고 나머지는 남자가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초반의 경우 학자금 마련이, 30대 초반의 경우 주거비 마련이 매우 높았다. 도시규모별로는 대도시는 주거비 마련이, 중소도시는 학자금 마련이, 농어촌 지역은 창업 자금 마련이 높았다. 경제 수준별로는 학자금 마련, 생활비 마련 영역에서 못 산다고 응답한 청년이 높았고 주거형태별로는 동거 중인 청년은 학자금 마련이, 독립해서 사는 청년은 주거비 마련 비중이 높았다. 일자리형태별로는 일자리가 없는 경우에 학자금 마련이, 정규직인 경우 주거비 마련 비중이, 비임금 근로자는 창업 자금 마련 비중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배우자 없는 경우에는 학자금 마련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거비 마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54. 채무 발생 사유(명, %)

구분	사례수	채무 발생 사유					
		학자금 마련	주거비 마련	생활비 마련	창업 자금 마련	기타	
전체	(344)	38.9	47.5	6.1	6.3	1.2	
성별	남 자	(186)	34.2	48.8	7.7	7.8	1.4
	여 자	(158)	44.4	45.9	4.1	4.6	1.0
연령	만 19 ~ 24 세	(78)	77.6	8.9	9.8	2.9	0.7
	만 25 ~ 29 세	(97)	46.0	38.8	8.8	3.6	2.8
	만 30 ~ 34 세	(169)	17.8	69.4	2.8	9.4	0.6
도시규모	대 도 시	(199)	33.8	54.1	6.0	5.0	1.1
	중 소 도 시	(94)	48.2	41.7	7.3	2.7	0.0
	농 어 촌	(51)	41.5	32.6	4.3	17.7	3.9
학력	고 졸 이 하	(74)	1.6	67.7	11.7	14.9	4.1
	대 학 / 대 학 원 재 학	(66)	90.3	0.0	9.7	0.0	0.0
	대 졸 이 상	(204)	37.2	54.6	2.7	5.0	0.5
경제 수준	못 산 다	(66)	43.5	34.4	15.5	5.0	1.5
	보 통	(175)	34.1	56.7	3.5	4.8	0.8
	잘 산 다	(103)	44.2	39.9	4.2	9.9	1.7
주거 형태	동 거	(138)	76.2	4.8	10.4	5.6	3.1
	비 동 거 / 독 립	(206)	14.5	75.3	3.3	6.8	0.0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73)	73.1	20.9	6.0	0.0	0.0
	임금근로자-비정규직	(41)	57.9	28.7	7.7	2.8	2.9
	임금근로자-정규직	(193)	28.0	62.9	6.3	1.1	1.6
혼인상태	비 임 금 근 로 자	(37)	12.0	34.2	3.0	50.7	0.0
	배 우 자 없 음	(224)	54.9	27.6	8.5	7.1	1.9
	배 우 자 있 음	(120)	7.8	86.0	1.3	4.9	0.0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채무 발생 기관을 보면, 은행이 93.6%였고 제2금융권이 3.7%, 사채 등 기타가 4.2%로 나타났다. 제2금융권이나 기타의 응답비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비은행 채무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초반인 경우에 비은행 채무 비중이 높았다. 도시규모별로는 농어촌의 비은행 채무 비중이 높았다. 학력별로는 재학생의 비은행 채무 비중이 높았다. 경제수준별로는 못 산다고 응답한 경우에, 주거형태별로는 부모와 동거 중인 경우에, 일자리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인 경우에,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비은행 채무 비중이 높았다.

표 III-55. 채무 발생 기관(명, %)

구분		사례수	채무 발생 기관		
			은행	제2금융권	기타
전체		(344)	93.6	3.7	4.2
성별	남 자	(186)	93.7	3.9	3.1
	여 자	(158)	93.3	3.4	5.4
연령	만 19 ~ 24 세	(78)	89.3	1.3	9.4
	만 25 ~ 29 세	(97)	90.8	6.4	3.6
	만 30 ~ 34 세	(169)	97.0	3.1	2.2
도시규모	대 도 시	(199)	96.0	2.7	3.0
	중 소 도 시	(94)	92.5	4.4	4.5
	농 어 촌	(51)	86.1	5.8	8.0
학력	고 졸 이 하	(74)	92.6	10.4	0.0
	대학/대학원 재학	(66)	87.8	1.5	10.7
	대 졸 이 상	(204)	95.8	1.7	3.8
경제 수준	못 산 다	(66)	86.1	8.3	8.3
	보 통	(175)	94.2	2.6	4.1
	잘 산 다	(103)	97.4	2.5	1.6
주거 형태	동 거	(138)	88.7	5.6	6.3
	비 동 거 / 독 립	(206)	96.7	2.4	2.8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73)	91.3	0.0	9.5
	임금근로자-비정규직	(41)	83.4	6.9	9.7
	임금근로자-정규직	(193)	96.5	4.3	1.1
	비 임금 근로자	(37)	92.0	4.0	5.2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224)	90.9	4.3	5.7
	배 우 자 있 음	(120)	98.7	2.4	1.3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이어서 물질적 박탈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비중이 34.5%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는 응답 비중이 5.3%였고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비중은 2.5%였다. 나머지 물질적 박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중은 2% 미만이었다.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는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박탈 경험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초반이, 도시규모별로는 중소도시에서 사는 청년이, 학력별로는 재학생인 경우가, 경제 수준별로는 못 산다고 응답한 청년이, 주거형태별로는 독립해서 살아가는 청년이, 일자리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인 경우가,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물질적 박탈 경험 비율이 높았다.

표 III-56. 물질적 박탈 경험 여부(있다 비율만)(명, %)

구분		사례수	물질적 박탈 경험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1,938)	0.7	0.2	1.7	0.7	5.3	2.5	0.9	34.5	0.4
성별	남 자	(1,002)	0.5	0.0	1.7	0.8	5.5	2.6	0.7	32.1	0.5
	여 자	(936)	0.8	0.4	1.9	0.7	5.0	2.3	1.0	37.2	0.2
연령	만 19 ~ 24 세	(634)	0.6	0.2	1.5	1.1	6.8	2.7	1.6	47.8	0.6
	만 25 ~ 29 세	(663)	0.4	0.2	1.2	0.2	4.9	2.6	0.6	38.3	0.0
	만 30 ~ 34 세	(641)	1.0	0.2	2.6	0.9	4.1	2.2	0.5	17.8	0.5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0.8	0.2	1.5	0.7	4.3	3.0	1.0	32.9	0.3
	중 소 도 시	(434)	0.4	0.0	2.6	0.0	8.0	1.2	0.5	34.2	0.7
	농 어 촌	(321)	0.7	0.4	1.3	1.8	5.0	2.4	0.8	41.0	0.0
학력	고 졸 이 하	(494)	0.4	0.0	1.9	0.4	4.8	2.4	0.6	30.8	0.6
	대학/대학원 재학	(445)	0.7	0.3	1.2	1.1	7.2	3.2	1.6	47.0	0.4
	대 졸 이 상	(999)	0.8	0.2	1.9	0.7	4.6	2.2	0.6	30.9	0.2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1.2	0.0	4.2	1.2	14.5	4.9	0.5	38.0	0.0
	보 통	(1,032)	0.9	0.3	1.8	0.8	4.3	2.0	0.6	33.2	0.6
	잘 산 다	(652)	0.0	0.0	0.6	0.4	2.8	2.3	1.5	35.2	0.2
주거 형태	동 거	(1,160)	0.4	0.2	1.3	0.5	5.0	0.9	0.7	37.8	0.3
	비 동 거 / 독 립	(778)	1.1	0.2	2.4	1.1	5.6	4.9	1.0	29.8	0.5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576)	0.8	0.2	1.7	0.8	7.5	3.2	1.1	42.8	0.5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0.0	0.0	3.2	1.8	10.2	3.2	1.2	47.8	0.0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0.7	0.2	1.7	0.3	3.2	2.0	0.6	28.7	0.4
	비 임 금 근 로 자	(142)	1.5	0.0	0.0	1.4	2.1	2.0	0.9	20.4	0.0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1,580)	0.7	0.2	1.6	0.9	5.4	2.8	0.9	39.8	0.5
	배 우 자 있 음	(358)	0.6	0.0	2.4	0.0	4.4	1.2	0.5	10.4	0.0

①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②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③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④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⑤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⑥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⑦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⑧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⑨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다음으로 취업자를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이나 산업안전 상 사고를 경험한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영역별로 직장내 괴롭힘이나 산업안전 상 사고 경험을 살펴보면, “회사로부터 업무수행 중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인 및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혹은 교육을 받았다”고 긍정적인 결과를 물어 본 질문을 제외하고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과도한 업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일을 떠넘겼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0%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였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4%였다. “나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근로환경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응답이 3.2%였고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나에게 소리치거나 화를 내거나 모욕적인 욕설을 하거나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였다”가 2.7%로 높았다.

표 III-57. 현재 일자리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있다 비율만)(명, %)

구분	사례수	현재 일자리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전체	(1,220)	5.0	2.7	0.7	4.4	1.3	2.1	0.4	0.8	10.0	3.2	1.3	
성별	남 자	(629)	5.0	4.0	1.1	5.0	1.5	2.4	0.2	0.9	13.2	4.7	1.8
	여 자	(591)	5.1	1.4	0.2	3.9	1.0	1.8	0.7	0.8	6.5	1.5	0.8
연령	만 19 ~ 24 세	(260)	4.7	1.5	0.5	2.0	0.0	1.4	0.3	0.8	8.9	1.6	0.0
	만 25 ~ 29 세	(490)	5.1	3.5	0.4	4.8	1.6	1.3	0.4	1.0	11.0	3.9	2.2
	만 30 ~ 34 세	(470)	5.2	2.6	1.1	5.4	1.6	3.3	0.6	0.7	9.5	3.2	1.2
도시규모	대 도 시	(735)	5.1	1.5	0.7	3.3	1.5	2.2	0.6	0.8	9.6	2.5	1.1
	중 소 도 시	(281)	6.6	5.3	0.8	8.3	0.8	2.4	0.4	0.5	12.3	3.8	1.5
지역	농 어 촌	(204)	2.9	3.6	0.5	3.5	1.1	1.4	0.0	1.3	8.0	4.7	2.0
	고 출 이 하	(349)	4.1	2.4	1.2	3.9	2.2	2.2	0.3	1.9	10.6	3.3	1.7
학력	대학/대학원 재학	(96)	4.7	2.7	0.0	0.9	1.1	1.3	0.9	0.0	8.1	0.0	0.0
	대 출 이 상	(775)	5.6	2.9	0.5	5.2	0.8	2.1	0.4	0.4	9.9	3.5	1.3
경제 수준	못 산 다	(155)	9.8	6.7	1.8	6.7	1.9	2.5	1.2	1.5	15.6	6.1	2.6
	보 통	(681)	4.6	2.3	0.3	4.2	1.1	1.9	0.3	0.6	9.4	2.8	1.3
	잘 산 다	(384)	3.6	1.7	0.9	3.8	1.3	2.3	0.4	0.9	8.5	2.4	0.8
주거 형태	동 거	(688)	4.1	2.7	0.3	4.0	0.7	1.6	0.6	0.6	9.8	2.7	0.9
	비 동 거 / 독 립	(532)	6.2	2.8	1.1	5.0	1.9	2.7	0.3	1.1	10.1	3.8	1.9
일자리 형태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3.5	3.0	0.4	1.7	1.1	2.2	1.2	1.4	6.6	2.8	0.4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5.4	2.7	0.7	5.1	1.3	2.1	0.3	0.7	10.8	3.2	1.6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987)	4.7	2.6	0.4	4.0	1.4	1.9	0.5	0.7	9.8	3.1	1.1
	배 우 자 있 음	(233)	6.5	3.3	1.8	6.6	0.6	3.0	0.2	1.3	10.6	3.5	2.5

①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과도한 업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일을 떠넘겼다. ②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나에게 소리치거나 화를 내거나 모욕적인 욕설을 하거나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였다. ③ 고용주, 직장상사가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암묵적·직접적으로 강요하였다. ④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였다. ⑤ 교육·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 대우 등에서 나를 다른 동료들보다 불합리하게 차별하였다. ⑥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암묵적·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하거나 내 요구를 무시하였다(병가, 휴가, 휴직, 교육훈련 등). ⑦ 나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 또는 행동을 했다(이메일, 메시지, 전화 포함/성적 농담, 성추행 등 포함). ⑧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업무 외의 대화나 식사, 모임 등에서 나를 조직적으로 제외하였다. ⑨ 회사로부터 업무수행 중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인 및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혹은 교육을 받았다. ⑩ 나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근로환경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었다. ⑪ 업무수행 중 업무로 인하여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로 인해 다친 적이 있다.

다음으로 직장에서 사고로 다친 경험이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는지를 물어 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2.7%가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받은 경우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 초반이 높았고 도시규모별로는 대도시인 경우에, 학력수준별로는 고졸 이하이고 경제수준이 못하는 경우에, 주거형태별로는 독립해서 생활하는 경우에, 일자리형태에서는 정규직인 경우에,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 급여를 받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8. 현재 일자리에서의 경험 - 산업재해보험 급여(병원비,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보상금 등)를 받은 적이 있다(명, %)

구분		사례수	현재 일자리에서의 경험		
			모르겠다	있다	없다
전체		(16)	7.8	12.7	79.5
성별	남 자	(11)	10.9	10.8	78.3
	여 자	(5)	0.0	17.3	82.7
연령	만 25 ~ 29 세	(10)	12.0	0.0	88.0
	만 30 ~ 34 세	(6)	0.0	36.2	63.8
도시규모	대 도시	(8)	0.0	26.2	73.8
	중 소 도시	(4)	0.0	0.0	100.0
	농 어 촌	(4)	31.1	0.0	68.9
학력	고 졸 이 하	(6)	0.0	32.9	67.1
	대 졸 이 상	(10)	12.7	0.0	87.3
경제 수준	못 산 다	(4)	0.0	19.0	81.0
	보 통	(9)	0.0	14.0	86.0
	잘 산 다	(3)	41.4	0.0	58.6
주거 형태	동 거	(6)	0.0	0.0	100.0
	비 동 거 / 독 립	(10)	12.5	20.3	67.2
일자리 형태	임금근로자-비정규직	(1)	0.0	0.0	100.0
	임금근로자-정규직	(15)	8.3	13.4	78.3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10)	11.8	0.0	88.2
	배 우 자 있 음	(6)	0.0	37.3	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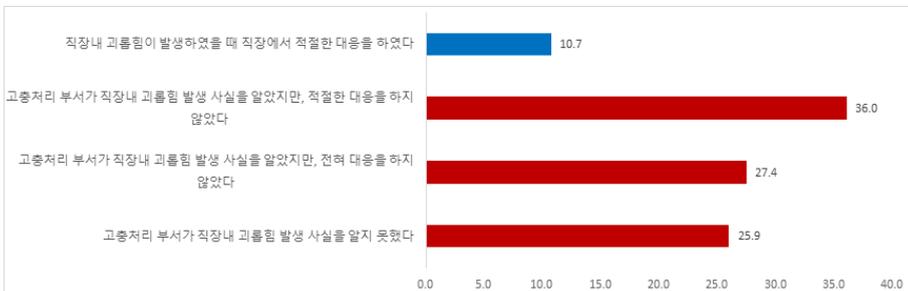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현재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2.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 초반에서, 도시규모별로는 농어촌에서, 경제수준별로는 못 산다고 응답한 청년인 경우에, 주거형태별로는 부모와 동거 중인 청년인 경우에, 일자리형태별로는 정규직인 경우에,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괴롭힘 경험 비율이 높았다.

표 III-59.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여부(명, %)

구분		사례수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여부		
			모르겠다	있었다	없었다
전체		(1,220)	5.3	2.2	92.6
성별	남 자	(629)	6.0	1.7	92.3
	여 자	(591)	4.5	2.6	92.9
연령	만 19 ~ 24 세	(260)	3.0	1.4	95.6
	만 25 ~ 29 세	(490)	4.8	2.3	92.9
	만 30 ~ 34 세	(470)	6.9	2.4	90.7
도시규모	대 도 시	(735)	5.3	1.9	92.8
	중 소 도 시	(281)	6.2	2.0	91.7
	농 어 촌	(204)	3.6	3.3	93.0
학력	고 졸 이 하	(349)	6.2	1.8	92.0
	대 학 / 대 학 원 재 학	(96)	3.1	1.8	95.1
경제 수준	대 졸 이 상	(775)	5.1	2.4	92.5
	못 산 다	(155)	6.8	3.7	89.5
	보 통	(681)	3.3	1.7	95.1
주거 형태	잘 산 다	(384)	8.2	2.4	89.5
	동 거	(688)	5.3	2.4	92.3
일자리 형태	비 동 거 / 독 립	(532)	5.2	1.9	93.0
	일 자 리 없 음	(238)	3.6	1.1	95.3
혼인상태	임 금 근 로 자 - 정 규 직	(982)	5.6	2.4	91.9
	배 우 자 없 음	(987)	4.7	1.9	93.3
	배 우 자 있 음	(233)	7.6	3.1	89.2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주) 그렇다고 응답한 결과임. 19-34세의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그림 III-14. 현재 직장내 괴롭힘 상담 또는 고충처리절차 응답 비율(%)

현재 직장내 괴롭힘 상담 및 고충처리 절차를 물어본 결과, "고충처리 부서가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응답은 25.9%였다. "고충처리 부서가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았지만,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27.4%, "고충처리 부서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았지만,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36.0%였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직장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였다"는 응답은 10.7%에 그쳤다.

사례수가 적지만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여자보다 고충처리 부서가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 초반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알지 못하거나 전혀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도시규모별로는 대도시에서,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에서, 경제수준별로는 못 산다의 경우 미인지 문제가, 보통의 경우 무대응 문제가 컸다. 주거실태별로는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인 경우에, 일자리 형태별로는 정규직인 경우에,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미인지나 무대응 문제가 컸다.

표 III-60. 직장내 노동자관련 조직·제도 설치여부 - (1) 노동조합(명, %)

구분	사례수	직장내 노동자관련 조직·제도 설치여부		
		모른다	있다	없다
전체	(1,220)	3.4	16.8	79.8
성별	남 자 (629)	2.6	19.5	77.9
	여 자 (591)	4.3	13.9	81.8
연령	만 19 ~ 24 세 (260)	6.9	6.1	87.1
	만 25 ~ 29 세 (490)	3.4	17.6	79.0
	만 30 ~ 34 세 (470)	1.5	21.7	76.7
도시규모	대 도 시 (735)	4.1	15.7	80.2
	중 소 도 시 (281)	0.3	16.7	83.1
	농 어 촌 (204)	5.2	21.0	73.7
학력	고 졸 이 하 (349)	3.5	8.8	87.7
	대학/대학원 재학 (96)	7.4	6.5	86.1
	대 졸 이 상 (775)	2.8	22.0	75.2
경제 수준	못 산 다 (155)	6.7	5.9	87.4
	보 통 (681)	2.7	16.1	81.3
	잘 산 다 (384)	3.2	23.1	73.7
주거 형태	동 거 (688)	3.5	15.1	81.4
	비 동 거 / 독 립 (532)	3.2	19.0	77.8
일자리 형태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8.3	4.8	86.9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2.2	19.7	78.1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987)	3.7	15.6	80.7
	배 우 자 있 음 (233)	2.1	22.2	75.7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직장 내 민주주의와 참여와 관련하여 먼저 노동조합 설치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청년 취업자 중 직장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16.8%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설치되었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 초반인 경우에, 도시규모별로는 농어촌인 경우에,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인 경우에, 경제 수준별로는 잘 산다고 응답한 청년인 경우에, 주거형태별로는 독립해서 살아가는 청년인 경우에, 일자리형태별로는 정규직인 경우에,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설치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표 III-61. 직장내 노동자관련 조직·제도 설치여부 - (2) 노사협의회(명, %)

구분	사례수	직장내 노동자관련 조직·제도 설치여부			
		모른다	있다	없다	
전체	(1,015)	5.7	7.4	86.9	
성별	남 자	(508)	4.3	7.2	88.5
	여 자	(507)	7.2	7.5	85.3
연령	만 19 ~ 24 세	(245)	8.9	3.0	88.2
	만 25 ~ 29 세	(403)	5.6	6.4	88.1
	만 30 ~ 34 세	(367)	3.9	11.3	84.8
도시규모	대 도 시	(619)	6.9	6.7	86.5
	중 소 도 시	(233)	2.0	8.5	89.5
	농 어 촌	(163)	6.8	8.5	84.7
학력	고 졸 이 하	(317)	6.3	5.1	88.6
	대학/대학원 재학	(91)	9.0	0.9	90.1
	대 졸 이 상	(607)	4.9	9.6	85.5
경제 수준	못 산 다	(145)	8.6	5.3	86.0
	보 통	(574)	4.6	7.9	87.5
	잘 산 다	(296)	6.3	7.5	86.2
주거 형태	동 거	(585)	4.9	5.2	90.0
	비 동 거 / 독 립	(430)	6.9	10.2	82.9
일자리 형태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27)	10.4	0.6	89.0
	임금근로자-정규직	(788)	4.4	9.3	86.3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834)	5.4	6.0	88.6
	배 우 자 있 음	(181)	7.1	13.9	78.9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이번에는 노사협의회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청년 중에서 7.4%가 노사협의회가 있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설치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 초반에서,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에서, 경제 수준별로 보통인 경우에, 일자리형태별로는

정규직인 경우에,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도시규모별로는 대도시에서 설치되었다는 응답비율이 낮았다.

표 III-62. 직장내 노동자관련 조직·제도 설치여부 - (3) 업무 관련 제안제도(명, %)

구분		사례수	직장내 노동자관련 조직·제도 설치여부		
			모른다	있다	없다
전체		(1,220)	5.9	21.9	72.2
성별	남 자	(629)	4.8	24.1	71.1
	여 자	(591)	7.0	19.6	73.4
연령	만 19 ~ 24 세	(260)	10.3	11.1	78.6
	만 25 ~ 29 세	(490)	5.7	23.6	70.7
	만 30 ~ 34 세	(470)	3.7	26.0	70.3
도시규모	대 도시	(735)	6.3	23.4	70.3
	중 소 도시	(281)	2.9	23.8	73.3
	농 어 촌	(204)	8.5	14.1	77.5
학력	고 졸 이 하	(349)	7.1	14.4	78.5
	대학/대학원 재학	(96)	8.8	10.7	80.4
	대 졸 이 상	(775)	4.9	26.9	68.2
경제 수준	못 산 다	(155)	8.8	11.3	79.9
	보 통	(681)	5.7	20.7	73.6
주거 형태	잘 산 다	(384)	4.9	29.0	66.1
	동 거	(688)	5.7	20.8	73.5
일자리 형태	비 동 거 / 독 립	(532)	6.1	23.4	70.5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12.1	6.3	81.6
혼인상태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4.4	25.6	69.9
	배 우 자 없 음	(987)	6.0	20.7	73.3
배 우 자 있 음		(233)	5.5	27.4	67.1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직장 내에 업무 관련 제안제도 여부를 물어본 결과, 청년 중 21.9%가 있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설치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 초반에서, 도시규모별로는 중소도시인 경우에,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에서, 경제수준별로는 잘 산다고 응답한 청년인 경우에, 주거형태별로는 독립해서 살아가는 청년인 경우, 일자리형태별로는 정규직인 경우에,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응답 비율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조직적응 프로그램 도입 여부를 살펴보면, 청년 중 18.3%가 있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도입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 초반에서, 도시규모별로는 중소도시에서,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에서 경제 수준별로는 잘 산다고

응답한 청년인 경우에, 주거형태별로는 독립해서 살아가는 청년인 경우에, 일자리형태에 서는 정규직인 경우에,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응답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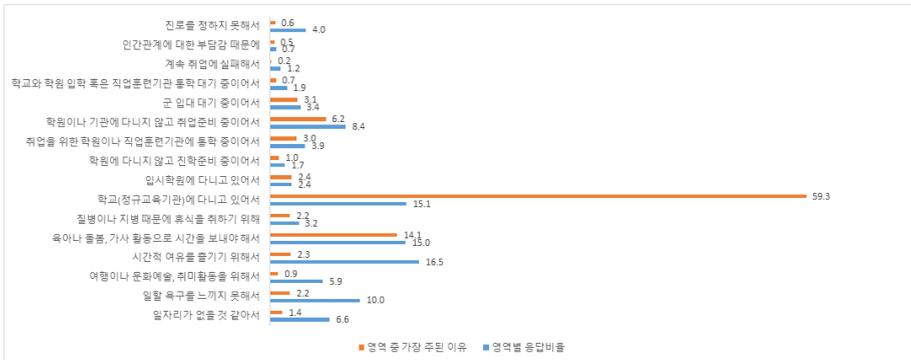
표 III-63. 직장내 노동자관련 조직·제도 설치여부 - (4) 조직적응 프로그램(명, %)

구분	사례수	직장내 노동자관련 조직·제도 설치여부			
		모른다	있다	없다	
전체	(1,220)	6.5	18.3	75.2	
성별	남 자	(629)	5.1	20.7	74.2
	여 자	(591)	8.0	15.7	76.3
연령	만 19 ~ 24 세	(260)	9.7	8.8	81.5
	만 25 ~ 29 세	(490)	6.3	17.9	75.8
	만 30 ~ 34 세	(470)	4.9	23.9	71.1
도시규모	대 도 시	(735)	7.2	19.0	73.7
	중 소 도 시	(281)	2.8	22.3	74.8
	농 어 촌	(204)	9.0	10.2	80.8
학력	고 졸 이 하	(349)	6.9	11.1	82.0
	대학/대학원 재학	(96)	8.8	7.4	83.8
	대 졸 이 상	(775)	6.0	23.2	70.9
경제 수준	못 산 다	(155)	7.6	10.9	81.6
	보 통	(681)	6.4	17.3	76.4
	잘 산 다	(384)	6.2	23.7	70.1
주거 형태	동 거	(688)	5.8	16.8	77.4
	비 동 거 / 독 립	(532)	7.4	20.2	72.4
일자리 형태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11.0	4.4	84.6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5.4	21.6	72.9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987)	6.4	16.6	77.0
	배 우 자 있 음	(233)	6.9	26.0	67.0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다음으로 일할 권리와 학습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일도, 교육도, 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 을 의미하는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 이하 NEET)에 대해 서 살펴보고자 한다. 니트 상태에서 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지를 물어본 결과, 가장 주된 이유로는 "학교(정규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가 59.3%로 가장 높았다. 이 경우는 주로 휴학 중인 경우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주된 이유로는 "육아나 돌봄, 가사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야해서"인데 이 부분은 주부와 관련이 있다. 니트는 국가에 따라 주부를 니트에서 제외하기도 하는데 OECD에서는 주부라는 이유로 니트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다. 세 번째 이유로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고 취업준비 중이어서"는 취업준비생, 다섯 번째

이유로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통학 중이어서" 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에 OECD는 공식 교육 및 훈련기관인 중등후 교육 및 훈련과정(post secondary education and training)만을 니트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니트 상태에 포함된다. 네 번째 사유는 군입대 대기 중으로 정책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여섯 번째 사유는 입시학원에 다니는 경우 재수생을 의미한다. 여섯 번째까지는 니트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책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는 경우이며 중요한 것은 일곱 번째 사유부터 핵심적인 정책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곱 번째 사유로는 "시간적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인데 OECD에서 자발적 니트(volunteering NEET)로 분류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질병이나 지병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건강 상의 문제로 니트가 된 경우이다. 같은 비율로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는 구직단념청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이다.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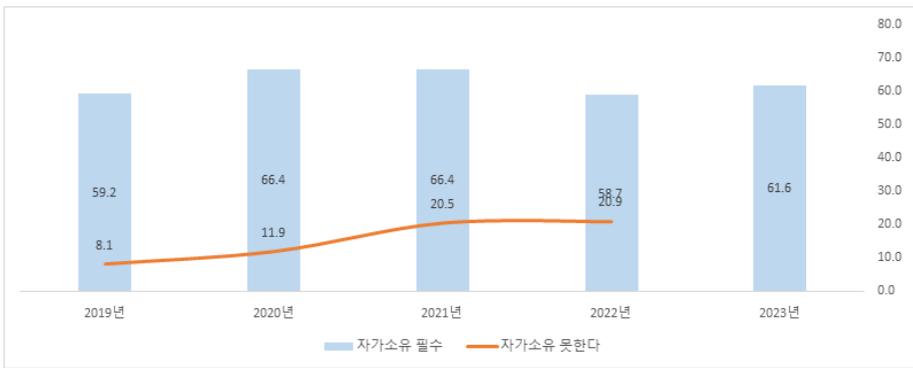
그림 Ⅲ-15. 니트(NEET)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주된 이유가 아니라 각 영역별 응답 비율을 볼 때 여섯 가지 사유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시간적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가 16.5%로 가장 높았고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가 10.0%였다. 이어서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가 6.6%였고 "여행이나 문화예술, 취미활동을 위해서"가 5.9%였다. 이어서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가 4.0%였고 "질병이나 지병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가 3.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거권과 관련하여 자가 소유가 필수인지에 대한 응답과 자가 소유가 어렵다는 질문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가 소유에 대한 질문은 2023년에 제외되어 2022년까지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자가 소유가 필수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렇

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9-34세 청년의 경우 2019년 59.2%에서 2020년 66.4%로 증가했으나 2022년 58.7%로 낮아졌고 2023년에는 61.6%로 소폭 증가했다. 자가 소유가 필수라는 응답은 2022년 부동산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낮아졌으나 2023년 부동산 가격이 다소 진정되면서 기대감이 커진 결과로 보인다.

이어서 자가 소유를 못한다는 응답에 대한 비율을 살펴보면, 2019년 8.1%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증가한 2021년 20.5%까지 급등했다가 2022년에도 20.9%로 소폭 상승하였다. 이 역시 부동산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가지 결과는 자가 소유가 주거권의 측면보다는 투자와 자산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더 크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주)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임. 표본조사 대상 연령을 고려하여 19-29세 결과를 비교해 제시하였음. 표본기준치를 적용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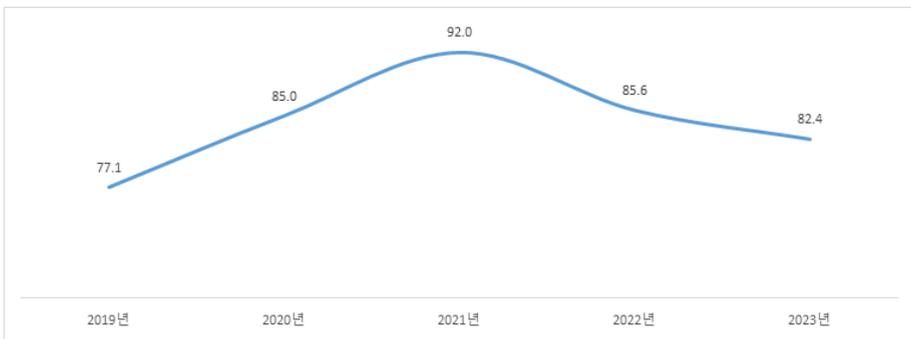
그림 Ⅲ-16. 자가 소유 필수 및 자가 소유 못한다는 청년 응답 비율에 대한 연도별 비교(%)

자가 소유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사회인구적 배경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자기를 소유해야한다는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초반인 경우에 자가 소유에 대한 평균 점수가 높았다. 대체로 나이가 들수록 자가 소유에 대한 긍정 응답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가 소유의 필요성과 구입할 수 있는 자금 확보 면에서의 현실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인 경우에, 경제수준별로는 잘 산다고 생각하는 청년인 경우에, 주거형태별로는 독립해서 생활하는 청년인 경우에, 일자리형태별로는 비임금 근로자인 경우에,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가 소유에 대한 평균 점수가 높았다. 도시규모별로는 중소도시에서 자가 소유에 대한 평균 점수가 낮았다.

표 III-64. 자가 소유에 대한 생각(명, %)

구분	사례수	자가 소유에 대한 생각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5점)	
전체	(1,938)	1.4	11.1	22.8	51.8	12.9	3.6	
성별	남 자	(1,002)	1.9	11.6	23.7	49.6	13.2	3.6
	여 자	(936)	0.9	10.5	21.8	54.3	12.5	3.7
연령	만 19 ~ 24 세	(634)	1.8	12.1	27.4	46.0	12.7	3.6
	만 25 ~ 29 세	(663)	1.6	12.5	21.4	53.0	11.6	3.6
	만 30 ~ 34 세	(641)	0.9	8.8	19.8	56.3	14.3	3.7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1.1	9.6	22.5	54.8	12.0	3.7
	중 소 도 시	(434)	1.2	16.5	24.9	48.6	8.8	3.5
	농 어 촌	(321)	2.9	9.5	21.2	45.0	21.4	3.7
학력	고 졸 이 하	(494)	1.8	13.4	23.1	49.1	12.6	3.6
	대 학 / 대 학 원 재 학	(445)	2.1	11.4	27.0	46.1	13.4	3.6
	대 졸 이 상	(999)	0.9	9.8	20.8	55.8	12.7	3.7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1.3	16.4	20.5	46.9	14.9	3.6
	보 통	(1,032)	1.0	11.3	24.3	51.1	12.2	3.6
	잘 산 다	(652)	2.2	8.4	21.4	55.0	13.0	3.7
주거 형태	동 거	(1,160)	1.8	11.8	25.6	48.8	12.0	3.6
	비 동 거 / 독 립	(778)	0.9	10.0	18.7	56.2	14.1	3.7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576)	1.3	12.8	25.6	46.4	13.8	3.6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2.0	16.7	27.9	43.2	10.3	3.4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1.5	9.0	20.9	56.6	12.1	3.7
혼인상태	비 임 금 근 로 자	(142)	0.7	9.9	16.8	54.1	18.5	3.8
	배 우 자 없 음	(1,580)	1.7	12.1	24.3	50.0	12.0	3.6
	배 우 자 있 음	(358)	0.3	6.7	16.1	60.2	16.8	3.9



주)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임. 표본조사 대상 연령을 고려하여 19-29세 결과를 비교해 제시하였음.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그림 III-17. 집값이 걱정하지 않다는 청년 응답 비율에 대한 연도별 비교(%)

집값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2019년부터 질문하였는데 비교를 위해 19세에서 29세까지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집값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9년 77.1%였으나 2020년 85.0%로 증가했고 2021년 92.0%로 급증했다. 이 결과는 부동산 가격 상승 추세와 거의 일치한다. 2022년부터 부정 평가가 낮아져 85.6%였고 2023년에는 82.4%로 낮아졌으나 코로나19 이전이 2019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III-65. 현재 집값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생각(명, %)

구분		사례수	현재 집값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생각					평균 (점/5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938)	42.2	39.4	12.7	5.6	0.1	1.8
성별	남 자	(1,002)	40.8	40.9	13.2	5.1	0.1	1.8
	여 자	(936)	43.8	37.8	12.1	6.2	0.1	1.8
연령	만 19 ~ 24 세	(634)	41.6	41.5	11.4	5.5	0.0	1.8
	만 25 ~ 29 세	(663)	44.9	36.8	12.2	6.1	0.0	1.8
	만 30 ~ 34 세	(641)	40.0	40.1	14.4	5.2	0.4	1.9
도시 규모	대 도 시	(1,183)	42.5	38.0	12.5	6.9	0.1	1.8
	중 소 도 시	(434)	43.1	43.2	10.2	3.2	0.3	1.7
	농 어 촌	(321)	39.9	39.5	16.6	4.0	0.0	1.9
학력	고 졸 이 하	(494)	45.1	36.3	12.2	6.2	0.2	1.8
	대학/대학원 재학	(445)	39.3	43.7	11.9	5.1	0.0	1.8
	대 졸 이 상	(999)	42.0	39.1	13.3	5.5	0.1	1.8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45.8	42.1	7.6	4.4	0.0	1.7
	보 통	(1,032)	40.7	40.4	13.0	5.9	0.1	1.8
	잘 산 다	(652)	43.2	36.6	14.4	5.7	0.2	1.8
주거 형태	동 거	(1,160)	41.7	39.9	12.4	5.9	0.1	1.8
	비 동 거 / 독 립	(778)	42.9	38.8	13.0	5.2	0.1	1.8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576)	41.9	41.8	11.5	4.7	0.0	1.8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39.6	43.1	12.5	4.7	0.0	1.8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41.9	38.3	13.2	6.3	0.2	1.9
	비 임 금 근 로 자	(142)	49.6	31.5	13.4	5.5	0.0	1.8
혼인 상태	배 우 자 없 음	(1,580)	42.6	39.3	12.3	5.7	0.1	1.8
	배 우 자 있 음	(358)	40.2	40.1	14.2	5.2	0.3	1.9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현재 집값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81.6%가 부정적인 의견(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을 보여주었다. 이 질문은 5점 척도인데 평균점수가 1.8점에 그쳤다. 성별로는 차이

가 없었고 연령별로는 30대 초반의 평균 점수가 1.9점으로 다소 높았다. 도시규모별로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년인 경우 동의도가 낮았다. 학력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고 경제 수준별로는 못 산다고 생각한 청년인 경우 동의도가 낮았다. 주거형태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고 일자리형태별로는 정규직인 경우 평균 점수가 다소 높았다.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동의도가 낮았다.

이어서 건강권과 관련하여 청년들의 주관적인 신체건강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19-34세 청년 중에서 주관적 신체건강이 좋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2%로 낮았고 5점 척도에서 평균 점수는 4.0점이었다.

표 III-66. 주관적인 신체건강에 대한 인식(명, %)

구분		사례수	주관적인 신체건강에 대한 인식					평균 (점/5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938)	0.6	1.6	11.2	66.7	19.9	4.0
성별	남 자	(1,002)	0.6	1.6	9.8	64.8	23.2	4.1
	여 자	(936)	0.5	1.6	12.8	68.9	16.2	4.0
연령	만 19 ~ 24 세	(634)	0.4	0.7	9.3	65.5	24.1	4.1
	만 25 ~ 29 세	(663)	0.9	2.2	11.5	67.3	18.0	4.0
	만 30 ~ 34 세	(641)	0.4	1.9	12.8	67.3	17.7	4.0
도시 규모	대 도 시	(1,183)	0.4	1.4	11.1	67.9	19.1	4.0
	중 소 도 시	(434)	0.8	0.8	10.8	68.5	19.1	4.0
	농 어 촌	(321)	0.9	3.3	12.2	60.0	23.7	4.0
학력	고 졸 이 하	(494)	1.0	1.4	13.3	64.6	19.7	4.0
	대학/대학원 재학	(445)	0.7	0.9	8.0	65.3	25.0	4.1
	대 졸 이 상	(999)	0.3	2.0	11.5	68.5	17.7	4.0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2.2	2.7	17.0	57.6	20.5	3.9
	보 통	(1,032)	0.3	1.4	9.0	71.4	17.9	4.1
	잘 산 다	(652)	0.4	1.5	12.3	62.9	22.9	4.1
주거 형태	동 거	(1,160)	0.6	1.6	10.9	64.6	22.3	4.1
	비 동 거 / 독 립	(778)	0.6	1.6	11.6	69.8	16.4	4.0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576)	1.4	1.9	10.2	65.8	20.7	4.0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0.4	1.0	15.0	65.7	17.9	4.0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0.2	1.6	11.4	67.8	19.1	4.0
	비 임 금 근 로 자	(142)	0.0	1.6	7.9	64.9	25.6	4.2
혼인 상태	배 우 자 없 음	(1,580)	0.7	1.7	10.9	65.7	21.1	4.1
	배 우 자 있 음	(358)	0.3	1.3	12.4	71.5	14.6	4.0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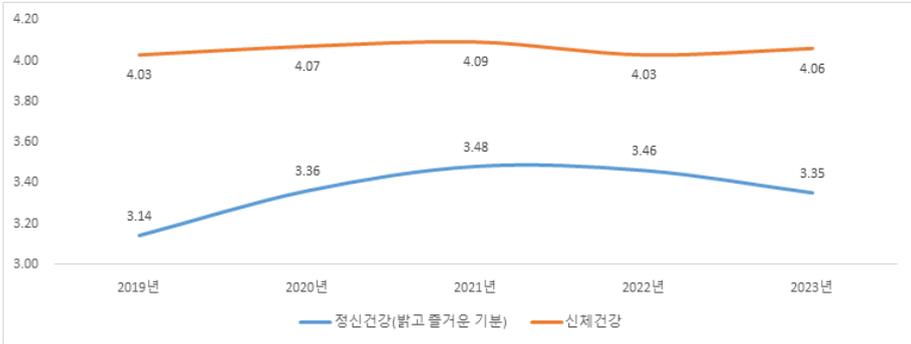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초반의 평균 점수가 높았으며 도시규모별로는 차이가 없었다. 학력별로는 재학생인 경우 평균 점수가 높았다. 경제 수준별로는 못 산다고 생각한 청년인 경우 평균 점수가 낮았다. 주거형태별로는 독립해서 생활하는 청년의 평균 점수가 낮았다. 일자리형태별로는 비임금 근로자의 평균 점수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평균점수가 높았다.

이어서 규칙적인 운동 연구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35.9%가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3번 하는 경우가 40.4%로 가장 많았고 일주일에 2번 하는 경우가 20.0%로 뒤를 이었다.

표 III-67. 규칙적인 운동 여부(명, %)

구분		사례수	예	일주일						매일	아니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전체		(1,938)	35.9	3.6	20.0	40.4	14.5	14.5	2.3	4.7	64.1
성별	남 자	(1,002)	41.5	3.1	17.1	39.6	15.8	17.0	2.8	4.6	58.5
	여 자	(936)	29.6	4.4	24.5	41.6	12.5	10.6	1.6	4.8	70.4
연령	만 19 ~ 24 세	(634)	33.8	3.3	18.1	39.5	16.4	14.0	2.9	5.8	66.2
	만 25 ~ 29 세	(663)	36.1	2.8	17.1	44.0	13.6	15.1	2.2	5.1	63.9
	만 30 ~ 34 세	(641)	37.9	4.7	24.3	37.6	13.7	14.3	2.0	3.3	62.1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39.1	3.2	19.5	40.3	14.4	15.3	1.9	5.3	60.9
	중 소 도 시	(434)	29.0	2.3	21.3	39.0	16.4	14.4	3.4	3.2	71.0
	농 어 촌	(321)	33.6	6.6	20.5	42.2	12.6	11.3	2.8	3.8	66.4
학력	고 졸 이 하	(494)	27.0	5.3	23.5	38.9	12.9	13.7	2.4	3.4	73.0
	대학/대학원 재학	(445)	40.0	1.9	17.6	41.3	17.9	13.3	2.8	5.2	60.0
	대 졸 이 상	(999)	38.8	3.8	19.8	40.6	13.5	15.4	2.1	4.9	61.2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35.2	1.0	21.0	45.7	15.7	10.6	0.0	6.0	64.8
	보 통	(1,032)	33.1	4.1	19.0	42.7	13.7	14.2	2.7	3.6	66.9
주거 형태	잘 산 다	(652)	40.9	3.9	20.9	35.2	15.1	16.4	2.8	5.6	59.1
	동 거	(1,160)	35.8	3.1	17.7	41.5	15.7	15.2	3.0	3.9	64.2
일자리 형태	비 동 거 / 독 립	(778)	36.1	4.4	23.2	38.8	12.8	13.5	1.4	5.8	63.9
	일 자 리 없 음	(576)	34.4	3.5	17.3	41.9	15.6	13.7	3.8	4.2	65.6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32.5	5.2	19.7	34.3	18.0	20.4	0.0	2.5	67.5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38.7	2.9	22.0	40.7	13.2	14.4	2.0	4.8	61.3
혼인상태	비 임 금 근 로 자	(142)	28.3	7.7	13.9	41.8	14.9	8.7	3.0	9.9	71.7
	배 우 자 없 음	(1,580)	37.0	3.4	19.4	39.9	15.3	14.7	2.8	4.6	63.0
	배 우 자 있 음	(358)	30.8	4.9	23.0	42.9	10.3	13.7	0.0	5.2	69.2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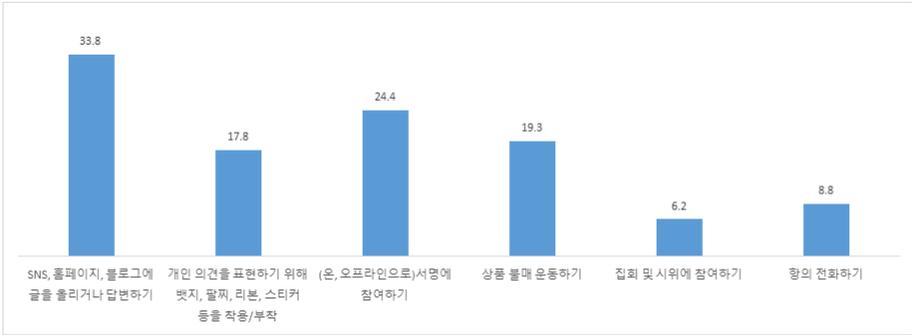
주) 점수는 19~29세 응답결과이며 연도별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정신건강은 6점 만점이며 신체건강은 5점 만점임

그림 Ⅲ-18. 청년의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 응답 추이(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응답 결과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19세에서 29세를 대상으로 결과를 비교해 보면, 주관적 신체건강 점수는 4.06점으로 지난 4년 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관적 정신건강은 “밝고 즐거운 기분이 든다”고 물어본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2019년 3.14점이었으나 2021년 3.48점까지 상승하다가 2023년 3.35점으로 낮아졌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는 비율이 10%p 이상 높았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들수록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도시규모별로는 대도시에 사는 청년인 경우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학력별로는 재학생의 운동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 수준별로는 잘 산다고 응답한 청년인 경우 운동 비율이 높았다. 주거 형태별로는 독립해서 생활하는 청년인 경우에, 일자리형태별로는 정규직인 경우에, 혼인 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운동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어서 청년의 사회, 정치적 참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청년의 사회, 정치 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 방법을 살펴보면,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지적답게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는 경우가 33.8%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서명에 참여하기가 24.4%였으며 상품 구매 운동하기는 19.3%였다. 전통적인 의사 표시 방식 중 하나인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는 6.2%로 낮았다.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그림 III-19. 청년의 사회, 정치 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 참여 방법(%)

표 III-68. 사회·정치 문제에 대한 의견 표명 행동 참여 여부 - (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명, %)

구분	사례수	사회·정치 문제에 대한 의견 표명 행동 참여 여부					
		참여한적 없음	1년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전체	(1,938)	66.2	11.7	11.3	8.8	2.0	
성별	남 자	(1,002)	69.1	11.7	10.6	7.3	1.3
	여 자	(936)	63.0	11.8	12.0	10.4	2.8
연령	만 19 ~ 24 세	(634)	63.0	12.8	12.6	9.9	1.7
	만 25 ~ 29 세	(663)	67.8	10.4	10.2	9.3	2.2
	만 30 ~ 34 세	(641)	67.6	12.1	11.0	7.2	2.1
도시규모	대 도시	(1,183)	66.7	12.9	10.2	8.2	1.9
	중 소 도시	(434)	57.8	10.5	16.3	12.9	2.6
	농 어 촌	(321)	75.7	9.0	8.2	5.3	1.8
학력	고 졸 이하	(494)	75.0	10.3	7.5	6.3	0.9
	대학/대학원 재학	(445)	56.9	14.2	16.1	10.8	2.1
	대 졸 이상	(999)	65.8	11.4	11.1	9.2	2.5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67.3	10.4	11.6	8.9	1.8
	보 통	(1,032)	68.8	10.8	10.8	8.3	1.3
	잘 산 다	(652)	61.4	13.9	11.9	9.6	3.2
주거 형태	동 거	(1,160)	62.3	13.4	12.3	10.2	1.7
	비 동 거 / 독 립	(778)	71.9	9.3	9.7	6.7	2.4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576)	62.7	13.6	13.7	8.5	1.6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67.8	11.2	10.9	8.7	1.3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67.2	11.2	9.9	9.3	2.5
	비 임금 근로자	(142)	71.0	9.5	11.8	6.5	1.4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1,580)	65.3	12.1	11.5	9.0	2.0
	배 우 자 있 음	(358)	70.3	9.9	10.0	7.9	2.0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먼저 온라인을 통한 의견 표명 행동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참여한 비율이 높았다. 거의 매일이나 일주일에 1-2회 참여하기와 같이 빈번하게 참여하는 정도에 있어서도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초반의 참여 비율이 높았고 빈번하게 참여하는 정도에 있어서도 높았다. 도시규모별로는 중소도시에 살고 있는 청년의 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재학생인 경우가, 경제 수준별로는 잘 산다고 생각하는 청년이, 주거형태별로는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이, 일자리형태별로는 일자리가 없는 경우에,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참여 비율이 높았다.

표 III-69. 사회·정치 문제에 대한 의견 표명 행동 참여 여부 - (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뱃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명, %)

구분		사례수	사회·정치 문제에 대한 의견 표명 행동 참여 여부				
			참여한적 없음	1년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전체		(1,938)	82.2	9.4	4.4	3.1	0.8
성별	남 자	(1,002)	85.2	7.1	4.4	2.7	0.6
	여 자	(936)	78.8	12.0	4.5	3.6	1.1
연령	만 19 ~ 24 세	(634)	84.0	8.8	4.5	2.2	0.6
	만 25 ~ 29 세	(663)	83.1	7.7	4.9	3.5	0.9
	만 30 ~ 34 세	(641)	79.5	11.8	3.9	3.7	1.0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85.4	8.7	4.0	1.2	0.7
	중 소 도 시	(434)	70.2	13.8	6.1	8.9	1.0
	농 여 촌	(321)	86.5	6.3	3.6	2.5	1.2
학력	고 졸 이 하	(494)	88.1	6.3	4.2	1.4	0.0
	대학/대학원 재학	(445)	80.0	11.7	5.2	2.5	0.7
	대 졸 이 상	(999)	80.1	10.1	4.2	4.4	1.3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84.8	8.0	4.5	2.4	0.4
	보 통	(1,032)	85.3	8.7	2.6	2.7	0.6
	잘 산 다	(652)	75.8	11.2	7.4	4.2	1.4
주거 형태	동 거	(1,160)	81.0	10.0	4.8	3.4	0.8
	비 동 거 / 독 립	(778)	83.9	8.5	3.9	2.8	0.9
	일 자 리 없 음	(576)	82.7	9.1	4.7	2.8	0.7
일자리 형태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87.0	7.2	3.7	2.1	0.0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80.4	10.6	4.0	3.8	1.3
	비 임금 근로자	(142)	84.4	6.1	7.7	1.8	0.0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1,580)	82.3	9.4	4.6	3.0	0.7
	배 우 자 있 음	(358)	81.9	9.4	3.5	3.9	1.3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이어서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뱃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하거나 부착하는 행동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참여 비율이 높았다. 온라인 참여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여성의 참여 비율이 높았는데 이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사회 및 정치 참여를 더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최근 청년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별로는 30대 초반의 참여 비율이 높았으며, 도시규모별로는 중소도시 청년의 참여 비율이 높았다. 학력별로는 재학생인 경우에, 경제 수준별로는 잘 산다고 생각한 청년인 경우에, 주거 형태별로는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 일자리형태별로는 정규직인 경우에,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참여비율이 높았다.

표 III-70. 사회·정치 문제에 대한 의견 표명 행동 참여 여부 - (3) (온·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명, %)

구분	사례수	사회·정치 문제에 대한 의견 표명 행동 참여 여부				
		참여한적 없음	1년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전체	(1,938)	75.6	19.1	3.1	1.8	0.4
성별	남 자 (1,002)	77.8	17.2	3.0	1.6	0.4
	여 자 (936)	73.1	21.1	3.2	2.0	0.5
연령	만 19 ~ 24 세 (634)	78.0	17.4	3.0	1.7	0.0
	만 25 ~ 29 세 (663)	74.9	19.7	3.0	1.9	0.5
	만 30 ~ 34 세 (641)	74.1	20.1	3.4	1.6	0.8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76.7	18.4	2.8	1.6	0.5
	중 소 도 시 (434)	70.3	22.7	4.3	2.6	0.1
	농 어 촌 (321)	78.7	16.7	2.7	1.1	0.8
학력	고 졸 이 하 (494)	81.2	14.3	2.6	1.6	0.3
	대학/대학원 재학 (445)	73.8	20.4	3.3	2.2	0.3
	대 졸 이 상 (999)	73.5	21.0	3.3	1.6	0.6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77.7	18.0	2.8	1.0	0.4
	보 통 (1,032)	77.8	18.5	2.7	1.0	0.1
주거 형태	잘 산 다 (652)	71.1	20.5	4.0	3.3	1.1
	동 우 자 거 (1,160)	74.3	19.8	3.2	2.3	0.4
일자리 형태	비 동 거 / 독 립 (778)	77.5	18.1	3.0	0.9	0.5
	일 자 리 없 음 (576)	75.8	18.2	3.9	2.1	0.0
일자리 형태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78.3	18.3	1.6	1.8	0.0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74.3	20.1	3.2	1.6	0.8
	비 임금 근로자 (142)	79.1	17.2	2.0	1.3	0.4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1,580)	75.7	19.1	3.1	1.8	0.4
	배 우 자 있 음 (358)	75.2	19.1	3.4	1.4	0.8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다음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서명 참여하기를 살펴보면, 이 경우에도 여자가 남자보다 참여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 초반인 경우에 참여 비율이 높았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의 참여 비율이 높았다. 경제 수준별로는 잘 산다고 응답한 청년이, 주거형태별로는 부모님과 동거 중인 청년인 경우에, 일자리형태별로는 정규직인 경우에, 혼인상태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도시규모별로는 이 경우에도 중소도시의 참여 비율이 높았다. 대도시나 농어촌 청년이 아닌 중소도시 청년의 참여 비율이 높은 이유를 밝히기는 어렵다. 다만, 대도시의 경우 참여할 수 있는 여유가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농어촌의 경우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표 III-71. 사회·정치 문제에 대한 의견 표명 행동 참여 여부 - (4) 상품 불매 운동하기(명, %)

구분	사례수	사회·정치 문제에 대한 의견 표명 행동 참여 여부					
		참여한적 없음	1년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전체	(1,938)	80.7	14.5	3.2	1.1	0.6	
성별	남 자	(1,002)	82.5	12.8	3.1	0.9	0.6
	여 자	(936)	78.6	16.4	3.3	1.3	0.5
연령	만 19 ~ 24 세	(634)	82.1	14.2	2.5	0.9	0.3
	만 25 ~ 29 세	(663)	81.8	13.3	2.9	0.9	1.1
	만 30 ~ 34 세	(641)	78.1	16.0	4.2	1.3	0.3
도시규모	대 도시	(1,183)	82.5	13.4	2.8	1.0	0.3
	중 소 도시	(434)	75.1	18.8	3.5	1.6	0.9
	농 어 촌	(321)	81.5	12.7	4.1	0.6	1.1
학력	고 졸 이 하	(494)	82.1	14.0	2.5	1.1	0.4
	대학/대학원 재학	(445)	78.4	16.7	3.1	1.3	0.5
	대 졸 이 상	(999)	80.9	13.8	3.7	0.9	0.7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84.7	10.3	3.2	0.9	0.8
	보 통	(1,032)	81.4	14.8	3.0	0.5	0.3
주거 형태	잘 산 다	(652)	77.7	15.8	3.6	2.0	0.9
	동 우 자 거	(1,160)	78.4	16.1	3.8	1.0	0.6
	비 동 거 / 독 립	(778)	84.0	12.1	2.3	1.2	0.4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576)	80.1	15.3	3.2	1.0	0.4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82.3	13.2	3.3	0.8	0.4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79.7	15.2	3.3	1.0	0.8
혼인상태	비 임 금 근 로 자	(142)	87.0	8.7	2.6	1.7	0.0
	배 우 자 없 음	(1,580)	80.6	14.4	3.4	0.9	0.7
	배 우 자 있 음	(358)	81.0	14.8	2.5	1.6	0.0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이어서 상품 불매 운동하기를 살펴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참여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 초반의 참여 비율이 높았다. 도시규모별로는 중소도시에 사는 청년인 경우에 참여 비율이 높았다. 학력별로는 재학생인 경우에, 경제수준별로는 잘 산다고 응답한 경우에, 주거형태별로는 부모와 동거 중인 경우에, 일자리형태별로는 정규직인 경우에,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참여 비율이 높았다.

지금까지 살펴 본 참여 비율을 보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주는 대상의 참여 비율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학생이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가능성이 높고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결혼 전으로 비혼이나 미혼으로 사는 경우에 참여 비율이 높았다.

표 III-72. 사회·정치 문제에 대한 의견 표명 행동 참여 여부 - (5)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명, %)

구분		사례수	사회·정치 문제에 대한 의견 표명 행동 참여 여부				
			참여한적 없음	1년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전체		(1,938)	93.8	4.0	0.9	0.9	0.3
성별	남 자	(1,002)	94.7	3.1	1.0	0.8	0.4
	여 자	(936)	92.7	5.1	0.9	1.0	0.2
연령	만 19 ~ 24 세	(634)	93.8	4.1	0.9	1.3	0.0
	만 25 ~ 29 세	(663)	94.5	3.4	1.1	0.9	0.2
	만 30 ~ 34 세	(641)	93.0	4.7	0.8	0.6	0.7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94.2	3.3	0.9	1.3	0.3
	중 소 도 시	(434)	92.3	6.0	0.9	0.7	0.1
	농 여 촌	(321)	94.3	4.1	0.9	0.0	0.7
학력	고 졸 이 하	(494)	94.7	2.9	1.2	0.8	0.3
	대학/대학원 재학	(445)	92.3	4.8	1.2	1.4	0.3
	대 졸 이 상	(999)	94.0	4.3	0.6	0.8	0.3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97.1	1.8	0.3	0.4	0.4
	보 통	(1,032)	94.9	3.4	0.8	0.7	0.1
	잘 산 다	(652)	90.4	6.2	1.4	1.5	0.5
주거 형태	동 거	(1,160)	93.1	4.3	1.0	1.5	0.2
	비 동 거 / 독 립	(778)	94.8	3.7	0.8	0.1	0.5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576)	93.4	3.9	1.3	1.4	0.0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95.3	3.8	0.5	0.4	0.0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93.3	4.5	0.8	0.9	0.5
	비 임금 근로자	(142)	96.2	2.1	1.3	0.0	0.4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1,580)	93.8	4.0	1.0	1.1	0.2
	배 우 자 있 음	(358)	93.8	4.5	0.6	0.3	0.8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전통적인 사회 및 정치 참여 방법인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를 살펴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참여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 초반의 참여 비율이 높았다. 도시 규모별로는 중소도시에 살고 있는 청년의 참여 비율이 높았다. 학력별로는 재학생인 경우에 참여 비율이 높았다. 주거형태별로는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 일자리형태별로는 일자리가 없는 경우에, 혼인상태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경제수준별로는 잘 산다고 응답한 청년인 경우에 참여 비율이 높았다. 특히 못 산다고 응답한 청년들의 참여 비율은 불과 2.9%로 잘 산다고 응답한 청년보다 6.7%p나 낮았다. 이 같은 결과는 물리적인 시간을 써야하는 집회와 시위와 같은 참여 방법에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하는 저소득 청년의 참여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 III-73. 사회·정치 문제에 대한 의견 표명 행동 참여 여부 - (6) 항의 전화하기(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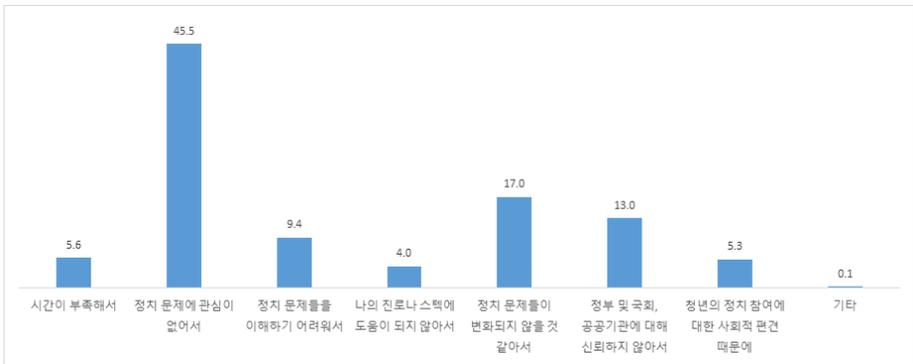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사회·정치 문제에 대한 의견 표명 행동 참여 여부				
			참여한적 없음	1년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전체		(1,938)	91.2	5.7	2.0	0.8	0.3
성별	남 자	(1,002)	91.5	4.9	2.5	0.8	0.4
	여 자	(936)	90.8	6.7	1.5	0.8	0.2
연령	만 19 ~ 24 세	(634)	92.4	5.1	1.6	0.5	0.4
	만 25 ~ 29 세	(663)	91.4	5.2	2.5	0.5	0.3
	만 30 ~ 34 세	(641)	89.7	6.8	1.9	1.4	0.2
도시규모	대 도시	(1,183)	92.0	4.8	2.1	0.7	0.4
	중 소 도시	(434)	88.8	8.2	2.0	1.0	0.0
	농 어 촌	(321)	91.3	5.8	1.8	0.7	0.4
학력	고 졸 이 하	(494)	92.3	4.7	1.9	1.1	0.0
	대학/대학원 재학	(445)	90.4	6.5	1.8	0.7	0.7
	대 졸 이 상	(999)	90.9	5.9	2.2	0.7	0.3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91.7	5.6	2.0	0.3	0.4
	보 통	(1,032)	92.2	5.5	1.7	0.3	0.3
주거 형태	잘 산 다	(652)	89.1	6.1	2.5	1.9	0.3
	동 거	(1,160)	90.1	6.3	2.3	0.9	0.3
일자리 형태	비 동 거 / 독 립	(778)	92.8	4.8	1.5	0.6	0.3
	일 자 리 없 음	(576)	91.3	5.6	2.0	0.5	0.6
일자리 형태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94.2	2.2	3.2	0.5	0.0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90.2	6.6	2.0	0.9	0.2
	비 임금 근로자	(142)	92.2	5.5	0.6	1.7	0.0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1,580)	91.2	5.6	2.1	0.7	0.3
	배 우 자 있 음	(358)	90.9	6.3	1.4	1.1	0.3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마지막으로 항의 전화하기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참여 비율이 조금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 초반의 참여비율이 높았다. 도시규모별로는 중소도시에 사는 청년의 참여비율이 높았다. 학력별로는 재학생의 참여 비율이 높았다. 경제수준별로는 잘 산다고 응답한 청년인 경우에, 주거형태별로는 부모와 동거 중인 청년인 경우에 참여 비율이 높았다.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조금 참여 비율이 높았다.

일자리형태별로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정규직인 경우에 참여 비율이 높았다. 모든 형태의 참여에서 임금 근로자로 정규직인 경우에 일자리가 없거나 비정규직인 경우, 비임금 근로자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상대적으로 일하는 시간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고 노동조합과 같은 집단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청년의 정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다. 첫 번째 이유로 "정치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가 45.5%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였다. 이어서 "정치 문제들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서"가 17.0%였고 "정부 및 국회, 공공기관에 대해 신뢰하지 않아서"가 13.0%로 뒤를 이었다. 이어서 "정치 문제들을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9.4%로 나타났다. 이어서 "시간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5.6%, "청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라는 응답이 5.3%로 나타났다.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그림 Ⅲ-20. 청년의 정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주된 이유(%)

이 결과는 정치 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정치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정치 참여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표 III-74. 정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이유(명, %)

구분		사례수	정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이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체		(1,938)	5.7	45.5	9.4	4.0	17.0	13.0	5.3	0.1
성별	남 자	(1,002)	6.2	44.4	7.6	4.0	18.8	13.7	5.1	0.2
	여 자	(936)	5.0	46.7	11.4	4.0	15.0	12.3	5.6	0.0
연령	만 19 ~ 24 세	(634)	5.4	48.0	10.3	4.3	14.3	13.3	4.4	0.0
	만 25 ~ 29 세	(663)	6.0	45.2	9.9	3.9	17.8	11.8	5.1	0.2
	만 30 ~ 34 세	(641)	5.6	43.3	7.9	3.8	18.9	14.0	6.4	0.1
도시규모	대 도시	(1,183)	6.8	43.6	8.9	4.2	17.7	14.0	4.8	0.0
	중 소 도시	(434)	2.5	45.8	11.7	4.9	16.8	10.8	7.3	0.3
	농 어 촌	(321)	5.8	51.9	8.0	2.4	14.8	12.6	4.6	0.0
학력	고 졸 이 하	(494)	5.6	52.3	10.8	2.4	16.1	8.8	4.1	0.0
	대학/대학원 재학	(445)	5.4	42.5	9.6	5.0	16.9	15.1	5.5	0.0
	대 졸 이 상	(999)	5.9	43.3	8.5	4.4	17.6	14.3	5.9	0.2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5.9	48.8	10.0	3.7	13.5	12.7	4.8	0.5
	보 통	(1,032)	5.0	47.2	10.1	3.7	18.7	11.3	4.0	0.0
	잘 산 다	(652)	6.7	41.2	7.9	4.7	15.7	16.1	7.6	0.1
주거 형태	동 거	(1,160)	5.3	44.9	9.9	4.2	17.0	13.2	5.4	0.1
	비 동 거 / 독 립	(778)	6.2	46.3	8.6	3.7	17.1	12.8	5.2	0.1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576)	4.6	46.2	12.1	4.2	14.3	14.1	4.6	0.0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5.2	46.9	8.4	2.6	22.6	10.1	4.2	0.0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6.5	44.2	8.5	4.2	17.1	13.3	5.9	0.2
	비 임 금 근 로 자	(142)	5.3	49.0	6.6	4.2	17.9	11.2	5.7	0.0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1,580)	5.6	45.8	9.5	4.2	16.4	13.1	5.4	0.1
	배 우 자 있 음	(358)	5.9	44.2	8.7	3.3	20.0	12.7	4.9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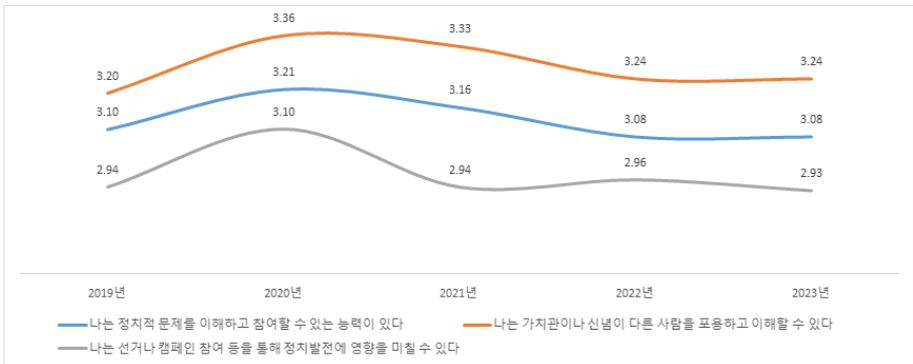
① 시간이 부족해서 ② 정치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 ③ 정치 문제들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④ 나의 진로나 스펙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⑤ 정치 문제들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서 ⑥ 정부 및 국회, 공공기관에 대해 신뢰하지 않아서 ⑦ 청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⑧ 기타

성별로는 남자가 "시간이 부족해서"와 "정치 문제들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서"에 대한 응답비율이 여자보다 높았고 여자는 "정치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와 "정치 문제들을 이해하기 어려워서"에서 남자보다 응답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정치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와 "정치 문제들을 이해하기 어려워서"에 대해서 나이가 들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반대로는 나이가 들수록 응답비율이 높아진 것은 "정치 문제들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서"와 "청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였다.

"정치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도시규모별로는 농어촌에서 응답비율이 높았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에서 응답비율이 높았다. 경제 수준별로는 못 산다고 응답한 청년이, 주거형태별로는 독립해서 생활하는 청년이, 일자리형태별로는 비임금 근로자인 청년이,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응답비율이 높았다.

2019년부터 청년에게 정치효능감에 대해 묻었는데 이 결과를 살펴보면,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세 가지 질문으로 물어본 결과 정치효능감 점수가 높았으나 이후 낮아졌다. 정치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물어본 질문은 2020년 3.21점에서 2023년 3.08점으로 낮아졌다.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질문 역시 2020년 3.36점에서 2023년 3.24점으로 낮아졌다.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질문은 2020년 3.10점에서 2023년 2.93점으로 낮아졌다.



주) 5점 척도의 평균점수임. 표본조사 대상 연령을 고려하여 19-29세 결과를 비교해 제시하였음.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그림 Ⅲ-21. 청년의 정치효능감 연도별 추세(%)

이어서 정치 참여와 관련하여 지난 대통령 선거에 참여했는지를 물어본 결과, 80.0%가 참여했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의 응답결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체 선거인 표본조사에 비해 투표율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조사는 전체 선거인을 모집단으로 10.3% 표본(4,527,836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다 정확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III-75. 지난 대통령 선거 참여여부(명, %)

구분		사례수	지난 대통령 선거 참여여부		
			참여했다	참여하지 않았다	투표권 없었다
전체		(1,938)	80.0	18.6	1.4
성별	남 자	(1,002)	78.8	19.7	1.6
	여 자	(936)	81.5	17.3	1.2
연령	만 19 ~ 24 세	(634)	66.9	28.9	4.3
	만 25 ~ 29 세	(663)	83.7	16.3	0.0
	만 30 ~ 34 세	(641)	89.1	10.9	0.0
도시규모	대 도시	(1,183)	79.2	19.3	1.5
	중 소 도시	(434)	80.1	19.1	0.8
	농 어 촌	(321)	83.0	15.1	1.9
학력	고 졸 이 하	(494)	74.2	24.2	1.6
	대학/대학원 재학	(445)	69.3	26.5	4.2
	대 졸 이 상	(999)	88.0	12.0	0.0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75.6	23.1	1.3
	보 통	(1,032)	81.1	18.2	0.7
	잘 산 다	(652)	80.3	17.1	2.6
주거 형태	동 거	(1,160)	75.4	22.6	2.0
	비 동 거 / 독 립	(778)	86.8	12.8	0.4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576)	70.4	25.8	3.8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76.4	22.2	1.3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85.3	14.7	0.0
	비 임금 근로자	(142)	88.1	10.5	1.4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1,580)	77.5	20.8	1.7
	배 우 자 있 음	(358)	91.7	8.3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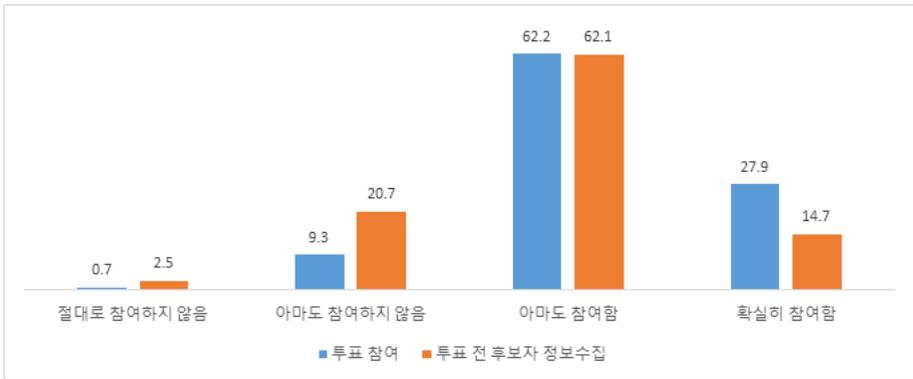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면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자의 참여비율이 높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2: 476)의 성별에 따른 연령대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이번에 처음 참여한 18세(남:여=67.8%:75.0%)와 19세(남:여=70.7%:74.5%), 그리고 20대 전반(남:여=70.0%:73.4%)과 20대 후반(남:여=66.3%:75.2%), 마지막으로 30대 초반(남:여=68.3%:73.7%) 모두 남자가 여자보다 투표율이 높아 여자 청년의 참여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 초반의 참여비율이 높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2: 472)에서 연령대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18세가 71.3%, 19세가 72.5%, 20대 전반이 71.6%, 20대 후반이 70.4%, 30대 전반이 70.9%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규모별로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청년인 경우에,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인 경우에, 경제 수준별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청년인 경우에, 주거형태별로는 독립해서 생활하는 청년인 경우에, 일자리형태별로는 비임금 근로자인 경우에,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참여 비율이 높았다.

향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선거 등 선거 투표 참여 의향을 물어본 결과, 62.2%가 아마도 참여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27.9%는 확실히 참여할 것이라고 응답해 90.1%가 선거에 참여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투표 전에 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의향을 물어본 결과, 확실히 참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투표 참여에 비해 낮았고 아마도 참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투표 참여와 유사한 응답비율을 보여주었다.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그림 III-22. 청년의 투표 참여 및 정보수집에 대한 의견(%)

투표 참여에 대해 사회인구적 배경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차이가 크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30대 초반이 참여 의향이 높았고 도시규모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도시규모별로 농어촌에 거주하는 청년인 경우 “확실히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의 참여 비율이 낮았다. 경제 수준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고 주거 형태나 일자리형태별로도 큰 차이가 없었다.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참여비율이 높았다.

표 III-76. 투표 관련 정치적 활동 참여 여부 - (1) 투표 참여(명, %)

구분	사례수	투표 관련 정치적 활동 참여 여부					평균 (점/4점)
		절대로 참여 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 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전체	(1,938)	0.6	8.2	61.7	29.4	3.2	
성별	남 자 (1,002)	0.8	9.0	61.1	29.1	3.2	
	여 자 (936)	0.5	7.3	62.4	29.8	3.2	
연령	만 19 ~ 24 세 (634)	0.8	8.8	61.6	28.8	3.2	
	만 25 ~ 29 세 (663)	0.5	9.7	62.8	27.0	3.2	
	만 30 ~ 34 세 (641)	0.5	6.2	60.7	32.6	3.3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0.7	7.6	63.6	28.1	3.2	
	중 소 도 시 (434)	0.7	6.7	65.6	27.0	3.2	
	농 어 촌 (321)	0.3	12.7	49.6	37.4	3.2	
학력	고 졸 이 하 (494)	1.2	12.9	58.2	27.8	3.1	
	대학/대학원 재학 (445)	0.9	6.1	61.7	31.4	3.2	
	대 졸 이 상 (999)	0.3	6.7	63.6	29.4	3.2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0.5	11.6	55.7	32.2	3.2	
	보 통 (1,032)	0.8	7.6	64.4	27.2	3.2	
	잘 산 다 (652)	0.5	7.8	59.8	31.8	3.2	
주거 형태	동 거 (1,160)	0.8	9.0	61.9	28.3	3.2	
	비 동 거 / 독 립 (778)	0.4	7.1	61.4	31.0	3.2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576)	1.1	6.9	62.9	29.1	3.2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0.9	7.8	60.9	30.3	3.2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0.4	9.6	60.5	29.5	3.2	
	비 임금 근로자 (142)	0.0	5.0	66.4	28.6	3.2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1,580)	0.6	9.2	61.6	28.6	3.2	
	배 우 자 있 음 (358)	0.7	3.9	62.3	33.0	3.3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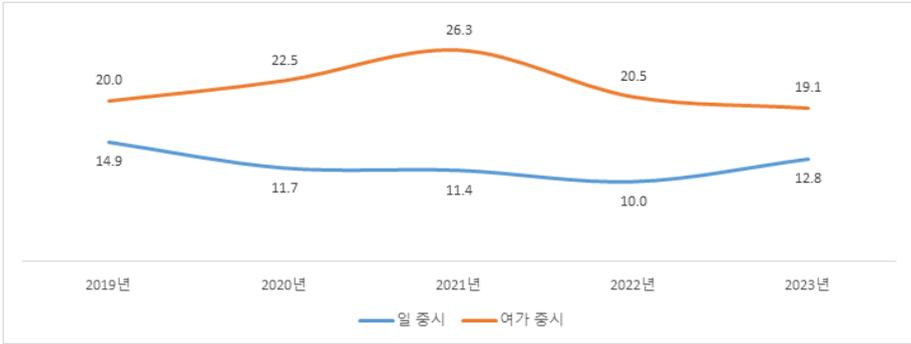
이어서 투표하기 전 후보자에 대한 정보 수집에 대해 사회·인구학적 배경별로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5점 만점에 평균 2.9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로는 30대 초반의 평균 점수가 높았다. 도시규모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확실히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농어촌 청년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의 평균 점수가 낮았다. 경제 수준별로는 잘 산다고 응답한 청년의 평균 점수가 높았다. 일자리형태별로는 비임금 근로자의 평균 점수가 높았다.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평균 점수가 높았다.

표 III-77. 투표 관련 정치적 활동 참여 여부 - (2) 투표하기 전 후보자에 대한 정보 수집(명, %)

구분	사례수	투표 관련 정치적 활동 참여 여부				평균 (점/4점)
		절대로 참여 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 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전체	(1,938)	2.3	19.1	62.7	15.9	2.9
성별	남 자 (1,002)	3.1	19.3	61.6	16.0	2.9
	여 자 (936)	1.4	18.9	63.9	15.8	2.9
연령	만 19 ~ 24 세 (634)	2.7	22.6	60.9	13.8	2.9
	만 25 ~ 29 세 (663)	2.4	18.9	63.3	15.5	2.9
	만 30 ~ 34 세 (641)	1.8	16.0	63.9	18.3	3.0
도시규모	대 도시 (1,183)	2.8	16.8	64.6	15.9	2.9
	중 소 도시 (434)	2.3	19.6	65.6	12.5	2.9
	농 어 촌 (321)	0.6	27.0	52.1	20.3	2.9
학력	고 졸 이 하 (494)	2.9	26.3	55.9	14.9	2.8
	대학/대학원 재학 (445)	2.9	16.1	64.1	16.8	3.0
	대 졸 이 상 (999)	1.7	16.7	65.7	15.9	3.0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3.7	25.9	55.0	15.4	2.8
	보 통 (1,032)	1.7	20.0	63.8	14.5	2.9
	잘 산 다 (652)	2.6	14.8	64.2	18.4	3.0
주거 형태	동 거 (1,160)	2.7	19.0	63.8	14.5	2.9
	비 동 거 / 독 립 (778)	1.7	19.4	61.1	17.9	3.0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576)	2.9	18.6	64.1	14.3	2.9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3.2	23.1	59.1	14.6	2.9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1.8	19.1	62.5	16.6	2.9
	비 임 금 근 로 자 (142)	1.8	14.6	64.6	19.0	3.0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1,580)	2.5	20.3	62.1	15.1	2.9
	배 우 자 있 음 (358)	1.4	13.7	65.7	19.3	3.0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행복추구권이나 여가권과 관련하여 먼저 청년들이 일과 여가 중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019년부터 동일한 질문이 추가되었는데 1점에서 7점 사이로 일을 중시할 경우 1점에 가깝게, 여가를 중시할 경우 7점에 가깝게 응답하도록 했다. 2019년 일을 중시한다(1-2점)고 응답한 비중은 14.9%였고 여가를 중시한다(6-7점)고 응답한 비중은 20.0%로 일보다는 여가를 중시하였고 여가를 중시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2021년 36.3%까지 증가했다가 최근 들어 다시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여가를 중시하는 경향이 감소 추세로 돌아선 것은 코로나19이후 부동산, 코인 등에 대한 투자가 활발했으나 가격이 급락하면서 임금 노동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고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면서 일을 중시하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 7점 척도에서 일 중시 1-2점, 여가 중시 6-7점 응답 비율임. 표본조사 대상 연령을 고려하여 19-29세 결과를 비교해 제시하였음.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그림 III-23. 청년의 일-여가 중시 비중 연도별 추세(%)

표 III-78. 가치 항목별 선호도 - 일 중시 VS 여가 중시(명, %)

구분	사례수	일 중시 (-----) 여가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1,938)	1.7	11.5	14.8	26.5	26.8	14.5	4.2	
성별	남 자	(1,002)	1.7	13.2	16.3	26.3	24.6	13.7	4.2
	여 자	(936)	1.8	9.6	13.1	26.7	29.3	15.5	4.2
연령	만 19 ~ 24 세	(634)	1.3	9.1	14.8	28.4	27.2	14.2	5.0
	만 25 ~ 29 세	(663)	2.0	13.2	13.2	26.7	26.0	14.8	4.1
	만 30 ~ 34 세	(641)	2.0	12.0	16.4	24.4	27.2	14.6	3.4
도시규모	대 도시	(1,183)	1.4	10.3	12.7	27.7	29.6	14.4	3.8
	중 소 도시	(434)	1.1	14.3	19.8	25.9	22.3	13.7	2.9
	농 어 촌	(321)	3.8	11.7	15.6	22.8	22.7	16.1	7.3
학력	고 졸 이 하	(494)	1.5	15.2	17.2	22.9	25.3	13.6	4.2
	대 학 / 대 학 원 재 학	(445)	1.5	8.4	12.6	29.0	27.5	16.2	4.8
	대 졸 이 상	(999)	2.0	10.9	14.5	27.2	27.2	14.3	3.9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2.9	11.4	15.6	18.5	25.5	19.2	7.0
	보 통	(1,032)	1.7	10.8	15.2	28.5	26.3	13.1	4.4
	잘 산 다	(652)	1.3	12.6	13.8	26.6	28.1	14.8	2.6
주거 형태	동 거	(1,160)	1.6	10.7	14.8	26.4	27.4	13.9	5.2
	비 동 거 / 독 립	(778)	2.0	12.6	14.8	26.5	25.9	15.4	2.7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576)	1.3	8.3	12.2	27.2	28.6	18.0	4.4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3.3	15.1	14.1	30.9	21.5	11.1	3.9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1.3	10.2	14.9	25.7	28.9	14.8	4.2
	비 임 금 근 로 자	(142)	4.4	26.2	25.1	21.6	13.8	5.1	3.8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1,580)	1.8	11.5	15.0	27.1	26.3	13.9	4.5
	배 우 자 있 음	(358)	1.5	11.3	13.9	23.8	29.0	17.7	2.8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일과 여가 중시 경향을 사회인구학적 배경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여가를 중시하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초반인 경우에, 도시규모별로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청년인 경우에, 학력별로는 재학생인 경우에, 경제 수준별로는 못 산다고 응답한 청년인 경우에, 주거형태별로는 독립해서 생활하는 경우에, 일자리 형태별로는 일자리가 없는 경우에,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여가 중시 비율이 높았다.

이어서 청년의 단체 및 여가활동 참여 비율을 살펴보면, 친목 및 친교 모임 참여 비율이 67.7%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여가활동 모임이 54.3%였고 자기계발 모임 및 그룹스터디는 12.8%였다. 사회참여와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 가입은 4.0%였고 노동조합 가입이나 지역사회모임 등도 4.0%로 나타났다.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정당 및 정치단체 가입은 2.7%로 나타났다.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그림 III-24. 청년의 단체 및 여가활동 참여 비율(%)

먼저 여가활동 모임 참여를 보면, 한 달에 1-2회 참여가 24.8%로 가장 높았고 일주일에 1-2회 참여가 17.5%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빈번하게 여가활동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어릴수록 더 빈번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로는 대도시인 경우에 빈번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대학생인 경우에, 경제 수준별로는 잘 산다고 응답한 청년인 경우에, 일자리 형태별로는 임금 근로자로 정규직인 경우에,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더 빈번하게 여가활동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표 III-79. 지난 1년간 단체(모임) 참여 빈도 - (1) 여가활동(취미 및 스포츠) 모임(명, %)

구분	사례수	지난 1년간 단체(모임) 참여 빈도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전체	(1,938)	44.8	11.0	24.8	17.5	1.9	
성별	남 자	(1,002)	41.6	10.4	25.7	20.1	2.2
	여 자	(936)	48.4	11.8	23.7	14.5	1.6
연령	만 19 ~ 24 세	(634)	46.6	11.5	21.3	18.9	1.6
	만 25 ~ 29 세	(663)	44.9	9.8	26.0	17.6	1.7
	만 30 ~ 34 세	(641)	43.0	11.9	26.8	16.0	2.4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42.0	12.6	24.2	18.9	2.2
	중 소 도 시	(434)	49.5	6.9	29.3	13.1	1.2
	농 어 촌	(321)	48.4	10.8	20.7	18.2	1.8
학력	고 졸 이 하	(494)	51.9	7.3	22.6	17.5	0.7
	대 학 / 대 학 원 재 학	(445)	41.0	13.6	24.4	18.7	2.4
	대 졸 이 상	(999)	42.7	11.9	26.1	16.9	2.4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56.2	9.2	20.0	14.0	0.6
	보 통	(1,032)	44.3	11.9	25.6	16.5	1.6
	잘 산 다	(652)	40.5	10.4	25.5	20.6	3.0
주거 형태	동 거	(1,160)	44.0	12.1	24.1	17.6	2.3
	비 동 거 / 독 립	(778)	46.0	9.5	25.8	17.2	1.4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576)	47.7	12.9	21.4	16.1	2.0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51.3	10.3	20.7	15.5	2.3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41.6	10.3	26.5	19.8	1.8
	비 임금 근로자	(142)	44.4	10.5	32.6	10.7	1.8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1,580)	43.7	11.0	24.9	18.3	2.0
	배 우 자 있 음	(358)	49.8	11.1	24.1	13.6	1.4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친목 및 친교 모임을 살펴보면, 한 달에 1-2회 참여가 36.4%로 가장 많았고 1년에 1-2회가 22.1%로 많았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친목 및 친교 모임 참여를 더 빈번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초반이 더 빈번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로는 중소도시인 경우에 덜 빈번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재학생인 경우에, 경제 수준별로는 잘 산다고 응답한 청년인 경우에, 주거형태별로는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인 경우에,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더 빈번하게 친목 및 친교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형태별로는 정규직인 경우 더 빈번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가 없는 경우나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이 더 모임을 자주 나가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문제라기 보다는 자신을 증명하는 뚜렷한 지위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III-80. 지난 1년간 단체(모임) 참여 빈도 - (2) 친목 및 친교(동창, 향우회 등) 모임(명, %)

구분	사례수	지난 1년간 단체(모임) 참여 빈도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전체	(1,938)	29.7	22.1	36.4	10.9	0.9
성별	남 자 (1,002)	29.4	21.2	36.2	12.0	1.2
	여 자 (936)	30.0	23.1	36.7	9.7	0.5
연령	만 19 ~ 24 세 (634)	33.4	21.6	32.9	10.9	1.1
	만 25 ~ 29 세 (663)	31.1	19.1	37.1	12.0	0.7
	만 30 ~ 34 세 (641)	24.6	25.7	39.1	9.8	0.8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27.8	20.9	37.5	12.6	1.2
	중 소 도 시 (434)	30.9	28.0	35.4	5.2	0.4
	농 어 촌 (321)	34.9	18.3	34.0	12.3	0.5
학력	고 졸 이 하 (494)	34.6	18.0	36.5	10.3	0.6
	대 학 / 대 학 원 재 학 (445)	33.0	20.1	34.0	11.6	1.2
	대 졸 이 상 (999)	25.6	25.1	37.5	10.9	0.9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36.8	20.7	31.3	11.2	0.0
	보 통 (1,032)	28.1	22.3	38.7	10.4	0.6
주거 형태	잘 산 다 (652)	29.3	22.4	34.9	11.7	1.8
	동 거 (1,160)	29.8	20.4	37.1	11.5	1.1
일자리 형태	비 동 거 / 독 립 (778)	29.5	24.5	35.4	10.1	0.5
	일 자 리 없 음 (576)	37.3	22.3	28.4	10.7	1.3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36.9	18.9	32.8	10.8	0.6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24.4	23.6	39.5	12.0	0.5
혼인상태	비 임 금 근 로 자 (142)	24.3	16.3	52.4	4.8	2.2
	배 우 자 없 음 (1,580)	29.9	20.9	36.6	11.6	1.0
	배 우 자 있 음 (358)	28.8	27.3	35.8	7.6	0.6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이어서 자기계발 모임 및 그룹 스터디에 참여한 빈도를 보면, 한 달에 1-2회와 1년에 1-2회가 각각 11.2%와 10.0%로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자기계발 모임 및 그룹스터디에 더 빈번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초반이 학생이라는 특성상 더 빈번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은 학력별로 재학생의 참여 빈도가 높게 나오는 것과 같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도시규모별로는 농어촌인 경우에, 경제 수준별로는 잘 산다고 응답한 경우에, 주거형태 별로는 부모와 동거 중인 청년인 경우에, 일자리형태별로는 일자리가 없는 경우에,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다른 경우와 비교해 자기계발이나 스터디 모임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았다.

표 III-81. 지난 1년간 단체(모임) 참여 빈도 - (3) 자기계발 모임 및 그룹 스터디(명, %)

구분	사례수	지난 1년간 단체(모임) 참여 빈도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전체	(1,938)	72.3	10.0	11.2	5.8	0.6	
성별	남 자	(1,002)	73.3	8.2	11.5	6.4	0.6
	여 자	(936)	71.3	12.1	11.0	5.2	0.5
연령	만 19 ~ 24 세	(634)	63.7	9.8	15.6	9.6	1.2
	만 25 ~ 29 세	(663)	75.3	9.8	9.6	4.9	0.4
	만 30 ~ 34 세	(641)	77.6	10.5	8.7	3.1	0.1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70.4	11.4	11.9	5.9	0.4
	중 소 도 시	(434)	74.7	9.2	11.3	4.5	0.3
	농 어 촌	(321)	76.0	6.3	8.9	7.2	1.5
학력	고 졸 이 하	(494)	84.0	5.9	6.3	3.5	0.2
	대학/대학원 재학	(445)	52.0	12.0	20.8	13.7	1.5
	대 졸 이 상	(999)	75.3	11.3	9.5	3.5	0.3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79.7	6.3	8.1	5.9	0.0
	보 통	(1,032)	73.9	10.1	11.4	4.1	0.5
	잘 산 다	(652)	66.4	11.5	12.4	8.6	1.0
주거 형태	동 거	(1,160)	68.2	11.0	12.8	7.5	0.5
	비 동 거 / 독 립	(778)	78.3	8.6	8.9	3.5	0.6
	일 자 리 없 음	(576)	63.0	9.4	15.5	11.1	1.1
일자리 형태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68.9	10.2	13.7	6.6	0.6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77.6	10.5	8.7	3.0	0.2
	비 임금 근로자	(142)	78.7	9.6	8.0	3.0	0.6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1,580)	70.0	10.5	12.1	6.7	0.6
	배 우 자 있 음	(358)	82.9	7.8	7.2	1.8	0.3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다음으로 종교모임을 살펴보면, 86.6%가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일주일에 1-2회가 6.9%로 가장 높은 참여빈도를 보여주었다. 성별로는 다른 단체 활동과는 달리 여자가 남자보다 더 빈번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종교활동에 참여한 여자의 비율이 높은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20대 후반의 참여 빈도(거의 매일+일주일에 1~2회)가 낮았다. 도시규모별로는 대도시의 참여 빈도가 낮았다. 학력별로는 재학생의 참여빈도가 높았고 경제 수준별로는 못 산다고 응답한 경우에 참여 빈도가 높았다. 주거형태별로는 부모와 동거 중인 경우에, 일자리형태별로는 일자리가 없는 경우에,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종교모임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았다.

표 III-82. 지난 1년간 단체(모임) 참여 빈도 - (4) 종교모임(명, %)

구분	사례수	지난 1년간 단체(모임) 참여 빈도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전체	(1,938)	86.6	3.2	2.8	6.9	0.5	
성별	남 자	(1,002)	88.6	3.2	2.6	5.3	0.3
	여 자	(936)	84.4	3.2	3.0	8.7	0.6
연령	만 19 ~ 24 세	(634)	87.4	3.0	1.7	7.6	0.3
	만 25 ~ 29 세	(663)	87.1	4.4	2.2	5.7	0.6
	만 30 ~ 34 세	(641)	85.4	2.2	4.4	7.5	0.5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85.9	3.3	3.0	7.4	0.5
	중 소 도 시	(434)	86.6	3.5	3.0	6.3	0.5
	농 어 촌	(321)	89.5	2.5	1.6	6.1	0.3
학력	고 졸 이 하	(494)	88.9	2.9	3.1	4.7	0.4
	대학/대학원 재학	(445)	86.3	2.8	2.1	8.4	0.4
	대 졸 이 상	(999)	85.6	3.5	2.9	7.5	0.5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88.0	1.7	1.2	8.3	0.8
	보 통	(1,032)	86.8	3.0	2.9	6.8	0.4
	잘 산 다	(652)	85.6	4.3	3.2	6.5	0.4
주거 형태	동 거	(1,160)	84.7	3.4	3.2	8.3	0.4
	비 동 거 / 독 립	(778)	89.4	2.9	2.1	4.9	0.5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576)	84.7	3.5	3.1	8.2	0.4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90.8	1.3	1.1	5.9	0.9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86.1	3.8	3.1	6.6	0.5
	비 임금 근로자	(142)	91.1	1.1	2.0	5.8	0.0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1,580)	86.5	3.5	2.8	6.9	0.4
	배 우 자 있 음	(358)	87.4	1.9	2.5	7.3	0.9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이어서 시민사회단체 참여를 살펴보면,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95.4%로 대다수 청년들은 시민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빈도를 1년에 1-2회 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여자의 참여 비율이 약간 높았고 참여빈도에 있어서도 여자가 약간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초반의 참여율이 높았고 참여빈도는 20대 후반이 낮았다.

학력별로는 재학생의 참여 비율이 높았고 참여 빈도는 고졸이하가 약간 낮았다. 경제 수준별로는 잘 산다고 응답한 청년인 경우 참여비율이 높았고 못 산다고 응답한 경우에 낮았다. 주거 형태별로는 부모와 동거 중인 경우가 참여비율이 높았고 참여빈도 역시 높았다. 일자리형태별로는 일자리가 없는 경우에 참여 비율이 높았고 참여 빈도 역시 높았다. 혼인상태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표 III-83. 지난 1년간 단체(모임) 참여 빈도 - (5) 시민사회 단체(NGO, NPO 등)(명, %)

구분	사례수	지난 1년간 단체(모임) 참여 빈도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전체	(1,938)	95.4	2.0	1.6	0.8	0.2	
성별	남 자	(1,002)	95.8	1.8	1.5	0.9	0.0
	여 자	(936)	94.9	2.2	1.8	0.7	0.3
연령	만 19 ~ 24 세	(634)	95.7	2.2	1.0	1.0	0.2
	만 25 ~ 29 세	(663)	96.3	1.8	1.4	0.5	0.0
	만 30 ~ 34 세	(641)	94.1	2.0	2.6	1.0	0.3
도시규모	대 도시	(1,183)	94.5	2.1	2.4	0.9	0.1
	중 소 도시	(434)	95.9	2.6	0.6	0.7	0.2
	농 어 촌	(321)	98.0	0.9	0.3	0.5	0.3
학력	고 졸 이 하	(494)	96.5	0.7	1.9	0.9	0.0
	대학/대학원 재학	(445)	94.5	3.1	1.4	0.8	0.2
	대 졸 이 상	(999)	95.2	2.2	1.6	0.8	0.2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98.2	0.7	0.8	0.3	0.0
	보 통	(1,032)	95.7	1.8	1.4	0.9	0.2
	잘 산 다	(652)	93.6	2.9	2.4	0.9	0.2
주거 형태	동 거	(1,160)	94.9	2.1	1.8	1.0	0.2
	비 동 거 / 독 립	(778)	96.1	1.8	1.5	0.5	0.1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576)	94.4	3.1	1.0	1.1	0.4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95.5	2.1	2.0	0.4	0.0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95.6	1.5	2.0	0.8	0.1
	비 임금 근로자	(142)	97.7	0.6	1.1	0.6	0.0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1,580)	95.4	2.0	1.7	0.8	0.1
	배 우 자 있 음	(358)	95.3	2.1	1.5	0.8	0.3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다음으로 지역사회 모임인 반사회 등에 참여한 빈도를 살펴보면, 95.0%가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해 대다수 청년들은 지역사회 모임에 거의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하는 경우에도 1년에 1-2회 참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약간 더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빈도는 큰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로는 30대 초반의 참여비율이 더 높았고 빈도 역시 30대 초반이 높았다. 도시규모별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농어촌보다 참여비율이 높았고 참여빈도는 대도시가 높았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의 참여비율이 높았고 참여빈도 역시 대졸 이상이 높았다. 경제수준별로는 잘 산다고 응답한 경우가, 주거형태별로는 독립해서 생활하는 경우에, 일자리형태별로는 비임금 근로자인 경우에,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참여비율과 빈도가 높았다.

표 III-84. 지난 1년간 단체(모임) 참여 빈도 - (6) 지역사회 모임(반상회, 주민협회 등)(명, %)

구분	사례수	지난 1년간 단체(모임) 참여 빈도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전체	(1,938)	95.0	2.8	1.3	0.8	0.1	
성별	남 자	(1,002)	95.7	2.3	1.0	0.8	0.2
	여 자	(936)	94.2	3.4	1.6	0.7	0.1
연령	만 19 ~ 24 세	(634)	96.7	1.7	1.1	0.5	0.0
	만 25 ~ 29 세	(663)	95.3	2.7	1.0	0.8	0.1
	만 30 ~ 34 세	(641)	93.0	4.1	1.7	0.9	0.3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94.7	2.8	1.5	0.9	0.2
	중 소 도 시	(434)	94.7	3.6	1.0	0.7	0.0
	농 어 촌	(321)	96.5	2.0	0.9	0.3	0.3
학력	고 졸 이 하	(494)	95.2	2.3	1.8	0.7	0.0
	대학/대학원 재학	(445)	95.9	2.5	1.0	0.5	0.0
	대 졸 이 상	(999)	94.5	3.3	1.1	0.9	0.3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97.4	1.6	0.7	0.2	0.0
	보 통	(1,032)	95.4	2.4	1.4	0.6	0.3
	잘 산 다	(652)	93.3	4.1	1.4	1.2	0.0
주거 형태	동 거	(1,160)	95.1	2.4	1.2	1.1	0.2
	비 동 거 / 독 립	(778)	94.8	3.4	1.4	0.3	0.1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576)	94.8	3.3	0.9	0.8	0.2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97.2	1.1	1.1	0.5	0.0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94.7	2.9	1.4	0.8	0.2
	비 임금 근로자	(142)	94.3	3.4	1.9	0.5	0.0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1,580)	95.5	2.3	1.3	0.8	0.1
	배 우 자 있 음	(358)	92.6	5.2	1.3	0.6	0.3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이어서 학술단체 참여를 살펴보면, 이 역시 참여한 적이 없다는 비율이 95.0%로 대다수 청년들은 학술단체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한 경우에 1년에 1-2회 참여한 경우가 2.6%로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참여비율이 높았으나 참여 빈도는 남자가 약간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 초반의 참여비율이 높았고 빈도 역시 30대 초반이 높았다.

학력별로는 재학생의 참여비율이 높았고 참여빈도는 큰 차이가 없었다. 경제수준별로는 잘 산다고 응답한 청년인 경우 참여 비율이 높았고 일자리형태별로는 일자리가 없는 경우에,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참여비율이 높았다. 전체적으로 학술단체 참여는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 중인 경우에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85. 지난 1년간 단체(모임) 참여 빈도 - (7) 학술단체(명, %)

구분	사례수	지난 1년간 단체(모임) 참여 빈도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전체	(1,938)	95.0	2.6	1.5	0.8	0.0	
성별	남 자	(1,002)	95.1	2.5	1.5	0.9	0.0
	여 자	(936)	94.9	2.9	1.5	0.6	0.1
연령	만 19 ~ 24 세	(634)	94.9	2.9	1.1	1.0	0.0
	만 25 ~ 29 세	(663)	95.9	2.0	1.6	0.4	0.0
	만 30 ~ 34 세	(641)	94.2	3.0	1.8	0.9	0.1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94.7	2.3	1.9	1.0	0.0
	중 소 도 시	(434)	95.0	3.9	0.6	0.5	0.0
	농 어 촌	(321)	96.1	2.1	1.3	0.3	0.3
학력	고 졸 이 하	(494)	96.3	1.2	1.3	1.2	0.0
	대학/대학원 재학	(445)	93.0	4.3	1.6	1.1	0.0
	대 졸 이 상	(999)	95.2	2.7	1.6	0.5	0.1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97.9	1.0	1.1	0.0	0.0
	보 통	(1,032)	95.6	2.9	0.9	0.5	0.1
주거 형태	잘 산 다	(652)	92.7	3.0	2.8	1.5	0.0
	동 거	(1,160)	95.2	2.1	1.6	1.0	0.0
일자리 형태	비 동 거 / 독 립	(778)	94.7	3.4	1.3	0.5	0.1
	일 자 리 없 음	(576)	94.0	3.0	2.0	1.0	0.0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95.1	3.8	0.4	0.7	0.0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95.6	2.1	1.5	0.6	0.1
혼인상태	비 임금 근로자	(142)	94.9	3.0	1.0	1.1	0.0
	배 우 자 없 음	(1,580)	94.7	2.7	1.7	0.9	0.0
	배 우 자 있 음	(358)	96.5	2.3	0.5	0.4	0.3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정당 및 정치단체 참여비율을 보면,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96.8%로 대다수 청년들은 정당 및 정치단체 참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빈도를 보면, 1년에 1~2회 정도가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로는 30대 초반의 참여 비율이 높았고 20대 후반의 참여 빈도가 높았다. 도시 규모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참여 비율이 높았고 참여 빈도 역시 높았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의 참여 비율이 약간 높았고 참여 빈도 역시 약간 높았다. 경제 수준별로는 잘 산다고 응답한 청년인 경우에, 주거형태별로는 부모와 동거 중인 경우에, 일자리형태별로는 일자리가 없는 경우에,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약간 더 참여 비율이 높았다. 및 정치단체 참여 비율을 보면,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96.8%로 대다수 청년들은 정당 및 정치단체

참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가치조사의 7차주기(2017-2022년)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투표 참여율과 정당 가입 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2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언제나 선거 투표에 참여한다는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42.7%로 조사에 참여한 100개 국가의 전체 평균인 46.5%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정당 가입과 관련하여 소극적, 적극적 가입 비율은 한국의 경우 2.4%로 전체 평균인 14.5%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선거 투표 참여보다 정당 가입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III-86. 지난 1년간 단체(모임) 참여 빈도 - (8) 정당 및 정치단체(명, %)

구분	사례수	지난 1년간 단체(모임) 참여 빈도				거의 매일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전체	(1,938)	96.8	1.4	0.8	0.8	0.2	
성별	남 자	(1,002)	96.9	1.3	1.0	0.6	0.2
	여 자	(936)	96.7	1.5	0.6	1.1	0.1
연령	만 19 ~ 24 세	(634)	97.1	1.6	0.5	0.7	0.0
	만 25 ~ 29 세	(663)	97.4	0.9	0.6	1.0	0.1
	만 30 ~ 34 세	(641)	96.0	1.7	1.4	0.6	0.3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96.3	1.4	1.0	1.2	0.1
	중 소 도 시	(434)	97.7	1.4	0.4	0.2	0.2
	농 어 촌	(321)	97.4	1.4	0.6	0.3	0.3
학력	대 학 / 대학원 재학	(445)	96.9	2.1	0.2	0.9	0.0
	대 졸 이 상	(999)	96.9	1.6	0.7	0.6	0.3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98.2	0.7	0.8	0.3	0.0
	보 통	(1,032)	97.2	1.2	0.8	0.6	0.2
주거 형태	잘 산 다	(652)	95.6	2.1	0.8	1.3	0.2
	동 거	(1,160)	96.7	1.3	0.8	1.0	0.2
일자리 형태	비 동 거 / 독 립	(778)	97.0	1.5	0.8	0.5	0.1
	일 자 리 없 음	(576)	96.4	2.0	0.5	1.0	0.2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98.1	1.3	0.4	0.3	0.0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96.7	1.3	1.0	0.8	0.2
혼인상태	비 임 금 근 로 자	(142)	97.7	0.0	1.7	0.6	0.0
	배 우 자 없 음	(1,580)	96.8	1.4	0.8	0.9	0.1
	배 우 자 있 음	(358)	97.0	1.5	0.7	0.4	0.3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참여 빈도를 보면, 1년에 1-2회 정도가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연령 별로는 30대 초반의 참여 비율이 높았고 20대 후반의 참여 빈도가 높았다. 도시 규모별로

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참여 비율이 높았고 참여 빈도 역시 높았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의 참여 비율이 약간 높았고 참여 빈도 역시 약간 높았다. 경제 수준별로는 잘 산다고 응답한 청년인 경우에, 주거형태별로는 부모와 동거 중인 경우에, 일자리형태별로는 일자리가 없는 경우에,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약간 더 참여 비율이 높았다.

이어서 노동조합을 살펴보면, 95.6%가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해 이 역시 대다수 청년들이 거의 참여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소개한 세계가치조사의 7차 주기 결과를 보면, 한국의 참여 비율은 4.4%였고 100개 국가 평균은 15.3%로 3배 이상 차이를 보여주었다.

표 III-87. 지난 1년간 단체(모임) 참여 빈도 - (9) 노동조합(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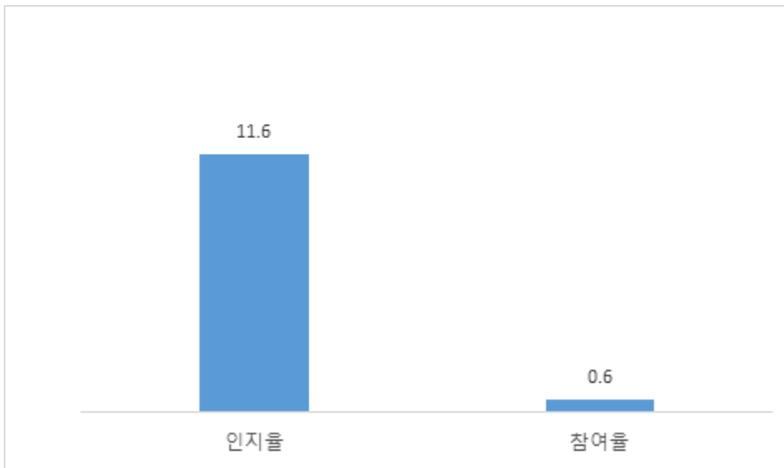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지난 1년간 단체(모임) 참여 빈도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전체	(1,938)	95.6	2.1	1.5	0.5	0.3	
성별	남 자	(1,002)	95.9	1.8	1.5	0.5	0.3
	여 자	(936)	95.1	2.5	1.6	0.5	0.3
연령	만 19 ~ 24 세	(634)	97.5	1.1	0.8	0.4	0.3
	만 25 ~ 29 세	(663)	94.7	2.7	1.6	0.7	0.2
	만 30 ~ 34 세	(641)	94.7	2.4	2.2	0.4	0.3
도시규모	대 도시	(1,183)	94.9	2.5	1.5	0.6	0.4
	중 소 도시	(434)	96.1	1.4	2.1	0.5	0.0
	농 어 촌	(321)	97.1	1.5	0.8	0.3	0.3
학력	고 졸 이 하	(494)	97.0	0.9	1.1	1.0	0.0
	대 학 / 대 학 원 재 학	(445)	97.3	1.5	0.7	0.2	0.4
	대 졸 이 상	(999)	94.0	3.0	2.1	0.5	0.4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97.5	1.5	1.0	0.0	0.0
	보 통	(1,032)	95.8	1.6	1.5	0.7	0.4
	잘 산 다	(652)	94.3	3.1	1.9	0.5	0.3
주거 형태	동 거	(1,160)	95.0	2.3	1.5	0.8	0.3
	비 동 거 / 독 립	(778)	96.3	1.7	1.6	0.1	0.2
	일 자 리 없 음	(576)	96.7	1.5	1.0	0.4	0.3
일자리 형태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98.5	0.5	0.0	0.7	0.3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93.9	3.1	2.3	0.6	0.2
	비 임금 근로자	(142)	97.7	0.5	1.2	0.0	0.6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1,580)	95.6	2.1	1.5	0.6	0.2
	배 우 자 있 음	(358)	95.6	2.3	1.6	0.0	0.5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성별로는 차이가 크지 않았고 연령별로는 20대 초반의 참여 비율이 낮았다. 도시규모별로는 대도시의 참여 비율이 높았고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에서, 경제 수준별로는 잘 산다고 응답한 청년이, 주거 형태별로는 부모와 동거 중인 경우에, 일자리 형태별로는 정규직인 경우에 참여비율이 높았다. 혼인상태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실질적인 청년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도입 중인 청년 자율예산제 혹은 참여예산제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서울시가 청년 자율예산제라는 이름으로 정책 당사자인 청년이 직접 제안하는 과제에 대해 예산을 배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실질적인 참여제도라고 할 수 있다.

청년 자율 혹은 참여예산제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청년 중 11.6%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에서 실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년은 0.6%에 그쳤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 숙의토론방식으로 예산을 정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저변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그림 III-25. 청년 자율예산제(참여예산제) 인지도 및 참여율(%)

성별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약간 인지도가 높았으며 응답자 중 참여경험이 있는 것은 남자였다. 연령별로는 30대 초반인 경우에 인지도가 높았으며 응답자 중 20대 후반만이 참여경험이 있었다. 도시규모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인지도가 높았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에서, 경제 수준별로는 잘 산다고 응답한 경우에, 주거형태별로는 부모와 동거 중인 경우에, 일자리형태별로는 정규직인 경우에,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인지도가 높았다.

표 III-88. 청년 자활예산제(참여예산제) 인지 여부 및 참여 경험(명, %)

구분		사례수	모른다	안다	참여 경험	
					있다	없다
전체		(1,938)	88.4	11.6	0.6	99.4
성별	남 자	(1,002)	88.9	11.1	1.1	98.9
	여 자	(936)	87.9	12.1	0.0	100.0
연령	만 19 ~ 24 세	(634)	90.7	9.3	0.0	100.0
	만 25 ~ 29 세	(663)	88.0	12.0	1.6	98.4
	만 30 ~ 34 세	(641)	86.6	13.4	0.0	100.0
도시규모	대 도시	(1,183)	87.1	12.9	0.0	100.0
	중 소 도시	(434)	90.7	9.3	0.0	100.0
	농 어 촌	(321)	89.9	10.1	3.9	96.1
학력	고 졸 이 하	(494)	88.8	11.2	0.0	100.0
	대학/대학원 재학	(445)	89.4	10.6	0.0	100.0
	대 졸 이 상	(999)	87.7	12.3	1.1	98.9
경제 수준	못 산 다	(254)	91.5	8.5	0.0	100.0
	보 통	(1,032)	88.1	11.9	0.0	100.0
	잘 산 다	(652)	87.5	12.5	1.7	98.3
주거 형태	동 거	(1,160)	87.4	12.6	0.9	99.1
	비 동 거 / 독 립	(778)	89.8	10.2	0.0	100.0
일자리 형태	일 자 리 없 음	(576)	89.2	10.8	0.0	100.0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92.5	7.5	0.0	100.0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86.3	13.7	1.0	99.0
	비 임금 근로자	(142)	92.7	7.3	0.0	100.0
혼인상태	배 우 자 없 음	(1,580)	88.6	11.4	0.7	99.3
	배 우 자 있 음	(358)	87.7	12.3	0.0	100.0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마지막으로 청년정책 참여비율을 살펴보면, 2022년 1년 동안 청년정책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6%에 그쳤다. 2022년 현재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과제는 376개에 이르고 예산은 24조 6천억원으로 과제와 예산을 고려할 때 청년정책에 대한 참여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관계부처합동, 2023a).

청년정책 참여자를 대상으로 청년참여정책사업에 대한 참여 비율을 살펴보았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참여거버넌스를 대상으로 질문을 했는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준 것은 지자체 청년센터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프로그램 참여였다. 청년정책 참여자 중 50.5%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지자체 청년센터가 일종의 허브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높았던 사업은 청년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통로로 국민 청원, 국민동의청원, 국민 제안, 국민 신문고 등에 참여한 것으로 36.6%였다. 이어서 지자체 청년 온라인 플랫폼 활동이나 프로그램 참여가 32.8%로 온라인을 활용한 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청년 참여기구의 참가는 중앙정부가 31.5%였고 지자체가 31.1%로 나타났다.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그림 III-26. 청년정책 및 참여정책 참여비율(%)

3. 요약 및 시사점

이 장에서는 2023년 청년 사회 첫 출발실태조사를 통해서 청년 시민권과 참여와 관련된 실태를 살펴보았다. 청년 시민권과 참여 실태는 성인기 진입과 시민권, 교육 및 훈련 영역, 경제 및 고용 영역, 주거 및 건강 영역, 참여와 권리 영역 등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성인기 진입과 시민권 관련 실태를 살펴보면, 성인기 이행을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 압박을 받는 시기 등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2011년 결과와 비교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기를 가능성이나 탐색의 시기로 볼 수 있도록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19세에서 34세 청년 중에서 20대 초반을 청년의 사회 첫 출발이 이루어지는 이행기로 보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것은 청년정책이 성인기 이행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가장 많이 이행이 이루어지는 20대 초반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청년들은 다른 무엇보다 성인이 되는 기준과 행복한 삶의 조건으로 경제적인 자립을 가장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성인기 이행에서 자립은 심리정서적 자립과 분가와 같은 공간적 자립, 그리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는 경제적 자립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청년들은 다른 무엇보다 경제적 자립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청년정책 추진 시에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괜찮은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시민권 중에서 청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정치적 권리였는데 이것은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가정, 학교, 직장, 사이버공간 등 청년이 살아가고 있는 공간 중에서 가장 인권 존중이 되지 않는 곳에 대해 청년들은 사이버공간이라고 답했다. 청년들은 여러 가지 차별 중에서 성차별과 외모, 신체조건에 대한 차별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인권 침해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며 성차별이나 외모, 신체조건에 대한 차별 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교육과 훈련 실태를 보면, 대학 내에서 학생선발 과정의 차별이 가장 많았고 대학 내에 범죄 및 성폭력 신고기구와 인권교육에 대한 인지도나 참여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대학에서 선발과정의 차별을 최소화하고 대학인권센터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인권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도 인권교육 참여율이 낮았고 대학보다 더 많은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중등교육단계에서 인권교육 강화가 필요

하며 차별해소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경제와 고용 실태를 보면, 부모나 친지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청년은 감소했으나 지원을 받는 청년들의 의존 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취업을 한 청년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물어본 결과, 과도한 업무 떠넘기기가 가장 많았고 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미취업 청년 중 니트(NEET) 상태에 있는 청년에게 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지를 물어본 결과, 10%가 “일할 의욕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이것은 니트 청년에게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주거 및 건강 실태를 살펴보면, 자가 소유를 평생 못 할 것이라는 응답이 증가했고 80% 이상의 청년들이 집값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년의 주거권과 관련하여 부동산 대책과 청년지원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청년들에게 정신건강 상태를 물어본 결과, 최근 2년 간 긍정적인 응답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년들의 건강권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마지막으로 참여와 권리 영역을 살펴보면, 청년들은 온라인을 통한 사회, 정치 참여를 더 활발하게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이유로 무관심을 지목했으며 정치효능감이 최근 2년 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온라인을 통한 청년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과 청년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교육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청년들의 시민사회단체나 정당, 정치단체 가입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청년정책이나 청년자율예산(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율 역시 매우 낮았다. 이것은 청년정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참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 — 제4장 우리나라 청년의 목소리: 심층면접

- 1. 청년 심층면접 개요
- 2. 심층면접 분석 결과
- 3. 요약 및 시사점

1. 청년 심층면접 개요

본 연구에서는 청년 참여와 권리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올해 연구의 조사영역인 청년들의 시민권 의식과 현황에 대한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 참여 활동을 하고 있거나 그 외 다양한 상태에 있는 15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시민권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태도, 시민권의 주요 영역인 교육/직업/주거/건강/사회적 관계 현황, 시민권의 실천의 관점에서 청년들의 실제 사회·정치 참여 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1) 심층면접 참여자

심층면접 참여자들은 다양한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청년 및 청년 활동가들 18명으로 구성했다. 구체적으로는 성별(남/여), 연령(20대/30대), 학력(대학 재학 혹은 졸업), 지역(수도권/비수도권)을 우선적인 지표로 삼아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 해당 기관이 보유한 약 22만 명의 청년 패널 중에서 해당 조건에 부합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청년들을 선정했다. 최종적으로 18명의 청년들이 본 연구의 심층면접에 참여했다. 참여한 청년의 연령대는 19세에서 20대 9명, 30대가 9명으로 20대 청년 중에는 여성이 5명, 남성이 4명이었고 30대에서는 남성이 5명, 여성이 4명이었다. 거주지는 수도권 거주자가 10명, 비수도권 거주자가 8명으로 수도권의 비중이 높았으나 이는 실제 수도권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의 비율을 반영한 결과였다.

5) 이 장은 장근영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표 IV-1. 청년 권리와 참여 심층면접조사 표본 구성(명)

	계	19세, 20대 (9명)		30대 (9명)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체	18	4	5	5	4
수도권	10	2	3	3	2
비수도권	8	2	2	2	2

2) 심층면접조사의 내용

청년 참여와 권리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내용은 면접 참여자들 개개인의 1) 성인기 진입 상황과 시민권에 대한 인식, 2) 교육 및 훈련 영역의 시민권 상황, 3) 고용 및 경제 영역의 시민권 상황, 4) 주거 및 건강 영역의 시민권 상황, 5) 참여와 권리 영역의 시민권 상황과 정책 요구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심층면접의 조사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V-2. 청년 권리와 참여 심층면접조사 주요내용

구분	세부 내용
1) 성인기 진입과 시민권	① 성인기의 조건에 대한 기대와 신념, 가치체계 ② 성인기 진입을 위해 필요한 시민권 정책 요구 ③ 시민권의 영역별 우선순위, 가치평가
2) 교육 및 훈련 영역	① 교육 및 훈련 접근성에 대한 기대와 신념, 가치체계 ② 교육 및 훈련의 내용에서 시민권 관련 경험 ③ 교육 및 훈련 과정과 결과에 대한 만족도
3) 경제 및 고용 영역	① 경제적 자립 현황, 경제적 기회에 대한 기대와 신념, 가치체계 ② 고용 기회와 평등권 보장의 경험 ③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 인식 및 경험 실태
4) 주거 및 건강 영역	① 주거 안정성, 주거환경의 건강성 및 주거 비용, 주택시장 경험 ② 평등한 주거 접근성의 수준 평가, 주거 정책 수요 ③ 신체적 정신적 건강 현황, 보건 정책 수요
5) 참여와 권리 영역	① 정치적 참여에 대한 기대와 신념, 가치체계 ② 시민단체, 디지털 시민참여 등의 실제 참여 경험과 평가 ③ 인종, 성별, 성적취향, 장애 등의 인권과 차별에 대한 신념 ④ 문화적 참여 경험, 국제적 교류와 참여 경험 현황 ⑤ 청년 참여에 대한 정책적 수요

3) 심층면접조사 절차 및 분석방법

심층면담을 위한 조사지는 병행 실시하는 양적 연구의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초안을 개발했다. 초안은 심층면접 표준 가이드라인의 형식으로 작성했다. 초기 설정한 가이드라인을 연구진 협의를 토대로 수정·보완한 후, 청년 권리와 참여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을 받아 확정했다.

심층면접 조사는 2023년 8월 1일 부터 12일 까지 개별심층면담(In-Depth Interviews) 방식으로 진행했다. 면접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면담 내용을 녹취했다. 각 영역별로 단어출현 빈도 분석을 포함한 텍스트 마이닝 작업을 통해 주요 개념을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권리와 참여에 관한 의식과 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2. 심층면접 분석 결과

1) 성인기 진입과 시민권

성인기 진입과 시민권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어른 혹은 성인이 되었다고 말하기 위해서 나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 이외에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질문했다. 그리고 시민권의 내용을 제시하고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권이 무엇인지, 한국에서 가장 잘 보장되는 시민권과 반대로 잘 보장되지 않는 시민권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심층면접 응답결과의 질적 분석을 위해서 세부 주제별로 해당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답변에 포함된 어휘를 분리하여 빈도를 살펴보았다. 우선 성인기 진입과 시민권에 관련된 결과의 어휘 빈도분석결과는 아래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도표와 같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성인기 진입과 관련되어 가장 많이 언급된 어휘는 교육, 학교, 자유권, 권리 그리고 여성과 차별이었다. 청년들은 학교 졸업과 함께 자신이 사회인으로 성인기에 진입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성인으로서의 권리 중에서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은 자유권이며, 여성과 차별은 모두 평등권에 대한 인식과 연결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IV-3. 성인기 진입의 기준

개념	주요내용
심리적 독립	타인(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책임성	행동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
경제력	심리적 독립의 물질적 기반 직장(안정된 수입), 경제적 자립, 의식주의 자체해결 등
기타	성인기 기준으로 교육의 수준, 공동체 의식 등은 언급되지 않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사 참여 청년들은 성인기를 주로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했는지,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지의 여부로 판단했다. 인지적으로는 스스로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해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사회적으로는 타인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자신이 선택한 대로 행동하고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상태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4)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행동에 온전히 책임을 질 수 있을 정도의 판단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독립적으로 혹은 어느정도 보조를 받아서 스스로 행동 할 수 있는 점까지 성인의 조건이 아닐까 합니다.

응답자6) 쉽게 말하자면 '철이 든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중략)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라고 할까요. 시간적인 조망이 늘어났다?

응답자11)책임감. 성인이 되면 모든 행동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응답자16) 저는 진짜 성인이 되었다는 거는 내가 스스로 충분히 가치 판단을 할 수 있고 그거를 말할 수 있고 또 그냥 오롯이 나라는 존재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판단력도 포함되는 것 같고, 되게 정서적인 독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나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냐'에 달린 것 같아요. (중략) 계속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는 친구들을 보면 무언가 계속 다 부모님한테 얽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타지로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없는 편인데, 부모님이 타지에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다 안 가고...

정서적으로 타인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인식하고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제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부모로부터의 정서적인 분리와 심리적인

독립을 성인이 진입의 주요 관문으로 여긴다는 것은 이 주제를 해결하지 못한 청년들이 많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이 생각하는 심리적인 독립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주거하는 주거의 독립을 전제로 하거나 최소한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아야 가능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다시 말해 청년들에게 경제적인 독립은 심리적인 독립을 위한 물질적인 기반이었다. 경제적인 독립의 최고 수준은 스스로 자신의 주거와 생활에 드는 비용을 모두 감당하며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지만 실제로 현재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나 미래에도 자신이 그런 수준에 도달하리라는 기대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응답자2) 제가 생각하는 성인의 평균은 부모님이나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 자생해서 살 수 있어야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경제적인 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 제가 사회에 나가거나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도 좀 생겼는데 가끔 내가 결혼하면 어땠을까 생각했을 때 아직 집을 갖거나 어떤 자녀를 낳아서 기르거나 결혼식을 하거나 경제적인 여건이 준비가 안 돼서 성인으로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응답자9) 일단 혼자서 돈을 벌 수 있고 아르바이트라도 어느 정도 돈을 개인 용돈 정도는 충당할 수 있어야죠. 쓸 수 있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스스로 경제 활동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저는 하고 있습니다. 과외하고 있습니다.

응답자13) 성인이 갖춰야 할 조건은 책임감이랑 경제력. 저는 경제력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책임감은 아직 너무 광범위하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응답자18) 성인으로서 갖춰야 될 조건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뭐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 하고요. 의식주를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해결을 할 수 있어야겠죠. (중략) 못해도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은 수입이 있어야지 그게 최소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② 시민권에 대한 인식

시민권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참여자들에게 먼저 자유권, 참정권, 평등권, 참정권, 노동권, 청구권, 행복추구권, 학습권의 개념을 간략히 제시하고 이들 시민권 중에서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보장되는 권리와 가장 잘 보장되지 않는 권리는 무엇인지 선택하게 하였다. 각각의 선택 이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질문하여 청년들이 각 시민권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유추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IV-4. 청년들의 시민권 인식 요약

	인식내용
자유권	다른 모든 시민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로 인식 중요하며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잘 보장되는 권리
평등권	성차별, 연령차별 등으로 인해 한국에서 비교적 부족한 권리로 인식 공정성의 상대 개념으로 해석되는 사례 존재 예) 청년지원정책 대상 선정, 범죄 피해자 인권 이슈
참정권	정치참여는 시민으로서 중요한 역할이라는 인식 형식적, 법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보장되는 권리 실제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가장 부족한 권리
학습권	중요도 우선순위는 낮으나 가장 잘 보장되는 권리로 인식 성차별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 있음 특정한 직업이나 진로에 있어서는 교육훈련의 기회가 부족
노동권	경제적 자립의 기반이 되는 권리로 중요성 인식 노동기회의 차별,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장 부족 언급
청구권	다른 권리의 침해시 이를 보상 혹은 보호 받을 권리로 인식 차별이나 노동권 침해 등의 사례와 연관되어 언급
행복권	자유권과는 달리 결과적 권리로 언급되며 우선순위는 낮은 편 치안, 각종 사고로부터의 안전 등과 연관되어 언급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중요한 시민권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권리는 자유권과 노동권, 그리고 참정권이였다. 자유권은 모든 시민권의 기반을 이루는 권리라는 점을 적절히 지적한 경우가 많았고, 노동권에 대해서는 앞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이유로 선택된 경우가 많았다. 참정권을 선택한 청년들은 시민과 정치참여의 연관성을 많이 언급하였다. 그 외에도 안전에 대한 권리 언급도 많았다. 이는 최근 있었던 대형 안전사고들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평등권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평등권은 공정성 개념과 함께 언급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청년지원 정책이 취약청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원 대상에서 배제당한 경험, 범죄의 피해자 인권과 가해자의 인권을 동등하게 존중하거나 혹은 가해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존중한다는 인식 등이 평등권에 대한 언급에서 나타났다. 그 외에 행복추구권이나 청구권에 대한 언급도 발견되었다.

응답자1) 제일 중요한 권리는 노동권, 이유는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의 조건에 경제적인 자유가 포함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경제와 노동의 연관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응답자3) 제일 중요한 권리는 참정권인 것 같아요. 일단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지 기타 다른 권리들도 보장받을 수 있게 투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응답자4)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 안전할 수 있는 권리가 제일 크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략)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죽는 청년도 너무 많고, 여성의 입장에서 말하면 최근에 스토킹 범죄든 여러 가지 디지털 성폭력 범죄 등 많은데.. 처벌이든 방지책이든 그 부분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

응답자5) 가장 필수로 요구되는 건 자유권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학교에서 배우기도 했고. 기본 바탕이 자유권이라는 게 있어야 다른 권리도 원만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응답자15) 저는 자유권이요. 다른 거는 크게 청소년이랑 성인이랑 구분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자유권은 어쨌든 경제적인 자유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했던 육체적인 자유 이런 거는 성인이 됐을 때 해야 좀 비로소, 그러니까 좀 정신적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보장되는 권리에 대해서는 참정권과 교육권을 선택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특히 참정권은 논쟁적인 주제로서 투표의 권리가 보장된다는 이유로 가장 잘 보장된다는 의견도 많았던 반면, 형식적인 참여는 보장되어 있으나 실제 청년들의 정치 참여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장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교육권은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범위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교육이 부족했던 경우는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이유를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참정권과 교육권에 대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많았을 뿐 부족한 권리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근로권을 선택한 경우도 많았는데, 취업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이유와 실제로 취업해서 노동자로서의 권리, 특히 직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유가 언급되었다.

응답자1)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보장되는 권리는 개인적으로 교육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들어가고 있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때문에...

응답자5) 형식적으로 제일 많이 노력한 게 참정권 같거든요. 법적으로 가장 잘 보장이 되고. 나라에서도 선거할 때는 쉬게도 해주고...

응답자6) 학습권은 우리나라가 가장 최상위일 것 같아요. 지금 EBS 그런 인터넷 강의도 무료로 굉장히 질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초·중·고등학교를 의무적으로 다니면서 문맹률도 가장 낮다고 하잖아요.

응답자7) 가장 잘 보장 되는 권리는 참정권. 그래도 다 투표에 참여 할 수 있고 그런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중에서는 참정권이 제일 잘 보장되고 있습니다.

응답자8) 참정권은 보장이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투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이 비교적 널리 퍼져 있는 것 같고. 요즘 청년세대를 대표하는 어떤 정당이나 의원들도 나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응답자2)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에 있어서 저는 그런 재산이 없었는데 못 받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것들을 느꼈을 때 내가 같은 국민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중략)가 해자 인권을 너무 챙겨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예를 들면 최근에 있었던 부산돌려차기남을 보면 보복을 하겠다고 피해자가 오히려 벌벌 떨고 있어야 되는...

응답자7) 가장 부족한 권리는 평등권? 제가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까 취업 준비를 하면서 남녀가 차별받는 상황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청년들에게는 평등권이 뭔가 더 와 닿는 것 같아요.

응답자8) 평등권은 다양성과 관련된 건데요. 예를 들면 쿼어문화 축제도 자주 가는데 그런 지점에 있어서 우리 세대가 다양성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에 비해서 승인받는 게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평등하지 못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유도 그런 맥락에서...

응답자13) 저는 청구권이 좀.. 이게 회사에서 연차 쓰는 건 개인 권리인데 이유를 꼬치꼬치 캐묻는 상사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저는 청구권 이 제일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응답자15)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보장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권리는 평등권. 최근에 그런 촉법소년 이런 기사들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청소년과 성인의 크게 그런 구분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응답자18) 평등권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노약자라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거를 실제로 많이 봤고요.

가장 잘 보장되지 않는 권리로는 평등권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성차별 혹은 연령차별 등의 차별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평등권은 직접적인 언급도 많았으나 사회 참여의 기회나 취업의 기회 등에서의 차별과 함께 언급되면서 명목상으로는 참정권이나 교육권, 혹은 노동권으로 지목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범죄자의 처벌이 평등하지 않다는 지적도 발견되었다. 단, 청년들이 생각하는 처벌의 불평등은 사회적 지위나 권력으로 인한 차별과는 무관했다. 오히려 촉법소년 등에 대한 인권 보장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했다. 근로권 보장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어떤 경우에는 이를 청구권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2) 시민권 교육 영역에 대한 인식과 정책수요

교육 및 훈련 영역에서는 청년들이 지금까지 겪은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함께 시민권과 관련된 교육 경험을 질문했다. 개인적으로 경험한 시민권 교육의 내용과 질이 충분했거나 부족했는지, 어떤 시민권에 대한 교육이 기억에 남는지, 가장 교육이 부족했다고 느끼는 시민권 주제는 무엇인지 등을 질문했다.

아래 도표는 이렇게 실시한 교육과 훈련 영역에 관련된 심층면접 어휘 빈도분석 결과를 워드 클라우드로 나타낸 것이다. 교육 영역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교육, 학교, 고등학교, 지식이라는 어휘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출현한 어휘는 청구권이었다. 그 외에 노동권, 평등권이 조금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차별이나 경제적 문제 등이 함께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권 교육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공교육과정에서 받았던 시민권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교과서에 있어서 다른 기억은 있으나 본인의 삶과 관련된 교육은 받은 기억이 없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단, 교실 교육이 아닌 동아리 활동이나 단체 활동 혹은 멘토(선배)를 통해서 시민권에 대한 체험과 교육을 받은 경험을 이야기한 청년들도 소수 있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습득한 시민권에 대한 인식은 오랫동안 유지되고 실제 해당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였다.

다른 권리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일단 정보를 찾기 위해서라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있어야하는데 그걸 구입하는 것도 결국 경제적 권리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경제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응답자12)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평등권 지식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약자나 종교, 인종, 신분에 따라서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혐오를 많이 하고 그런 그게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정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등권 교육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응답자13) 이런 자유권이나 평등권이나 노동권이나 행복권은 보통 도덕 시간에 배우는데 도덕은 학교에서 그렇게 비중있는 과목이 아니니까 강사님들 외부 강이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응답자16) 대학생들 멘토링 같은 것. 그냥 일상적으로 청년들이 조금 그런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언가를 알려주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서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청년들이 교육과정에서 경험한 차별에 대한 언급도 많이 등장했다. 남성 중 일부는 여성 쿼터 제도나 여자대학 등으로 인한 역차별을 언급했으며, 여성들은 여자들을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학교나 학과 내 문화, 혹은 남성 동료들로부터 배척받은 경험을 언급했다. 어떤 여성은 대학교내의 여학생회 설립과 함께 여성은 여학생회로 가라는 식으로 총학생회에서 배제된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는 예전에 비해 차별이 많이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교육 현장에서 교육 기회의 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응답자1) 제가 공과대학을 나왔는데 대학원에서 저 혼자 여자다 보니 한 번씩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실제로도 저를 따로 빼고 자기들끼리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은근하게. 심지어 업무가 아니라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거였는데도 그랬죠. (중략) 사실 제가 말한다고 그들이 뭐가 개선하려는 의지는 없죠.

응답자2) 약대를 준비하는 많은 남학생들이 같이 경험하는 건데. 여대 비중이 너무 높아서 쿼터제가 있습니다. 학교가 20개 밖에 안 되는데 여대가 4개 정도 됩니다. 학생 수를 100%로 따지면 약대 인원수 100% 중에 여대를 뽑는 퍼센트가 정확한 건 아닌데 10%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략) 유일하게 아마 살면서 좀 손해를 본 케이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응답자8) 저는 여성이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은은하게 차이를 더 공고히 하는 느낌을 받았던 게, 예를 들어 대학교를 다닐 때 외모에 대한 평가를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그래도 예쁘다는 말은 할 수 있잖아” 정도의 그런 인식수준인 거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질문에 포함된 어휘인 '노조'와 '차별'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출현한 단어는 '급여'와 '시간' 이었다. 이는 청년들이 흔히 '워라밸'이라 부르는 일과 여가의 균형을 중시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응답자5) 아직 여기는 덜 됐다는 영역은 제가 볼 때 휴가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 누나도 결혼해서 조카가 재작년에 태어났는데 지금 잘 일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무시간 중간에 나가거나 일이 있으면 휴가를 써야 되는데 쓰기가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연차 쓰면 눈치 보이는 것 같아요.

응답자7) 제가 경험했던 게 주 52시간 생길 때였나 아무튼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게 생겨서 컴퓨터를 아예 꺼버렸거든요. 그 시간이 되면, 그래서 되게 잘된 제도인 것 같다. 그래서 뭔가 능률이 오른다고 생각했어요. 집중해서 근로할 수 있으니까

응답자8) 휴게시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8시간 내내 풀타임으로 1초도 빠지지 않고 근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지점에 있어서 45분 근로 10분, 15분 쉬는 거에 대한 유연함이랄까 인간다운 심이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안전'이 조금 높은 빈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년들이 근로 현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산업재해라는 점을 시사한다. 사무직 보다는 생산현장이나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보호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며 그 이유로 직업 자체에 대한 차별, 혹은 규정위반에 대한 당국의 처벌의지 부족을 들었다.

응답자4) 거칠게 말해서 작업 현장에서 이걸 안 지켜서 받는 벌금보다 사람 한 명 더 고용 해서 법을 준수하는 그 인건비가 더 비싸다는 인식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가 된다고 생각해서 처벌을 더 강화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응답자13) 저희 회사도 산재를 쓰시는 분이 많은데 안 그렇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돌아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보장을 해 주거나 아니면 추후에 산재 처리에 따른 불이익 여부를 파악하면 회사도 좀 더 조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 직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일수록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어서 노조 혹은 교섭단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에 노조가 불합리한 요구를 하며 '떼쓰는 집단'이라는 인식도 발견되었다.

응답자1) 요즘에는 노조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져 있다 보니 때를 쓰면 다 되는 이미지로 약간 변질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응답자3) 차별 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노조를 결성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 노동자 개인이 겪는 문제가 사실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 당사자가 있을 거고 회사라는 거대한 존재가 있고 그 사이에서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결성이 필수적이라고 피부로 많이 느껴와서 그런 것 같아요.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가 노조가 되더라고요.

응답자4) 노조는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어서 노조 가입은 가능한 하는 게 좋고 저도 하고 싶은데 사내 노조가 없어서 못하고 있고 교섭 단체가 있고 없고 정말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노조는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용과정에서의 차별문제에 대해서는 블라인드 채용의 확대를 대안으로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았다. 고용영역에서 정책은 존재하나 그 정책의 전달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았다. 정책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정보접근성이나 실제 정책의 실행에 대한 신뢰의 부족 등이 그 이유로 지적되었다.

응답자8) 블라인드 채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2, 3년 전에 대학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블라인드 채용이 활발해진다는 내용을 듣고 자란 세대거든요. 근데 막상 취업시장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보니까 여전히 블라인드 채용은 소수이고 대부분 이력서 고정적인 양식을 그대로 채워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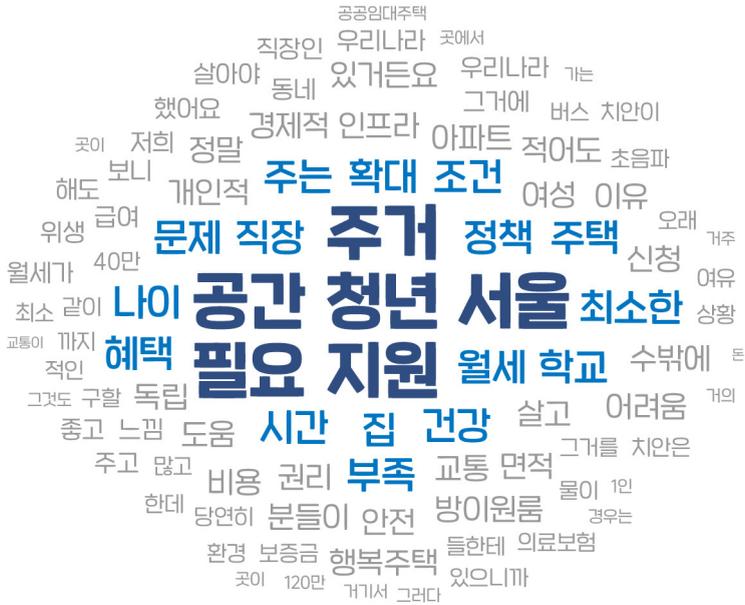
응답자10) 블라인드 같은 것들을 법제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 최소한 개인정보만 수집하거나 아니면 자격증은 자격증 번호로 검색이 되잖아요. 얼굴 가리고 이름 한 자리 나오고 자격증 번호 같은 걸로 딱 대조만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서 차별을 없애는 게 우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응답자12) 일단 블라인드 채용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도 더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어느 기업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고 했다가 그게 거짓이었던 것이 들렸기 때문에...

응답자1)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법과 제도는 어느 정도 충분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쉬운 건 접근성이 일반인들에게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뭔가 법적인 거에 연관이 되면 노무사를 알아봐야 된다거나 잘 모르다 보니 제도 자체는 충분히 있는데 그걸 잘 모르고 이용을 잘 못하겠다는..

4) 주거 영역에 대한 인식과 정책 수요

청년들의 주거에 대한 인식과 정책수요를 알아보기 위해서 청년들이 생각하는 주거 조건의 우선순위, 주거에 관한 청년 정책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질문했다. 아래 도표는 이들 질문에 대한 청년들의 답변에서 출현한 어휘의 빈도분석 결과를 워드 클라우드로 나타낸 것이다.



응답자1) 학교 근처에 있던 원룸에 사는 친구들 집에 가보면 사람 한명이 살 수 있는 공간인가 싶을 정도로 불법으로 방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을 들이려고... (비수도권)

응답자3) 요즘 청년주택을 지어지는 걸 보면 너무 뻑뻑하게 마치 감옥처럼 지어지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전하지만 매우 작은 골방이예요. (수도권)

응답자5) 통근이 제일 지방은 그게 심하더라고요. 주거비를 빼면 급여가 깎이는. 일을 안 하니만 못하니까 (수도권)

응답자8) 저는 서울에 살게 되면서부터 서울에 사는 게 좀 특권인 것 같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저는 타지에서 올라와서 (주거비용은 들어도) 서울에 살기 때문에 시간적인 건 아낄 수 있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취업은 서울에 다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기업들이 서울에 몰려 있어서 제가 적어도 출퇴근 고민은 안 해도 되니까 서울에 사는 혜택을 본다는 생각을 했어요.

응답자14) 일단 자기가 누워서 잘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에 친구들 보면 생각보다 작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비수도권)

응답자18) 대부분의 회사가 강남 쪽에 있다든지 서울에 다 있는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서울에서 집을 구하기 너무 어렵고 힘들고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되어서요. 그러니까 직주근접을 실현하려면 굉장히 좁은 데 살거나 조건이 안 좋은 곳에 살아야 되고, (비수도권)

주거환경에 관한 정책에 있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주거환경의 하한선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고 보장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 외에 최근 부각되는 전세입주자의 주거 안정성 문제를 포함한 주거 안정성의 보장도 중요한 정책 수요로 나타났다.

응답자1) 소위 말하는 하한선 같은 걸 정해야... 너무 심각한 경우에는 벌금을 강하게 해서 건물주나 집주인이 개선을 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응답자4) 세입자의 권리. 거칠게 말하면 부동산 쪽 중개사와 집주인이 마음먹고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부분이고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응답자6) 주거질의 최저선을 정하는 정책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어차피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그런 건물을 지을 때 소음이 어느 정도 이상이 안 되는 벽두께로 짓고.

그러나 청년주거지원 정책에 관해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의견은 정책지원 대상의 확대였다. 현재 청년 정책이 전반적으로 청년정책이기 이전에 취약계층 지원정책에 가깝다는 지적은 주거정책에 대한 의견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청년주거지원 정책이 정규직이거나 결혼한 청년만 되어도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그나마 보통 청년들이 지원 가능한 주거정책은 청년행복주택 정도인데 이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7) 행복주택에 참여할 기회, 이용할 기회를 늘리는 거. 그게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 주변에 좀 있거든요. 당점이 돼서 들어간 친구들이. 근데 너무 만족도가 높아서, 저도 찾아보니까 적더라고요. 선발하는 인원도 적고

응답자11) 공공임대가 청년 대상으로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확대라는 것이 단순히 공급을 늘릴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지원조건이나 그런 조건들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응답자13) 청년주택이나 청약 이런 것들이 기회가 적고... 아무래도 너무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주로 그런 정책들이 짜여지다 보니까 신혼부부도 혼자일 때보다 불리하고..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청년들은 오히려 더 혜택을 못 보지 않나 생각도 합니다.

응답자16) 진짜 직장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거의 지원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세전 금액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세전으로 내가 딱 210만 원이야. 그런데 거기는 이제 199만 원인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5) 청년들의 정치·사회 참여에 대한 인식과 정책수요

정치·사회참여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현재 청년들의 정치참여 필요성과 가치관을 물어보고 정치참여의 그리고 정치·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질문했다. 이 주제에 대한 청년들의 답변에서 출현한 어휘의 빈도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정책, 의견, 활동, 투표로 정치참여를 투표의 문제로 여기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식, 정당, 주거, 관심 등의 단어가 그 다음으로 많이 출현하는데 이는 청년들도 정치에 대한 인식 변화의 필요성을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인이 참여한다면 주거 정책에 의견을 많이 내고 싶다는 답변이 비교적 많았던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정치 자체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함께 양극화된 정치구도도 청년들의 정치참여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였다. 편향된 정보, 1번 아니면 2번으로 극단적으로 나뉘어지는 선택의 갈림길은 정치적 표현을 하면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모두 삼켜버릴 것 같은 두려움을 준다는 답변도 있었다.

응답자4) 대학교 안에서 학생회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학생회 이클 정치단체 느낌이었지만 최근에는 전혀 그렇지 않고 학생들 요구 사항을 들어주는 취합해서 실현하는 이미지가 강한테 그럼에도 가끔 정치 활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다른 어떤 노동자 단체나 다른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성명서를 내거나 그러면 굉장히 반발하는 경우가 많이 봤어요. 왜 우리 대학 내의 일도 아닌데 왜 나서느냐 나대느냐 이런 것들이 강해서

응답자12)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너무 팽배해져 있어서 이거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주변만 봐도 투표를 할 때 그 놈이 그 놈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고 정치는 의미 없다, 투표 의미 없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응답자15) 친구들 사이에서도 정치색을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좀 꺼려하는 게, 이렇게 약간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 같고... 1번 아니면 2번 이런 식으로 딱 나뉘니까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양성이 없고. 너 그럼 보수 아니면 진보 이런 식으로 딱 나뉘니까. 자기가 아무리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해도 좀 숨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응답자16) 그러니까 내가 어디 정당에, 난 이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직접적인 발언을 한다든가 그런 거에 조금 엮인다든가, 그렇게... 그냥 이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약간의 어느 정도의 약간 방관 아닌 방관? 그래서 개인 SNS 같은 거에 정치적인 발언을 안 한다든가 약간 이런 거? 아니면 정치적인 농담이라도 안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걸로 제가 규정이 될까 봐.

이와 같은 인식에서 청년들은 정치 자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교육, 정치를 통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례의 제시, 혹은 청년들에게 실제 정치현장을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의 제공 등을 제안했다.

응답자4) 어떻게 보면 시야를 좀 더 넓게 정치라는 게 굉장히 이상한 거나 국회에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일상이 다 엮여 있는 일이라는 부분은 여전히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응답자5) 정치로 성공한 청년이 있어야. 하다못해 국회의원이라도 해서 내각에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중략) 저런 루트를 통해서 인생 성공 케이스가 있다고 그러면 많이 할 것 같아요.

응답자9) 이것도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물론 당연히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포럼을 하면 보통 서울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데 이 포럼이 부산에서 개최가 되지 않는 이상 서울까지 올라오셔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교통비만 해도 몇 만 원 들어가니까 그런 보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치사회적 참여와 함께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질문한 결과, 청년정책이 청년에 대한 고정관념에 얽매어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앞서 주거정책 등에서 지원 대상의 다양화를 요구한 목소리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청년은 다양하며 그만큼 다양한 정책 수요가 있음을 전하고 있다.

응답자5) 청년이라는 개념이 세분화될 필요가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갓 20살부터 20대인 청년도 있고 보통 청년은 30대 중반까지 보잖아요. 저희 누나가 딱 거기에 속하는 것 같은데 보통 결혼해서 애 낳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기혼인 분들이 많고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한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토로하기도 하고. 육아 문제도 있고 본인도 직장이나 그런 전반적인 미비한 걸 본인이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결혼하면 오히려 더 보이고..

응답자6) 청년 도약계좌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건 청년을 위한 느낌보다는 청년 하위계층을 위한 느낌인 거죠. 그런 걸 알아봤는데 저도 해보려고 들어가서 보고 근데 평범한 중산층 이상의 청년한테 해당되는 건 거의 하나도 없어요.

또한 많은 청년정책들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었다. 청년정책이 실제 수요자인 청년들에게 전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보도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청년 원스톱서비스를 자칭하는 곳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는 원스톱이 아니라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는 청년정책의 전달체계 일원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응답자8) 온라인 이런 사이트에 청년들을 위한 걸 다 모아 놓은 원스톱 서비스센터가 있다고 들었고 보기도 봤는데 직접 이용해보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어디에 물어봐야 다 똑같은 건지 다른 건지도 구분이 잘 안 되고 각 지자체마다 청년사이트가 있고 그걸 통합하는 사이트가 있고 각 프로그램별로 또 사이트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느 사이트에 물어봐야 상담을 해 줄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원스톱이라고 하는데 원스톱이 아닌거죠.

3. 요약 및 시사점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청년들이 생각하는 성인기는 시기적으로는 학교 졸업과 함께 시작되지만 성인으로서 완성되었다고 여기기 위해서는 타인 특히 부모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개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를 결정하는 것은 경제적인 독립이다. 경제적 자립은 심리적 독립의 물질적 기반으로, 스스로 돈을 벌지 못한다면 자기 주장을 하기보다는 부모 말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도 포함되어 있었다. 청년들에게 성인기의 첫 번째 경험은 자유였다. 이전에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자유와 함께 차별을 경험하기도 한다. 단, 청년들이 성인기 진입을 사회구성원 보다는 개인의 관점에서, 부모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물질적 기반을 형성하는 문제로 간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년들은 시민권 중에서 자유권과 노동권, 그리고 참정권을 중요하게 여겼다. 자유권은 모든 시민권의 기반으로, 노동권은 경제적 자립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그리고 참정권은 시민권의 대표로 선택되었다. 그 외에 안전할 권리는 최근 벌어진 안전사고들의 반영으로, 평등권은 공정성 개념과 함께 언급되었다. 다. 청년 중 일부는 평등과 공정이 상호 충돌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청년들은 우리나라에서 참정권과 교육권은 잘 보장된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참정권은 투표의 권리가 보장된다는 이유로, 교육권은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범위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선택되었다. 부족한 권리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평등권은 성차별 혹은 연령차별 등의 차별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해서, 근로권은 청년 실업과 근로 현장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 특히 직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유가 언급되었다.

시민권 교육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학교 교실에서 본인의 삶과 관련된 시민권 교육의 경험은 거의 없었다. 반면 사회참여와 사회적 교류를 통한 시민권 교육은 효과가 있었다. 청년들은 특히 청구권과 노동권, 그리고 경제적 지식에 대한 교육을 중요하다고 선택했으며, 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식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청년들이 교육과정에서 경험한 차별도 남녀 모두에게서 발견되었다. 남성 중 일부는 역차별을, 여성들은 제도적·문화적인 성차별을 지적했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차별 해소가 여전히 중요한 주제임을 보여준다.

고용영역의 면접결과는 청년들이 일과 여가의 균형과 안전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청년들은 노동자의 권리가 직종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호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직업 자체에 대한 차별, 혹은 규정위반에 대한 당국의 처벌의지 부족을 원인으로 여겼다. 실제 직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일수록 노동자 교섭단체로서 노조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반면,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발견되었다. 청년들은 블라인드 채용이 고용과정에서의 차별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인식했다.

주거 영역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청년들은 주거지에 대해 공간과 근접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갈등을 겪고 있었다. 서울은 근접성이 높으나 좁은 공간을 감수해야 하고, 비수도권은 공간은 상대적으로 넓으나 근접성을 포기해야 하는 곳이었다. 주거 정책은 주거환경의 하한선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고 보장할 필요가 제안되었다. 더 많이 언급된 것은 주거정책대상의 편협성이었다. 보통 청년들이 지원 가능한 주거정책은 청년행복주택 정도인데 이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많았다.

참여 영역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청년들은 정치 참여의 필요성은 알지만 참여의 효과를 신뢰하지 못했다. 정치에 대한 왜곡된 인식, 양극화된 정치구도는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막는 장애물이었다. 따라서 정치 자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교육, 정치와 삶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사례의 경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청년들은 청년은 정책입안자들의 생각보다 다양하며 그만큼 다양한 정책 수요가 있음을 전하고 있다. 또한 청년정책의 홍보와 전달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았다. 정책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정보접근성이나 실제 정책의 실행에 대한 신뢰의 부족 등이 그 이유로 지적되었다.

○———— 제5장 우리나라 청년 시민권 및 참여 정책 현황 및 문제점

- 1. 청년 시민권 및 참여 관련 법률 현황과 문제점
- 2. 청년 시민권 및 참여 정책 현황과 문제점
- 3. 청년정책 추진체계의 청년 참여 현황과 개선점
- 4. 해외 청년 시민권 및 참여 정책 현황과 시사점
- 5. 요약 및 시사점

1. 청년 시민권 및 참여 관련 법률 현황과 문제점⁶⁾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살펴보기 전에 여기에서는 법률과 법안 현황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5년부터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년정책은 개별 부처에서 이루어져 왔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전 청년실업해소 특별법)」을 근거로 청년고용대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이끌었다. 「청년기본법」 조항 중에서 청년의 권리와 참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2조 기본이념과 제5조의 청년의 권리와 책임이다. 먼저 제2조에서는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b). 이것은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의무를 완수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문제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 제5조라고 할 수 있다.

제5조에서는 청년의 기본권이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자기결정권을 다룬 후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청년을 시민의 일원으로 국가와 사회의 의사를 결정하는데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마지막으로 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6) 이 절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표 V-1. 청년기본법의 시민권과 참여 관련 조항

법률조항	주요내용
제2조 (기본이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청년의 권리와 책임)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년의 기본권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년은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③ 청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④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국가·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년 참여 현황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청년 참여 현황을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국무총리는 청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점검을 위하여 청년정책 전문가와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청년인재정보의 수집·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8. 17.]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3b), 검색일 2023년 2월 2일.

제2조와 제5조가 청년 시민권과 참여에 관한 원칙을 밝히고 있다면 제15조는 제④항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정부정책 수립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15조에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청년정책 결정과정에서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을 청년으

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년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경우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a).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에서는 “청년이 단순한 중간세대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의 당당한 주역이 되기 위한 선제적 사회투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청년이 자신의 삶을 둘러싼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및 자율 활동 토대” 구축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위원회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청년인재 발굴과 네트워크 지원을 강화하는 것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청년참여와 청년 주도성이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의 참여와 주도성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체계에서 격차 해소, 지속가능성과 더불어 3대 원칙 중 하나로 제시되어 있다. 한편, 이러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인 「청년기본법」에는 ‘청년의 참여’라는 언급은 있으나 ‘청년의 주도’라는 언급은 없다.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의 참여’는 크게 제2조의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의 참여’, 제4조와 제15조의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제5조의 ‘국가·사회의 의사결정에 청년의 참여’ 등의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제2조의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의 참여’는 ‘기본이념’이며, 제5조의 ‘국가·사회의 의사결정에 청년의 참여’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참여기구’나 ‘거버넌스’로서 참여는 제4조와 제15조의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있어서 청년의 참여’로 국한된다.

그리고 「청년기본법」은 ‘정책추진’에서 ‘청년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는데 「청년정책 기본법」 제2조는 “장기적·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엄밀히 해석하자면 ‘단기적’이고 ‘종합적이지 않은’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 있어서는 청년의 참여 촉진 의무가 없다고도 볼 수 있다. 이를 앞의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와 연계하여 해석하자면 청년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청년 참여를 의무로 하고 있지만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청년 참여를 의무로 하고 있지 않다고까지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청년기본법 개정법률안 중에서 청년 시민권과 참여를 다루고 있는 것은 5개 법안이 있다. 청년 연령 규정을 바꾸는 법안은 여러 개가 발의 중인데 공직선거법 상 선거권 연령인 18세에 맞추어 청년 하한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2개(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가 발의되었다.

표 V-2. 청년기본법 개정법률(안) 중 시민권과 참여 관련 조항

의안	현행	개정안
윤한홍 의원 대표발의 (2022.10.28.)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단서 신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만,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청년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2.6.16.)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③ 청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③ ----- 인종·종교·지역·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 ----- -----.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2022.3.2.)	제3조(정의)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3조(정의) 1. ----- 18세 ----- ----- ----- -----.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2021.1.18.)	〈신 설〉	제24조의2(청년의 사회참여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청년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0.11.27.)	제3조(정의)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3조(정의) 1. ----- 18세 ----- ----- ----- -----.
	〈신 설〉	제27조(청년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발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조에서 “청년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청년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절차,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청년기본법 정무위원장 대안 법률안. 검색일 2023년 2월 2일.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다루는 제5조에 대한 개정은 지역을 차별 금지의 영역에 추가하는 법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구체적인 정책 사업과 관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사회참여를 신설하는 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이 있다. 이밖에 정부위원회 청년 위촉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우선 적용하는 내용을 제안한 법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과 청년친화도시 사업을 제안한 법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이 있다.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제안된 법안은 2023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법률 제19253호)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취약계층 청년과 청년시설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과 청년정책 연구시설 조성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표 V-3.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을 정무위원장 대안 중 시민권과 참여 관련 조항

기존 내용	개정 내용
<p>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① (생략)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개별 사건을 다루거나 외교·안보 정책 과 관련되는 등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위촉하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및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등 -----.</p>
<p>〈신설〉</p>	<p>제24조의6(청년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청년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청년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절차,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ikms.assembly.go.kr), 청년기본법 정무위원장 대안 법률안. 검색일 2023년 2월 2일.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에서 권리와 참여와 관련된 부분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 위원회 중 주로 청년정책을 다루고 있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30%를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기존의 「청년기본법」에서는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였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 조항으로 구체화되었다. 또 다른 관련 개정사항은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부분이 신설되었다는 점이다. 청년 친화도시는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와 권리 부문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18세로 낮아진 부분을 반영해 청년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청년기본법」 외에 신설 법률 제정안으로 청년 주거와 자산 형성, 그리고 자립 지원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청년 주거 관련 법안은 청년 주거권 보장을 내용으로 특히 무주택 청년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청년 자산 관련 법안은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자산 격차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 자립에 대한 법안은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정책과 관련하여 법률 체계를 보면, 「청소년기본법」을 모법으로 하위 법률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법률 체계를 갖추고 있다. 현재 청년정책은 「청년기본법」을 모법으로 하위 법률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하에 하위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시민권과 관련하여 청년의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이 담기기 위해서는 「청년기본법」만으로 한계가 있어 하위 법률체계를 갖추는 노력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

청년 관련 법률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있는데 이 법률에서는 일할 권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3조)로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청년을 포함한 성인 전반을 다루는 법률에서는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3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채용과정에서의 차별에 대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문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형법」 제303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등에서 다루고 있다. 청년의 학습할 권리에 대해서 별도로 이를 다루기보다는 「교육기본법」과 같은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주거나 복지, 문화 등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부분 역시 청년만을 별도로 다루지 않고 관련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표 V-4. 청년 관련 법률 제정안 중 시민권과 참여 관련 조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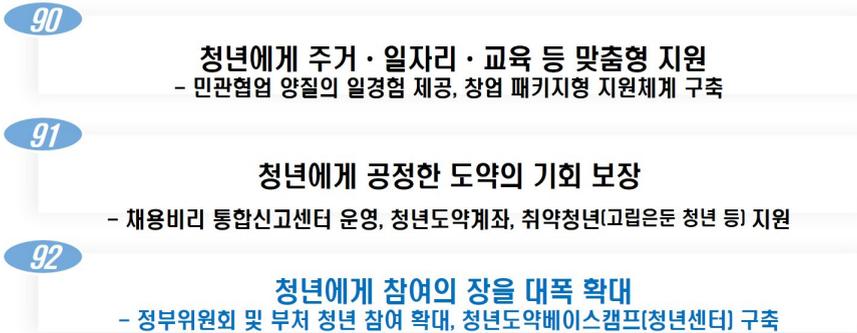
법안	개정 내용
청년주거안정특별법안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0.10.06.)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주택 청년층에 대한 다양한 주거 안정 지원으로 청년층의 주거 불안 등의 문제 해결을 통하여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청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법안 (김희재 의원 대표발의, 2022.06.16.)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청년층의 자산격차 완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의 자산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청년자립 지원법안 (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2023.05.04.)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ikms.assembly.go.kr). 검색일 2023년 10월 15일.

향후 성인 전반을 포괄하는 법률에서 청년의 시민권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 시민권을 포함한 청년을 지원하고 청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기본법」을 모범으로 생활 영역 전반을 다루는 다양한 하위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2. 청년 시민권 및 참여 정책 현황과 문제점⁷⁾

윤석열 정부는 3가지 국정과제로 청년 대상 과제를 제시하였다. 세 가지 국정과제 중 청년 권리와 참여에 해당하는 과제는 92번 과제로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2).

그림 V-1.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청년과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년기본법」을 통해 정부 및 지자체 위원회 중 청년 대표성을 필요로 하는 위원회에 대해 일정 비율 청년 민간위촉직을 두도록 하였는데 92번 국정과제에서는 이를 확대해 청년 참여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92번 국정과제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각 부처에 장관을 보좌하는 청년보좌관을 두고 청년보좌관을 중심으로 부처의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2030자문단을 두도록 한 점이다. 청년보좌관은 6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2030자문단과 함께 청년 의견을 부처 정책에 반영하고 장관의 청년정책 추진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2030자문단은 19세에서 39세 청년으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처의 청년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 제언,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발굴, 제안하는 역할을 맡았다.

7) 이 절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2023년에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하여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 총 9개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대상	기재·교육·행안·문체·복지·고용·국토·중기부, 금융위 9개기관
청년 보좌역	별정직 6급 상당, 청년기본법 상 청년(19-34세) 1명 채용
	2030자문단과 함께 청년 의견 부처 정책 반영, 장관 보좌
2030 자문단	19-39세 청년으로 성별, 지역별 균형 선발, 20명으로 구성
	정책 모니터링, 정책 제언, 청년 여론수렴, 정책 발굴 및 제안

* 출처: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2.06.27.). 정부, 9개 부처에 '청년보좌역' 신설.. '2030 자문단'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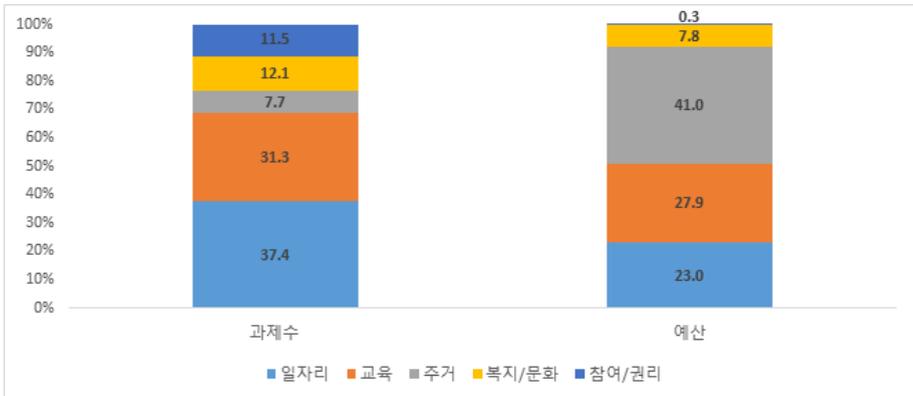
그림 V-2. 중앙정부 청년정책보좌역 및 2030자문단 개요

2022년 기준으로 시행령을 통해 지정한 청년참여 정부위원회의 청년민간위촉직 현황을 살펴보면, 50% 이상을 두도록 한 청년정책위원회는 12명의 위원을 두고 있어 법정 비율 이상을 보여주었다. 30% 이상을 두도록 한 군인복지위원회는 33.3%로 법적 요건을 달성하였고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각 대학별로 파악이 필요한 상황으로 집계가 되지 않았다. 10% 이상을 두도록 한 위원회 중 법정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곳은 공공디자인위원회, 도시농업협의회,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4곳에 이르렀다.

여기에서는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의 정책 영역 중에서 참여와 권리에 국한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볼 때 다른 정책 영역의 정책 과제 중에서 참여와 권리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청년 일자리 영역 중에서 네 번째 과제인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문화 개선”은 시민권 중 일할 권리와 관련된 과제로 볼 수 있다. 청년 주거 영역 중에서 세 번째 과제인 “고시원·반지하 거주 취약 청년 집중 지원”도 시민권 중 주거권과 관련된 과제로 볼 수 있다. 청년 교육 영역 중에서 첫 번째 과제인 “고른

교육기회 보장” 역시 학습권과 관련된 과제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복지·문화 영역 중에서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도 시민권과 관련된 과제로 볼 수 있다. 포괄적으로 볼 때 시민권과 참여 영역으로 볼 수 있는 정책과제가 더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정책 영역으로 구분한 참여와 권리에 대한 기본계획의 정의를 존중해 해당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023년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 5가지 정책분야 중 참여와 권리 분야는 과제 수가 45개로 주거 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고 예산규모는 전체 예산의 0.3%로 매우 미미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참여와 권리 분야는 법과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업이 상대적으로 많아 예산 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정책 전달체계와 같은 인프라 구축 관련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참여와 권리 분야의 예산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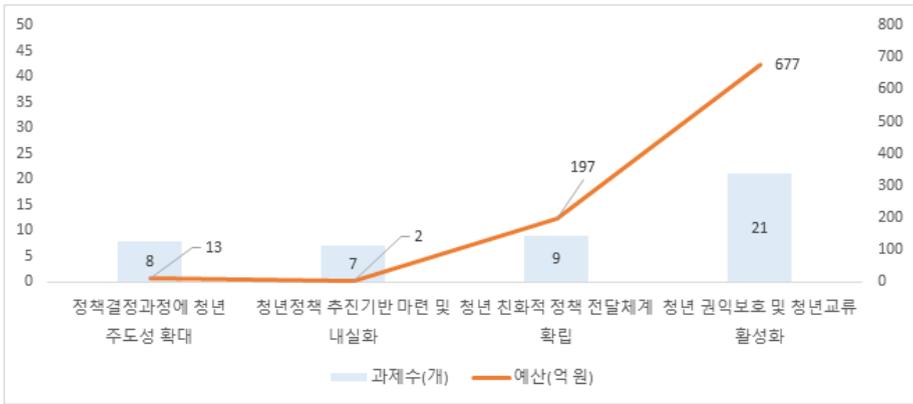
* 출처: 관계부처합동(2023a: 10). 2023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그림 V-3. 2023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분야별 과제 및 예산 비중

참여와 권리 분야는 “정책결정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청년 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등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관계부처합동, 2023a: 10). 분야별로 과제 수와 예산을 살펴보면,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과제가 21개 과제로 가장 많았고 677억 원으로 예산도 가장 컸다.

반면,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는 7개 과제 2억 원 예산으로 적었고 유일하게 예산이 2022년 대비 삭감되었다. 이 분야의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은 정책적 고려나 판단 때문이 아니라 10억 원의 예산 규모로 이루어지는 청년 삶 실태조사가 격년으로 이루어져 불가피하게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참여와 권리 분야 중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이나 전달체계, 청년교류 등은 정책분야 중 일종의 잔여 범주로 다른 영역에 두기 어려워서 참여와 권리 분야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출처: 관계부처합동(2023a: 10). 2023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그림 V-4. 2023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참여/권리분야 과제 및 예산 비중

이 연구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2023년 시행계획 자료에서 청년정책 추진체계와 전달체계, 청년교류 등을 제외하고 참여와 권리에 해당되는 중앙행정기관의 과제만을 추려 살펴보았다. 소관부처를 살펴보면, 국무조정실이 5개 과제로 가장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개 과제로 뒤를 이었고 교육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과제가 1개 과제였다. 참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정기관의 과제는 정부위원회 청년 참여 확대나 청년참여기구 운영 등이 포함되었다. 권리와 관련된 과제는 일자리, 교육 등 분야별 과제에 일부 포함되어 있어 제한적으로만 다루어졌다.

노동 및 교육 분야의 권리 문제를 다루는 센터 관련 과제들이 주로 포함되었다. 노동 권리 문제와 관련된 과제는 일자리 분야의 네 번째 정책 영역이 청년일터 안전망 강화와 노동권의 보장 부분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이 정책 영역에는 노동환경 개선, 직장 괴롭힘 근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 포함되었다. 주거 권리 문제와 관련된 과제는 주거 분야의 세 번째 정책 영역에서 일부 포함하고 있는데 취약 주거지 개선이나 청년 임차인 보호 강화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금융, 자산 문제와 관련된 과제는 복지문화 분야의 첫 번째 영역에서 청년 부채 부담 경감 등이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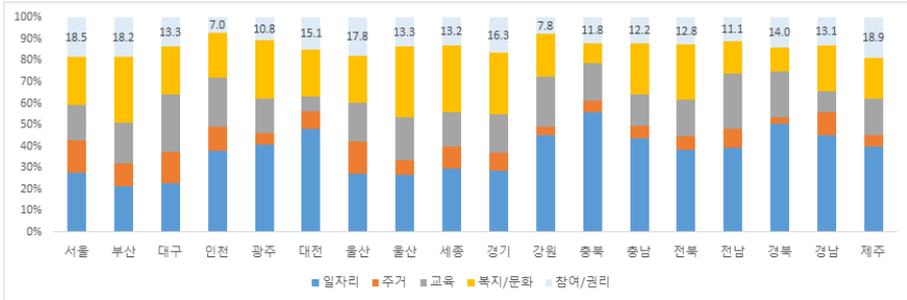
표 V-5. 2023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참여 및 권리 분야 과제

과제명	사업내용	예산(억원)	소관부처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확대	정부위원회의 청년참여위원회 지정, 청년위원 후보 발굴, 청년위원 위촉기준 개선	비예산	국조실
청년인재 DB 플랫폼 구축	청년인재DB 업무망 및 대민망 구축 및 운영	1.2	국조실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운영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청년보좌역 채용 및 청년 참여기구 운영	비예산	국조실
청년 관련 제안 및 정책·제도개선 활성화	청년 민원 빅데이터분석, 우수 아이디어 공모 등	0.5	권익위
청년거버넌스 확대	부처 및 지자체별 청년참여 거버넌스 구축·운영	7.1	국조실
국토교통 청년 소통채널 운영	국토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 의견수렴, 청년정책위원단, 청년온라인패널, MZ보드 운영	0.7	국토부
청년과 함께 하는 통일 준비	청년 의견수렴 및 참여·소통 프로그램 운영	3.0	통일부
찾아가는 인사정책 토론회(청년공감) 운영	대학 수업으로 인사제도 강의 진행	비예산	인사처
청년친화도시 운영	청년친화도시 운영방안 마련, 지자체 지정·지원	비예산	국조실
청년 아르바이트 원스톱 권리구제	노동관계법 위반 피해 청년 상담, 중재, 무료 권리구제 지원	5.0	고용부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청소년 근로 상담 및 찾아가는 현장 지원	21.9	여가부
청년 금융교육 지원	자산, 신용관리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	비예산	금융위
청년소비자 역량 제고 및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	청년 소비자 소양 교육, 교육봉사활동 운영	4.0	공정위
특수거래분야 소비자 보호	불법피라미드 피해 예방 홍보 등	0.3	공정위
대학인권센터 설치 강화	대학인권센터 선도모델 구축 시범대학 및 우수대학 지원	8.0	교육부

* 출처: 관계부처합동(2023b). 2023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이어서 지자체 현황을 살펴보면, 정책 분야별 과제에서 참여권리 비중은 13.8%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의 참여권리 분야의 과제 비중은 11.5%였는데 이 보다는 조금 높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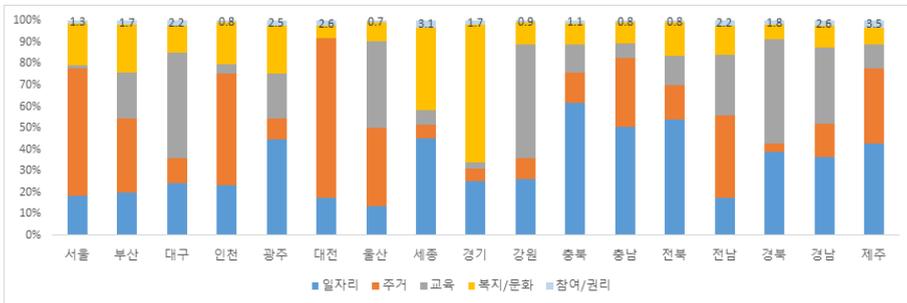
수준이다. 광역시도 중에서 참여권리 분야의 과제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로 18.9%였고 이어서 서울이 18.5%였고 부산이 18.2%였다. 반면, 참여권리 분야의 과제 비중이 낮은 곳은 인천으로 7.0%였고 이어서 강원이 7.8%였고 다른 시도는 10% 이상의 비중을 보여주었다.



* 출처: 관계부처합동(2023b: 10). 2023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그림 V-5. 2023년 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분야별 과제 비중

다음으로 예산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의 예산 비중은 0.3%였기 때문에 시도 예산 비중이 높았다. 예산 비중이 가장 높았던 곳은 제주로 3.5%였고 이어서 세종이 3.1%였고 대전과 경남이 2.6%의 높은 비중을 보여주었다. 예산 비중이 낮았던 곳은 0.7%에 그친 울산이었고 인천과 충남, 전북이 0.8%로 낮은 비중을 보여주었다.



* 출처: 관계부처합동(2023b: 10). 2023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그림 V-6. 2023년 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분야별 예산 비중

중앙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경우에도 정책추진체계나 전달체계, 청년교류 등을 제외하고 참여권리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제를 살펴보았다. 대체로 청년정책 참여기구 운영에 관한 과제와 시도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위촉하는 과제, 청년토론회와 같은 행사나 공모를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과제 등이 포함되었다.

표 V-6. 2023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참여 및 권리 분야 과제(광역시)

시도	과제명	사업내용	예산(억원)
서울	청년참여 활성화 및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지원	정책발굴, 예산편성, 모니터링 등 정책결정과정 전반 참여 및 청년자율예산제 추진	5.7
	미래서울전략회의 운영	미래서울전략회의 청년위원 선발 및 참여	0.5
	청년정책콘테스트	청년정책 제안 및 토론회 개최	2.9
	온라인 청년정책 제안 플랫폼 운영	온라인 청년정책 제안 플랫폼 구축 및 운영	1.0
	자치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자치구 청년자율예산제 지원	8.4
부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청년위원 참여보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청년위원 참여 할당(20%)	비예산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부산 청년정책 참여기구 운영	0.6
	취약근로자 권리보호 강화(노동상담소 지원)	최저임금, 부당해고 등 불공정한 노사관계 보호 및 구제	1.4
대구	대구청년네트워크 운영	대구 청년정책 참여기구 운영	0.7
	대구 단기근로청년 돌봄사업	아르바이트 청년의 근로권익 보장 및 범시민 인식개선	5.0
인천	청년 참여 위원회 확대	인천시 각종 위원회 청년 참여 확대	비예산
	인천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운영	인천 청년정책 참여기구 운영	1.0
광주	청년위원회 운영	청년문제에 대한 의견수렴 및 시정 참여	0.4
	광주 청년주간	청년의제 발굴, 청년정책컨퍼런스 등	2.0
대전	대청넷 운영	대전 청년정책 참여기구 운영	0.9
	대전 청년주간 운영	정책포럼, 청소년 소통 및 공감 프로그램 등	1.5
울산	시 위원회 청년위원 참여 제고	시위원회 청년위원 위촉율 확대 및 위원회 지정	비예산
	울산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울산 청년정책 참여기구 운영	0.5
세종	청년위원 할당제 도입	위원회 구성 시 청년 위촉위원 10분의 1 이상	비예산
	세종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운영	세종 청년정책 참여기구 운영	1.0
	도시재생 청년 서포터즈	도시재생사업 청년층 참여 지원	0.3
	청년자율예산제 운영	청년 제안 과제로 청년 예산 편성	0.04
	청년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공모사업을 통한 청년정책 아이디어 모집	0.2

* 출처: 관계부처합동(2023b). 2023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권리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제는 거의 없었는데 부산, 대구, 경기, 충남, 경북에서 노동권과 관련된 과제가 포함되었다. 이번에 새롭게 법률에 담겨진 청년 친화도시와 관련된 과제는 경남에서 유일하게 포함되었다.

표 V-7. 2023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참여 및 권리 분야 과제(도)

시도	과제명	사업내용	예산(억원)
경기	대학교 노동인권 강좌개설	13개 대학 노동인권 교양강좌 및 특강 개설	1.5
	청년·청소년 노동법률교육	청년 및 제도권 밖 청소년 대상 노동법률 및 노동인권 교육	0.5
충북	2023 청년 포럼 개최	청년정책 전문가 포럼, 청년자유토론 등	비예산
	제8기 충북청년광장	충북 청년정책 참여기구	0.5
	대학생 정책제안 발표대회	대학생 아이디어 발굴 공모	0.08
	청년서포터즈기지원	청년 주제 이슈 취재 및 홍보	0.1
충남	충남 청년네트워크 구성·운영	충남 청년정책 참여기구	0.4
	청년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간담회 개최	청년 소통·공감 채널 다양화 및 의견 수렴	0.06
	대학생 국제정책 토론회	대학생 국제이슈 및 현안 관련 정책토론회	0.5
	청년 리빙랩 해커톤 운영 지원	청년 지역문제 발굴 및 해결방안 제안	0.4
	청년과 함께하는 자치경찰체 운영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운영	0.2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도내 취약노동자 대상 권리보호	3.3
	충청남도청년자원봉사단	충남 소재 청년 아시아 국제자원봉사 활동	0.5
전북	전략북도 청년정책포럼단 운영	정책 제안 및 의견수렴 위한 청년협의체 운영	0.9
	청년 생생 아이디어 발굴 및 정책화 지원	정책 수립 단계부터 청년이 정책 기획에 참여하는 청년 협의체 운영	3.0
	청년정책 SNS홍보단 운영	청년이 직접 SNS를 이용해 청년정책 홍보	1.0
전남	청년 도약 프로젝트	청년 단체나 기업 아이디어 발굴 및 실험 지원	2.0
	청년 소통간담회 개최	청년 소통 간담회 개최 및 정책 발굴	0.2
전남	청년의 목소리 운영	전남 청년정책 참여기구	0.2
	경북	경상북도 위원회 청년참여 확대	도 운영 위원회 청년 참여 확대
청년정책참여단 활성화		경북 청년정책 참여기구	0.2
대학생 정책 아이디어 콘서트		경북 대학생 아이디어 콘서트 개최	0.6
미래·취약근로자 노동기본권 인식교육		사회 진출을 앞둔 고등학생 및 취약 근로자 대상 노동교육	1.0
새마을 해외봉사활동		청년 중심 새마을봉사단 해외 파견	1.5
국제 청년 메타버스 컨퍼런스		국내외 청년 대상 메타버스 놀이터 행사 진행	1.0
경남	경남정책네트워크 운영	경남 청년정책 참여기구	1.7
	경남청년주간 운영	경남청년주간 행사 운영	1.5
	경남청년정책대전	경남 청년정책 경진대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0.5
	청년친화도시 조성	청년 친화적 서비스 제공 및 인프라 조성	20.0
제주	도 소속 위원회 청년참여 확대	도 위원회 청년 위촉 대상 선정 및 참여 확대	비예산
	제주 청년원탁회의 운영	제주 청년정책 참여기구	1.0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서귀포시 청년정책 참여기구	0.2
	청년자율예산 시범운영	청년 제안 과제 예산 배정	3.1
	청년반상회 운영	지역사회 청년 네트워크 및 참여 활성화	0.2

* 출처: 관계부처합동(2023b). 2023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강원도는 참여·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이 없음.

3. 청년정책 추진체계의 청년 참여 현황과 개선점⁸⁾

1) 정책 추진체계

(1) 정책 추진체계와 정책과정

정책 추진체계란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관계되는 개념이다. 좁은 의미에서는 정책을 담당하는 기구 혹은 조직을 의미하나 넓은 의미에서는 효과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제반 기술 혹은 제도를 포함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조석준, 임도빈, 2019). 여기서는 정책 추진체계를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 기술 혹은 제도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여기서 기술이라 함은 전략, 수행방법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제도에는 규칙과 규정, 조직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면, 결국 정책 추진체계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 전략, 규칙과 규정, 조직, 수행방법 등을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한편, 어떤 정책의 추진은 일정한 단계적 절차를 거치는데, 이를 정책과정이라 한다. 그러므로 정책 추진체계는 이러한 정책과정이라는 단계적 절차 속에서 작동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책과정의 단계는 일반적으로 정책의제설정(Agenda setting), 정책결정(Policy making), 정책집행(Policy implementation), 정책평가(Policy evaluation), 정책환류(Policy feedback)로 분류한다(권기현, 2014).

정책의제설정은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해서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채택하는 과정이고, 정책결정은 정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행위이다. 그 다음으로 정책집행은 정책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현활동을 말하며, 정책평가는 원래 가지고 있던 의도와 목표를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했는가를 측정하는 활동이다. 마지막으로 정책환류는 정책영향에 대한 평가결과가 다시 환경이나 정책결정과정으로 환류되는 것을 의미한다(권기현, 2014).

(2) 정책과정과 참여자

정책과정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정책의 각 과정에는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거나, 정책과정에 개입하여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8) 이 절은 임성근 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이 작성하였음.

개인이나 집단이 있다. 이들을 정책과정의 참여자라고 한다. 정책과정의 참여자에는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가 있다. 공식적 참여자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행정관료, 그리고 사법부가 있고, 비공식적 참여자로는 정당, 이익집단, NGO, 언론, 정책전문가, 일반시민 등이 있다.

현실의 정책과정은 행정관료, 국회의원 등 공식적 참여자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비공식적 참여자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참여자들이 참여하는 정책과정을 설명하는 모형으로 정책네트워크모형(policy network model)이 있다. 정책네트워크는 다시 정책공동체와 이슈네트워크로 구분하기도 한다. 정책공동체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폐쇄적인 것으로 의회 상임위원회, 행정부 소관부서, 이익집단으로 구성되는 하위정부 모형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서 이슈네트워크는 동일한 정책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심지어는 이해관계가 정반대인 사람들이 참여하는 개방적 연결망이다(정정길, 이시원, 정준근, 김성수, 최종원, 2022).

1980년대와 1990년대 여러 학문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였다. 정책학이나 행정학의 경우 정책과정에서 NGO나 비영리조직의 비중이 확대되고 신공공관리론이 등장하면서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정정길 외, 2022). 거버넌스란 사회와 국가가 공동목적을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에 공공부문에서 일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매우 중요한 협력관계를 갖는 일련의 사회·경제적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노화준, 2012).

거버넌스에서 정부는 이해관계와 갈등의 조정, 공익의 보호, 네트워크의 관리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먼저, 정부는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거버넌스 참여자들이 이해관계로 인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공식적인 결정권자인 정부가 형평성 있게끔 조심스럽게 이해관계의 균형을 새로 잡도록 해서 갈등을 잘 해소해야 한다. 두 번째로 정부는 정책의 기본방향과 공익에 어긋나는 식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로 정부는 거버넌스가 계속하여 순조롭게 작동하도록 거버넌스 자체를 평소에 잘 관리해야 한다(정정길 외, 2022).

(3) 정책과정의 당사자주의

청년정책과정에 있어서 청년 참여는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안다’라는 당사자 우선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국무조정실, 2022). 그렇지만 이러한 당사자 우선 원칙 혹은

당사자주의(Self-determinism)가 우리 사회나 정책과정에서 아직은 일반화 된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책수요의 대상자가 주도성을 갖고 해당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면 집단이기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기 십상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특정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관련 대표적 법령으로 「노인복지법」이 있는데 노인복지정책결정에 있어서 ‘노인’ 당사자의 참여를 의무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법령에서는 당사자주의를 의식한 조항이 담겨 있기도 하다. 「청소년기본법」이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은 제2조에서 청소년 정책 추진 시 ‘청소년의 참여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5조의 2에서도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는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청소년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서도 당사자주의와 관련된 조항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복지 영역에서 당사자주의가 선구적으로 도입되었다는 배경과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제4조를 보면,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촉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오세근, 이명호(2022)는 “‘당사자주의’는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 스스로 자신의 문제나 고통을 동료에게 드러내고 그들과 논의를 통해 증상 발생의 원인, 행동의 패턴, 고초의 구조를 찾아내는 정신장애인 문제 해결의 새로운 실천방식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 정의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배경으로 하였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에 한정된 개념으로 표현된 것이다. 보다 일반적으로 이 개념을 해석해 보자면 당사자주의는 당사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의 발생원인, 유형, 구조를 찾아내어 해결하도록 하는 실천방식이라고 개념화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청년정책 추진체계의 청년 참여

(1) 청년정책의 비전과 전략

「청년기본법」은 제2조에서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출처: 관계부처합동(2020: 7).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2021-2025).

그림 V-7. 청년정책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그리고 이러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①청년 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②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③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④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비전으로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를 제시하고, 방향으로는 ‘청년의 삶을 청년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삶의 공간, 안정적 토대를 다양한 청년에게 권리로 보장’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청년기본법」에서 기본이념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방향에서 모두 청년 참여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청년의 삶을 청년이 만들어 나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청년정책의 비전에서는 청년의 참여가 잘 나타나 있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전략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3대 원칙(참여와 주도, 격차해소, 지속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참여와 주도’가 청년의 참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청년정책 추진체계의 청년 참여

청년 권리와 참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 추진을 살펴보면,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정책추진체계가 갖추어졌고 청년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민간위촉직 중 절반 이상을 청년으로 채웠으며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참여기구들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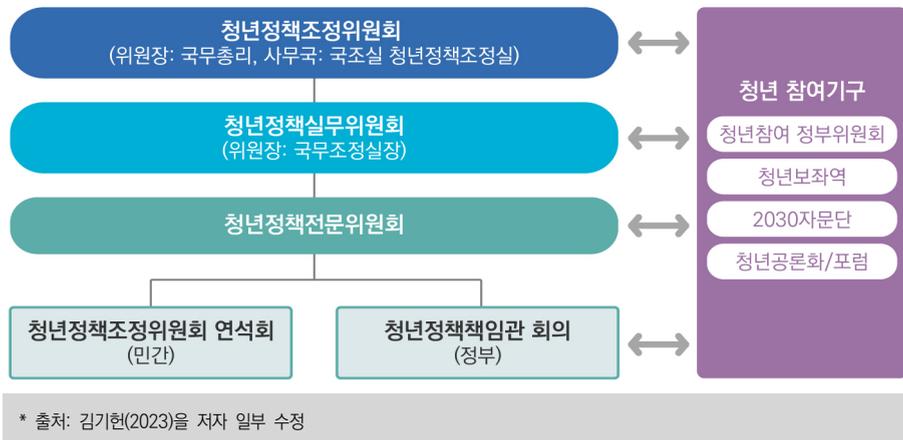


그림 V-8. 중앙정부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념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으며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3년 10월 현재, 정부위원은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20명이고, 민간위원은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8명이다. 민간위원 18명 중 12명이 청년으로 청년비율이 67%에 이른다.

표 V-8.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기능

1.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출처: 「청년기본법」(법률 제19253호, 2023. 3. 21., 일부개정)에서 발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는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다. 「청년기본법 시행령」은 실무위원회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위원은 2023년 10월 현재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며, 부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명, 민간위원 1명을 두고 있으며, 그 외 위원은 정부위원 8명,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위원 9명 중 청년대표는 7명으로 청년대표 비율이 78%에 이른다.

실무위원회는 일자리, 교육, 주거, 생활, 참여·권리 분야 그리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023년 10월 현재, 일자리 전문위원회(7명), 교육 전문위원회(4명), 주거 전문위원회(6명), 생활 전문위원회(3명), 참여·권리 전문위원회(5명), 기획·균형발전 전문위원회(6명) 등 총 6개 전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청년정책 지역협력 체계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중앙부처-광역지자체 청년정책책임관 회의를 개최하고, 민간에서는 중앙-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중앙정부 청년정책 추진 거버넌스는 민간위원의 참여 비율이 높은 편이며, 특히 정책대상자인 청년의 참여 비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해 왔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원칙적으로 위촉직 위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 중 3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위촉직 위원 중 3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특별위원회가 해당하고, 그 이외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와 조정을 거쳐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곳도 해당한다. 그 밖의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중 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한다.

2023년에는 24개 중앙행정기관으로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설치하여 직접 청년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청년보좌역은 청년의 입장에서 장관과 직접 소통하고 수시로 만나 정책과정에 참여하였다. 2030자문단은 청년보좌역을 통해 해당 부처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에도 참여하였다. 고용노동부의 2030자문단은 ‘내일을 위한 청년 4다리 정책과제’를, 문화체육관광부의 2030자문단은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를,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창업 10대 과제’를 발표하였다(청년정책조정위원회 보도자료, 2023.08.07.).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총괄조정기구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며, 현재 전담조직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10개이다.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중간지원조직은 중앙취업지원센터와 대학일자리센터+ 등 2개이며, 그 이외에 청년정책 전담조직은 아니라 청년정책 관련 기능이 있는 중간지원조직은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21개가 있다.

표 V-9. 중앙정부 청년정책 전담조직과 중간지원조직 현황(명)

구분	총괄조정기구	행정체계		
		행정부서		중간지원조직
		명칭	인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	청년정책조정실 (2관 4과 2팀)	37	-
기획재정부	-	청년정책과	6	-
교육부	-	청년장학정책과	9	중앙취업지원센터/한국장학재단/한국사학진흥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정보화진흥원
외교부	-	-	-	재외동포재단/한국국제교류재단
통일부	-	-	-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법무부	-	-	-	-
국방부	-	-	-	-
행정안전부	-	청년정책팀	4	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	청년문화정책팀	3	한국콘텐츠진흥원
농림축산식품부	-	-	-	-
보건복지부	-	청년정책팀	3	한국자활복지개발원/사회보장정보원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촉진특별위 (2023년 폐지)	청년고용정책관 (3과)	37	대학일자리센터+/지방노동관서/한국고용정보원
여성가족부	-	-	-	-
국토교통부	-	청년정책담당관	9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주택보증공사
해양수산부	-	-	-	한국수산자원공단/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	청년정책과	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가보훈처	-	-	-	-
병무청	-	-	-	-
금융위원회	-	청년정책과	4	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

* 출처: 김기현(2023). 인원은 2023년 12월 21일에 각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치를 확인하여 수정함.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청년정책 총괄조정기구로서 각각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에도 청년정책 총괄조정기구가 높은 비율로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인천 지역, 강원 지역, 경북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총괄조정기구 설치 비율이 각각 45.5%, 52.6%, 54.2%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지방선거(2022년) 이후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청년정책 담당 행정부서 및 중간지원조직 개편이 진행 중인데, 현행 체계를 확대하거나 유지한 곳도 있으나 행정부서의 위상을 격하하고, 인원을 감축하며, 중간지원조직의 통폐합 혹은 해체 등이 진행되었다(김기현, 2023). 강원은 전담 행정부서가 사라졌고 경남은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하던 청년온나가 사라졌다. 이것은 광역지방자치단체조차도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추진체계조차 유지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V-10.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전담조직과 중간지원조직 현황(% , 명)

구분	총괄·조정기구		행정체계	
	광역	기초 설치비율	행정부서(공무원 수)	중간지원조직
서울	청년정책조정위	76.9	미래청년기획단(2반 8팀 45명)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허브 2024년 일몰)
부산	청년정책조정위	64.7	청년신학국 청년희망정책과(1과 35명)	부산청년센터
대구	청년정책조정위	66.7	청년여성교육국 청년정책과(1과 25명)	청년센터
인천	청년정책위	45.5	청년정책담당관(3담당 17명)	유유기지
광주	청년정책위	100	청년정책관(3팀 15명)	청년센터
대전	청년정책조정위	83.3	청년정책과(3팀 12명)	청년 내일센터
울산	청년정책조정위	100	대학청년지원단(2팀 15명)	-
세종	청년정책조정위	-	청년정책담당관(4담당 15명)	세종 청년센터
경기	청년정책조정위	87.5	청년기획과(3팀 23명)	경기일자리재단, 경기복지재단
강원	청년정책조정위	52.6	-	-
충북	청년정책조정위	66.7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청년지원팀(1팀 7명)	청년희망센터
충남	청년정책조정위	81.3	청년정책관(4팀 16명)	충남 청년센터
전북	청년정책위	87.0	청년정책과(4팀 18명)	전북청년허브센터
전남	청년정책조정위	80.0	인구청년정책관(1팀 5명)	-
경북	청년정책조정위	54.2	청년정책과(3팀 21명)	-
경남	청년정책조정위	89.5	청년정책과(3담당 13명)	-
제주	청년정책조정위	-	청년정책담당관(4팀 17명)	제주청년센터

* 출처: 김기현(2023). 기초지자체 설치비율은 2021년 기준임. 인원은 2023년 12월 21일에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수치를 확인하여 수정함. 강원도는 청년 행정부서인 청년어르신일자리과가, 경남은 중간지원조직(청년온나)이 없어졌음.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참여/소통기구의 현황을 보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청년참여/소통기구가 운영되고 있는데,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만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청년참여·소통기구 운영비율은 20% 대에서 100%까지 편차가 상당한 편이다.

표 V-11. 지방자치단체 참여/소통기구 현황(명, %, 명)

구분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비고
	청년참여/소통기구	조례	인원	운영비율	인원	
서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	1,045	88.5	1,044	2019년 자율예산제 추진
부산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	×	3,000	35.3	87	-
대구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	○	70	33.3	17	참여예산제 청년할당
인천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	○	30	54.5	147	-
광주	광주광역시청년위원회	×	50	83.3	111	청년정책협의체 조례규정
대전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	164	83.3	213	-
울산	울산청년정책네트워크	○	50	100.0	113	-
세종	청년정책네트워크	×	38	-	-	2022년 자율예산제 추진
경기	청년참여기구	×	180	531	845	2021년 구성, 참여예산제 청년할당
강원	-	×	-	21.1	101	-
충북	청년광장/청년정책네트워크	×	61/80	41.7	101	네트워크는 민간기구
충남	청년정책네트워크	○	118	75.0	376	-
경북	청년정책포럼단	○	50	66.7	368	-
경남	청년의목소리	○	71	95.7	670	-
전북	청년정책참여단	○	405	54.2	227	자율예산제 도입 검토
전남	청년정책네트워크	○	1,215	84.2	426	광역은 온라인참여단 포함
제주	제주청년원탁회의	○	55	-	-	2023년 자율예산제 추진

* 출처: 김기현(2023). 현황은 2022년 기준임. 청년 자율예산제(참여예산제)는 2023년 현재 기준임.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강원도를 제외하고 청년 참여 및 소통기구를 두고 있다. 「청년기본조례」에 청년 참여 및 소통기구를 법정기구로 제시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1개에 이른다. 경남의 청년정책네트워크는 1,215명으로 참여 인원이 제일 많은데 이는 온라인 청년참여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청년시민회의는 818명으로

참여인원이 두 번째 많으며 이어서 경북 청년정책네트워크가 405명으로 뒤를 잇고 있다. 기초 지자체를 살펴보면, 운영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자치구로 88.5%였고 이어서 경남지역의 기초지자체는 84.2%로 뒤를 잇고 있다. 서울과 세종은 청년 참여 및 소통기구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직접 지자체의 청년 예산의 일부를 제한한 과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자율예산제를 도입해 추진 중이다. 제주에서도 2023년부터 자율예산제를 도입했고 전북에서도 이를 검토 중이어서 주민 참여예산제 형태의 실질적 참여방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3) 청년정책 추진체계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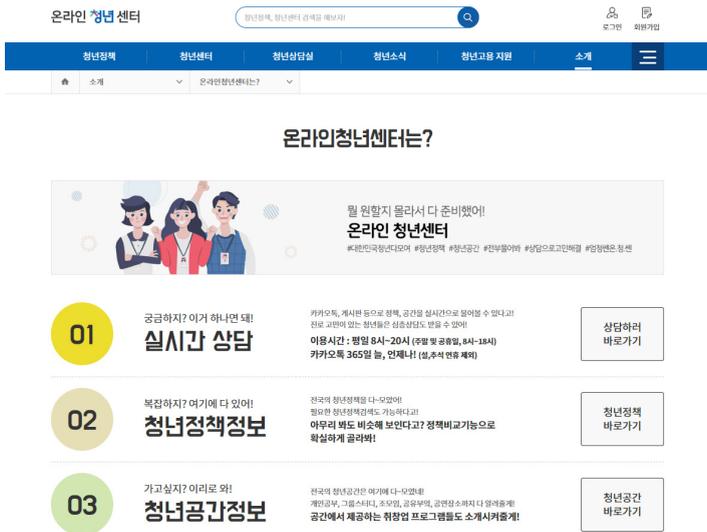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현재 개정된 부분은 제15조의 2로 청년인재정보의 수집과 관리를 다루고 있다. 이것은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법적 근거인데 이 DB의 구축 목적은 청년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지원하는 것에 두고 있다. 청년 DB(2030db.go.kr)는 2023년 1월 30일에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청년정책 참여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은 자신의 프로필을 이곳에 등록할 수 있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청년 대상으로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모집하거나 참여기구 구성,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등 필요할 경우 이곳에 등록된 청년을 검색할 수 있다.



* 출처: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3.01.29.). 정책참여 인재발굴을 위한 청년DB 정식 개통

그림 V-9. 청년DB 홈페이지와 업무망 이미지

청년정책을 온라인으로 전달하는 전달체계는 고용노동부에서 온라인청년센터를 구축해 2018년 이후 추진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하는 창구로 개설하면서 시작되었다.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청년 하나로라는 이름으로 각 중앙부처 청년정책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통합플랫폼 구축하는 과제가 포함되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온라인청년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정책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국무조정실로 이관되었으며 온라인청년센터는 2023년 10월까지 명칭이 유지되어 오다 11월부터 온통청년으로 명칭이 바뀌어 운영중에 있다.



* 출처: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 홈페이지(2023.10.5 접속)

그림 V-10.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이미지

오프라인에 구축되는 청년전달체계는 2023년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정부 지원이 가능해 졌으며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운영 중인 청년센터를 개편하는 작업이 추진 중이다. 현재 국무조정실에서는 먼저 각 지자체 청년센터를 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청년재단 위탁 운영 방식으로 구축했으며 장기적으로 지자체별로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해 지원할 예정이다(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23. 09. 05). 청년지원센터는 아래 표와 같은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다.

표 V-12. 청년지원센터의 기능

1. 청년정책의 안내 및 홍보
2. 지역 청년단체, 청년시설 등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3. 지역의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과 관련한 조사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년지원 사업
5. 그 밖에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출처: 「청년기본법」에서 발췌

「청년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자체 청년지원센터 지정기준은 아래표와 같다. 2023년 10월 현재, '온라인 청년센터'에는 195개 청년센터가 등록되어 있다.

표 V-13. 청년지원센터 지정기준

-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지정기준
 1.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상담실 및 교육실을 각각 1개 이상 둘 것
 2. 청년들의 교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둘 것
 3.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와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부서를 둘 것
- 중앙청년지원센터 지정기준
 1.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상담실 및 교육실을 각각 1개 이상 둘 것
 2. 청년들의 교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둘 것
 3.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와 업무를 수행하는 10명 이상의 상근 직원을 둘 것
 4. 업무를 수행하는 3개 이상의 별도 부서를 둘 것
 5. 최근 3년간 청년지원, 청년발전 또는 청년정책 관련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업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출처: 「청년기본법 시행령」에서 발췌

4) 청년정책 추진체계의 청년 참여 개선점

진술한 바와 같이 본 보고서에서는 청년정책 추진체계의 개념을 상당히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즉, 청년정책의 추진체계를 청년정책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넘어서서 다양한 참여자나 방식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정책네트워크론이나 거버넌스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청년정책의 추진체계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진행되는 심의·조정절차에 민간위원 등이 참여하는 장치가 적극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다. 물론 행정부의 집행행위에 민간인

이 참여하는 경우가 낮은 것은 아니다. 실제로 행정기관이 해당 기관의 사무를 수행할 때 자문을 받거나 업무를 조정, 협의, 심의 혹은 의견을 할 때 민간위원을 참여시키는 것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앞에서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을 서술하였는데, 여기서는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는 조직의 구성·운영 차원에서 검토하고, 그 다음으로는 정책과정 단계에 따라 검토하도록 한다.

(1) 조직의 구성·운영 차원 개선점

청년정책 추진체계에 관해서 조직의 구성·운영 차원에서 보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본 위원회 이외에도 실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가 있다. 청년 참여 관점에서 보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부의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정책대상자의 참여를 중시하고 있다. 본 위원회,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 모두에 청년 당사자 혹은 청년대표가 높은 비중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세 위원회는 그 역할이 다소 애매한 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 위원회별로 참여하는 민간위원이 어떤 자격이나 역량을 구비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부위원회를 본 위원회,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 등 3유형으로 분류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보면, 본 위원회는 장관급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심의·조정을 다소 의식적인 절차로서 확정하는 역할을 하고, 실무위원회는 복수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각자의 부처를 대변하여 실무적으로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전문위원회는 해당 분야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안전에 대해서 자문을 한다. 이런 세 개 유형의 위원회에 있어서 민간위원 참여비율은 천차만별이다. 특히 본 위원회는 민간위원 없이 장관급 공무원으로만 구성되는 예도 적지 않다.

이러한 일반적이라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과 비교해 보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의 참여를 중시한 탓인지 본 위원회,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 모두에 청년을 참여하도록 하였으나 자격이나 역량 등에 대한 고려는 그다지 하지 않은 듯 하다. 특히 실무위원회의 역할이 가장 명확하지 않아서 본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청년 위원의 자격이나 역량 차별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회,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검토 결과 실무위원회가 필요성이 높지 않다면 실무위원회는 없애고 본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만 둘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본 위원회로 안건을 넘기기 전에 실무위원회에서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 전문위원회와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실무위원회의 위원을 분야별로 구성된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전문위원회의 자문활동을 이끌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실무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이다.

조직의 구성·운영 차원에서 또 하나 살펴 볼 것은 ‘청년지원센터’이다. 「청년기본법」제 24조의4에 ‘청년지원센터’의 업무와 지정기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청년지원센터는 청년정책 추진체계 내에서 정책 수요자와 가장 근접하여 접촉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는데 청년참여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 이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참여를 증시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청년지원센터가 청년이라는 정책수요자가 구체적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청년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청년이 참여하도록 의무화 하거나 청년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중간지원조직은 전국 사업으로 모든 지역에 많은 인력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경우 중앙행정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산하 조직을 의미한다. 청년정책 사무를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에 아직까지 중간지원조직이 없다(김기현, 2022). 「청년기본법」에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조항은 없는 상태이다. 청년을 지원하는 조직들이 이미 상당히 늘어난 현실을 고려할 때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청년정책을 집행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정책과정 차원의 개선점

앞에서 정책과정의 단계는 일반적으로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정책환류로 분류한다고 서술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과정 단계는 달리 말하면 정책 추진체계가 작동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제 청년정책 추진체계를 정책과정 차원에서 살펴보면서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어떤 사안이 공공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로 인식되어, 이슈가 형성되고, 그렇게 형성된

이슈에 대해 정부가 해결하도록 요구되고 정부 차원에서 다루기로 정해지면 정책의제가 형성된 것이다. 청년정책의 경우 2030자문단 등을 통한 의견수렴절차를 통해서 정책의제를 발굴하기도 하고,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과정, 매년 수립되는 시행계획 수립과정 등을 통해서 발굴되기도 한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경우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위탁하여 수립하는 형태인데, 연구과정에서 청년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통상이기 때문에 청년의 참여가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청년정책의 결정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청년정책 시행계획 등이 모두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는 법령 상 청년의 참여를 의무화 하였기 때문에 청년정책의 결정단계에서 청년의 참여는 보장되고 있다고 하겠다. 다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은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조정에서 반드시 집중하여 임한다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민간위원이 얼마나 청년정책에 관심이 높고 역량이 있으며 역량이 있느냐에 따라서 참여의 밀도는 달라질 것이다. 또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가 얼마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활동에 열정을 갖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다.

민간위원 위촉을 기준으로 본다면, 2022년 10월부터 제2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출범했다고 할 수 있는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홈페이지 등록된 활동내역만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제1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비해서 제2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본 위원회 개최는 크게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그 이외의 위원회 활동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동일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활동실적이 달라진 것이라 하겠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회 민간위원 중 부위원장 등 일부를 상근위원으로 하거나 위원회 운영예산이 충분히 배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연구과제를 발주하거나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역량을 더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전문위원회의 경우에도 자문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청년정책의 집행은 행정조직이나 중간지원조직, 그리고 청년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청년기본법」에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상으로 볼 때 「청년기본법」 시행으로 청년정책의 집행은 상당한 탄력을

받아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 중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부처는 9개에 머무르고 있어서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청년정책의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국무총리는 제출된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부터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국무총리는 매년 분석·평가지원기관에 의뢰하여 청년정책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청년정책의 분석·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해서 심의·하는 역할을 하기에 청년정책 평가 단계에도 청년 참여는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그러나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분석·평가지원기관에 의해 제출된 평가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정하는 역할까지는 하는지는 의문이다. 분석·평가지원기관에서 청년정책 실적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정책만족도를 조사하므로 청년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제도화 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분석·평가지원기관이 청년정책 실적을 평가할 시에 청년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아야 할 것이다.

청년정책의 환류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매년 수립되는 시행계획, 그리고 5년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에도 평가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은 청년정책과정 중에서 행정부를 중심으로만 살펴본 것이다. 그러나 모든 정책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입법부에서 청년정책이 다루어지는 과정도 중요하다. 「청년기본법」제27조는 정부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청년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주요 청년정책의 수립·추진실적 및 청년 실태조사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논의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국회 차원에서도 청년들이 청년정책을 비롯한 국가의제를 논하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해외 청년 시민권 및 참여 정책 현황과 시사점

여기에서는 국제연합(UN)과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에서 다루고 있는 정책 계획보고서(blue paper)에서 청년 시민권과 참여 정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이어서 주요 국가별로 청년 참여 정책의 방향과 개별사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청년 시민권 및 참여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제연합(UN)은 2018년에 2030년까지 적용될 향후 정책 계획보고서(Youth 2030: Working with and for Young People)을 발표하였다(United Nations, 2018). 여기에서는 5가지 정책 우선순위 영역을 밝히고 있는데 첫 번째로 제시한 것이 청년 참여와 권리에 관한 것이다(United Nations, 2018: 10). 이 우선순위 영역의 정책 목표는 “평화롭고 적절하며 지속적인 세계를 위해 청년의 목소리를 증폭시키기 위한 참여와 옹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국제연합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지자체, 정부와 국제적인 수준에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로 포함되어 있다.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청년 참여와 청년 대표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과 온라인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표 V-14. 국제연합(UN)의 청년 계획보고서(blue paper)의 참여·권리 관련 정책 목표와 정책 방향

청년정책 계획보고서	정책목표	정책 방향
유스 2030 (Youth 2030)	<p>평화롭고 적절하며 지속적인 세계를 위해 청년의 목소리를 증폭시키기 위한 참여와 옹호</p> <p>(Engagement, Participation and Advocacy – Amplify youth voices for the promotion of a peaceful, just and sustainable worl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참여라는 포괄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기관, 시설 간의 연계와 협력 강화 • 지역사회에서 국가 수준을 넘어 국제적으로 연계와 협력을 확장하고 국제연합의 여러 기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원 강화 • 지역과 국가, 국제적인 수준에서 정부정책모름에 청년 참여를 촉진하며 참여하는 청년 대표의 권한 강화 • 국제연합이 청년에게 더 잘 다가가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청년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참여를 활성화 • 국제연합의 가치를 옹호하는 청년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이들의 목소리를 강화하고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

* 자료: United Nations(2018: 10)

유럽연합(EU)은 국제연합이 2030년까지의 청년정책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했던 2018년에 계획보고서(European Union Youth Strategy 2019-2027)를 발표하였다(European Union, 2018). 여기에서는 세 가지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세 가지는 연계(connect)와 권한 강화(empower)와 더불어 참여(engagement)였다. 우리말에는 참여가 세부적으로 나누어지지 않지만 영어에서는 일반적인 의미의 참여(participation)와 구분되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의 참여(engagement)를 구분하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관여나 관계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적극적인 참여 정도가 가장 적절해 여기에서는 참여로 번역하고자 한다.

표 V-15. 유럽연합(EU)의 청년 계획보고서(blue paper)의 참여·권리 관련 정책 목표와 정책 방향

청년정책 계획보고서	정책 목표	정책 방향
유럽 유스전략 2019-2027 (European Union Youth Strategy 2019-2027)	참여 (Engag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사회에서 민주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든 청년들의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참여 촉진 • 청년들과 청년 단체 및 청소년 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자체, 정부 및 유럽연합 수준에서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며 평가하는데 참여 • 지역사회와 지자체, 정부 수준에서 청년대표 기구를 설립하고 발전시키며 청년 참여를 조직화하고 청년 대표들이 지역사회와 지자체, 정부 및 유럽연합 차원에서 정책 추진과 업무에 동참 •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 결정과정 전반에서 반영하고 시민교육 및 학습 전략을 통해 시민교육 역량을 촉진 • 청년들이 참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참여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 증진 • 혁신적이고 민주적인 참여와 관련하여 온라인 참여를 위한 인터넷 및 디지털 기술에 모든 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 자료: European Union(2018: 4).

이 보고서에는 참여와 관련하여 6가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European Union, 2018: 4). 우선 민주적인 절차를 강조한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참여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부족한 부분이 이에 해당하는데 대표성과 대의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민주적인 절차를 갖출 필요가 있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제안단계에서의 참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럽연합에서는 결정과 실행과 평가단계에 이를 정책 전반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중요성과 시민교육

을 통한 시민역량 강화, 그리고 온라인을 비롯한 다양한 참여 방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표 V-16. 유럽연합(EU)의 계획보고서(blue paper)의 참여·권리영역 정책 내용

청년정책 계획보고서	정책영역	정책 내용
유럽 유스전략 2019-2027 (European Union Youth Strategy 2019-2027)	정보와 건설적인 대화(Information & Constructive Dialog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참여할 수 있는 건설적인 대화를 지원 • 청년들이 정보를 비판적이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강화 • 청년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뉴스를 파악하고 뉴스의 소스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보장 • 청년들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혐오발언과 차별을 인식하고 신고할 수 있는 능력 보장 • 청년들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존중받고 관용적이며 폭력적이지 않은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 이해하기 쉬운 청년 친화적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 부모와 양육자, 그리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관계자가 미디어와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공간과 모두를 위한 참여 (Space and Participation for 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들이 민주적 참여와 자주성을 강화하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을 위한 전용공간을 제공 • 청년들이 모든 사회분야와 의사결과정, 의제 설정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청년 친화적이고 접근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들이 충분히 영향을 미치도록 보장 • 다양한 배경을 가진 모든 청년에게 일상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동등한 권한 보장 •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 공간을 제공하고, 자주적이며 개방적이고 안전한 곳에서 청년에게 접근 가능하며 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청년 참여의 기회를 보장 • 안전한 가상 공간에서 모든 청년들에게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 • 청년단체의 활동과 청년들의 참여, 비형식 교육을 위한 지속적인 자금 지원과 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장 • 청년 친화적이고 관련성이 있는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청년 참여 활성화

* 자료: European Union(2018: 13-16).

세부적인 정책 내용은 두 가지 정책 영역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정보와 건설적인 대화(Information & Constructive Dialogue)를 다루는 정책 영역에서는 청년들의 의사소통과 미디어 문해력과 같은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다. 이것은 청년 참여의 밑바탕을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어서 공간과 모두를 위한 참여(Space and Participation for All)는 청년 참여가 청년정책 전달체계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센터는 기능과 역할이 제각각이고 청년이 주도한다기보다 관이 주도하고 있으며 청년 참여의 공론장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데 유럽 연합에서는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한 정책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세부적인 정책사업을 살펴보면, 유럽연합(EU) 청년 대화(EU Youth Dialogue)가 가장 대표적이다(European Union, 2018: 8-9). 이것은 과거 구조화된 대화(Structured Dialogue, 2012-2018)를 발전시킨 것이다. 이것은 청년정책 의사결정자와 청년당사자 및 청년 단체 활동가, 그리고 전문가 간에 청년 의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로 지역사회에서 출발해 유럽연합 차원까지 논의의 장을 확대한 것이다. 이 대화는 유럽연합의 청년장관 협의회(Council of Youth Ministers)에서 설정한 의제에 대해서 18개월 동안 지역사회, 지자체, 정부 및 유럽연합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한다. 21개 유럽연합 회원국 중 3개의 의장국을 선정하고, 회원국을 돌면서 의제를 논의하는 유럽연합 청년회의(EU Youth Conference)를 개최한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참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온라인은 유럽청년포털(European Youth Portal)을 활용하고 있다.

이어서 유로데스크(Eurodesk)는 에라스무스+(Erasmus+)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유럽 청년 정보 네트워크이다. 대학 간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학생만이 아니라 청년 전반에 걸쳐 비형식, 무형식 학습을 위한 이동(지역간, 유럽연합 회원국간, 다른 국가간 이동)을 지원하는 유럽연합 대표사업인 에라스무스+로 확장되었다. 유로데스크는 에라스무스+에 관한 정보를 유럽회원국 청년에게 제공하기 위해 37개 회원국에 39개의 네트워크 센터로 약 3,000여개의 기관, 시설들이 참여해 설립되었다. 유로데스크 집행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과 5-7인의 집행위원으로 구성, 총괄조정 역할을 하며 유로데스크 브뤼셀 링크(Eurodesk Brussels Link)는 3,000여개의 기관, 시설들의 네트워크에 대한 조정기관이자 각 국가의 유로데스크 센터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수행한다.

표 V-17. 유럽연합의 청년 참여·권리 정책사업 현황

사업	개요	내용
EU 청년 대화 (EU Youth Dialogue)	청년정책 의사결정자와 청년당사자 및 청년 단체 활동가, 그리고 전문가 간에 청년 의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로 지역사회에서 출발해 유럽연합 차원까지 논의의 장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개월에 걸쳐 진행 • 청년장관협의회(Council of Youth Ministers)에서 설정한 의제에 대해 논의 • 21개 유럽연합 회원국 중 3개의 의장국 선정, 회원국을 돌면서 의제를 논의하는 유럽연합 청년회의(EU Youth Conference) 개최 • 지역사회에서 지자체, 정부 및 유럽연합까지를 포괄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참여 병행, 온라인은 유럽청년포털(European Youth Portal)을 활용 • 과거 구조화된 대화(Structured Dialogue, 2012-2018)에서 적용되었던 참여 방법론을 발전시켜 지속적인 혁신 추진
유로데스크 (Eurodesk)	에라스무스+ (Erasmus+)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유럽 청년 정보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간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학생만이 아니라 청년 전반에 걸쳐 비형식, 무형식 학습을 위한 이동(지역간, 유럽연합 회원국간, 다른 국가간 이동)을 지원하는 유럽연합 대표사업인 에라스무스+로 확장 • 유로데스크는 에라스무스+에 관한 정보를 유럽회원국 청년에게 제공하기 위해 37개 회원국에 39개의 네트워크 센터로 약 3,000여개의 기관, 시설들이 참여해 구축 • 유로데스크 집행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과 5-7인의 집행위원으로 구성, 총괄조정 역할을 하며 유로데스크 브뤼셀 링크(Eurodesk Brussels Link)는 3,000여 개의 기관, 시설들의 네트워크에 대한 조정기관이자 각 국가의 유로데스크 센터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수행
유럽 청년포털 (European Youth Portal)	유럽연합과 회원국 청년을 위한 온라인 참여 및 정보 제공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청년포털(https://youth.europa.eu/)은 28개의 언어로 제공 • 이 사이트에서는 청년정책 참여와 관련된 내용과 에라스무스+를 통한 학습이동과 관련된 내용, 청년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 청년정책을 소개하는 내용 등 4가지 주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밖에 청년들의 이야기와 발인, 뉴스와 이벤트 정보 등을 제공 • 청년 참여 페이지는 유럽청년대화를 비롯하여 시민참여와 권리, 지속가능발전, 문화교류와 스포츠, 평화활동 등에 관한 내용을 제공 • 에라스무스+ 페이지는 유학, 자원봉사, 인턴십, 취업, 학교교류, 청년교류, 여행 관련 내용을 제공 • 이 사이트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에라스무스+를 지원하는 유럽 청년 정보 네트워크인 유로데스크에서 관리

* 자료: European Union(2018: 8-9). 유럽 청년포털 홈페이지(<https://youth.europa.eu/>). 유로데스크 홈페이지(<https://eurodesk.eu/>). 2023년 10월 4일 접속함.

다음으로 온라인 청년정책전달체계인 유럽연합 포털(European Youth Portal)이 있다. 유럽 청년포털(<https://youth.europa.eu/>)은 28개의 언어로 제공 중이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에라스무스+를 지원하는 유럽 청년 정보 네트워크인 유로데스크에서 관리한다. 이 사이트에서는 청년정책 참여와 관련된 내용과 에라스무스+를 통한 학습이동과 관련된 내용, 청년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 청년정책을 소개하는 내용 등 4가지 주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밖에 청년들의 이야기와 발언, 뉴스와 이벤트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청년 참여 페이지는 유럽청년대화를 비롯하여 시민참여와 권리, 지속가능발전, 문화교류와 스포츠, 평화활동 등에 관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에라스무스+ 페이지는 유학, 자원봉사, 인턴십, 취업, 학교교류, 청년교류, 여행 관련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청년정책을 주관부처를 두고 통합적으로 다루지 않고 다양한 부처가 함께 실무단(IWGYP: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Youth Programs)을 구성해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중에서 청년 시민권과 참여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업은 젊은이가 참여하는 4가지 변화(YE4C: Youth Engaged 4 Change)이다.

표 V-18. 미국의 젊은이(아동·청소년·청년) 참여·권리 정책사업 현황

국분	사업	개요	내용
중앙정부	젊은이가 참여하는 4가지 변화 (YE4C: Youth Engaged 4 Change)	미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를 변화시키는 참여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YE4C는 16세에서 24세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사회 참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플랫폼으로 운영 중 미국의 청년 포털(youth.gov)에서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으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라디오 등 47가지 미디어매체로 접근이 가능 이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활동은 시민참여와 자원봉사 활동, 인턴십과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학자금 등의 재정적인 지원과 건강, 사회관계, 리더십 프로그램 등 다양
지자체	변화를 이끄는 젊은이(YLC: Youth Lead the Change)	보스턴시에서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을 제안하는 참여예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보스턴 시의 변화를 이끄는 젊은이(YLC: Youth Lead the Change)는 12세에서 25세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제안과 투표를 거쳐 청년 스스로가 정책 사업을 제안하는 참여예산제로 2014년부터 도입 YLC는 공원, 공동체 센터, 도서관, 학교와 같은 도시의 자산을 향상시키는 내용으로 5가지 단계(1. 규칙 정립, 2. 제안 공론화, 3. 제안서 작성, 4. 투표, 5 예산 배분)로 이루어짐. 가장 많은 투표를 획득한 사업안은 보스턴시에 건의되고 시의회에서 승인된 후 정책사업으로 추진됨.

* 자료: 미국 청년 프로그램 통합워크그룹(IWGYP: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Youth Programs) 홈페이지(youth.gov), 보스턴 시 홈페이지(https://www.boston.gov/). 2023년 10월 4일 접속함.

이것은 16세에서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를 변화시키는 참여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미국의 유스 정책은 10대와 20대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젊은이로 표기하고자 한다. 미국의 젊은이 포털

(youth.gov)에서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으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라디오 등 4가지 미디어매체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활동은 시민참여와 자원봉사 활동, 인턴십과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학자금 등의 재정적인 지원과 건강, 사회관계, 리더십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중이다.

변화를 이끄는 청년(YLC: Youth Lead the Change)는 미국의 각 주에서 이루어지는 청년 참여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사업으로 보스턴시에서 운영 중이다. YLC는 2년 주기로 제안과 투표를 거쳐 청년 스스로가 정책 사업을 제안하는 참여예산제로 2014년부터 도입되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현재는 2020년과 2023년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YLC는 공원, 공동체 센터, 도서관, 학교와 같은 도시의 자산을 향상시키는 내용으로 5가지 단계(1. 규칙 정립, 2. 제안 공론화, 3. 제안서 작성, 4. 투표, 5 예산 배분)로 이루어진다. 가장 많은 투표를 획득한 사업안은 보스턴시에 건의되고 시의회에서 승인된 후 정책 사업으로 추진된다.

프랑스는 유스(Jeunesse)를 3세부터 30세까지 아동기부터 청년기를 포괄하여 정의하고 있어 여기에서도 청년 대신 젊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청년부처를 운영해 온 곳으로 현재 국가교육·젊은이·체육부(MEJS: Le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에서 청년정책을 주관하고 있다. 지역사회 단위에 다양한 젊은이 센터가 민간과 정부 주도로 운영 중이며 이러한 센터 중에서 2곳을 대상으로 시민권과 참여 관련 정책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젊은이 문화의집(MJC: Maison des Jeunes et de la Culture)은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과 기업, 단체의 기부금, 그리고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조직으로 2020년 현재 전국적으로 1,460개소 운영 중이다(좌동훈, 김지수, 변주영, 2021: 171-176). 이곳은 우리나라의 기초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의 모델이 된 곳이다. MJS는 독립적인 공간을 갖추거나 지자체 및 민간재단 혹은 단체 등의 일부 공간을 대여해 운영 중이며 아동, 청소년, 청년을 위한 사회문화 차원의 대중교육과 문화예술, 시민의식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이다. 젊은이 활동가(youth worker) 등이 젊은이들과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시민의식과 자원봉사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

표 V-19. 프랑스의 젊은이(아동·청소년·청년) 관련 센터별 참여·권리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개요	내용
젊은이 문화의집 (MJC: Maison des jeunes et de la culture)	시민의식 관련 프로그램	공식교육과 연계되거나 비형식, 무형식 학습 프로그램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생활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MJC는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과 기업, 단체의 기부금, 그리고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조직으로 2020년 현재 전국적으로 1,460개소 운영 중 MJC는 독립적인 공간을 갖거나 지자체 및 민간재단 혹은 단체 등의 일부 공간을 대여해 운영 중이며 아동, 청소년, 청년을 위한 사회문화 차원의 대중교육과 문화예술, 시민의식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 젊은이 활동가(youth worker) 등이 젊은이들과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시민의식과 자원봉사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짐
젊은이정보문서 센터(CIDJ: Centre d'information et de documentation pour la jeunesse)	청년 워크숍과 시민권과 봉사 활동 프로그램	젊은이 워크숍을 수행하고 시민권과 봉사활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정보 제공 및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CIDJ는 프랑스의 국가교육·젊은이·체육부(이하 MEJS, Le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에서 지원하는 정책 전달체계이자 여러 지역 사회 기관들의 네트워크 연합체로 전국적으로 1,300개소 운영 중 대표적인 원스톱(One-stop) 서비스기관으로 취업, 창업, 교육, 생활, 참여 등 다양한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 정보와 문서 작성을 제공 CIDJ에 방문한 아동, 청소년, 청년들이 특정한 주제에 대해 제안한 워크숍이 진행되며 한 해에 100개 이상의 워크숍이 전국적으로 진행됨 이곳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중에서 아동, 청소년, 청년의 생활(Vie quotidienne) 관련 프로그램에는 시민권과 봉사활동(Citoyenneté & Volontariat)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

* 출처: 김기현(2022: 38-40), 좌동훈, 김지수, 변주영(2021: 171-176).

이어서 프랑스의 정책전달체계인 젊은이정보문서센터(CIDJ: Centre d'Information et de Documentation pour la Jeunesse)는 국가교육·젊은이·체육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전달체계이자 여러 지역사회 기관들의 네트워크 연합체로 전국적으로 1,300개소 운영 중이다. 이곳은 대표적인 원스톱(One-stop) 서비스기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취업, 창업, 교육, 생활, 참여 등 다양한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 정보와 문서 작성 등을 제공하고 있다. CIDJ에 방문한 아동, 청소년, 청년들이 특정한 주제에 대해 제안한 워크숍이 진행되며 한 해에 100개 이상의 워크숍이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다(김기현, 2022: 38-40). 이곳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중에서 아동, 청소년, 청년의 생활(Vie quotidienne) 관련 프로그램에는 시민권과 봉사활동(Citoyenneté & Volontariat)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이어서 핀란드는 청년 정치 참여가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는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잘 보여준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1998년부터 시작된 젊은이 의회(Nuorten Parlamentti)는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의회 클럽 활동을 총화하는 자리로 지역별 젊은이 대표가 모여 핀란드 의회에서 질문과 제안을 하는 젊은이 참여기구이다(서현수, 전현진, 박유빈, 2022: 78-84).

표 V-20. 핀란드의 젊은이(아동·청소년·청년) 관련 참여·권리 프로그램 현황

구분	개요	내용
젊은이 의회(Nuorten Parlamentti)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의회 클럽 활동을 총화하는 자리로 지역별 젊은이 대표가 모여 핀란드 의회에서 질문과 제안을 하는 젊은이 참여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이 의회(Nuorten Parlamentti)는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의회 참여 클럽 활동을 총화해 전국 단위에서 지역 대표들이 의회에 모여 의사당에서 의회 의장 주재아래 총리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질문과 제안을 하는 젊은이 참여기구 • 지역의 젊은이 대표는 지역 선거구별로 투표를 통해 선발하며 핀란드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질 질문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출한 후 2주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일반 청년들의 투표로 질문을 결정함 • 핀란드의 공용방송에 생중계가 이루어지며 각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질문과 더불어 젊은이들이 제안한 의제에 대한 토론과 투표가 이루어짐
젊은이 선거(Nuorisovaalit)	투표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제 선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학교에서 투표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이 선거(Nuorisovaalit)는 1960년부터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젊은이단체 연합(Allianssi)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회, 지자체, 대통령, 유럽의회 선거가 이루어질 때 동일한 후보에 대해 실제 선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투표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선거를 실시하는 프로그램 • 2019년 실시된 젊은이 선거를 보면, 21개 광역 선거구의 877개 학교 재학생 중 48.0%인 62,935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투표 결과는 공용방송에서 생중계로 이루어지며 각 정당에서 투표 결과에 대한 논평을 발표함

* 출처: 서현수, 전현진, 박유빈(2022: 78-84).

지역의 젊은이 대표는 지역 선거구별로 투표를 통해 선발하며 핀란드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질 질문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출한 후 2주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일반 청년들의 투표로 질문을 결정한다. 핀란드의 공용방송에 생중계가 이루어지며 각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질문과 더불어 젊은이들이 제안한 의제에 대한 토론과 투표가 이루어진다.

이어서 젊은이 선거(Nuorisovaalit)는 투표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제 선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학교에서 투표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선거는 1960년부터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젊은이단체연합(Allianssi)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회, 지자체, 대통령, 유럽의회 선거가 이루어질 때 동일한 후보에 대해 실제 선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투표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선거를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2019년 실시된 젊은이 선거를 보면, 21개 광역 선거구의 877개 학교 재학생 중 48.0%인 62,935 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투표 결과는 공영방송에서 생중계로 이루어지며 각 정당에서 투표 결과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였다.

5. 요약 및 시사점

이 장에서는 법률과 중앙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 정책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어서 해외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법률과 관련하여 「청년기본법」을 살펴본 결과, 국가, 지자체 책무로 청년 참여 또는 의견 수렴 보장과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에 대한 조치가 명시되어 있었다. 이것은 청년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다만, 제안단계와 더불어 진행단계, 결정단계에서도 청년 참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다른 국가들처럼 대의제 방식의 참여 자격 등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청년참여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고 공직선거법상 18세로 낮아진 선거 연령이 청년 연령 규정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를 살펴본 결과, 부처별로 청년참여 조직을 운영 중인데 부처를 뛰어넘는 국가적 사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부처 간 참여기구의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청년정책조정위와 같은 총괄조정기구와 부처별로 구성된 청년참여기구 간에 연계도 미흡했는데 총괄조정기구의 당연직으로 참여기구대표가 참여하는 방식의 제도화가 필요해 보인다. 현재 총괄조정기구인 청년정책조정위 산하에는 실무위와 전문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정책 추진체제와 관련하여 주관부처인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이 없어 이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년 참여와 권리 예산은 1%가 안되는 수준으로 확대가 필요해 보이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의 전달체계를 연계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국회의 경우 청년 참여제도가 없는데 이 역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자체를 살펴본 결과,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참여와 권리 예산 비중은 1.7%로 매우 낮아 이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중앙과 지자체 간 연계가 부족한 만큼,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간의 연계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청년센터의 경우 지역 간에 역할과 기능이 제각각이며 청년매니저들의 처우도 열악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해외 사례를 살펴본 결과, 국제기구들은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참여와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참여와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청년 참여와 관련하여 청년 대표의 권한 강화를 강조하는 한편, 선발과정에서 대의성과 대표성을 강조하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온라인 참여 등을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어 이 역시 정책 추진 시에 강조할 필요가 있다. 청년정책 전달체계인 청년센터는 정책을 전달하는 주체이자 지역사회의 청년 플랫폼으로 민주적인 논의와 공론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우리나라 역시 청년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참여와 권리를 강조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는 국가별로 미국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과 참여예산제를, 프랑스의 경우 지자체 청년센터를 통한 시민교육과 시민참여를, 핀란드의 경우 입법부 차원의 참여 모델과 투표권이 없는 시기부터 모의 선거 등을 통해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는 모델 등을 참고해 청년 참여와 권리 정책을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제6장 정책제언

- 1. 청년 시민권과 참여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과정
- 2. 청년 시민권 및 참여 정책
방향과 정책과제(안)
- 3. 청년 사회 첫 출발
정책추진 로드맵 및
정책방안 종합

1. 청년 시민권과 참여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과정

이 연구에서는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와 청년 심층면접, 2차 분석, 국·내외 청년 시민권 및 참여 정책 분석을 토대로 청년 시민권과 참여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먼저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얻었다. 실태조사는 성인기 진입과 시민권, 교육 및 훈련 영역, 경제 및 고용 영역, 주거 및 건강 영역, 참여와 권리 영역 등 다섯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성인기 진입과 시민권 관련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년기를 가능성이나 탐색의 시기로 볼 수 있도록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청년정책은 국제적으로 성인기 이행 정책으로 우리나라 역시 성인기 이행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 가장 핵심적인 정책 대상으로 20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청년의 자립과 관련하여 경제적 자립을 가장 중시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청년의 권리 중에서 정치적 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사이버공간에서 인권 침해가 가장 심하며 차별 중에서 성차별과 외모, 신체조건에 대한 차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 이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교육과 훈련 실태를 통해 대학단계에서 학생선발과정에서의 차별 시정이 중요하고 대학 인권센터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인권교육 강화가 필요하며中等교육단계에서부터 인권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제와 고용실태에서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취업한 청년에게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미취업 청년의 진로 설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주거 및 건강과 관련하여 청년의 주거권 강화가 필요하고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위험 신호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참여와 권리와 관련하여 온라인 참여 확대와 정치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시민교육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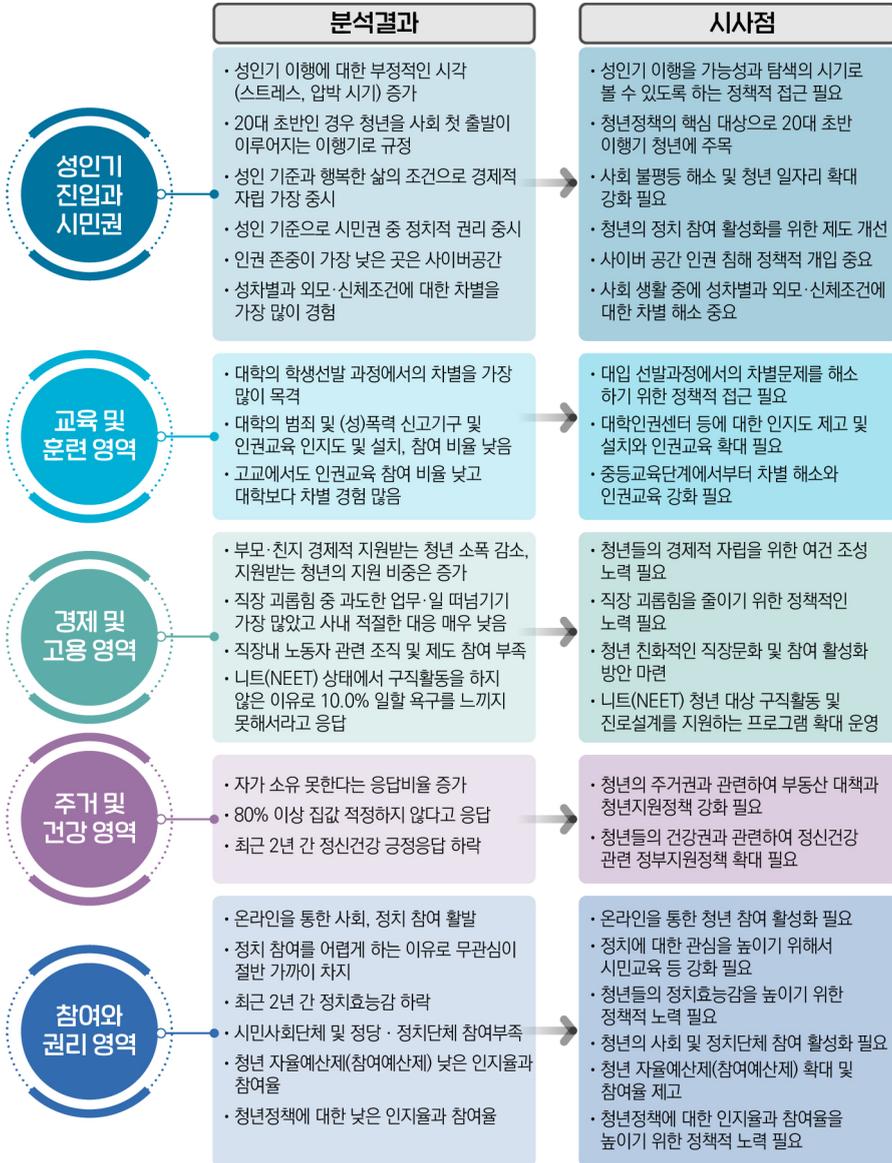


그림 VI-1.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정책적 시사점

이어서 이 연구에서는 청년들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에서 청년들은 경제적인 자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심층면접에서 이를 매우 어려운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시민권 중에서 실태조사에서 정치적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개인적 권리와 경제적 권리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청년들 간의 경쟁 심화로 인해 기회나 자원의 배분에 대한 공정성이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적으로 청년층의 요구를 단순화하기보다 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교육과 훈련 영역에서 심층면접에 참여한 청년들은 공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시민교육이 필요하고 이러한 교육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참여와 교류를 통해 이루어질 때 효과적이라고는 점을 강조하였다. 교육 현장의 차별과 관련하여 기존의 성차별과 함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역시 일방향의 정책 기조보다는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경제 및 교육 영역에서 노동현장의 보편적인 안전과 권리보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과 근무시간과 일반 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채용과 관련해서는 블라인드 채용이 고용차별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주거 및 건강 영역에서 청년주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확대와 청년 정신건강 지원이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참여와 권리 영역에서 청년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정책 전달체계의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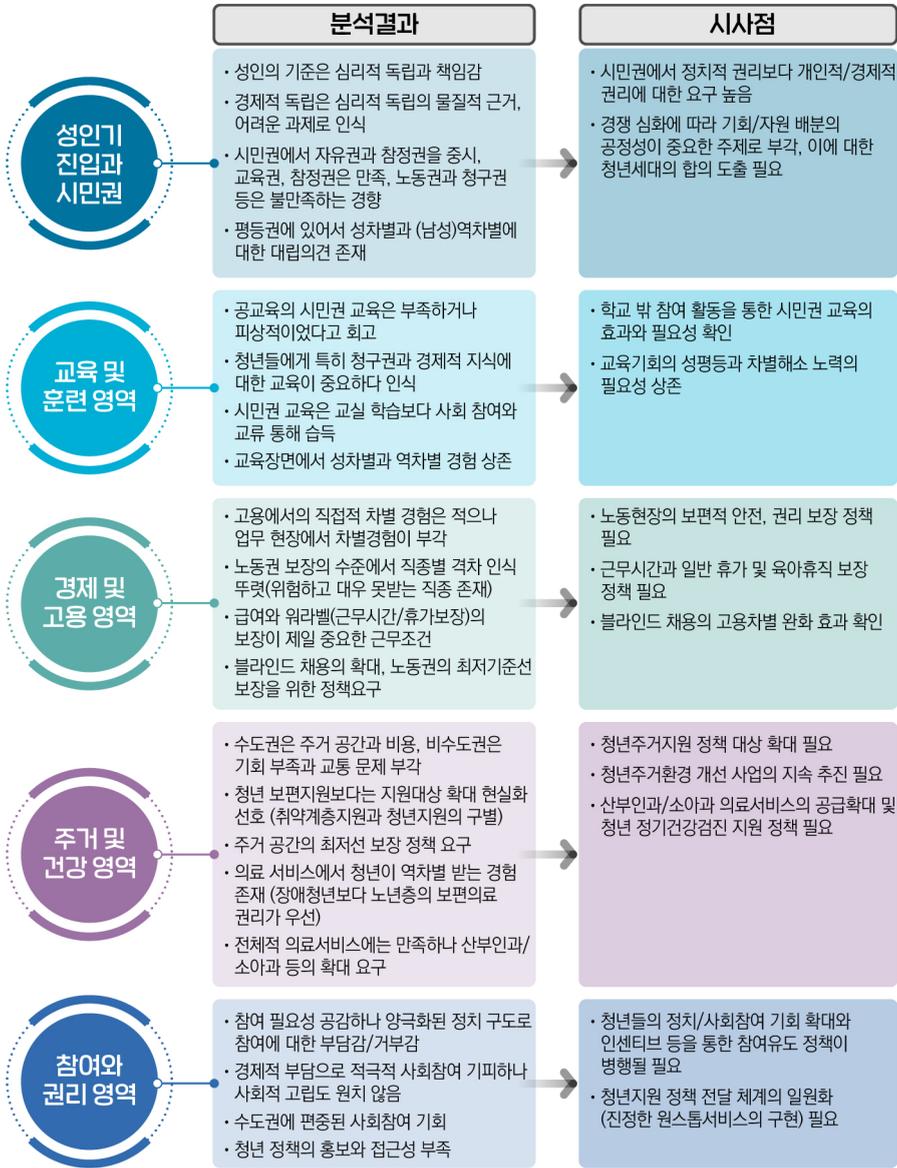


그림 VI-2. 청년 심층면접 결과 정책적 시사점

다음으로 2차분석을 통해 얻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뉴스 기사에 대한 토픽 모델링 분석에서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왔음을 확인하였고 특히 청년 시민권과

참여 관련 정책적인 접근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지자체 청년 정책에 대한 논의와 저출생 및 수도권 청년 인구 집중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어 지자체 중심으로 청년정책 거버넌스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청년정책에서 청년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세계가치조사를 이용해 국가별로 청년 참여와 권리 유형을 군집분석을 통해 파악한 결과, 청년들의 사회 및 정치 참여 활성화를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공식적, 공적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여가권에 심층분석 결과를 통해 청년들의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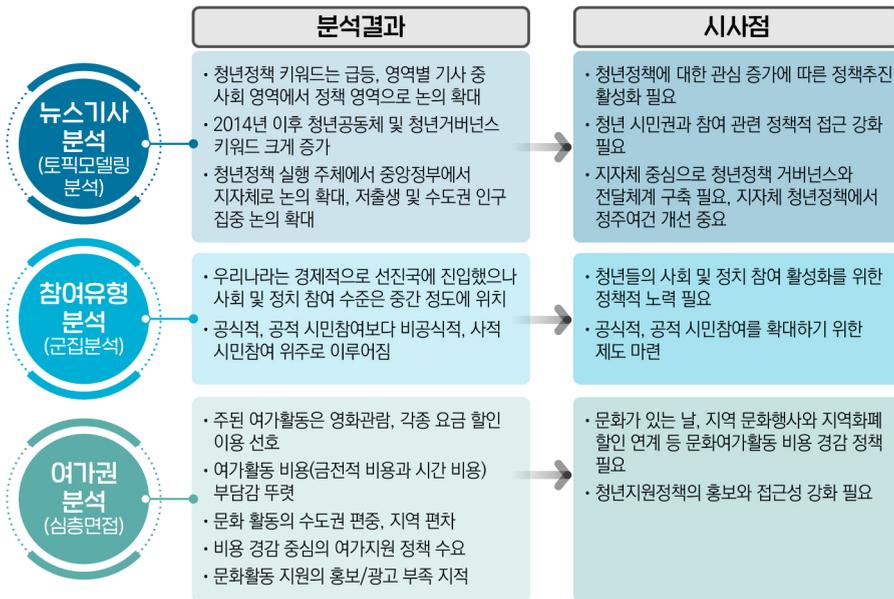


그림 VI-3. 청년 2차분석 결과 정책적 시사점

이어서 국내·외 정책 추진 현황을 통한 시사점을 정리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법률과 관련하여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참여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 제안만이 아니라 정책 전반에 대한 참여활성화와 18세로 청년 하한 연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중앙정부에서는 부처별로 나누어진 청년참여 조직 간의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고 청년정책조정위와 청년참여기구 간에 연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총괄조정기구인 청년정책조정위와 실무위, 전문위 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정립도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을 두는 것과 청년 참여와 권리 예산 확충, 그리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의 전달체계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국회에 청년 참여제도를 두는 것 역시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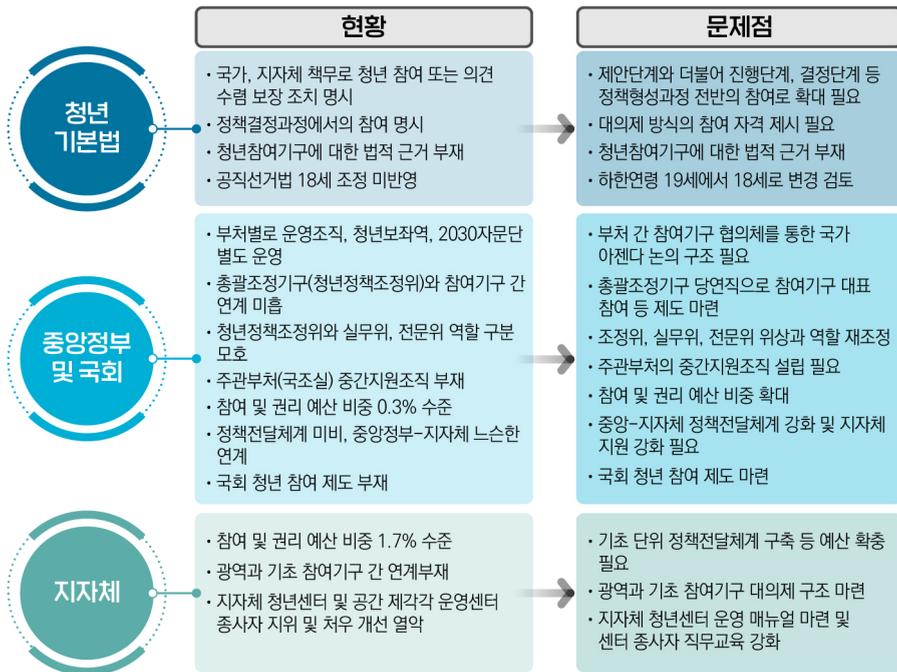


그림 VI-4. 청년 관련 법률 및 정책 현황 및 문제점

지자체와 관련하여 참여와 권리 예산을 확충하고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의 연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청년정책 전달체계인 지자체 청년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어느 정도 표준화하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청년매니저들의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해외 사례를 통해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기구들과 관련하여 청년정책에서 참여와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청년 참여와 관련하여 대표성과 대의성을 갖춘 참여 대표 선발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동시에 청년정책 전달체계인 청년센터가 청년들의 참여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청년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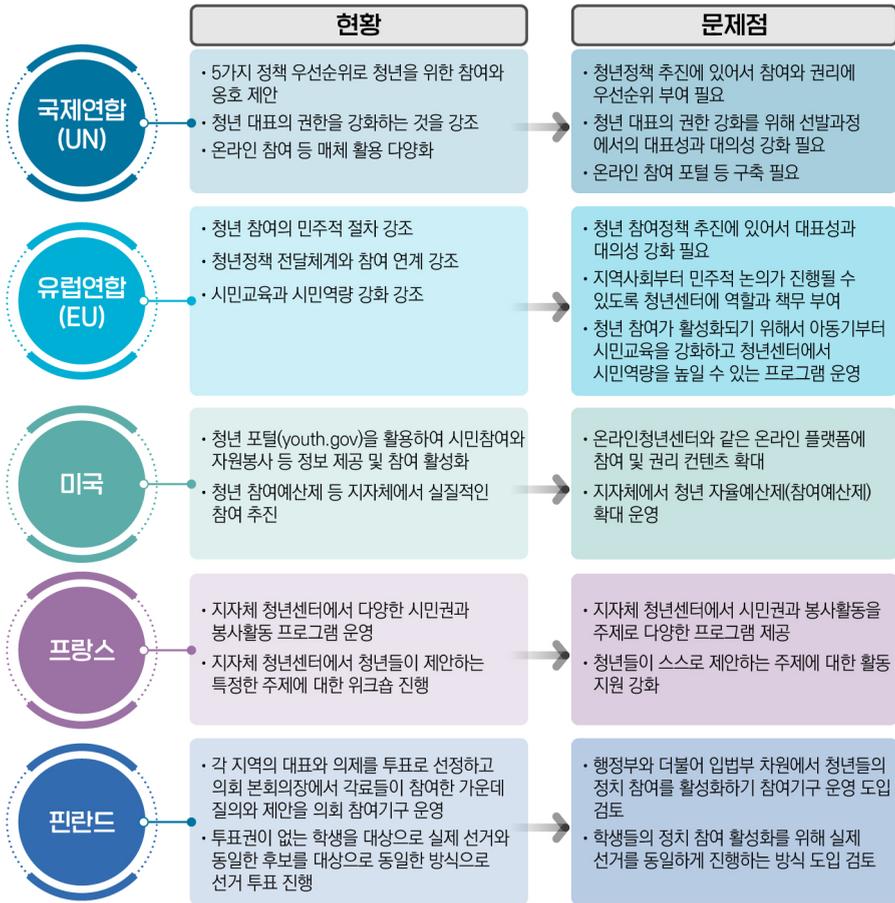


그림 VI-5. 청년 관련 해외사례 시사점

해외사례분석에서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과 참여예산제를, 프랑스의 지자체 청년센터를, 핀란드의 청년의회와 청년 선거 등과 같이 청년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청년 시민권 및 참여 정책 방향과 정책과제(안)

이 연구에서는 실태조사와 심층면접, 2차 분석과 국·내외 정책 분석을 토대로 세 가지 청년 시민권 및 참여에 대한 정책방향(안)과 10가지 정책과제(안)을 도출하였다. 세 가지 정책 방향은 청년 주도적 접근, 청년 맞춤형 접근, 청년 친화적 접근 등이다.

청년 주도적 접근은 청년의, 청년을 위한 정책 추진을 넘어서 청년에 의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며 청년 참여와 권한 강화가 정책 추진의 핵심적인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 것이다. 이것은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에서 3대 원칙 중 하나(참여와 주도)로 제시된 바 있으며 참여·권리 영역의 정책방향으로 제시된 “청년의 삶을 청년이 직접 결정합니다”에서도 상징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제연합과 유럽연합은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참여와 권한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청년 주도성은 청년 시민권과 참여 정책 추진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정책 방향은 청년 맞춤형 접근이다. 청년 내부의 이질성이 큰 상황에서 청년 시민권과 참여 정책을 추진할 때 청년 맞춤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인구학적인 측면에서 남녀간에, 연령집단간에, 소득계층간에, 학교에 다니는지, 직장에 다니는지, 미취업자로 취업을 준비 중인지에 따라 청년의 이해와 요구가 달라지며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맞춤형 접근은 정책 추진에 있어서 성인기 이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전제로 한다. 성인기 이행에 대한 지원과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출 때 성인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별 정책과의 차별화가 가능해지며 대상별 맞춤형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정책 방향은 청년 친화적 접근이다. 청년의 권리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년의 생활 공간이 청년 친화적으로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으로 학교를 다닐 때, 직장인으로 직장을 다닐 때, 미취업자로 학원을 다니거나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 지역사회에서 주민으로 생활할 때, 사이버공간에서 검색이나 의견 개진, 사람들과의 소통을 진행할 때 청년들은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차별을 경험할 수 있다. 청년들이 다양한 생활 공간에서

권리를 존중받고 차별적인 경험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체로서 의사를 개진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자신에게 주어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VI-6. 청년의 시민권과 참여 정책방향과 과제(안)

정책과제(안)은 분석틀로 활용했던 5가지 영역별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성인기 진입과 시민권은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위한 법과 제도, 그리고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것으로 청년의 시민권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과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통한 청년의 시민권과 참여 활성화 등 두 가지 정책과제(안)을 제시하였다.

교육 및 훈련 영역에서는 학교 차별 해소 및 참여·시민역량 강화를 위해 중등·고등교육 기관 차별 해소 및 인권교육 강화와 학교 참여 활성화 및 시민교육 강화를 제안하였다. 경제 및 고용 영역에서는 일자리 차별 해소 및 경제적 자립 여건 조성을 위해 직장 내 차별 해소 및 법·제도 운영 강화와 청년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및 참여제도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주거 및 건강 영역에서는 청년 주거권 강화 및 건강 지원 확대를 위해 청년 주거 마련 및 주거비 지원과 주거 환경 개선과 청년 신체 및 정신건강 지원 확대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권리 영역에서는 정책 참여 재구조화 및 정치효능감 강화를 위해

청년 참여기구의 대의성, 대표성 강화 및 정책 전반에 걸친 청년의 실질적 정책 참여 확대를 제안하였다.

1) 교육 및 훈련 정책과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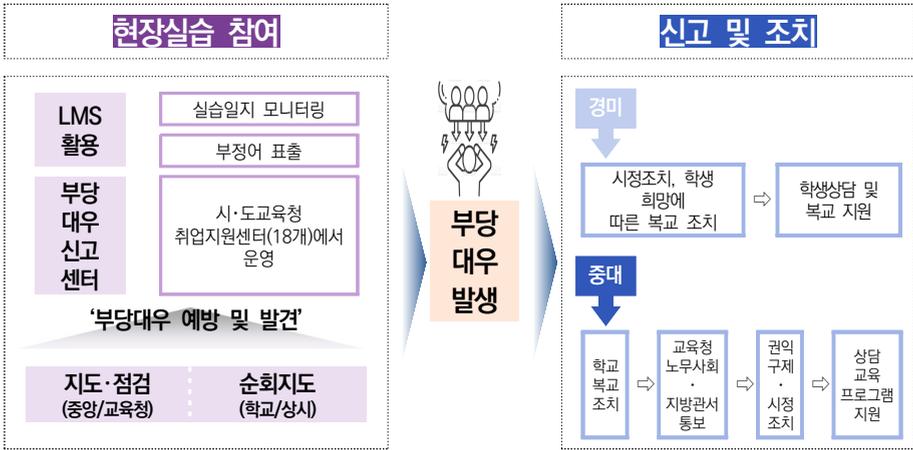
(1) 중등·고등교육기관 차별 해소 및 인권교육 강화

가. 추진배경

청년의 시민권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단계에서부터 차별을 해소하고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등교육단계에서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인권교육을 통해 사회에 진출한 이후에도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파악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시민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직업계고의 경우 학생신분이자 현장실습생으로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 고등교육단계에서는 대학인권센터 등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이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인권교육에 대한 참여율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대학인권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인권센터 운영에 있어서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나. 세부추진과제(안)

세부추진과제(안)로는 세 가지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먼저 중등교육단계에서 학생 인권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학교급별 교육목표에 인권교육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자체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초·중등교육법」에 선연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학생 인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교권이 쟁점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에서 인권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23. 10. 19). [설명자료]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사고·권익침해 예방 및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림 VI-7. 현장실습생 피해 구제 및 상담지원 체계

이어서 중등교육단계에서 직업계고의 현장실습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나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향신문의 보도(2023.10.19.)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직업계고 현장실습 과정에서 산업재해와 권익침해를 당한 현장실습생은 2018년 7건에서 2022년 44건으로 늘어났다. 5년 간 현장실습 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우가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대우가 27건, 성희롱 등이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교육부에서는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관계부처 합동, 2023c)을 마련하고 현장실습생에 대한 피해구제 및 상담지원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실습생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의 중앙취업지원센터와 시도교육청의 취업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생에 대한 부당대우신고센터를 운영 중인데 중앙취업지원센터에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고 시도교육청의 취업지원센터 역시 인력과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김기현, 유민상, 김창환, 정지운(2019)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센터의 예산이 취업지원센터보다 10배 가까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동시에 현실적으로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소속 학교 전체를 관할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점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대학의 현장실습과 인턴십은 직업계고의 현장실습보다 안전사고나 부당대우 문제가 덜 심각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2021년에 새롭게

고시한 교육부의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2021)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어서 현장실습 내실화와 관련하여 현장 점검을 위한 학교 전담 공인노무사 위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에서는 2023년 800명인 학교전담 공인노무사를 2024년 1,00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보다 체계적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대학인권센터가 법률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22년 9월 기준으로 인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25.6%(101개교)에 이르고 있다. 대학인권센터는 법률에 따라 모든 대학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을 내실화해 학생들이 인권 침해 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인권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사건 심의 단계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의무화한 곳은 65개소로 149개 대학 중 45.0%에 그쳤다(임희성, 2023).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인권센터 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의무화(학생위원 최소 2인 이상, 전체 중 3/10 이상)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곳이 24개소에 이른다. 대학인권센터에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학생 참여에 대한 부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참여를 강화하는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중등교육기관 학생 인권교육 강화
-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안전 및 권익 보호 강화
- 대학인권센터 운영내실화 및 학생 참여 강화

다. 법적 근거 및 법률 제·개정

중등교육과 관련하여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의 제18조의4에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되어 있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법제처 법령정보센터, 2023d).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인권센터를 학교 조직으로 두는 부분은 고등교육기관을 다루는 「고등교육법」에서만 다루고 있다(법제처 법령정보센터, 2023e). 시도교육청별로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 등에서는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참여단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중등교육 단계에서 학생 인권 보장과 관련하여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직업계고 현장실습과 관련된 부분이다. 현장실습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였고 현장실습생의 권익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의 조항을 추가해 준용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2023년 3월에 개정되었다(법제처 법령정보센터, 2023f). 이에 따라 현장실습생에게 부당한 처우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업체에 과태료를 지급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과 관련하여 인권센터의 설치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교직원, 학생 등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 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해 의무화되었다. 대학에서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응하는 인권센터의 설치 역시 이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과 관련된 포괄적인 법적 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국가가 성희롱과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여성폭력에 대한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라. 추진예산

중등교육과 관련하여 현장실습과 관련된 부당처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취업지원센터와 시도교육청의 취업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부에서 제출한 시행계획을 보면,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 내실화 과제의 예산이 2022년 대비 2023년에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서 현장실습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VI-1. 교육부 학생 차별 해소 및 인권교육 관련 예산 현황(2022-2023년)

구분	과제/사업	2022년 (백만원)	2023년 (백만원)	증감 (백만원)
중등교육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2,200	2,200	0
	(청년)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 내실화	46,200	40,200	△6,000
고등교육	대학 인권센터 확산지원 사업	500	800	300
	대학 내 양성평등 확산 및 성희롱 성폭력 근절 지원	391	491	100
	(청년)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비예산)	-	-	-

* 자료: 교육부(2023). 교육부 2023년도 예산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관계부처 합동(2023a).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출처가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시행계획 자료인 경우에는 (청년) 명기했으며 2022년 예산은 본예산이며 2023년 예산은 정부안인 아닌 확정 예산임.

대학인권센터 예산은 2022년 대비 2023년 증액되었는데 현재 인권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학에 인권센터를 두도록 좀 더 독려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설치율을 매년 10%씩 늘리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교육부, 2023).

(2) 학교 참여 활성화 및 시민교육 강화

가. 추진배경

청년의 시민권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단계에서부터 학생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등교육단계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서 의사를 개진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며 사회에 진출한 이후에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등교육단계에서는 학생들이 교내에서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평생학습단계에서는 주거나 금융, 소비생활과 같은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나. 세부추진과제(안)

세부추진과제(안)로는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과 중등교육단계에서의 인성교육 및 시민교육 강화, 주거, 금융, 소비 등 생활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평생학습 활성화 등이다. 학생자치활동 법률 개정 부분은 법 개정을 제시한 부분에 상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현재 시민교육 및 인성교육은 교육부에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인 인성교육과 「교육기본법」 제2조의 교육이념에 기초해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 추진 중인 시민교육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인간상 중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 협력을 실천하는 사람”이 제시되었다(교육부, 2022a: 5). 이와 관련 교육과정에는 핵심역량으로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개방적·포용적 가치와 태도로 지속 가능한 인류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을 갖추는 것이 제시되었다(교육부, 2022a: 6). 인성교육에 대한 정의는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의 정의에 제시되어 있는데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법제처 법령정보센터,

2023g). 제2조에는 필요로 하는 역량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는데 의사소통능력과 갈등해결능력이 이에 해당한다.

국제적으로 볼 때 사회적 역량은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이며 시민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괄적인 시민교육과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키우는 인성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역량중심 교육과정 개편과도 맞물려 있으며 교과 중심의 암기식 교육보다는 역량 중심의 실천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평생학습 차원에서 청년에 대한 시민교육과 생활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 소비와 같은 경제교육과 주거 관련 교육 등 실생활에 필요한 실용적 학습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정규교육에서 이 부분은 범교과 학습 주제에 포함되어 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는 이에 대해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등을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22a: 15).

2022현재 평생교육 주제별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시민권과 참여에 해당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은 0.1%에 불과하고 참여자 비율역시 같은 0.1%로 나타나고 있다(교육부, 2022b: 41). 김종국(2023)에 따르면, 금융교육의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이 2022년에 1,608명을 지원하는데 그쳤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금융교육 역시 1,688명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전국지역경제교육센터에서 운영 중인 경제교육은 2023년 244,870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으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2022년 고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2022a)에서 「일간과 경제활동」 과목은 「경제」 과목과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마련되는 등 이론적이거나 일상생활과 거리가 먼 내용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 분야에 대한 선택은 수능에서의 불리함과 어려운 내용 등으로 인해 외면 받고 있다. 학교 내에서 경제나 금융 교육 등이 실생활과 연결되어 체험과 토론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학생자치활동 관련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
- 중등교육단계에서 시민교육 및 인성교육 강화
- 주거, 금융, 소비 등 생활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평생학습 활성화

다. 법적 근거 및 법률 제·개정

학생의 참여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의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조항으로 학생의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법제처 법령정보센터, 2023d). 교육부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개정 방안을 2018년 민주시민교육 대책에서 내놓은 바 있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학생회를 법적 기구로 명시하고 학생회에 대한 지원과 운영,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표 VI-2.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 - 학생 자치활동 구체화

법률	현행조항	개정(안)	부처
초·중 등교 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7조(목적) ①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된다. ② 학생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에 학생회를 두며 학생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의 장 또는 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회 설립·운영에 필요한 공간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교육부 (학교교수 학습혁신 과·대학 규제혁신 총괄과)
고등 교육 법	제12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상동	

* 자료: 법제처 법령정보센터(2023d; 2023e), 2023년 10월 4일 접속.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2018: 23)

라. 추진예산

교육부에서는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을 분리해서 예산 집행을 하고 있는데 두 예산 모두 2023년 감액되었다. 사회통합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으며 사회적 역량을 갖춘 인재가 필요한 상황에서 해당 분야의 예산을 최소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청년정책기본 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으로 각 부처에서 제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경제나 소비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 제출한 과제는 금융교육협의회 운영 개최에 관한 것으로 실제로 경제 및 금융교육이 이루어지는 금융감독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투자협회 등의 실적을

취합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관계부처 합동, 2023a).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청년 소비자리더 아카데미는 전국 16개 대학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9월에서 10월까지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대상과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표 VI-3. 중앙부처 시민교육 관련 예산 현황(2022-2023년)

구분	과제/사업	2022년 (백만원)	2023년 (백만원)	증감 (백만원)
교육부	인성교육진흥사업	417	393	△24
	학교 시민교육 활성화 사업	1,800	1,400	△400
금융위	(청년) 청년 금융교육 지원(비예산 사업)	-	-	-
공정위	(청년) 청년소비자 역량 제고 및 디지털 디바이스 해소	847	847	0

* 자료: 교육부(2023), 교육부 2023년도 예산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관계부처 합동(2023a),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출처가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시행계획 자료인 경우에는 (청년) 명기했으며 2022년 예산은 본예산이며 2023년 예산은 정부안이 아닌 확정 예산임.

2) 경제 및 고용 정책과제(안)

(1) 직장 내 차별해소 및 법·제도 운영 강화

가. 추진배경

경제와 고용 영역에서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에서 차별을 해소하고 이를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법,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채용과정이나 직장 내 차별 문제는 청년 친화적인 일자리를 조성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 취업자들을 위한 노무 상담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세부추진과제(안)

세부추진과제(안)로는 채용과정에서의 차별 해소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사후 조치 강화, 그리고 청년 노무 상담 강화와 노동옴부즈만 실시 등 3가지를 제시하였다. 먼저 채용과정에서의 차별 해소는 청년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로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블라인드 채용이 2017년 도입된 이후 채용과정에서 공정한 절차와 기준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는 변화가 이루어졌으나 몇 가지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직무 분야에 따라서 출신 학교와 전공분야, 실적을 비롯해 출신 경력 등을 보지 않고

선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블라인드채용 가이드라인을 새로 발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2). 이 중에서 신체적 조건이나 학력 등은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가이드라인에는 예시로 특수경비직을 채용할 경우 시력이나 신체 능력을 요구할 수 있고 연구직 등을 채용할 경우에 논문이나 학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학력이나 경력은 차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학교명이나 직장명 등을 공정하지 않은 요소로 두는 것은 장기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사후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3년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는 전국에 10개소가 운영 중이며 법률 및 심리상담 제공을 비롯한 피해자 지원은 1만 5천 건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3a: 723). 그런데 실제 상담 연결이 잘 되지 않고 센터 당 하루 상담 인력이 2명에 그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JTBC, 2023.05.01.). 해당 예산은 2022년 대비 2023년 2천 만원 가량 오른 것이 전부여서 지원인력에 해당 확충과 예산 확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 옴부즈만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제 역시 청년 핵심정책 추진과제에서 제안되었으나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김기현, 신동훈, 변금선, 고혜진, 신인철, 2020: 227-229). 청년 관련 각 부처 시행계획에서 관련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 중인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운영 등이 있다. 그런데 두 센터 모두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제가 발생한 청년들은 직장 내 괴롭힘 센터를 노동분쟁이 발생했을 때 체불일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법률적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부당해고와 비정규직 차별 관련해서는 노동위원회를,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야 한다. 청년 근로권익을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센터를 두거나 기존의 고용노동관서에 청년전담조직을 구성해 실질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접근 중에서 기업 내부에서 조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개인적으로 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노동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서울시의 모든 민원이 집중되어 이루어지는 다산콜센터에 노동 권익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에는 노동옴부즈만으로 공인노무사를 통한 노무상담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델을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 채용과정에서의 차별 해소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사후 조치 강화
- 청년 노무 상담 강화와 노동 ombudsman 실시

다. 법적 근거 및 법률 제·개정

이 과제 추진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채용상 차별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에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권리 침해와 관련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 장시간 근로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같은 법의 제64조에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고용 상 차별과 관련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라. 추진예산

이 과제와 관련된 예산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의 경우 근로조건개선지원, 고용상차별 개선지원,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공공부문 고용개선 지원사업, 근로감독역량강화 등이 있으며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제출한 과제로는 공정채용문화 확산, 일방적 채용취소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강화, 근로감독 강화, 청년 아르바이트 원스톱 권리 구제 등이 있다. 이 과제 중에서 2022년 대비 2023년 예산이 감액된 경우는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과 공공부문 고용개선 지원사업 등이다. 근로 권익을 보호하는 예산은 규모가 크지 않고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어서 최소한 예산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여성가족부 예산은 청년 직장 성폭력 근절과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운영 등이 있다. 2022년 대비 2023년 예산은 줄지 않았는데 2024년 여성가족부 정부예산안을 보면 전액 삭감되었다. 이 역시 최소한 예산 규모가 유지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 VI-4.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의 차별 해소 관련 예산 현황(2022-2023년)

구분	과제/사업	2022년 (백만원)	2023년 (백만원)	증감 (백만원)
고용노동부	근로조건개선지원	15,618	16,675	857
	고용상차별개선지원	4,228	4,288	60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2,846	2,480	△366
	공공부문 고용개선 지원사업	1,489	1,421	△68
	근로감독역량강화	11,059	11,175	116
	(청년) 공정채용문화 확산	1,016	3,471	2,455
	(청년) 일방적 채용취소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	1,125	1,125	0
	(청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강화	824	842	22
	(청년) 근로감독 강화	155	155	0
	(청년) 청년 아르바이트 원스톱 권리 구제	240	1,000	760
여성가족부	(청년) 청년 직장 성폭력 근절	1,592	1,592	0
	(청년)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운영	1,260	1,273	13

* 자료: 고용노동부(2023). 고용노동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사업설명자료. 관계부처 합동(2023a).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출처가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시행계획 자료인 경우에는 (청년) 명기했으며 2022년 예산은 본예산이며 2023년 예산은 정부안이 아닌 확정 예산임.

(2) 청년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및 참여제도 활성화

가. 추진배경

경제와 고용 영역에서 두 번째 과제는 청년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및 참여제도 활성화이다. 차별 해소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라면 이 과제는 좀 더 청년들이 직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부분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청년들이 어렵게 취업하고도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으며 그만두는 이유 중 하나는 경직적인 조직문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좀 더 친화적인 직장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직장문화를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나. 세부추진과제(안)

세부추진과제(안)로는 청년친화기업 인증제 법제화, 사내민주주의 강화 및 직장참여제도 활성화, 일-생활 균형 일자리 환경 조성 등이다. 첫 번째 과제는 청년 친화적인 기업에 대한 인증과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 과제는 청년 핵심정책 추진과제에서 제안한 바 있으나 법제화로 이어지지 못했다(김기헌 외, 2019: 329-332). 이것은 일본에서 청소년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青少年の雇用促進等に関する法律)을 통해 추진 중인 우수 중소기업 인증제도(youth yell)를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하는 것이다. 이것은 학교를 졸업하는 청년에게 자신에게 어울리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수한 중소기업을 정부가 인증하고 안내하는 한편, 기업에서는 채용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 사업의 근본적인 차이는 채용정보의 공개와 거짓정보를 올렸을 때 이에 따른 제재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기업의 얻는 혜택은 일본의 엘 제도나 우리나라의 청년친화강소기업이나 큰 차이는 없는 상황이다.

부처마다 제각각의 추진 중인 각종 우수 기업 선정 사업을 통합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추진 중인 교육부의 선도기업 선정 외에 노사문화우수기업, 녹색기업, 우리지역 일하기 좋은 기업 등 각종 우수 기업 선정 사업을 통합하거나 각자 운영하더라도 하나의 플랫폼에서 동시에 제공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과제는 사내민주주의 강화와 직장참여제도 활성화이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와 더불어 다양한 조사에서 청년들이 직장 내의 다양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사내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삼성디스플레이, LG전자나 금호타이어, 유플러스 등 대기업과 서울교통공사, 한국가스공사, 부산관광공사 등 공기업의 사무연구직 중심으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등장하기도 했다. 현재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에서 청년 친화적인 직장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과제를 각 부처에서 제시하였으나 이 문제에 관한 정책과제를 제안한 부처는 없었다. 고용노동부에서 직장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과제는 일-생활 균형 일자리 환경 조성이다. 청년들은 근로시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일-생활 균형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 친화적인 직장 환경 조성에서 일-생활 균형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

정책 시행계획에 정책과제로 ‘청년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확산’을 제안하고 있다. 이 과제에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과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3a: 681-685).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은 회사의 노동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할 경우 회사에게 간접노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은 회사의 노동자에게 주당 소정근로시간 단축 시에 이를 회사에서 수용하여 운영할 경우 회사에게 임금감소에 따른 보전금을 지원하고 간접노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제도는 2015년 당초 시간선택제(part-time)나 2016년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된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사업들은 일-생활 균형 일자리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주4일제 근무나 완전 유연근무제와 같은 좀 더 파격적인 조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청년친화기업 인증제 법제화
- 사내민주주의 강화 및 직장참여제도 활성화
- 일-생활 균형 일자리 환경 조성

다. 법적 근거 및 법률 제·개정

청년 채용 과정에서 청년 기업 인증제 도입과 채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관한 법률」이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다룰 수 있는데 일본에서도 청년에 국한해서 법 적용이 이루어지는 법률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신설 조항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설조항으로는 학교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채용을 할 경우 우수 사업체 인증을 받고 대통령령으로 채용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른 사업체 인센티브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불이익에 관한 사항도 법률에 담는 것이 필요하다.

표 VI-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 청년 친화강소기업 인증

법률	현행조항	개정(안)	부처
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	<신설>	신설조항 1(학교졸업예정자 채용 우수 사업체 인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체 신청에 근거해 해당 사업체가 학교졸업예정자의 모집과 채용, 직업능력개발, 사내 복지 정도가 우수함을 인증할 수 있다. ② 인증 사업체의 구인자는 학교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채용을 실시할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인증 사업체의 구인자는 학교 졸업예정자 등이 채용정보를 요구할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인증 사업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증사업체 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 추진 사업 참여에 대한 혜택과 학교졸업예정자의 모집과 채용, 직업능력개발, 사내 복지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⑤ 인증 사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하 중 하나라도 위반할 시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

* 자료: 김기현, 배정희, 김창환, 성재민(2021: 331)

라. 추진예산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환경 개선과 관련된 예산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외에 일과 학습 균형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과 능력중심 및 블라인드 채용, 출산과 육아 참여권리 보장 등이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3년 예산에서 해당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공공부문 고용개선 지원사업, 일터혁신지원 등이다. 일터혁신지원은 2022년 대비 2023년에 증액되었으나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과 공공부문 고용개선 지원사업은 감액되었다. 특히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은 2022년 15,525백만 원에서 2023년 9,180백만 원으로 6,345백만이 삭감되었다. 이 사업 중에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구축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청년들의 직장 내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적인 사업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한 사업은 크지 않은 소액 정책사업들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만약 청년친화강소기업 사업이 인증제로 범제화된다면 보다 많은 예산 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기현, 배정희, 김창환, 성재민, 2021).

표 VI-6.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의 직장문화 개선 관련 예산 현황(2022-2023년)

구분	과제/사업	2022년 (백만원)	2023년 (백만원)	증감 (백만원)
고용노동부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15,525	9,180	△6,345
	공공부문 고용개선 지원사업	1,489	1,421	△68
	일터혁신지원	25,720	28,004	2,284
	(청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300	790	490
	(청년) 청년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확산	48,423	44,606	△3,817
여성가족부	(청년)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및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450	400	△50
	(청년)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182	182	0

* 자료: 고용노동부(2023). 고용노동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사업설명자료. 관계부처 합동(2023a).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출처가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시행계획 자료인 경우에는 (청년) 명기했으며 2022년 예산은 본예산이며 2023년 예산은 정부안이 아닌 확정 예산임.

3) 주거 및 건강 정책과제(안)

(1) 청년 주거 마련 및 주거비 지원과 주거 환경 개선

가. 추진배경

주거 및 건강 영역에서 첫 번째 과제는 청년 주거 마련 및 주거비 지원과 주거 환경 개선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 과정에서 무리하게 집을 구매한 청년들이 부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반대로 집을 갖고 있지 못한 청년들은 전, 월세 상승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청년 주거 마련을 위한 해법으로 청년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지만 주거권 차원에서 취약 청년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대응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동시에 지옥고로 불리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세부추진과제(안)

세부추진과제(안)로는 취약 청년 주거 지원 강화, 청년 월세 지원 기준 현실화와 예산 집행률 제고, 지하방·옥탑방·고시원 등 청년 주거 환경 개선, 청년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주거교육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먼저 취약 청년 주거 지원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2021년까지 지원해오다 2022년부터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주거와 더불어 생활, 취업, 교육, 건강 등 포괄적인 개인별 맞춤형 지원으로 확대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23a: 1569-1583). 주거비 등을 포함한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에게 2022년 매월 30만원에서 25만원으로, 2023년부터 40만원으로 다시 증액되었다. 이처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이 늘어왔으나 수도권에서 월세를 충당하기에도 버거운 수준이어서 여전히 증액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동시에 올해 전세사기 지원으로 청년 전세임대사업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주거 지원을 받아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경향신문, 2023.10.12.).

장애나 질병에 걸린 부모 등을 부양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이나 고립·은둔청년에 대해서 지원 방안이 마련 중이거나 일부 사업이 추진 중이나 주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관계부처 합동, 2023a: 1584-1592). 부모 폭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 밖으로 나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역시 주거를 포함하여 월 40만원의 자립수당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급 요건이 완화(2년 이상 쉼터 보호, 직전 1년 연속 보호한 경우만 해당→직전 6개월 연속 보호로 완화)되었으나 해당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지급 요건을 좀 더 완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관계부처 합동, 2023a: 1593-1597).

청년 월세 지원 기준 현실화와 예산 집행률 제고는 청년 주거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신설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높은 지급 기준으로 인해 집행률이 매우 낮아지면서 매년 절반 이상의 예산이 줄어드는 기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들은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로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여야 하고 부모를 포함해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여야 하며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 주거비가 보증금 5천만원 이하에 월세 60만원인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청년들이 절반 가까이 살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 해당 매물을 찾기 어렵고 지원 대상 역시 매우 제한적이며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더 열악한 청년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 없이 당사자들은 찾아 지원하는 아웃리치(out-reach) 방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신청주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예산만 불용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한 현실화와 더불어 주거 지원을 받아야 하는 청년들을 찾아 나서는 아웃리치 방식을 확대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하방·옥탑방·고시원 등 청년 주거 환경 개선은 주거 기준 미달 공간을 임시적으로 개선하는 것과 지·옥·고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으로 이주시키는 것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시행계획 자료에서 정책과제 중 ‘고시원·쪽방·반지하 등 거주 청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1인 가구 거주로 무주택,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청년에게는 2023년부터 이주비용도 지원하는데 이에 대한 실적 자료가 아직 집계되지 않아 알 수 없으며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집값 하락이 본격화되면서 다량의 빌라를 소유한 집주인이 파산 등의 이유로 전세비용을 갚지 못하는 사태가 수도권 전역에서 이루어지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청년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주거교육 강화는 전세사기예방센터를 통해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주거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지자체의 경우 청년센터 등에서 주거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을 통해 전세 사기 등을 당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주거 관련 생활정보를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 청년 주거 지원 강화 - 청년 월세 지원 기준 현실화와 예산 집행률 제고 - 지하방·옥탑방·고시원 등 청년 주거 환경 개선 - 청년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주거교육 강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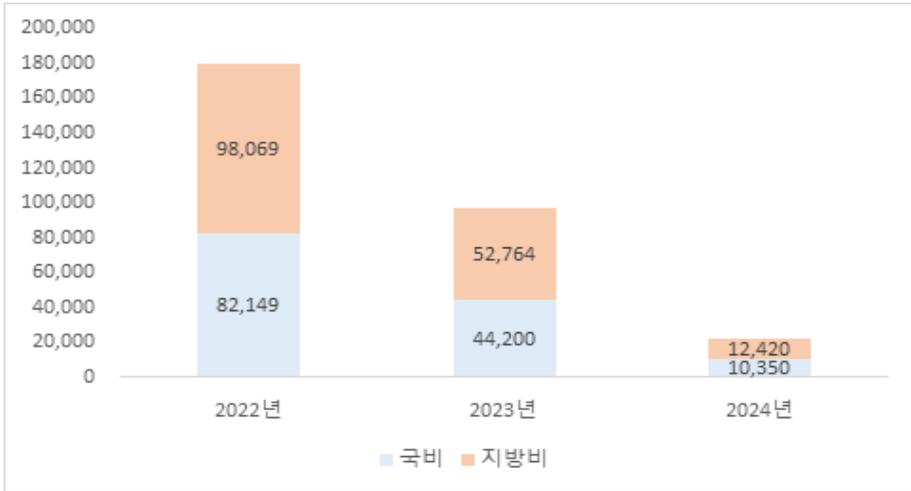
다. 법적 근거 및 법률 제·개정

청년의 주거 관련 지원은 「주거기본법」 제15조와 「청년기본법」 제20조를 비롯하여 「주거급여법」, 「주택도시보증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법」 등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라. 추진예산

국토교통부의 청년 주거 관련 예산을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큰 폭으로 삭감되었고 2024년에 큰 폭의 감액이 예상되고 있다. 아웃리치로 지원대상 청년을 찾아 지원하

는 방식을 도입하고 기준 기준을 조정해 현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최대한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3a: 799). 2024년은 정부예산안이며 지방비는 지방비 보조율(서울은 30%, 그 외 지역은 50%)을 토대로 한 추정치임.

그림 VI-8. 청년 월세지원 사업 예산 추이(백만 원, 2022-2024)

취약 청년 지원은 명시적으로 주거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자립수당으로 각종 생활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지원,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발굴 및 지원방안 마련, 고립·은둔 청년 발굴 및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성가족부는 위기청년 자립지원(쉼터 퇴소 청소년), 위기청년 자립지원(내일이룸학교), 청년한부모 자립 지원, 이주배경 청년 지원 등이 있다. 이 분야는 대부분 예산이 증액되었고 앞으로도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청년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대학가, 원룸촌 부동산 허위매물 등 수시모니터링,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인중개사 관리 감독 강화, 불법건축물 감독관 운영 등의 과제를 추진 중이며 이 사업들은 모두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사업들이다.

표 VI-7. 국토교통부의 청년 주거 관련 예산 현황(2022-2023년)

구분	과제/사업	2022년 (백만원)	2023년 (백만원)	증감 (백만원)
취약 청년 지원	(청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27,467	43,745	16,278
	(청년)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지원	7,734	14,706	6,972
	(청년)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발굴 및 지원방안 마련	100	-	-
	(청년) 고립·은둔 청년 발굴 및 제도적 기반 마련	60	563	503
	(청년) 위기청년 자립지원(쉼터퇴소 청소년)	252	480	228
	(청년) 위기청년 자립지원(내일이룸학교)	3,113	3,113	0
	(청년) 청년한부모 자립 지원	14,504	19,049	4,545
	(청년) 이주배경 청년 지원	3,481	4,013	532
주거 및 주거비 지원	(청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80,218	96,964	△83,254
	(청년)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53,659	29,154	△24,505
	(청년)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8,530,000	10,380,027	1,850,027
	(청년) 청년 전세금 반환보증 지원(비예산)	-	-	-
	(청년) 청년, 신혼 주택구입·전세대출 확대(비예산)	-	-	-
	(청년) 자립준비청년 주거 지원(비예산)	-	-	-
	(청년) 청년 전·월세 대출 공급	-	-	-
	(청년) 고시원·쪽방·반지하 등 거주청년 공공임대 주택 우선 공급(비예산)	-	-	-
주거환경 개선	(청년) 대학가, 원룸촌 부동산 허위매물 등 수시모니터링(비예산)	956	1,236	280
	(청년)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비예산)	-	-	-
	(청년)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인중개사 관리감독 강화(비예산)	-	-	-
	(청년) 불법건축물 감독관 운영(비예산)	-	-	-

*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3a),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출처가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시행계획 자료인 경우에는 (청년) 명기했으며 2022년 예산은 본예산이며 2023년 예산은 정부안외 아닌 확정 예산임.

(2) 청년 신체 및 정신건강 지원 확대

가. 추진배경

주거 및 건강 영역에서 두 번째 과제는 청년 신체 및 정신건강 지원 확대이다. 청년들은 가장 건강한 시기이지만 청년의 건강 상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특히 정신건강 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단절 상태에서 사회적 관계형성

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청년 건강 문제를 점검하고 신체 및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 청년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 세부추진과제(안)

세부추진과제(안)로는 청년의 신체 건강 강화, 청년의 정신 건강 서비스 확대, 장애 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 규정 마련 등이다.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된 부분은 법 개정 부분에서 상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먼저 신체 건강과 관련하여 청년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청년정책 시행계획으로 '생활밀착형 체육 시설 공급 확대'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 과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청년정책과제로 보기 어렵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청년마음건강바우처와 중독예방 등을 과제로 제시하였고 신체건강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체건강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2030 청년에 대한 무료 국가건강검진 사업으로 비만이나 당뇨, 시각과 청각을 비롯해 일반건강검진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다.

국가건강검진 중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조현병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검진으로 2023년부터 이를 검진 항목에 추가하고 검진 시기로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개편이 이루어졌다.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국가건강검진을 잘 받지 않는 경향이 있어 지자체와 함께 건강검진을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청년의 정신건강서비스는 2022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청년마음건강바우처로 전환기를 맞이했는데 사각지대 문제와 이용률 제고, 그리고 상담 인프라의 지역간 격차 해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마음건강 사업의 저변 확대와 관련하여 지자체 청년센터와 연계해 센터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자연스럽게 마음건강 사업을 소개하고 참여시키는 방식의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서울시에서는 지자체 청년센터인 오랑에서 지역 보건기관과 연계해 종합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마음건강 사업에 참여하거나 자체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다. 상담 인프라가 지역별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인프라를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고립 문제와 관련하여 지자체 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한데

청년센터에서 청년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청년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청년의 신체 건강 강화
- 청년의 정신 건강 서비스 확대
- 장애 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 규정 마련

다. 법적 근거 및 법률 제·개정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청년기본법이 2023년 3월 개정되고 9월에 시행되었는데 취약계층 청년에 관한 조항들이 신설되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행령으로 이를 다루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청년기본법 시행령에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의하고 있듯이 해당 조항을 참조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특히 해당 법률 시행령에 누락되어 있는 장애 청년 등에 관한 규정을 담는 것이 필요하다.

표 VI-8.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 장애 청년 등 취약 청년 정의 규정 마련

구분	조항	개정(안)	부처
청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1.>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정의) ----- ----- ----- -----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	제3조(취약계층 청년) 법 제3조의5에 따른 취약계층 청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19~34세인 청년 3. 「다문화가족법」 제2조의1과 2에 따른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로 19~34세인 청년 4. 기타 국무조정실장이 취약계층 청년으로 인정한 사람	국무 조정실 (청년정책 총괄과)

* 자료: 국가법령정보시스템(<https://www.law.go.kr>). 2021년 10월 4일 접속

라. 추진예산

보건복지부의 건강관련 과제로는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청년층 정신건강서비스 강화(중독예방) 등이 있다. 교육부에서는 대학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 강화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급 확대와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지원을, 여성가족부에서는 청년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 병무청에서는 사회적 배려대상 청년의 병역이행 지원 등이 있다. 이중에서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급 확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청년정책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나머지 과제들은 2022년 대비 2023년 거의 변동이 없었고 여성가족부의 1인가구 청년 지원 사업이 크게 예산 증액이 이루어졌다. 국민건강검진 지원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한 예산 증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아웃리치와 지역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청년마음바우처 이용률이 높아진다면 이 예산에 대한 확충도 필요해 보인다.

표 VI-9.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 건강 관련 예산 현황(2022-2023년)

구분	과제/사업	2022년 (백만원)	2023년 (백만원)	증감 (백만원)
보건복지부	(청년) 청년마음건강바우처	5,670	5,670	0
	(청년) 청년층 정신건강서비스 강화(중독예방)	200	400	200
교육부	(청년) 대학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 강화	3,417	3,417	0
문화체육 관광부	(청년)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급 확대	204,218	168,523	△35,695
	(청년)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지원	800	800	0
여성가족부	(청년) 청년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	606	1,838	1,232
병무청	(청년) 사회적 배려대상 청년의 병역이행 지원	77	77	0

*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3a).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출처가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시행계획 자료인 경우에는 (청년) 명기했으며 2022년 예산은 본예산이며 2023년 예산은 정부안이 아닌 확정 예산임.

4) 참여와 권리 정책과제(안)

(1) 청년 참여기구의 대의성, 대표성 강화

가. 추진배경

참여와 권리 영역에서 첫 번째 과제는 청년 참여기구의 대의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2024년에 24개 장관급 기관에 청년보좌역과 함께 2030자문

단이 들어설 예정으로 전체 부처의 청년 참여기구 위원 수가 48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청년 참여기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청년 참여기구가 전체 청년을 대변할 수 있기 위해서 대의성과 대표성을 갖춘 위원들이 선발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향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세부추진과제(안)

세부추진과제(안)로는 청년 참여기구 대표성 관련 법적 근거 마련과 청년 참여기구 대의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그리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참여기구 대표 원탁회의 운영 등이다. 법적 근거 관련된 부분은 법 개정을 다루는 곳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청년 참여기구 대의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은 국무조정실에서 2022년에 청년 참여 거버넌스 매뉴얼(국무조정실, 2022)을 마련한 바 있는데 이를 수정·보완하여 청년 참여기구의 대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담는 것이다.

청년 참여기구의 대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초 지자체에 참여기구가 만들어지고 기초 지자체의 대표들로 광역 지자체의 참여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광역 지자체의 참여기구 대표들로 중앙정부의 참여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에는 지자체만이 아니라 중앙부처별 참여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참여하는 원탁회의 형태로 진행될 필요가 있고 모든 참여기구가 모여서 의제를 정하고 각 부처나 지역에서 논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것은 유럽연합이나 회원국에서 추진 중인 EU 유스 포럼의 형태이며 국가 의제로는 청년 연령 규정과 같은 부분을 다룰 수 있다.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이러한 절차로 승인을 받는다면 보다 진일보한 청사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세 번째 과제로 제시한 원탁회의는 이러한 대의제 구조를 실현하는 것이며 유사한 사례로 국내에서 청소년 특별회의가 있다. 이것은 각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총화하는 방식이며 민주적인 대표 선발 절차를 거친다.

- 청년 참여기구 대표성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청년 참여기구 대의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참여기구 대표 원탁회의 운영

다. 법적 근거 및 법률 제·개정

청년 참여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나 청소년기본법의 참여위원회에 관한 법적 조항 등을 참고해 청년기본법에 담을 필요가 있다. 먼저 청년기본법에 국가와 지자체의 참여기구 구성 의무화를 담은 조항과 참여기구에서 논의된 사항을 국가 및 지자체가 성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조항, 그리고 청년참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까지 포함될 필요가 있다. 시행령에는 청년참여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는데 이 경우에 대표성과 대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대표성과 관련하여 청년참여기구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인구 비례 등을 고려해 적정 비율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VI-10. 청년기본법 개정(안) - 청년참여기구 규정 신설

법률	현행조항	개정(안)	부처
청년기본법	-	제5조의2(청년참여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되는 참여기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4항에 따른 청년참여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	제2조(청년참여기구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청년참여기구의 위원은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구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참여기구의 회의를 주재한다. ③ 참여기구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참여기구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여기구가 청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⑥ 국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참여기구의 대표로 구성된 원탁회의를 둘 수 있으며 국가 의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총괄과)

* 자료: 국가법령정보시스템(<https://www.law.go.kr>). 2021년 10월 4일 접속

라. 추진예산

청년 참여기구와 관련된 예산은 국무조정실의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설치·운영, 청년 거버넌스 확대, 청년정책 지역협력 체계 마련 등이 있다. 각 부처 중에서 시행계획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출한 곳은 국토교통부, 통일부, 인사혁신처 등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교통 청년 채널 운영을, 통일부에서는 청년과 함께 하는 통일 준비를, 인사혁신처에서는 찾아가는 인사정책 토론회 청년공감 운영 등을 제시하였다. 각 부처에서 구성해 운영해 오던 참여기구들이 2030자문단이라는 틀로 일원화되었기 때문에 부처별 참여기구 운영은 2030자문단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표 VI-11. 국무조정실 청년 참여기구 관련 예산 현황(2022-2023년)

구분	과제/사업	2022년 (백만원)	2023년 (백만원)	증감 (백만원)
국무조정실	(청년)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설치·운영	-	-	-
	(청년) 청년 거버넌스 확대	500	710	210
	(청년) 청년정책 지역협력 체계 마련(비예산)	-	-	-
국토교통부	(청년) 국토교통 청년 채널 운영	0	67	67
통일부	(청년) 청년과 함께 하는 통일 준비	30	302	273
인사혁신처	(청년) 찾아가는 인사정책 토론회 청년공감 운영	-	-	-

*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3a).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출처가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시행계획 자료인 경우에는 (청년) 명기했으며 2022년 예산은 본예산이며 2023년 예산은 정부안이 아닌 확정 예산임.

(2) 정책 전반에 걸친 청년의 실질적 정책 참여 확대

가. 추진배경

참여와 권리 영역에서 두 번째 과제는 정책 전반에 걸친 청년의 실질적 정책 참여 확대이다. 2023년에 이루어진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청년과 관련된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위촉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 청년을 두어야 한다. 이는 매우 강력한 조치로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청년 정책 참여에 있어서 여전히 제안단계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결정단계와 집행단계, 평가단계에서도 청년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실질적인 정책 참여 방식인 참여예산제를 서울시가 시도한 자율예산제 형태로 중앙부처 및 타 시도에서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나. 세부추진과제(안)

세부추진과제(안)로는 청년정책 참여를 제안단계에서 결정, 실행 및 평가단계까지 확대 추진과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참여예산제(자율예산제) 추진 등 2가지를 제시하였다. 먼저 청년정책 참여에 있어서 제안단계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를 정책이 추진되는 전 과정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안단계로 이루어지는 참여는 2030자문단과 같은 참여기구에서 청년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거나 청년정책경진대회와 같이 일반 청년들이 특정한 의견 통로를 활용해 자신들이 제안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등이 해당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주로 이러한 방식으로 청년 정책 참여를 시행하고 있다.

결정단계와 관련해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비롯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관련 각종 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청년 참여기구의 대표들이 당연직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진행단계와 관련해서는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안한 과제를 점검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고 1년 임기제가 아닌 2년 임기제 등으로 기간을 확대해 직접 제안한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평가단계에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자체 평가와 청년정책시행계획 시행계획 평가 시에 청년들이 참여를 보장하고 국무조정실이 시행하는 청년정책시행계획 평가 외에 자체 평가 시에 청년참여기구에서 추진된 과제에 대한 평가를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국무조정실의 시행계획평가는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하되 평가위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청년정책 참여를 제안단계에서 결정, 실행 및 평가단계까지 확대 추진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청년참여예산제(자율예산제) 추진

다. 법적 근거 및 법률 제·개정

「청년기본법」에 청년의 권리와 참여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청년 참여기구 등에 관한 내용들은 향후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청년 참여 거버넌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추진예산

국무조정실의 청년 정책 예산들은 비예산인 경우가 절반 정도이며 청년 민간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에서는 청년인재 DB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참여위원들의 대표로 구성된 원탁회의가 추진된다면 이에 대한 별도의 예산 확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 VI-12. 국무조정실 청년 정책 참여 관련 예산 현황(2022-2023년)

구분	과제/사업	2022년 (백만원)	2023년 (백만원)	증감 (백만원)
국무조정실	(청년)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확대(비예산)	-	-	-
	(청년) 청년인재 DB 플랫폼 구축·운영	291	118	△179
	(청년) 청년 관련 제안 및 정책·제도개선 활성화	57	57	0
인사혁신처	(청년) 찾아가는 인사정책 토론회 청년공감 운영	-	-	-

*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3a).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출처가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시행계획 자료인 경우에는 (청년) 명기했으며 2022년 예산은 본예산이며 2023년 예산은 정부안이 아닌 확정 예산임.

5) 성인기 진입과 시민권 정책과제(안)

(1) 청년의 시민권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가. 추진배경

청년의 시민권과 참여 활성화 영역에서 첫 번째 과제는 청년의 시민권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이다. 「청년기본법」에 권리와 참여와 관련된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청년권리증진법」 등 하위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역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나. 세부추진과제(안)

세부추진과제(안)로는 「청년기본법」 청년 시민권과 참여 관련 조항 개정과 「청년기본법」 하위법령체계 구축이 있다. 이 내용은 법적 근거 및 법률 제정과 개정 부분에서 다루고자 한다.

- 「청년기본법」 청년 시민권과 참여 관련 조항 개정
- 「청년기본법」 하위법령체계 구축

다. 법적 근거 및 법률 제·개정

현재 「청소년기본법」은 모법으로 하위법령으로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기본법들은 대체로 이러한 구조를 갖는데 「청년기본법」 역시 모법으로 하위법령을 갖는 방식으로 법률체계를 갖출 수 있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에서는 청년권 입증진법안 마련을 위한 작업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기초해 추진한 바 있다. 관련 연구로 박광동(2022)은 청년권입증진법안을 검토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박광동(2022)은 「청년기본법」 개정을 통해 청년센터 및 중간지원기관의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부분은 2023년에 이루어진 법 개정으로 실현되었다.

표 VI-13. 국회에 제출된 청년 관련 법률 제정안

법안명	대표 발의	발의 일시
청년주거안정특별법안	장경태의원 대표발의	2020.10.06.
청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법안	김희재의원 대표발의	2022. 06. 16.
청년자립 지원법안	윤창현의원 대표발의	2023. 05.04.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검색일 2023년 10월 15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청년 관련 법률 제정안은 주거 법안과 자산격차 완화 관련 법안, 그리고 청년 자립 지원 법안 등이다. 이미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에 일자리와 관련된 법률 내용이 담겨져 있으므로 법률 체계를 구축한다면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에 교육이나 훈련에 관한 부분을 담고 청년 주거 관련 법, 청년 복지 관련 법, 청년 참여와 권리 관련 법 등으로 법 체계를 장기적으로 구축해 볼 수 있다.

라. 추진예산

법령 체계화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것으로 별도의 예산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 다만 관련 연구가 이루어질 경우 연구 예산이 필요할 수 있다.

표 VI-14. 국무조정실 청년 법률 관련 예산 현황(2022-2023년)

구분	과제/사업	2022년 (백만원)	2023년 (백만원)	증감 (백만원)
국무조정실	청년관련 법령 체계화(비예산)	-	-	-

*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3a).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출처가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시행계획 자료인 경우에는 (청년) 명기했으며 2022년 예산은 본예산이며 2023년 예산은 정부안인 아닌 확정 예산임.

(2)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통한 청년의 시민권과 참여 활성화

가. 추진배경

청년의 시민권과 참여 활성화 영역에서 두 번째 과제는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통한 청년의 시민권과 참여 활성화이다. 유럽연합에서는 청년 참여와 청년센터를 일종의 한 범주로 다루면서 청년정책 전달체계에서 청년들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지역 청년들이 만나는 공간이자 공론의 장으로 청년센터가 자리 잡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은 청년의 시민권과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세부추진과제(안)

세부추진과제(안)로는 온라인, 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정비와 지자체 청년센터 청년 참여 및 공론의 장 기능 부여, 한국형 청년 수도(Capital) 추진 등이다. 먼저 온라인과 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 그리고 기초지자체를 연결하는 작업으로 중앙부처 중 정책전담 부처인 국무조정실에는 중간지원조직이자 총괄운영조직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청년정책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는 청년정책연구조직의 설립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장기 과제로 보이며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는 것이다. 2023년 중앙청년거점센터의 역할을 청년재단이 수행 중이나 이는 임시적인 조치로 보이며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광역과 기초 지자체의 관계 역시 서울시의 오랑 체계와 마찬가지로 광역센터와 기초센터

터로 구성될 필요가 있고 광역과 기초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광역센터는 독자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총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초센터는 청년들의 참여와 공론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자 자유롭게 청년들이 드나들면서 상담과 토론, 프로그램 참여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자리잡을 필요가 있다. 기초센터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예산과 광역 지자체 예산, 그리고 기초 지자체 예산을 모두 받는 형태로 예산 구조가 짜여 져야 하며 협력적인 거버넌스에 기반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운영위원회의 구성 역시 중앙, 광역, 기초가 참여하고 민간위원으로 지역 청년이나 참여기구의 대표가 참여해 심의와 조정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2023년 법개정을 통해 추진될 예정인 청년 친화도시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에서 추진 중인 청년 수도(Capital) 방식의 운영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모든 기초 지자체가 청년 수도가 될 수 있도록 매년 다른 기초 지자체를 선정해 청년 수도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각종 청년 행사와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청년 친화적인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청년 수도 선정은 청년 지표에 기초해 개선이 많이 이루어진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시도가 청년 수도로 지정되어 청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온라인, 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정비
- 지자체 청년센터 청년 참여 및 공론의 장 기능 부여
- 한국형 청년 수도(Capital) 추진

다. 법적 근거 및 법률 제·개정

2023년에 이루어진 「청년기본법」 개정을 통해 청년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들이 반영되었다. 다만, 청년정책에 대한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정이 향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라. 추진예산

오프라인 청년 예산과 관련 시범사업 수준에서 중앙거점센터와 광역 및 기초 센터를

지정하는 사업이 2023년부터 추진되었고 2024년부터 해당 지자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정책 전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청년 통합지원체계는 고용노동부에서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구축해 온 사업을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온라인플랫폼으로 확대, 재편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 친화도시 운영은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2024년 이후에 예산 규모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표 VI-15.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전달체계 관련 예산 현황(2022-2023년)

구분	과제/사업	2022년 (백만원)	2023년 (백만원)	증감 (백만원)
국무조정실	(청년) 오프라인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	1,739	1,739
	(청년) 온라인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4,148	3,775	△373
	(청년) 청년 친화도시 운영	0	0	0

*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3a).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출처가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시행계획 자료인 경우에는 (청년) 명기했으며 2022년 예산은 본예산이며 2023년 예산은 정부안이 아닌 확정 예산임.

3. 청년 사회 첫 출발 정책추진 로드맵 및 정책방안 종합

이 연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에 걸쳐 이루어진 장기과제이다. 여기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이 연구과제를 통해 제안했던 정책 방향과 과제를 포함하여 3차 연도 연구 결과를 종합해 청년 사회 첫 출발에 대한 정책방향과 과제(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동시에 여기에서는 지난 과제에서 제안했던 내용이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되고 추진되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 사회 첫 출발 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 방향은 예방적 접근, 맞춤형 접근 그리고 통합적 접근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사회 첫 출발이라는 성인이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 방향은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맞춤형 접근은 3년에 걸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정책 방향으로 청년 내부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대상별로 이해와 요구에 기반해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합적 접근은 기능 정책과는 달리 대상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사람은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 기능에 따른 구분이 불가능하

다. 청년은 취업을 원할 때 고용노동정책의 접근이 필요하며 진학을 원할 때 교육정책의 접근이 필요하고 건강이 좋지 않을 때 보건정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복지나 금융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 부처에서 협력과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중앙과 지자체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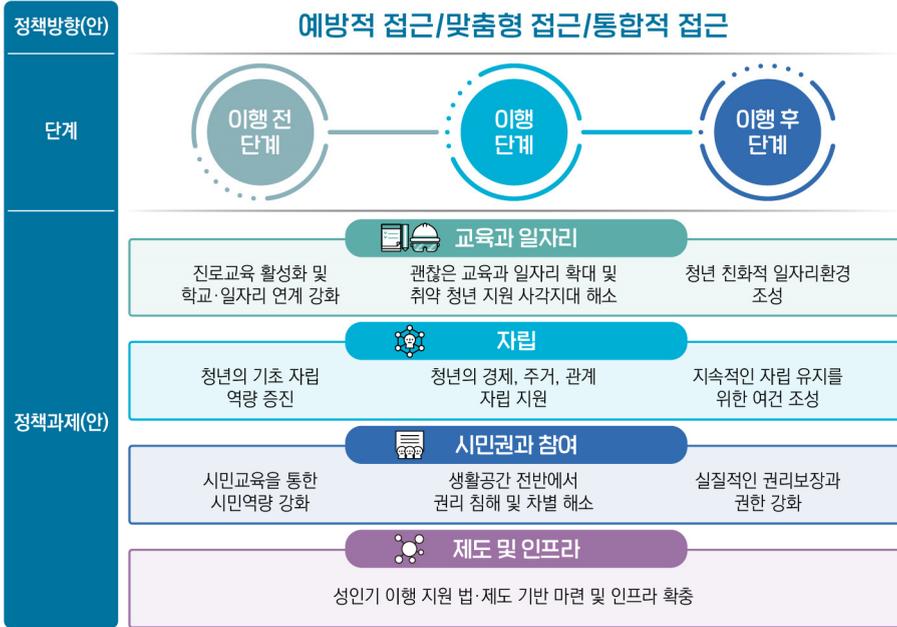


그림 VI-9. 청년의 사회 첫 출발 정책방향과 과제(안)

정책로드맵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 연구에서는 이행기에 초점을 맞추어 이행 전 단계와 이행단계, 그리고 이행 후 단계로 구분해 9개의 정책 과제(안)을 제안하였다. 1차 연도 연구에서는 정책과제로 이행 전 단계에서 진로교육 활성화 및 학교·일자리 연계 강화, 이행 단계에서 관측은 일자리 확대 및 취약 청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 이행 후 단계에서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환경 조성 등 3가지를 제안하였다.

2차 연도 연구에서는 이행 전 단계에서 청년의 기초 자립 역량 증진, 이행 단계에서 청년의 경제, 주거, 관계자립 지원, 이행 후 단계에서 지속적인 자립 유지를 위한 여건 조성을 정책과제(안)을 제안하였다.

3차 연도 연구에서는 이행 단계별로 볼 때 시민교육을 통한 시민역량 강화와 생활공간 전반에서 권리 침해 및 차별 해소, 실질적인 권리보장과 권한 강화 등 3가지 정책과제(안)을 제안하였다.

표 VI-16. 3차 연도(2023년) 청년 사회 첫출발 시민권과 참여 과제(안) 로드맵

영역	개입시기			추진기간			신규/ 기존	법률 제·개정	부처/ 지자체
	이행 전 단계	이행 단계	이행 후 단계	단기 (24)	중기 (24-26)	장기 (23-28)			
1. 중등·고등교육기관 차별 해소 및 인권교육강화	○				○		기존		교육부
2. 학교 참여 활성화 및 시민 교육강화	○				○		기존	○	교육부
3. 직장내 차별해소 및 법·제 도 운영강화			○		○		기존		노동부/ 여성부
4. 청년 친화적 직장문화 조 성 및 참여제도 활성화			○			○	기존	○	노동부/ 여성부
5. 청년주거 마련 및 주거비 지원과 주거환경개선			○			○	기존		국도부/ 복지부/ 지자체
6. 청년 신체 및 정신건강 지 원 확대	○	○	○		○		기존		복지부
7. 청년 참여기구의 대의성, 대표성 강화	○	○	○	○			신규	○	국조실/ 지자체
8. 정책 전반에 걸친 청년의 실질적 정책 참여 활성화	○	○	○	○			기존	○	국조실/ 지자체
9. 청년의 시민권과 참여 활 성화를 위한 법 개정	○	○	○			○	기존	○	국조실
10.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통 한 청년의 시민권과 참여 활성화	○	○	○			○	기존		국조실/ 지자체

3차 연도 과제의 추진 로드맵을 살펴보면, 중등·고등교육기관 차별 해소 및 인권교육강화와 학교 참여 활성화 및 시민교육강화는 개입 시기에 있어서 성인기 이행 전 단계에 해당하며 주로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이다. 이 과제들은 중기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장 내 차별해소 및 법·제도 운영강화와 청년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및 참여제도 활성화, 그리고 청년주거 마련 및 주거비 지원과 주거환경개선 과제는 성인이 이행 후의 과제이며 직장 내 차별 해소 외에 두 과제는 장기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청년 신체 및 정신건강 지원 확대, 청년 참여기구의 대의성, 대표성 강화, 정책 전반에 걸친 청년의 실질적 정책 참여 활성화, 청년의 시민권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과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통한 청년의 시민권과 참여 활성화는 개인 시기가 정해져 있는 과제가 아니라 모든 이행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과제이다. 이 중에서 건강 과제는 중기과제이며 참여기구와 실질적 참여 추진 과제는 단기, 그리고 법과 전달체계 구축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장기과제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 2년 간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했던 정책과제(안) 중에서 정부 정책으로 추진 중인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차 연도 연구에서 제안했던 과제 중 현재 구체적인 정책과제와 사업으로 추진 중인 것은 학교-일자리 연계 체계 강화와 취약계층 정책 사각지대 해소 등이다.

표 VI-17. 1차 연도(2021년) 사회 첫 출발 일자리 제안 정책과제(안) 및 추진현황

청년 니트 정책과제(안)	추진현황	부처/지자체
1. 진로교육 활성화 및 대상 확대	×	교육부
2. 현장실습 및 일·학습병행제 개편	×/×	교육부/고용부
3. 학교-일자리 연계 체계 강화	△/○	교육부/고용부
4. 청년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확대	△/×/△	국조실/중기부/고용부
5. 취약계층 정책 사각지대 해소	○	고용부
6. 자기주도적 삶 모색 기회 제공	×/×	국조실/여가부
7. 청년친화적 일자리환경 조성	△	고용부
8. 재직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	×/×	금융위/고용부

* 출처: 자체 작성. ○는 행정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경우이며 △는 추진을 검토하거나 예정인 경우이고 ×는 추진을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경우임.

학교-일자리 연계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해 1학년부터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졸업 전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지원을 시작했으며 교육부에서도 중앙취업지원센터와 시도교육청의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직업계고 졸업생에 대한 추적

관리와 더불어 일자리어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간에 연계,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해 고용서비스를 졸업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청년 고용지표 개선을 이루어질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청년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유럽연합의 청년보장제로 진화할 수 있는 정책 사업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추진 중이며 2024년부터 청년성장프로젝트를 통해 조기개입이 학교와 직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표 VI-18. 2차 연도(2022년) 청년 사회 첫 출발 자립 제안 정책과제(안) 및 추진현황

청년 자립 정책과제(안)	추진현황	부처/지자체
1. 성인 이행기 청년 자립의 법적도적 근거 및 기반 마련	×/×/○/×	복지부/여성부/국조실/법무부
2. 성인 이행기 청년의 경제적 자립 지원	○/△/△/○	노동부/복지부/중기부/금융위
3. 성인 이행기 청년의 주거 자립 지원	△/×/△	국토부/행안부/지자체
4. 성인 이행기 청년의 관계 자립 지원	×/△/○/△	복지부/여성부/국조실/지자체
5. 성인 이행기 청년의 기초자립 역량 증진 지원	△/×/×/×	교육부/노동부/여성부/국방부
6. 특별한 자립 욕구에 대한 대응(모두를 위한 자립 지원)	△/○/○/×	국조실/복지부/여성부/법무부

* 출처: 자체 작성. ○는 행정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경우이며 △는 추진을 검토하거나 예정인 경우이고 ×는 추진을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경우임.

다음으로 2차 연도 제안 과제를 살펴보면 경제적 자립과 관련하여 디딤씨앗통장 등을 통한 자산형성지원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2024년부터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에 목돈 마련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을 주거 및 교육급여 대상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동시에 디딤씨앗통장의 가입기간을 만 0에서부터 17세까지 확대해 지원 규모를 1,080만 원에서 3,240만 원으로 이 사업의 예산은 2023년과 대비해 3배 가량 늘어났다.

특별한 자립 욕구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자립준비청년과 은둔·고립 청년, 그리고 가족돌봄 청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해 특별한 자립 요구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 참고문헌

참고문헌

경향신문 보도자료 (2023.10.12.).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10121432001>
에서 2023년 10월 25일 인출.

경향신문 보도자료 (2023.10.19.)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01906000>
25에서 2023년 10월 25일 인출.

고용노동부 (2023). **고용노동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사업설명자료**. 세종: 고용노동부.

관계부처합동 (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세종: 국무조정실.

관계부처합동 (2022).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세종: 국무조정실.

관계부처합동 (2023a). **2023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세종: 국무조정실.

관계부처합동 (2023b). **2023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세종: 국무조정실.

관계부처합동 (2023c).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 세종: 국무조정실.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2018).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21).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22a).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총론**.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22b). **2022년 평생학습 주제별 현황**.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23). **2023년도 예산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세종: 교육부.

교육부 보도자료 (2023.10.19.). [설명자료]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사고·권익침해 예방 및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5&boardSeq=96741&lev=0&m=020401>에서 2023년 10월 25일 인출.

국무조정실 (2022). **청년참여 거버넌스 매뉴얼**. <https://brand.jeonnam.go.kr/B0309>

/boardView.do?seq=48&menuId=brand0403000000에서 2023년 2월 6일 인출.
 국무조정실 (2022.02).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추가지정(안)**. 세종: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2023.04). **2022년 청년정책백서**. 세종: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22.06.27.). 정부, 9개 부처에 청년보좌역 신설.. 2030 자문단도 운영. <https://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148902904&pkgId=49500649>에서 2023년 2월 6일 인출.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23.01.29.). 정책참여 인재발굴을 위한 청년DB 정식 개통.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49690>에서 2023년 2월 6일 인출.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23.09.05.).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집니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청년포털」에서 2023년 10월 5일 인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청년기본법 개정법률(안). likms.assembly.go.kr에서 2023년 2월 2일 인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청년기본법 정무위원장 대안 법률안. likms.assembly.go.kr에서 2023년 2월 2일 인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에 제출된 청년 관련 법률 제정안. likms.assembly.go.kr에서 2023년 10월 15일 인출.
 국회사무처 의안국 의사과 (2020). **장경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830)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처 의안국 의사과 (2021).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449)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처 의안국 의사과 (2022a). **김용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850)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처 의안국 의사과 (2022b). **윤한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981)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처 의안국 의사과 (2022c). **장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009)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기현 (2014). **정책학 강의**. 서울: 박영사.
 권영숙 (2020). 한국 노동권의 현실과 역사: ‘노동존중’과 노동인권에서 노동의 시민권으

- 로. **산업노동연구**, 26(1), 217-269.
- 김기현 (2018). **청년프레임**. 서울: 이담북스.
- 김기현 (2022). 청년정책 전달체계 및 참여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2022.03)**.
- 김기현 (2023). 전국 청년참여기구 현황 및 발전방향 제언. **서울시 서울청년시민회의 1차 공론장 발표문(서울시청 다목적홀, 2023. 10. 7. 14:00-16:30)**.
- 김기현, 배정희, 김창환, 성재민 (202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일자리** (연구보고 21-R1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신동훈, 변금선, 고혜진, 신인철 (2020).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I: 청년 이직자-총괄보고서** (연구보고 20-R1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유민상, 김창환, 정지운 (2019).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 학교 졸업예정자** (연구보고 19-R1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하형석, 신인철 (2016).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연구보고 16-R08).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덕수 (2019). 시민권과 로마 정치-키케로, 「시인 아르키아스 변론」(기원전 62년)을 중심으로. **수사학**, 36, 31-59.
- 김수정, 오지현, 최셋별 (2020). 청년세대의 정치: 정치의 주변화인가 새로운 정치의 등장인가. **사회과학연구논총**, 36(2), 283-318.
- 김영지, 최홍일 (202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한국 아동·청소년 권리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연구보고 22-일반01-0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윤철 (2020). 왜 우리나라에서는 핀란드 총리가 나올 수 없는가. **인권**, 127호, 국가인권위원회, 12-15.
- 김윤태 (2013). 토마스 험프리 마셜의 시민권 이론의 재검토: 사회권, 정치, 복지국가의 역동성. **담론201**, 16(1), 5-32.
- 김은경 (2003). 유럽연합시민권의 법적 개념과 의미. **유럽연구**, 17, 305-326.
- 김인곤 (2012). 플라톤의 <법률>에서 법에 의한 통치와 혼합정체. **서양고전학연구**, 53(2), 67-90.
- 김종국 (2023). 전국지역경제교육센터 어제와 오늘. 제6차 기획재정부·경제교육단체협의

- 회 워크숍 발표자료, 1-25. 전국경제교육단체협의회 홈페이지의 자료집을 제공하는 http://kcee.or.kr/bbs/board.php?bo_table=m51&wr_id=20에서 2023년 10월 26일 인출.
- 김형주, 김기현, 배정희, 신선미, 기현주 (2021). **청년정책의 패러다임과 전략과제 연구**(협동연구총서 22-59-03).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노화준 (2012). **정책학원론**. 서울: 박영사.
- 대한민국정부 (2022).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40075> 에서 2023년 2월 2일 인출.
- 문용린, 문미희, 전종희, 장희선, 김영주, 김호현 (2009). **인권교육 평가도구 개발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미국 청년 프로그램 통합워킹그룹(IWGIP: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Youth Programs) 홈페이지. youth.gov에서 2023년 10월 4일 인출.
- 민영 (2022). 노년층과 청년층의 차별적 정치참여 요인: 디지털 미디어 이용의 효과를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59(3), 64-97.
- 박광동 (2022). **청년기본법 상 청년권익증진시책 추진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연구** (현안분석 22-03).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 박선영, 장근영 (2015). A Study on Civic Engagement and Internal Political Efficacy of Young People in South Korea. **미래청소년학회지**, 12(4), 125-145.
-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2023a). 「청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20호.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B2%AD%EB%85%84%EA%B8%B0%EB%B3%B8%EB%B2%95#undefined>에서 2023년 10월 5일 인출.
-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2023b). 「청년기본법」, 법률 제18433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218&lsiSeq=234723#0000>에서 2023년 2월 2일 인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c). 대한민국 헌법 조항.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B%9C%EB%AF%BC%EA%B6%8C#undefined>에서 2023

년 2월 2일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d).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9738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5153&efYd=20230927#0000>에서 2023년 10월 26일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e). 「고등교육법」, 법률 제19430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1527&efYd=20230710#0000>에서 2023년 10월 26일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f).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법률 제19344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9987&efYd=20231019#0000>에서 2023년 10월 26일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g). 「인성교육진흥법」, 법률 제17472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20857&efYd=20200912#0000>에서 2023년 10월 26일 인출.

보스턴 시 홈페이지. <https://www.boston.gov/>에서 2023년 10월 4일 인출.

서현수, 전현진, 박유빈 (2022). **청소년 정치참여 확대 입법에 따른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 방안 연구**. 충청북도교육정보연구원 2022년 연구용역 보고서.

송경재 (2022). 디지털 기술과 청년 정치참여. **한국과 세계**, 4(6), 39-67.

안선영, 김희진, 박현준 (201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1-R2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오세근, 이명호 (2022). 정신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 전환으로서 '당사자주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합의와 사상적 체계화의 방향 설정을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25(1), 105-147.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youthcenter.go.kr에서 2023년 10월 5일 인출.

유동철 (2002). 장애인 시민권 모델 구축을 위한 시론- 장애차별금지법. **사회복지연구**, 19, 183-202.

유럽 청년포털 홈페이지. <https://youth.europa.eu/>에서 2023년 10월 4일 인출.

유로데스크 홈페이지. <https://eurodesk.eu/>에서 2023년 10월 4일 인출.

유민상, 신동훈, 신영규, 박미희 (2022).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연구보고 22-일반0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민중, 정은진, 정건희 (2016). **청소년 참여예산제 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연구보고 16-R2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지소, 권수현 (2020). 청년의 정치참여와 대표성: 청년당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13(3), 51-84.
- 윤혜영 (2020). 청년의 정치대표성에 대한 검토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4(1), 7-30.
- 이수정 (2022). **근거 이론을 적용한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참여에 관한 연구 : 디지털 시민성 교육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임희성 (2023). 대학별 인권센터 운영 현황. **대교연 현안보고**, 34.
- 장근영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V: IEA ICCS 2016 - ICCS 결과 보고서** (연구보고 18-R15-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미경 (2001). 시민권(citizenship) 개념의 의미 확장과 변화 - 자유주의적 시민권 개념을 넘어서. **한국사회학**, 35(6), 59-77.
- 장선화, 김윤철 (2021). 한국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 제도, 문화, 정당을 중심으로. **NGO연구**, 16(1), 77-119.
- 정정길, 이시원, 정준금, 김성수, 최종원 (2022). **정책학개론**. 서울: 대명출판사.
- 정필운 (2020). **모의선거교육의 쟁점과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2020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조석준, 임도빈 (2019). **한국 행정조직론**. 서울: 법문사.
- 조창덕 (2022). 청년의 정치참여는 청년정책예산에 영향을 미치는가? -2009~2018 광역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지**, 34(1), 119-142.
- 조철민 (2013). 민주화운동단체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고찰 3 ; 기독교청년회(YMCA)의 시민참여적 시민운동의 흐름 -시민감시와 캠페인 활동을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29(0), 225-263.
- 좌동훈, 김지수, 변주영 (2021).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연구** (연구보고 21-R55).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2). **제20대 대통령선거총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3). **역사로 살펴보는 선거권 이야기**.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47&bcIdx=17020>

- 에서 2023년 6월 27일 인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보도자료 (2023.08.07.).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확대.
<https://www.2030.go.kr/board/1/boardView>에서 2023년 9월 2일 인출.
 최태욱 (2017). 고령화·저성장·양극화 시대의 청년정치 부상 가능성.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31(0), 259-285.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2023). **사회통합실태조사**.
 JTBC 보도자료 (2023.05.01.).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4587에서 2023년 9월 28일 인출.
 Arnett, J.J. (1998). Learning to stand alone: The contemporary American transition to adulthood in cultural and historical context. *Human Development*, 41(5-6), 295-315.
 European Union. (2018). *Resolutions of Council: The European Union Youth Strategy 2019-2027*.
 Guerrero, M., Anderson, A.J., Catlett, B.S., Sánchez, B., Liao, C.L. (2021). Emerging Adults' Social Justice Engagement: Motivations, Barriers, and Social Identity. *Community Psychology*, 68(1-2), 73-87.
 Michikyan, M. (2020). Linking online self-presentation to identity coherence, identity confusion, and social anxiety in emerging adulthood.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8(4), 543-565.
 United Nations. (2018). *OECD Youth 2030: Working with and for Young People*.
 Wray-Lake, L., Arruda, E.H., & Schulenberg, J.E. (2020). Civic Development across the Transition to Adulthood in a National US sample: Variations by Race/Ethnicity, Parent Education, and Gender. *Developmental Psychology*.
<http://doi.org/10.1037/dev0001101>.에서 2023년 2월 6일 인출.

○ — 부 록

- 1. 설문지
- 2. 심층면담 가이드라인

부 록

1. 설문지

PID							
-----	--	--	--	--	--	--	--

2023년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

안녕하세요?
 국무총리실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년들의 일과 삶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청년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23년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개인정보도 철저히 보호됩니다.
 또한, 통계법 제34조(통계조사자의 의무)에 따라 응답 내용은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기관에 제공되는 일은 절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귀하께서 받으신 설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각각의 조사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활실태나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문항에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문지는 조사기준일(2023년 6월 1일) 현재 만18세~만 34세(1988년 6월 2일 ~ 2005년 6월 1일)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아래 사항은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면접원 ID	면접원 이름	응답자 이름			
주소(구/동)	시/도 구/시/군	동/읍/면	접촉구 일련번호		
응답자 연락처	() - () - ()	생년월일	년	월	일
주택 유형	1. 단독 주택 2. 아파트 3. 연립/다세대주택 4. 기타(적용 것 :)				

구 분	남 성	여 성	합 계		
총 가구원 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가구원 수					
가구당 조사표 부수	조사대상 가구원 수 총 ()부 중 ()부 진행				

* 조사원: 동일 가구인 경우라도 모든 설문지 표지에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미진행 가구원 사유		유져조사 진행 여부 ※ 해당되는 모든 내용에 표시 ('① 직접 만나서 조사'의 경우 중복응답 불가)	① 직접 만나서 조사 ② 설문 회수 시 만남 ③ 회수 후 전화로 응답확인 ④ 유져조사
------------	--	--	--

* 성별을 꼭 표시한 후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	------	------

조사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 수행기관 (주)한글리서치
 조사문의 이00 02-3014-0000 / 김00 02-3014-0000 / 이00 02-3014-0000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귀하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귀하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만일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면접원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시하는 방법1

대부분은 주된 응답 한 가지만 고르는 문항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응답에 동그라미(O)로 표시해 주세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표로 구성된 질문은 ①에서 ⑤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다'면 ②에, '보통이다'면 ③에, '그렇다'면 ④에, '매우 그렇다'면 ⑤에 동그라미(O)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표시하는 방법2

숫자를 기입해야 할 때는 박스 안에 한 자리씩 기입해 주세요.

<보기2>

문A.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의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명)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3>과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O)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수정액 등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3>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4>

문B. 귀하는 해외이주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B-1로 이동** ② 없다 → **문C로 이동**

☞ 나는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적이 있어서 '①'에 표시한 후, **문 B-1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 설명문 반드시 참

질문 아래 설명문(응답 기준, 용어 설명 등)이 있는 경우, 설명문을 읽고 응답해 주세요.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보기5>

문C.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① 예 → **문C-1로 이동** ② 없다 → **문D로 이동**

1. 먼저 「인구와 가족」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 귀하는 아등, 청소년, 청년의 연령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 등 : 만 세 ~ 만 세
- 청소년 : 만 세 ~ 만 세
- 청 년 : 만 세 ~ 만 세

문2)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귀하에게 현재의 삶은 어떤 의미를 지닌 시기입니까?

현재의 삶은 나에게...	전혀 동의하지 않음	거의 동의하지 않음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가능성이 많은 시기	①	②	③	④
(2) 탐색하고 탐험하는 시기	①	②	③	④
(3)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	①	②	③	④
(4) 압박을 많이 받는 시기	①	②	③	④
(5) 나를 정의하고 규정하는 시기	①	②	③	④
(6)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결정하는 시기	①	②	③	④
(7) 한편으로는 성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시기	①	②	③	④
(8) 조금씩 성인이 되어가는 시기	①	②	③	④

문3)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약간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부모나 타인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	①	②	③	④
(2) 부모(보호자)와 함께 살지 않는 것	①	②	③	④
(3) 학교교육을 마치는 것	①	②	③	④
(4) 결혼을 하는 것	①	②	③	④
(5) 최소한 한 명의 자녀를 두는 것	①	②	③	④
(6) 장기적으로 하게 될 일을 시작하는 것	①	②	③	④
(7) 주택 구입	①	②	③	④
(8)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9) 음주가 허용되는 것	①	②	③	④
(10) 선거에 참여하는 것	①	②	③	④

문11) 귀하는 추후 대학원에 진학할 의사가 있습니까?

 대학원에 진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 '③ 대학원에 진학을 하였다' 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예 - **문14로 이동** ② 아니오 - **문14로 이동** ③ 대학원에 진학을 하였다

문11-1) 대학원에 진학하셨다면 최종 또는 현재 학위과정은 무엇입니까?
 ① 석사과정 ② 박사과정 ③ 석·박사 통합과정

문11-2)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이십니까?
 * 대학원을 중퇴한 경우에는 '② 휴학' 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재학 ② 휴학(중퇴 포함) ③ 수료 ④ 졸업

→ **응답 후 문14로 이동**

* 다음(문12-문13)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분(고졸 이하 및 재학생 등 비진학자)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12) 귀하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고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해서 ②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③ 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④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⑤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⑥ 고등학교 시절, 졸업 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⑦ 기타(적을 것 : _____)

문13) 귀하는 추후 대학에 진학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14) 귀하는 고등학교를 다니셨습니까?(혹은 다니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문15로 이동**

문14-1) 다니셨던(혹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학교 유형이 바뀐 경우, 다녔을 당시를 기준으로 응답 해 주세요)

① 일반고 ② 자율형고(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③ 특성화고(공고, 상고, 실업고, 전문계고 등) ④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특목고)
 ⑤ 과학/영재고(특목고) ⑥ 외국어/국제고(특목고)
 ⑦ 예술/체육고(특목고) ⑧ 기타(적을 것 : _____)

문14-2) 다니셨던(혹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경험했던 부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있다	없다	해당 사항 없음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
(1) 나는 수업시간에 차별을 경험하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수업시간 외에 학교생활 중에 차별을 경험하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집회나 형의 표시(대자보 등)에 제한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5) 나는 학교의 의사결정 참여에 제한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III. 다음은 「경제와 고용」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8) 한 달 생활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가족을 제외한 본인 생활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생활비 포함 내용: 식비, 교통비, 통신비, 문화생활비(오락, 문화생활, 도서구입 등), 학원수강비, 시험응시료, 취업
을 위한 도서 등 자료 구입비, 주거비 등으로 대학 등록금은 포함하지 않음

약 만원

문18-1) 생활비 중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약 %

문19)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지원(금전적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경제적 지원(금전적 지원)에는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의 생활비(문18)를 포함하며
주택 관련 전/월세 보증금 및 주택 구입 시 대금 지원과 일시적으로 받은 용돈, 축하금도 포함됩니다.
대학교 등록금 지원을 받은 것과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대한 증여도 경제적 지원에 포함됩니다.

현재 혼인 상태이신 경우 본인의 부모님과 더불어 배우자의 부모(처가, 시댁)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우
경제적 지원 경험을 '있었다' 로 응답 해 주십시오.

- ① 없다 → 문20으로 이동 ② 있다 → 문19-1로 이동

문19-1) 지난 1년 간 귀하의 전체 소득(세후 기준)과 부모님(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은 얼마나 되십니까?

문항	비용(만원)
1. 지난 1년간 전체 소득(근로소득, 금융소득 등을 포함한 세후 기준)	연간 ()만원
2. 지난 1년간 부모님으로부터 지원 받은 액수	연간 ()만원

문20) 귀하는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부업체, 또는 개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학자금 대출 포함)가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문21로 이동

문20-1)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부업체 또는 개인에게 채무가 발생하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

- ① 학자금 마련 ② 주거비 마련(전·월세자금 대출 등)
③ 생활비 마련(식비, 의료비 등) ④ 창업 자금 마련
⑤ 기타(적용 것 : _____)

문20-2) 귀하는 어느 기관을 통해 돈을 빌리셨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은행 ② 제2금융권 ③ 대부업체 ④ 기타(적용 것 : _____)

문21) 귀하는 **지난 1년간(2022년 6월-2023년 5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현재 부모님 및 친척 등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주거비용 및 냉/난방비 지출에 대해 본인이 모를 경우만 (1), (2)에 '㉠ 잘 모름'에 체크)

구분	예	아니오	잘 모름
(1)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①	②	㉠
(2)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①	②	㉠
(3)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①	②	/
(4)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①	②	/
(5)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①	②	/
(6)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
(7)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
(8)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
(9)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

문22) 귀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현재 귀하의 취업상태와 상관없이, 귀하가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 - **문장으로 이동**

② 아니오

문22-1)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대기업보다 낮은 성취감 | ② 관련된 여러 업무 경험이 부족 |
| ③ 고용 불안정 | ④ 사회적으로 낮은 인지도 |
| ⑤ 낮은 급여 수준 | ⑥ 대기업으로의 이직이 불가능 |
| ⑦ 개인의 발전가능성이 없음 | ⑧ 대기업보다 낮은 복지 수준 |
| ⑨ 기타(적은 것 : _____) | |

문23) 창업을 해 보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창업을 생각해보았고 실제로 창업을 했다
- ② 창업을 생각해보았으나 실제로 창업을 해 본 적은 없다
- ③ 창업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문24) 귀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특례 이전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 포함)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 *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존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한 제도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임
- * 국민취업지원제도 통합 이전에 청년 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참여한 경험이 있을 경우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

- ① 참여하고 있다 → 문24-1로 이동
- ② 참여한 적이 있다 (참여년도: 년)
- ③ 참여한 적이 없다 → 문24-3으로 이동

문24-1) (문24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특례, 이전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포함) 참여는 귀하의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 → 문24-2로 이동
- ② 별로 도움 되지 않았다
- ③ 보통이다.
- ④ 조금 도움이 되었다 → 문25로 이동
- ⑤ 많은 도움이 되었다

문24-2) (문24-1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이유 모두 선택)

- ① 지원이 채감되지 않아서
 - ② 지원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 ③ 지원받는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서
 - ④ 지원기관 또는 담당자의 지원이 적절하지 못해서
 - ⑤ 지원받기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되어서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 응답 후 문25로 이동

문24-3) (문24에서 ③으로 응답한 경우) 귀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특례, 이전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포함)을 알고 계시고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 참여할 의향은 있었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참여할 수 없었던 경우는 '②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 로 응답해 주세요.
- ① 알고 있고 참여할 의향이 있다
- ②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지원대상 해당되지 않음)
- ③ 모름다

문25) 귀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 *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지 6개월 이내인 만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2~3년간 300~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 매칭으로 1,600~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
-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지 6개월이 넘은 청년이 5년 근속 시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업

- ① 참여하고 있다 } → 문25-1로 이동
- ② 참여한 적이 있다 (참여년도: 년) } → 문25-1로 이동
- ③ 참여한 적이 없다 → 문25-3으로 이동

문25-1) (문25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청년 내일채움공제 참여는 귀하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 } → 문25-2로 이동
- ② 별로 도움 되지 않았다 } → 문25-2로 이동
- ③ 보통이다.
- ④ 조금 도움이 되었다 } → 문26으로 이동
- ⑤ 많은 도움이 되었다 } → 문26으로 이동

문25-2) (문25-1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이유 모두 선택)

- ① 지원이 채감되지 않아서
 - ② 지원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 ③ 지원받는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서
 - ④ 지원기관 또는 담당자의 지원이 적절하지 못해서
 - ⑤ 지원받기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되어서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 응답 후 문26으로 이동

문25-3) (문25에서 ③으로 응답한 경우) 귀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알고 계시고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 참여할 의향은 있었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참여할 수 없었던 경우는 '②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 로 응답해 주세요.
- ① 알고 있고 참여할 의향이 있다
- ②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지원대상 해당되지 않음)
- ③ 모름

문26) 귀하는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청년도전지원사업: 6개월 동안 취업 및 직업훈련 참여이력이 없는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역량강화 및 심리정서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수 완료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지원사업
 * 주요 지원 대상 : ① 6개월 이상 취업, 직업훈련에 참여한 적이 없는 만18세~34세 청년, ②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③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생활한 적이 있는 청소년 등

- ① 참여하고 있다 → 문26-1로 이동
- ② 참여한 적이 있다 (참여년도: 년) →
- ③ 참여한 적이 없다 → 문26-3으로 이동

문26-1) (문26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취업역량강화 또는 심리정서적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 → 문26-2로 이동
- ② 별로 도움 되지 않았다 →
- ③ 보통이다 →
- ④ 조금 도움이 되었다 → 문27로 이동
- ⑤ 많은 도움이 되었다 →

문26-2) (문26-1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이유 모두 선택)

- ① 프로그램의 기간 때문에(짧거나 길어서)
 - ② 거리 때문에(집에서 멀어서 등)
 - ③ 담당자가 불친절해서
 - ④ 프로그램 참여 후 수당이 적어서(20만원)
 - ⑤ 프로그램 참여 후 취업 지원을 받지 못해서
 - ⑥ 프로그램 참여 후 취업 지원을 받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서
 - ⑦ 프로그램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 ⑧ 기타(적용 것 : _____)
- **정답 후 문27로 이동**

문26-3) (문26에서 ③으로 응답한 경우) 귀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알고 계시고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참여할 의향은 있었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참여할 수 없었던 경우는 '②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 로 응답해 주세요.

- ① 알고 있고 참여할 의향이 있다
- ②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지원대상 해당되지 않음)
- ③ 모름이다

※ 현재 일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일자리가 있는 경우 (문28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 응답해 주십시오.

문29) 다음은 **지난주(2023년 5월25일~5월31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거나 휴가 및 일시 휴직 상태였던 현재 일 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 ☞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지난주에 가장 많은 시간동안 일을 한 일자리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시간이 동일할 경우 임금이 많은 일자리, 시간과 임금이 동일한 경우 최근에 시작한 일자리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 사업체란 기업체보다 작은 단위의 개념으로 조사대상자가 직접 일하고 있는 직장을 의미함. 예) ○○은행 △△동 지점에 근무하는 경우, 기업체인 ○○은행 전 사원 수 15,000명 기준이 아닌 △△동 지점의 인원 수 20명을 기준으로 응답

구분	내용		
(1) 일을 시작한 시기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월	
(2) 근속년수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개월	
(3) 종사상 지위	① 임금 근로자	② 비임금 근로자	
(4) 고용형태	① 정규직	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② 비정규직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③ 무급가족종사자	
(5) 근로시간 유형	① 전일제	② 시간제	
(6) 직업 (별첨자료 참조)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차기계 조작및조립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직업군인	⑪ 기타()	
(7) 직장 유형	①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② 외국인회사	
	③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기업	④ (재단, 사단)법인단체	
	⑤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⑥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⑦ 기타 ()		
(8) 종사자 수 (사업체* 기준)	① 1-4인	② 5-9인	③ 10-29인
	④ 30-99인	⑤ 100-299인	⑥ 300-499인인
	⑦ 500인 이상		
(9) 현재 직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내용의 직무 수준은			
(9-1) 나의 교육수준보다	① 낮다	② 유사하다	③ 높다
(9-2) 나의 기술수준보다	① 낮다	② 유사하다	③ 높다
■ (9-3)번은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분(문10 '① 있다' 응답)만 응답해 주십시오.			
(9-3) 나의 전공분야와 (*대학진학 경험자)	① 일치한다	② 불일치한다	
(10) 귀하는 현재 일자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싫어한다	② 싫어한다	③ 약간 싫어한다
	④ 보통이다	⑤ 약간 좋아한다	⑥ 좋아한다
	⑦ 매우 좋아한다		

* 다음(문33-문35)은 임금근로자의 현재 일자리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취업 상태인 임금근로자(문29-3)의 ①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33) 귀하의 현재 직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직장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근로자의 존엄성이 침해되거나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 업무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9)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 (10)의 ‘위험한 근로환경’이란, 기계 등의 진동, 심한 소음, 알하지 않을 때조차 몸을 들릴 정도로 높은 온도, 실내/실외에 관계없이 낮은 온도, 연기, 먼지(목분진, 광물 분진 등) 등의 흡입, 신너 등 유기용제 증기 흡입, 화학제품/물질을 취급하거나 피부와 접촉, 다른 사람이 피는 담배연기, 폐기물, 체액, 실험물질 등 감염을 일으키는 물질을 취급하거나 직접 접촉하는 경우를 의미함.

문항	있다	없다	모르겠다
(1) 고용주, 직장상사 측은 동료가 과도한 업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일을 떠넘겼다.	①	②	③
(2) 고용주, 직장상사 측은 동료가 나에게 소리치거나 화를 내거나 모욕적인 욕설을 하거나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였다.	①	②	③
(3) 고용주, 직장상사가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임의적으로 강요하였다.	①	②	③
(4) 고용주, 직장상사 측은 동료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였다.	①	②	③
(5) 교육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 대우 등에서 나를 다른 동료들보다 불합리하게 차별하였다	①	②	③
(6)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요구할 수 없도록 임의적·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하거나 내 요구를 무시하였다(평가, 휴가, 휴직, 교육훈련 등)	①	②	③
(7) 나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 또는 행동을 했다 (이메일, 메시지, 전화 포함/성적 농담, 성추행 등 포함)	①	②	③
(8) 고용주, 직장상사 측은 동료가 업무 외의 대화나 식사, 모임 등에서 나를 조직적으로 제외하였다.	①	②	③
(9) 회사로부터 업무수행 중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인 및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혹은 교육을 받았다.	①	②	③
(10) 나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근로환경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었다.	①	②	③
(11) 업무수행 중 업무로 인하여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로 인해 다친 적이 있다.	①	②	③
■ (11)번에 ①있다 로 응답한 경우 (12)번을 응답, ②없다, ③모르겠다로 응답한 경우 문34로 이동 (12) 산업재해보험 급여(병원비,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보상금 등)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문34) 귀하의 현재 직장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본인을 포함하여 사내에서 발생한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 ① 있었다 → **문34-1로 이동**
- ② 없었다 → **문35로 이동**
- ③ 모르겠다 → **문35로 이동**

문34-1) 귀하의 현재 직장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했던 경우, 상담 또는 고충 처리 절차가 적절한 작동했습니까?

- ① 고충처리 부서가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다
- ② 고충처리 부서가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았지만,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다
- ③ 고충처리 부서가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았지만,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 ④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직장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였다

문35) 귀하의 현재 직장에는 다음과 같은 조직 혹은 제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 **노사협의회란?**
노동자 대표와 고용주 대표가 각각 동수로 구성된 기구로, 3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생산성 향상 및 성과배분, 근로자의 채용 배치, 교육훈련, 고충처리, 작업환경개선과 노동자의 건강증진, 인사 및 노무관리 개선,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작업및휴게시간의운용, 임금 지불방법 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등을 협의합니다.
- ☞ **업무 관련 제안제도란?**
업무혁신과 경영 효율화, 노동자 복리증진 등에 관련하여 직원이 의견을 개진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제출된 제안에 대해 절차를 거쳐 심사, 포상, 사내규정 재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 ☞ **조직적용 프로그램이란?**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 및 조직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문항	있다	없다	모른다
	①	②	③
(1) 노동조합	☞ ①있다 응답 시 문35-(3)업무 관련 제안제도로 이동	☞ ②없다, ③모른다 응답 시 문35-(2) 노사협의회로 이동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①
(2) ((1)노동조합 문항에서 ②, ③인 경우만 응답)	①	②	③
(3) 업무 관련 제안제도	①	②	③
(4) 조직적용 프로그램	①	②	③

→ **응답 후 41로 이동**

※ 현재 구직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일을 하지 않은 경우 (문28에서 ③으로 응답) 응답해 주십시오.

문36) 귀하는 지난 4주(2023년 5월 4일~5월 31일) 내에 직장(일자리)을 구해 보았습니까? (아르바이트, 창업준비도 포함됩니다.)

- ① 직장을 구해보았고,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 **문40으로 이동**
- ② 직장을 구해보았지만,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 → **문37로 이동**
- ③ 직장을 구해보지 않았다 → **문38로 이동**

문37) 귀하가 지난주(2023년 5월 25일~5월 31일)에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육아나 돌봄, 출산, 가사 활동으로 인해
- ② 질병이나 장애 때문에
- ③ 학교(정규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 ④ 입시학원, 취업준비를 위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 ⑤ 진학 준비 중이어서
- ⑥ 취업 준비 중이어서
- ⑦ 기타(적용 것 : _____)

→ **응답 후 40으로 이동**

문38) 다음의 각 항목이 지난주(2023년 5월 25일~5월 31일)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에 해당되는지 응답해 주세요.

구분	예	아니오
(1)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1)	(2)
(2)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	(1)	(2)
(3) 여행이나 문화예술행사, 취미활동을 위해서	(1)	(2)
(4) 시간적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1)	(2)
(5) 육아나 돌봄, 가사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야 해서	(1)	(2)
(6) 질병이나 지병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	(1)	(2)
(7) 학교(정규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1)	(2)
(8) 입시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1)	(2)
(9) 학원에 다니지 않고 진학준비 중이어서	(1)	(2)
(10)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통학 중이어서	(1)	(2)
(11)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고 취업준비 중이어서	(1)	(2)
(12) 군 입대 대기 중이어서	(1)	(2)
(13) 학교와 학원 입학 혹은 직업훈련기관 통학 대기 중이어서	(1)	(2)
(14) 계속 취업에 실패해서	(1)	(2)
(15)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1)	(2)
(16)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1)	(2)
(17) 기타(적용을 것 : _____)	(1)	(2)

문38-1) 위의 항목에서 '예' 로 응답한 항목 중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하나만 선택)

()번 → 문38-(7)에 '0예'를 선택한 경우 문41로 이동, 그 외 번호는 문39로 이동

문39) 귀하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하는 항목 한 가지만 선택 후, 응답해 주십시오)

선택(V)	비교육 및 미취업 기간
(1) 1개월 미만 ()	()일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5일)
(2) 1개월 이상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3개월)
(3) 1년 - 2년 미만 ()	()년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년 6개월)
(4) 2년 이상 ()	()년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2년 6개월)

■ 응답 후 문41로 이동

문40) 귀하가 구직활동을 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가장 최근 구직활동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하는 항목 한 가지만 선택 후, 응답해 주십시오)

선택(V)	구직활동 기간
(1) 1개월 미만 ()	()일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5일)
(2) 1개월 이상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3개월)
(3) 1년 - 2년 미만 ()	()년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년 6개월)
(4) 2년 이상 ()	()년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2년 6개월)

■ 응답 후 문41로 이동

※ 다음(문41~문43)은 이전 일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대상자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41) 귀하는 취업 후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② 해고를 당한 적이 있다' 로 응답 해 주세요.

- ① 스스로 그만둔 적이 있다
 - ② 해고를 당한 적이 있다
 - ③ 둘 다 경험한 적이 있다
 - ④ 둘 다 경험한 적이 없다
- } → 문42로 이동
- } → **해당 이동 로직에 따라 이동**

④ 둘 다 경험한 적이 없다 로 응답한 경우

지난주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거나 휴가 및 일시 휴직이었던 경우(문28-①, ②) → 문44-1-1로 이동

지난주에 일을 하지 않은 경우 (문28-③) → 주거영역(문46)으로 이동

문42) 직장을 그만두었을 당시, 실업급여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 ① 예 → 문43로 이동
- ② 아니오 → **해당 이동 로직에 따라 이동**

② 아니오 로 응답한 경우

지난주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거나 휴가 및 일시 휴직이었던 경우(문28-①, ②) → 문44-1-1로 이동

지난주에 일을 하지 않은 경우 (문28-③) → 문44-1-2로 이동

문43) 귀하는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해당 이동 로직에 따라 이동**
- ② 아니오

문43-1)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실업급여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 ②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 ③ 절차가 복잡해서, 요구사항이 많아서
- ④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혜택이 크지 않아서
- ⑤ 신청 도중에 취업이 되어서
- ⑥ 기타(적용 것 : _____)

→ **해당 이동 로직에 따라 이동**

문43-① 예로 응답 또는 문43-1 응답 후,

지난주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거나 휴가 및 일시 휴직이었던 경우(문28-①, ②) → 문44-1-1로 이동

지난주에 일을 하지 않은 경우 (문28-③) → 문44-1-2로 이동

※ 문44-1-1~문45은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 관련 문항입니다.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란

- 최종 학교 졸업 후(예: 대학교 재학 중이면 고등학교 졸업 기준)
-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거나 가족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주 18시간 이상 일을 한 일자리 중 첫 번째 일자리를 의미 합니다.

학교 입학 전, 재학 중에 해당 일자리를 시작했더라도 졸업 후까지 계속 일했다면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에 해당됩니다.

문44-1-1) 귀하의 현재 일자리가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와 일치합니까?

- ① 예 - **주거영역(문46)으로 이동**
- ② 아니오 - **문44-1-2로 이동**

문44-1-2) 귀하의 이전 일자리 경험 가운데, '졸업 후 첫 일자리' 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있습니까?

- ① 예 - **문45로 이동**
- ② 아니오 - **주거영역(문46)으로 이동**

IV. 다음은 「주거」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 문46~문47는 평소 집에 대해 귀하께서 갖고 계신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46)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은 꼭 있어야 한다' 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문46-1로 이동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문47로 이동
- ④ 그렇다 → 문46-2로 이동
- ⑤ 매우 그렇다

문46-1) '내 명의의 집이 있어야 한다' 는 의견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그렇지 않다 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주시시오)

- ① 높은 집값 때문에
- ② 자가마련을 위해 현재의 삶을 회생하고 싶지 않아서
- ③ 자산 증식 및 보전 수단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 ④ 이사를 자주 해야 할 상황이라서
- ⑤ 자가 보유 여부보다는 기주의 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 응답 후 문47로 이동

문46-2) '내 명의의 집이 있어야 한다' 는 의견에 대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 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주시시오)

- ①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 ② 이사하지 않고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어서
- ③ 자산 증식 및 보전을 위해서
- ④ 자가가 있어야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 ⑤ 집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문47)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문51) 귀하는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 주거비지원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 청년 전·월세지원: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을 위하여 전세대출 및 월세대출 조건을 완화하여 저소득 청년의 주거 부담 대충한도 상환하는 사업

- ① 참여하고 있다 - 문51-1로 이동
- ② 참여한 적이 있다 (참여년도: 년) - 문51-3으로 이동
- ③ 참여한 적이 없다

문51-1) (문51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청년 주거비지원 사업은 주거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 - 문51-2로 이동
- ② 별로 도움 되지 않았다
- ③ 보통이다
- ④ 조금 도움이 되었다 - 문52로 이동
- ⑤ 많은 도움이 되었다

문51-2) (문51-1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이유 모두 선택)

- ① 지원이 체감되지 않아서
 - ② 지원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 ③ 지원받는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서
 - ④ 지원기관 또는 담당자의 지원이 적절하지 못해서
 - ⑤ 지원받기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되어서
 - ⑥ 기타(적용 것 : _____)
- 응답 후 문52로 이동

문51-3) (문51에서 ③으로 응답한 경우) 귀하는 청년 주거비지원 사업을 알고 계시고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참여할 의향은 있었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참여할 수 없었던 경우는 '②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 로 응답해 주세요.

- ① 알고 있고 참여할 의향이 있다
- ②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지원대상 해당되지 않음)
- ③ 모름이다

문52) 귀하는 다음의 청년 주거 정책 중 무엇을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청년 주택공급 정책(청년 행복주택,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청년 공공지원주택 등)
- ②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청년 전·월세지원)
- ③ 청년 주거환경 개선 정책(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등)
- ④ 대학기숙사 공급 및 기숙사비 지원 정책(기숙사형 청년주택, 행복기숙사 등)
- ⑤ 기타(적용 것 : _____)

문53) 귀하의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 ① [동거] 현재 같이 살고 있다 → **김강영역(문53)으로 이동**
- ② [비동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학업, 군복무, 직장 등의 이유로 떨어져 지내는 경우)
- ③ [독립]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독립한 상태이다(결혼, 장성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

문53-1) (문53에서 ②,③ 응답자만) 귀하의 현재 미혼으로 혼자 거주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54) 귀하의 현재 주거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원룸(다가구) : 전체 집이 1인 개인 명의로 된 집으로 방 하나가 침실, 거실, 부엌을 겸하도록 설계된 집
- ② 아파트
- ③ 다세대/빌라 : 공동주택의 일종, 개별 방마다 소유주가 다른 경우
- ④ 오피스텔 : 세탁기, TV, 냉장고 등이 비치되어 있으며 관리인이 있는 경우
- ⑤ 하숙
- ⑥ 기숙사
- ⑦ 고시원
- ⑧ 단독주택
- ⑨ 기타 : 일반주택의 방 하나만 임대, 지역운영회사 등

문55) 귀하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점유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자가
- ② 전세
- ③ 보증금이 있는 월세
- ④ 보증금이 없는 월세
- ⑤ 사갈세, 연세, 일세 등
- ⑥ 무상

문56) 주거비용 마련은 누가 하셨습니까?

- 주거비용은 자기인 경우 구입 비용, 전세인 경우 전세금, 보증금 있는 월세의 경우 보증금 및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의 경우 월세 등을 의미함
- 금융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출을 누가 갚느냐를 기준으로 응답함

- ① 전부 본인 스스로
- ② 본인이 대부분 마련하고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일부 도움
- ③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대부분 마련해주시고 본인이 일부 도움
- ④ 전부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마련해 주심 → **김강영역(문58)으로 이동**
- ⑤ 기타(적용 것 : _____)

문57) 주거비용 마련을 위해 본인 명의로 금융대출을 받으셨습니까?

① 대출을 받았음

② 대출을 받지 않았음 → **건강보험(문58)으로 이월**

문57-1) (문57에서 ① 응답자만) 주거비용 중 본인 명의로 받은 금융대출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 ① 10% 미만
- ② 10% 이상 30% 미만
- ③ 30% 이상 50% 미만
- ④ 50% 이상 70% 미만
- ⑤ 70% 이상 90% 미만
- ⑥ 90% 이상
- ⑦ 모름

V. 다음은 「건강」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58) 귀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문59) 귀하는 지난 1년간(2022년 6월~2023년 5월) 건강검진(종합건강검진 혹은 일반건강검진 모두 해당)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60) 귀하는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 ① 병원 진찰 후 치료 받음 - 문61로 이동
- ②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름
- ③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 - 문60-1로 이동
- ④ 기타(적용 것 : _____)

문60-1) (문60에서 ②,③,④ 응답자만) 귀하가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 ②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 ③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서
- ④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 ⑤ 기타(적용 것 : _____)

문61) 귀하는 지난 2주 간 일상생활을 보내면서 다음 각 문항들에 대해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의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62)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 ☞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 ☞ 하루에 여러번 했더라도 1일 1회를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 문63로 이동

문62-1)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 ① 일주일에 1번
- ② 일주일에 2번
- ③ 일주일에 3번
- ④ 일주일에 4번
- ⑤ 일주일에 5번
- ⑥ 일주일에 6번
- ⑦ 매일

문63) 귀하는 다음 삶의 영역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을 듣는 즉시 떠오르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1) 생활수준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건강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삶에서 성취한 것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가족 관계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친구 관계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일반적 대인 관계 (학교, 직장, 동네에서의 인간 관계)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삶 전반에서의 안전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미래 안정성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9) 시간적 여유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0) 내가 살고 있는 동네환경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1) 전반적인 나의 인생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VI. 다음은 「가치관과 관계」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64) 다음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양 쪽의 표현을 보고, 귀하가 더 선호하는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 목	선호 정도							항 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일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여가 중시
(2) 현실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상 중시
(3) 결과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과정 중시
(4) 개인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집단 중시
(5) 타인의 이복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자신의 주관 중시

문65)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재산·경제력
- ② 화목한 가정
- ③ 자아성취
- ④ 건강
- ⑤ 감사·긍정적 태도
- ⑥ 종교생활
- ⑦ 직업·직장
- ⑧ 연인(이성관계 등)
- ⑨ 친구·대인관계
- ⑩ 꿈·목표의식
- ⑪ 기타(적용 것 : _____)

문66)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문67) 귀하는 평소 얼마나 외출하십니까?

- 직장, 학교가 아니라도 학원, 독서실 등을 매일 다닌다면 ①에 해당됩니다.
- 평소에는 직장 출퇴근, 학교 통학으로 외출을 하나 일시적으로 재택근무나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외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소 기준에 맞게 외출(① 또는 ②)에 해당됩니다.

- ①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
 - ②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 ③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 ④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 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 ⑥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 ⑦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 ⑧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 문68로 이동
- 문67-1로 이동

문67-1) (문67에서 ⑤, ⑥, ⑦, ⑧ 응답자만) 현재의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 ① 6개월 미만
- ②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③ 1년 이상 ~ 3년 미만
- ④ 3년 이상 ~ 5년 미만
- ⑤ 5년 이상 ~ 7년 미만
- ⑥ 7년 이상

문67-2) (문67에서 ⑤, ⑥, ⑦, ⑧ 응답자만) 현재의 상태가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① 학업중단이나 내학진학 실패로
- ②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
- ③ 인간관계가 잘되지 않아서
- ④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 ⑤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 ⑥ 기타()

문68)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이 있으십니까?

문항	없다	있다
(1) 취업이나 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①	②
(2) 나에게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관련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①	②
(3)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하는 경우,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①	②
(4)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①	②
(5)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큰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①	②
(6)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①	②
(7) 내가 갑자기 연락 두절되었을 때, 나의 안부(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	①	②

문69) 귀하는 다음의 각 집단의 사람들과 직접 만나는 대면 형태로 평소 얼마나 자주 교류하십니까?

☞ 교류란 다른 사람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의사소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같은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든 일주일에 매일 같이 사람들과 만난다면 '거의 매일' 로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문항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1) 가족들과의 대면 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2) 친인척들과의 대면 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3)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 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4) 이의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대면 교류 (업무 상 교류 제외)	①	②	③	④	⑤	⑥
(5) 온라인 커뮤니티, SNS로 알게 된 사람들과의 대면 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문70) 귀하는 다음의 각 집단의 사람들과 인터넷(SNS), 전화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평소 얼마나 자주 교류하십니까?

☞ 교류란 다른 사람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의사소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같은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든 일주일에 매일 같이 온라인으로 연락한다면 '거의 매일' 로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문항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1) 가족들과의 비대면 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2) 친인척들과의 비대면 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3)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비대면 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4) 이의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비대면 교류 (업무 상 교류 제외)	①	②	③	④	⑤	⑥
(5) 온라인 커뮤니티, SNS로 알게 된 사람들과의 비대면 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문71) 다음 문항을 읽고 얼마나 자주 이러한 감정을 느끼시는지 응답해주시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친구관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다른 사람들로 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 문71-(4)에 ②, ③, ④를 선택한 경우 문72로 이동, 그 외는 문73으로 이동

문72) (71-(4)번의 ②, ③, ④인 경우만 응답)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라는 감정을 느끼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① 6개월 미만
- ② 6개월 이상 1년 미만
- ③ 1년 이상 2년 미만
- ④ 2년 이상 3년 미만
- ⑤ 3년 이상

문73)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본인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령, 성별 등에 상관없이 가족 및 친지, 지인, 선생님 등 모든 대상이 포함됩니다)

① 없다

② 있다 (명)

문74) 귀하는 살아오면서 현재까지 6개월 이상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은 상태로 방이나 집에서 주로 활동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거의 맺지 않은 채 생활한 경험(은둔 경험)이 있습니까?

☞ 학업, 업무, 건강, 출산 등 특정한 목적 또는 사유로 인해 방 또는 집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① 없다

☛ 문75로 이동

② 과거에는 은둔 생활을 한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

☛ 문74-1로 이동

③ 현재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

☛ 문74-1로 이동

문74-1) (문74에서 ②, ③ 응답자만) 과거 혹은 현재의 은둔 생활을 지속한 기간은 총 얼마입니까?

① 6개월 이상 ~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3년 미만

③ 3년 이상 ~ 5년 미만

④ 5년 이상 ~ 7년 미만

⑤ 7년 이상

Ⅶ. 다음은 「참여와 권리」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75) 사회·정치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항목에 대해 귀하는 **지난 1년간(2022년 6월~2023년 5월)**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 항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①	②	③	④	⑤
(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밋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	①	②	③	④	⑤
(3) (온·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4) 상품 구매 운동하기	①	②	③	④	⑤
(5)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6) 항의 전파하기	①	②	③	④	⑤

문76) 귀하의 정치 참여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단약 정치 참여에 적극적인 경우라면 다른 청년들이 정치 참여를 어려워하는 이유를 선택 해 주세요.)

- ① 시간이 부족해서
- ② 정치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
- ③ 정치 문제들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 ④ 나의 진로나 스펙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 ⑤ 정치 문제들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서
- ⑥ 정부 및 국회, 공공기관에 대해 신뢰하지 않아서
- ⑦ 청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 ⑧ 기타(적을 것: _____)

문77)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78) 귀하는 지난 2022년(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셨습니다?

- ① 참여했다
- ② 참여하지 않았다
- ③ 투표권 없었다

문79) 귀하는 아래에 제시된 정치적 활동에 앞으로 참여할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 이 문항에서의 투표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교육감 선거 등을 포함합니다.

문 항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1) 투표 참여	①	②	③	④
(2) 투표하기 전 후보자에 대한 정보 수집	①	②	③	④

문80) 귀하는 다음의 기관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문항	전혀 신뢰하지 않음	신뢰하지 않음	신뢰함	매우 신뢰함	잘 모름
(1) 종교기관	①	②	③	④	⑤
(2) 군대	①	②	③	④	⑤
(3) 언론사	①	②	③	④	⑤
(4) 노동조합	①	②	③	④	⑤
(5) 경찰	①	②	③	④	⑤
(6) 법원	①	②	③	④	⑤
(7) 행정부	①	②	③	④	⑤
(8) 국회	①	②	③	④	⑤
(9) 대학	①	②	③	④	⑤
(10) 대기업	①	②	③	④	⑤
(11) SNS(소셜미디어)	①	②	③	④	⑤
(12) 환경단체	①	②	③	④	⑤
(13) 자선단체	①	②	③	④	⑤
(14) 여성단체	①	②	③	④	⑤

문81) 귀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이민 오는 것을 얼마나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	아주 약간만 허용한다	어느 정도 허용한다	가능한 많이 허용한다
(1) 외국에 있는 우리 민족 후손들(예: 고려인, 조선족 등)	①	②	③	④
(2) 우리 민족이 아닌 외국인이나 소수민족	①	②	③	④
(3) 빈곤국가(가난한 나라)의 사람들	①	②	③	④

문82) 귀하는 다음과 같은 단체(모임)에 지난 1년간(2022년 6월-2023년 5월)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항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1) 여가활동(취미 및 스포츠) 모임	①	②	③	④	⑤
(2) 친목 및 친교(동창, 향우회 등) 모임	①	②	③	④	⑤
(3) 자기계발 모임 및 그룹 스터디	①	②	③	④	⑤
(4) 종교모임	①	②	③	④	⑤
(5) 시민사회 단체(NGO, NPO 등)	①	②	③	④	⑤
(6) 지역사회 모임(반상회, 주민협회 등)	①	②	③	④	⑤
(7) 학술단체	①	②	③	④	⑤
(8) 정당 및 정치단체	①	②	③	④	⑤
(9) 노동조합	①	②	③	④	⑤
(10) 기타(적을 것:)	①	②	③	④	⑤

문83) 귀하는 청년 자율예산제(참여예산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청년 자율예산제(참여예산제)는 지역사회(시도, 시군구)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① 모른다

■ 문84-1로 이동

② 안다

■ 문83-1로 이동

문83-1) (문83에서 ② 응답자만) 귀하는 청년 자율예산제(참여예산제)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문84)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에 다니지 않는 등 아래 사항 중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에 표기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받는 편이다	해당사항 없음
(1) 가정	①	②	③	④	
(2) 학교	①	②	③	④	⑨
(3) 직장	①	②	③	④	⑨
(4) 우리나라 전체	①	②	③	④	
(5)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공간	①	②	③	④	

문85) 귀하는 지난 1년간(2022년 6월~2023년 5월) 주위 사람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별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차별을 경험했습니까?

문항	한 번도 없음	1년에 1~2회	2~3개월에 1~2회	한 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이상	해당 없음
(1)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2)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3)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4)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6)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8) 어머니 아빠가 안 계시거나 조손가정(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거주)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⑨
(9) 아동복지시설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⑨
(10)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⑨
(11) 이주배경 가정(다문화, 북한이탈, 중도입국)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⑨

문86)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2)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3) 모든 면에서 성별에 상관없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4)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 기회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5) 청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은 학교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문87) 귀하는 2022년 한 해 동안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정책 사업에 참여 혹은 지원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귀하가 참여 혹은 지원을 받으셨던 사업의 주관 기관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복수응답 가능)

중앙정부 정책 사업 :

중앙정부 청년참여기구(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보좌역, 청년참여단, 온라인청년매달, 2030청년자문단 등) 참여
 국민청원, 국민동의청원, 국민제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의견 제안 및 동의
 중앙정부 청년 온라인플랫폼(온라인청년센터, 청년포털 등) 접속 및 상담, 참여
 정부 주최 청년공모사업 참여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사업 :

지자체 청년참여기구(시도시군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원탁회의 등) 참여
 지자체 청년 온라인플랫폼(서울시 청년융합정보통, 경기청년포털 등) 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
 지자체 청년센터(청년 공간) 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
 청년 지역공동체 사업(청년 지역공동체, 청년미음 만들기, 청년 두레, 청년 지립미음,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티브) 참여,
 지자체 주최 청년공모사업에 참여

- ① 중앙정부(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처,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 ② 광역지자체(서울시청, 경기도청 등 특별시청·광역시청·도청 및 산하 공공기관 등)
- ③ 기초지자체(수원시청, 마포구청, 가평군청 등 시·군·구청 및 산하 공공기관 등)
- ④ 2022년 청년정책에 참여하지 않았다 → **문90로 이동**

문88) 귀하는 다음과 같은 청년 활동에 지난 1년간(2022년 6월-2023년 5월)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항		한 번도 없음	1년에 1-2회	2-3개월 에 1-2회	한 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이상
중앙 정부	(1) 중앙정부 청년참여기구(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보좌역, 청년 참여단, 온라인청년패널, 2030청년자문단 등) 참여	①	②	③	④	⑤
	(2) 국민청원, 국민동의청원, 국민제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의견 제안 및 동의	①	②	③	④	⑤
	(3) 중앙정부 청년 온라인플랫폼(온라인청년센터, 청년포털 등) 접속 및 상담, 참여	①	②	③	④	⑤
	(4) 정부 주최 청년공모사업 참여	①	②	③	④	⑤
	(5) 지자체 청년참여기구(시도·시군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 네트워크, 청년원탁회의 등) 참여	①	②	③	④	⑤
광역/ 기초 지자 체	(6) 지자체 청년 온라인플랫폼(서울시 청년롱텀정보통, 경기청년 포털 등) 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	①	②	③	④	⑤
	(7) 지자체 청년센터(청년 공간) 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	①	②	③	④	⑤
	(8) 청년 지역공동체 사업(청년 지역공동체, 청년마을 만들기, 청년 두레, 청년 자립마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등) 참여	①	②	③	④	⑤
	(9) 지자체 주최 청년공모사업에 참여	①	②	③	④	⑤

문89) 귀하가 2022년에 참여하신 청년정책은 어느 분야에 해당합니까? 참여하신 정책 분야를 모두 선택 해 주십시오.

분야	설명문
일자리	<p>청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취업지원제도 • 청년일자리사업 • 중소기업청장직접채용 • 중소기업청장직접채용 • 중소기업청장직접채용 • 중소기업청장직접채용 • 중소기업청장직접채용 <p>(1)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3) 청년의 일터 안전망 강화 (2)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4)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 문화 개선</p>
주거	<p>청년의 주거부담이 줄어듭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딤돌(보증금 대출) • 청년주택(보증금 대출) <p>(1) 청년 주택 공급 확대 (3) 고시원·반지하 거주 취약청년 집중 지원 (2) 청년의 전월세 비용 경감 (4)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p>
교육	<p>청년이 스스로의 삶을 그려갑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연계형 국가장학금 • 국가유수당학급 • 장학금 확대 •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확대 등 <p>(1) 고른 교육기회 보장 (3)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2)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4)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p>
복지·문화	<p>청년의 생활이 나아집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도양계획 • 청년복지서비스 • 청년건강지원사업 • 청년취업지원사업 • 청년고용카드 등 <p>(1)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3)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2) 청년건강 증진 (4)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p>
참여·권리	<p>청년의 삶을 청년이 직접 결정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년비 • 청년년비 • 청년년비 • 청년년비 2030자문단 등 <p>(1)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3)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2)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4)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p>

- ① 일자리
- ② 주거
- ③ 교육
- ④ 복지·문화
- ⑤ 참여·권리

문90)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귀하는 이와 같은 청년의 연령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 만19세~34세가 적절하다
- ② 만 19~39세로 개정이 필요하다
- ③ 만 15~29세로 개정이 필요하다
- ④ 기타 : 만 ()세부터 만 ()세로 개정이 필요하다

문91) 귀하는 **우리 사회의 청년세대(만 19~34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청년세대는 우리 사회의 주역이다	⑤	④	③	②	①
2. 청년세대는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⑤	④	③	②	①
3. 청년세대는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⑤	④	③	②	①
4. 청년세대는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	⑤	④	③	②	①

문92) 귀하는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만 35세 이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기성세대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	⑤	④	③	②	①
2. 기성세대는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⑤	④	③	②	①
3. 기성세대는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⑤	④	③	②	①
4. 기성세대는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	⑤	④	③	②	①

문93) 귀하는 **현재 청년세대(만 19~34세)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문94
- ② 별로 심각하지 않다 →문94
- ③ 보통이다 →문94
- ④ 대체로 심각하다 →문93-1
- ⑤ 매우 심각하다 →문93-1

문93-1) 귀하는 **현재 청년세대(만 19~34세)**가 어떤 부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최대 3개까지 선택 해 주세요.

- ① 일자리(취업, 창업, 근로 환경 등)
- ② 주거(주택 분양, 임대차 계약 등)
- ③ 교육(학자금, 진학, 미래역량교육 등)
- ④ 복지, 문화(자산형성, 마음건강, 취약계층 지원 등)
- ⑤ 참여, 권리(정책 결정, 시민 사회 참여, 지역 공동체 참여 등)
- ⑥ 청년 인프라(청년센터, 청년 지원 법령 등)
- ⑦ 기타()

문95) 귀하는 다음 분야별 청년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청년정책 분야		매우 공감 한다	공감하 다	약간 공감 한다	보통 이다	별로 공감 하지 않는 다	공감하 지 않는다	전혀 공감 하지 않는다
1.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실업률 낮추기 • 청년 창업 지원 • 청년 취업 지원 • 청년 고용 창출 • 청년 경력 개발 • 청년 직업 훈련 • 청년 해외 취업 지원 • 청년 창업 지원 • 청년 취업 지원 • 청년 고용 창출 • 청년 경력 개발 • 청년 직업 훈련 • 청년 해외 취업 지원 	7	6	5	4	3	2	1
2.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주택 공급 • 청년 임대료 지원 • 청년 주거 지원 • 청년 주택 지원 • 청년 임대료 지원 • 청년 주거 지원 • 청년 주택 지원 • 청년 임대료 지원 • 청년 주거 지원 • 청년 주택 지원 • 청년 임대료 지원 • 청년 주거 지원 • 청년 주택 지원 • 청년 임대료 지원 	7	6	5	4	3	2	1
3.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자금 지원 • 청년의 미래 역량 강화 • 교육 기회 확대 • 청년의 미래 역량 강화 • 교육 기회 확대 • 청년의 미래 역량 강화 • 교육 기회 확대 • 청년의 미래 역량 강화 • 교육 기회 확대 • 청년의 미래 역량 강화 • 교육 기회 확대 • 청년의 미래 역량 강화 • 교육 기회 확대 • 청년의 미래 역량 강화 	7	6	5	4	3	2	1
4. 복지·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출발 자산 형성 지원 • 청년 건강 증진 • 취약계층 지원 확대 •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지원 • 청년 건강 증진 • 취약계층 지원 확대 •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지원 • 청년 건강 증진 • 취약계층 지원 확대 •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지원 	7	6	5	4	3	2	1
5. 참여·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 청년정책 추진기관 투명성 확대 • 청년정책 추진기관 민관협력 강화 	7	6	5	4	3	2	1
6. 청년정책 전반		7	6	5	4	3	2	1

문96) 귀하는 다음 분야별로 정부가 청년정책을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 분야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약간 잘하고 있다	보통이다	약간 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매우 못하고 있다	잘 모른다
1.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 영향 강화 • 청년 창업 및 협동조합 지원 내실화 • 청년 안전산업 강화 • 청년 채용 기반 구축 지원 강화 개선 	7	6	5	4	3	2	1	0
2.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주택 공급 확대 • 임대료 전월세 비용 경감 • 주거 취약 청년층 지원 • 청년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7	6	5	4	3	2	1	0
3.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자금 지원 등 고등 교육 기회 보장 •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 콘텐츠 교육기반 구축 	7	6	5	4	3	2	1	0
4. 복지·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출발 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 청년 건강 증진 • 취약계층 지원 확대 •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지원 	7	6	5	4	3	2	1	0
5. 참여·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결정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 청년 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 청년 권익보호 및 민선교류 활성화 	7	6	5	4	3	2	1	0
6. 청년정책 전반	7	6	5	4	3	2	1	0

문97)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정책이 다음 중 어떤 집단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취약계층 비취업자(저학력, 저소득층 등)
- ② 구직 단념자
- ③ 경력 단절자
- ④ 지방 거주 청년
- ⑤ 고립·은둔 청년(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적 관계가 부재한 청년)
- ⑥ 이주배경 청년(다문화 가정 자녀, 북한 이탈 주민 자녀 등)
- ⑦ 자립준비 청년(아동양육시설, 위탁 가정 등 보호 종료 청년)
- ⑧ 가족돌봄 청년(질병, 장애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년)
- ⑨ 기타 ()

문98) 귀하가 생각하는 '공정성'이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
- ② 경쟁을 위한 자원 수단이 공정하게 주어지는 것
- ③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 것
- ④ 모든 과정/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지는 것
- ⑤ 모두에게 공정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
- ⑥ 기타()

문99) 귀하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공정하지 않다
- ② 별로 공정하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다소 공정하다
- ⑤ 매우 공정하다

문100) 다음 중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공정하지 않은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야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선택 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일자리
- ② 주거
- ③ 교육
- ④ 복지·문화
- ⑤ 참여와 권리
- ⑥ 기타()
- ⑦ 없음

문101) 다음 중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청년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채용비리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
- ② 국가자격시험 운영 실태 모니터링
- ③ 직무 능력·성과 중심 임금 보상 체계 개편
- ④ 공공분양·임대주택 개선헌 및 확대
- ⑤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
- ⑥ 부정입학·학사비리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
- ⑦ 장학금 등 취약계층 교육지원 강화
- ⑧ 복지제도 부정수급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
- ⑨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 문화 사각지대 해소
- ⑩ 청년정책 관련 정보제공 및 공간지원
- ⑪ 기타()
- ⑫ 없음

문102) 청년의 자립 및 사회적 성취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생각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우리 사회는 부모의 지원 없이도 노력만함 성공할 수 있다	(5)	(4)	(3)	(2)	(1)
2. 개인의 성공에는 가정환경보다 본인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	(5)	(4)	(3)	(2)	(1)
3.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재산, 인력 등의 자원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5)	(4)	(3)	(2)	(1)
4. 자녀가 취직, 창업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면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	(5)	(4)	(3)	(2)	(1)
5. 내가 지금까지 얻은 사회적 성취에는 부모의 도움이 컸다	(5)	(4)	(3)	(2)	(1)

문103) 청년정책 중 **일자리정책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생각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p><청년 일자리 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취업지원제도 ▪ 청년도입지원사업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취업지원사업 ▪ 청년창업지원사업 ▪ 청년직접창업지원사업 ▪ 청년창업스타보육
--	--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우리 사회에서 자격증 취득, 면접 합격, 임금 협상 등의 모든 고용 절차는 채용비리나 불공정 특례 없이 공정하게 진행된다	(5)	(4)	(3)	(2)	(1)
2.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충분하다	(5)	(4)	(3)	(2)	(1)
3. 채용시, 지역 인재 할당제를 확대해야 한다	(5)	(4)	(3)	(2)	(1)
4. 채용시, 학력, 경력, 성별등을 고려하지 않고 선발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	(5)	(4)	(3)	(2)	(1)
5. 청년세대(19~34세)의 일자리(취·창업 지원)을 위해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	(5)	(4)	(3)	(2)	(1)

문104) 청년정책 중 **주거 정책**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생각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청년 주거 정책> ▪ 다달돌/버틸돌 대출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중소기업 취업청년보통임 대출 ▪ 청년주거급여/청년보통임 대출
--	--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우리 사회에서 주택 분양을 받거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등의 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된다	⑤	④	③	②	①
2. 본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원하는 주거 환경의 집에서 살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3. 청년세대(19~34세)의 주거지원을 위해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	⑤	④	③	②	①

문105) 청년정책 중 **교육 정책**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생각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청년 교육 정책>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 - 인문100년 장학금, 예술체육 비전 장학금, 대통령 과학 장학금, 이공계 국가 우수 장학금	▪ 학자금 대출 ▪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확대
--	------------------------------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우리 사회에서 대학 입시 등 교육 제도는 공정하게 시행된다	⑤	④	③	②	①
2.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원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다	⑤	④	③	②	①
3. 청년세대(19~34세)의 교육을 위해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	⑤	④	③	②	①

문106) 청년정책 중 **복지·문화 정책**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생각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청년 복지·문화 정책> ▪ 청년도안계좌 ▪ 햇살뜰유스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 문화누리카드 ▪ 밀알교통카드
--------------------------------------	--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우리 사회의 복지 제도는 여러 사회적 집단에 대하여 공정하게 시행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2.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복지 제도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3. 본인이 원하는 문화 생활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4. 청년세대(19~34세)의 복지·문화지원을 위해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	⑤	④	③	②	①

문107) 청년정책 중 **정치사회 참여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생각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정치·사회 참여>

- 청년DB : 부처, 지자체 정책담당자가 만나는 참여 플랫폼
- 청년마을 : 청년단체, 기업에게 일정 금액 지원
- 청년보좌역 2030자문단 : 청년의 정책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도입한 제도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목소리를 낼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주어진다	⑤	④	③	②	①
2. 본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의 사회 참여를 충분히 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3. 청년세대(19~34세)의 정치·사회 참여를 위해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	⑤	④	③	②	①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경문항 1)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께서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

☞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중학교 졸업'에 표시합니다.

	부모님 안 계심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⑩
(2) 어머니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⑩

배경문항 2) 귀하와 귀하의 부모님은 어디에서 태어났나요?

	대한민국	북한	그 외 다른나라
(1) 나	①	②	③
(2) 아버지	①	②	③
(3) 어머니	①	②	③

배경문항 3) 귀하는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요

배경문항 4) 귀하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나요?

매우 못 산다		보통 수준			매우 잘 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심층면담 가이드라인

심층면담 가이드라인



주요 면접내용

구분	면접조사 내용
응답자 배경	- 거주지역, 성별, 만 나이 (청년 연령 18~34세 여부) - 학력 (고졸이하는 고교 유형 / 대학재학중 이상은 재학중 대학 유형) - 취업상태, 혼인상태, 자가소유 여부, 독립 여부
도입	- 인사 - 인터뷰 소개 및 주의사항 안내
성인기 진입과 시민권	- 성인의 조건에 대한 기대와 신념, 가치체계 - 성인으로 누리는 권리에 대한 가치관
교육 및 훈련 영역	- 교육 및 훈련 접근성에 대한 기대와 신념, 가치체계 - 교육 및 훈련의 내용에서 시민권 관련 경험
경제 및 고용 영역	- 경제적 자립 현황, 경제적 기회에 대한 기대와 신념, 가치체계 - 고용기회와 평등권 보장 경험 -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 및 인식과 경험 실태
주거와 건강 영역	- 주거환경 경험 - 신체적 정신적 건강 현황, 보건 정책 수요
참여 영역	- 정치적 참여에 대한 기대와 신념, 가치체계 - 시민단체, 디지털 시민참여 등의 실제 참여 경험과 평가 - 문화적 참여 경험



Part 1 도입

◎ 인사

-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 000입니다. XXX(면담자) 님이 맞으신지요?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 (대면 면접인 경우)

- 오시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 어디서 오셨나요? 그곳에서 거주하고 계신가요?

▶ (온라인 면접인 경우)

- 지금 어디서 접속 중이신가요?
- 접속 환경은 어떠신가요?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 인터뷰 소개 및 안내

- 본 면접의 목적은 청년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들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청년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어떤 정책과 지원이 필요할지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 본 면담에서 제가 드리는 질문에는 정답이 따로 없습니다.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의견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연구목적에 한해 자료로 활용됩니다.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및 한국리서치 관리하에 비밀을 보장합니다.
- 조사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회의 내용 녹화 또는 녹음이 진행되므로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화상회의 형태로 참여 하는 경우) 조용한 장소에서, 이동 없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Part 2 성인기 진입과 시민권

1. 성인의 조건에 대한 기대와 신념, 가치체계

- 성인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본인은 그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2. 성인으로 누리는 권리에 대한 인식

- 다음은 성인으로서 누리는 권리의 예입니다.

- ① 자유권 : 신체적 자유, 사생활의 자유, 경제적 자유, 정신적 자유 등을 누릴 권리
- ② 평등권 : 법 앞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성별/종교/인종/신분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③ 참정권 : 투표권, 투표를 통해 선출될 권리, 그 외에 정치적 과정에 참여할 권리
- ④ 청구권 : 자기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이를 구제받을 권리 등
- ⑤ 노동권 : 공정한 고용의 기회, 안전하고 인간적인 조건에서 노동할 권리 등
- ⑥ 행복권 : 물질적,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할 권리 등
- ⑦ 학습권 : 성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교양을 배울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 등
이외에도 환경권이나 건강권 등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 이 권리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그 권리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보장되는 성인의 권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장되지 않는 성인의 권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성인이 된 이후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성, 연령, 외모, 출신학교, 가정 형편, 교향, 종교, 장애 등)
- 청년들이 차별받는 문제 중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좀 더 신경써주었으면 하는 분야나 영역이 혹시 있으신가요?(이런 상황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나 지자체가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Part 3 교육 및 훈련 영역

1. 교육 및 훈련 접근성에 대한 기대와 신념, 가치체계

- 다음은 성인의 권리와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의 예입니다.

- ① 자유권 : 자신의 자유를 누리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 ② 평등권 : 스스로 성별/종교/인종/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누리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 ③ 참정권 : 우리나라의 정치 시스템과 정치적 절차와 과정에 대한 지식 등
- ④ 청구권 : 자기 권리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 필요한 법적 지식 등
- ⑤ 노동권 : 근로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지식, 이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법적 지식 등
- ⑥ 행복권 : 경제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제적 지식 등
- ⑦ 학습권 : 이용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와 이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등

- 귀하는 성인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교육 과정에서 충분히 배우셨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부족하다고 느끼신 영역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 이런 지식 중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2. 교육 및 훈련의 내용에서 시민권 관련 경험

-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지금까지 교육을 받으면서 본인이 차별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있다면) 그 일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차별이 시정되었나요? 그와 같은 일은 앞으로 계속 일어날까요?

- 그런 차별이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정책이 효과 있을까요?

(없다면) 주변에서 차별을 받는 것을 보거나 들으신 적이 있나요?

- 교육이나 훈련의 기회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떤 방법이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정책이 효과 있을까요?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법안 제정, 개인이나 공동체의 노력 등 자유롭게 제안)



Part 4 경제 및 고용 영역

1. 경제적 자립 현황, 경제적 기회에 대한 기대와 신념, 가치체계

- 본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은 어떠한가요? 만족스러우신가요?
- 본인은 앞으로 10년 후에 경제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고 싶으신가요? (월 수입, 재산 등)
- 실제로는 어느 정도가 가능할 것 같으신가요?
-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2. 고용기회와 평등권 보장 경험

- 한국에서 청년들이 취업할 기회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개인적으로 그에 관련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일이었는지 설명해주시실 수 있나요? 그 일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 청년들의 취업 기회 차별을 완화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법안 제정, 개인이나 공동체의 노력 등 자유롭게 제언)

3.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 및 인식과 경험 실태

- 취업을 하거나 자영업 등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근로경험이 있는 경우) 일을 하기 전에 기대했던 권리나 조건이 실제로는 달랐던 경우, 내 권리를 침해 받았던 경우가 있나요?
(자영업인 경우) 일을 하면서 자영업자로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느낀 경우가 있나요?
(이후 문항은 근로경험과 무관)
- 본인 개인적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직장의 조건, 혹은 이것이 있으면 절대로 선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조건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 근로자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 중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예- 안전과 건강 보장, 노동조합 등의 단체 가입과 권리, 성/인종/나이 차별 배제)
- 한국에서 (실제 현실에서 얼마나 잘 적용되는지와는 상관없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 어떤 영역이 가장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다) 어떤 영역에서 가장 보완이 필요할까요? 상대적으로 보장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권리는 무엇이 있나요?
- 한국에서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법규정이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 곳 (직종이나 직군)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 법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정책이 필요할까요?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법안 제정, 개인이나 공동체의 노력 등 자유롭게 제언)



Part 5 주거와 건강 영역

1. 주거환경 경험

- 현재 거주하시는 곳은 어떤가요? 만족스러우신가요?
-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이 일하며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거공간을 이용할 기회가 적절히 보장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 일하며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거공간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렇지 않다) 주거 공간에 대한 기회가 적절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주택 가격이나 임대료를 포함해 주거에 관해서 청년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2. 신체적 정신적 건강 현황, 보건 정책 수요

- **본인은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의료나 보건 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언제,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나요?
- 청년들 모두에게 보건 서비스에 관한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충분한 보장이 되지 않고 있다면) 부족한 보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청년들을 위해 어떤 활동이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Part 6 참여 영역

1. 정치적 참여에 대한 기대와 신념, 가치체계

- 청년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권리를 더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본인은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으신가요?
(있다)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으신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2. 시민단체, 디지털 시민참여 등의 실제 참여 경험과 평가

-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시민 활동이나 단체가 있으신가요?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 YMCA, 청년네트워크, 시민활동을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
(참여한 경우) 참여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실 생각이신가요?
(참여하지 않은 경우)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혹시 미래에 정치적 참여 참여하실 가능성이 있나요?
- 정치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활동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본인이 활동하는 단체 이외에 알고 있는 청년 단체나 조직이 있나요?
(알고 있다면) 그 단체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 청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하고 싶은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이 있으신가요?

4. 문화적 참여 경험

- 최근에 영화, 연극, 음악이나 무용/춤 공연 등을 관람하신 적이 있나요?
(있다면) 그 공연을 통해 어떤 생각이나 경험을 얻으셨나요?
(없다면) 그러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 직접 문화 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나요? 연주자나 공연자가 아니더라도 행사 스태프나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신 경험도 포함됩니다.
(있다면)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나 경험을 얻으셨나요?
- 청년들의 문화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하고 싶은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이 있으신가요?



Part 7 종결

- **마무리**

-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면접조사에서 말씀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 긴 시간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문초록

이 연구는 청년의 사회 첫 출발을 일자리, 자립, 시민권과 참여라는 세 가지 영역에 걸쳐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안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연구는 3차 연도 마지막 과제로 시민권과 참여 실태와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으며 지난 3년 동안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종합해 청년 사회 첫 출발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와 심층면접, 2차 분석, 국·내외 청년정책 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실태조사에 청년들이 성인기 이행 과정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주된 성인 기준은 경제적인 자립이었으며 학교, 직장, 지역사회, 온라인 중에서 온라인에서 권리 침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및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과 관여는 높지 못했고 정치효능감은 지난 2년 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에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심리적 자립이 필요하며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2차 분석을 통해 최근 들어 청년 참여와 권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중앙부처에서 지자체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청년 참여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공식적, 공적 참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정책 현황 분석에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청년 참여와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research was conducted with the aim of assessing the state of youth in three areas: employment, independence, and civic rights and participation, and proposing policy directions and challenges based on this assessment.

This research was based on a survey of the state of youth's social start, in-depth interviews, secondary analysis, and an analysis of youth policies at home and abroa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tendency for young people to perceive the transition to adulthood negatively. In in-depth interviews, the importance of economic independence was confirmed, and it was noted that psychological independence is needed to support this. Efforts are required to activate youth participation. Through secondary analysis, it was observed that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interest in youth participation and rights recently, with attention shifting from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It was also noted that South Korea's level of youth participation is lower than that of other advanced countries, and there is a lack of official and public participation. Policy analysis revealed the need to revise laws and regulations and prioritize policies that consider youth participation and rights. Based on these research findings, policy directions and challenges for youth were proposed.

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 연구보고23-기본01 청소년들은 '금융'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 실태 / 김지경·서정아·송현주
- 연구보고23-기본02 청소년활동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문호영·서고운·김진호
- 연구보고23-기본03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연구 / 이윤주·최용환·길정아·황현정
- 연구보고23-기본04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 임희진·황여정
- 연구보고23-기본05 디지털 유해환경과 청소년 위험행동 실태 연구 / 배상률·김영한·황현정
- 연구보고23-기본06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 및 지원방안 / 오해선·최홍일·송원일
- 연구보고23-기본07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지원 방안 연구 / 최정원·이인영·박지숙·이호준
- 연구보고23-기본08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최인재·임지연·김민·강영배
- 연구보고23-기본09 보호소년 범죄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소년보호재판 및 보호처분 제도를 중심으로 / 박지숙·이지연·한윤선·김혁
- 연구보고23-기본10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 김희진·조혜영·한지형
- 연구보고23-기본11 청소년 디지털인재를 어떻게 양성할까? / 이창호·모상현·최항섭
- 연구보고23-일반01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유성렬·이수정
- 연구보고23-일반01-01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기초분석보고서 / 유민상·이경상
- 연구보고23-일반02 사회통합을 위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방안연구 I / 양계민·권오영·이영신·장윤선·장인숙
- 연구보고23-일반07 20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황진구·김윤희·정윤미
- 연구보고23-일반07-01 20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윤희·정윤미
- 연구보고23-일반08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임선아·김지혜

- 연구보고23-일반08-01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1기 패널)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
- 연구보고23-일반08-02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2기 패널)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6-0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Ⅲ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3) / 김형주·김정숙·김문길·변금선·배정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7-0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시민권과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4) 참여-총괄보고서
/ 김기현·장근영·신인철·임성근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7-02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시민권과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4-01) 참여-심층분석 보고서
/ 김기현·장근영·신인철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1 청년종합연구Ⅱ: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 / 백혜정·김지연·김승경·김이배·노혜진·김성아·박광옥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2 2023년 시설외소청년의 생활실태 및 정책개발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1) / 백혜정·김지연·김승경·노혜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3 청년의 금융취약 및 정책소외 실태와 과제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2) / 김성아·김문길·나원희·한영섭·강예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4(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3) 발달장애청년의 정책소외 실태와 정책과제
/ 박광옥·김용득·이복실·이은영·이동림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9-01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Ⅱ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6) / 김경준·김영지·윤철경·이은주·이은주·임성은

수 시 과 제

- 연구보고23-수시0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교내 설치 활성화 방안 연구 / 황진구·김윤희
- 연구보고23-수시02 미디어 속 학교폭력 양상 분석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도출
/ 배상률

- 연구보고23-수시03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 유민상·서고운·신동훈·이지연
- 연구보고23-수시04 청소년복지시설 설치기준 개선방안 연구 / 김영한
- 연구보고23-수시05 니트 청년 지원 사업의 참여자 발굴 개선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구직단념청년 발굴 사례를 중심으로 / 유민상·김기현·김나영

수탁과제

< 일반 >

- 연구보고23-수탁01 디지털시대, 디지털 문해력 개념의 확장 / 황용석·이현주·황현정
- 연구보고23-수탁02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콘텐츠 개발방안 연구 / 강진숙·김지연·류숙
- 연구보고23-수탁03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 사업 성과 연구 / 이윤주·최정원·최홍일·이수진
- 연구보고23-수탁04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영한
- 연구보고23-수탁05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강화방안 연구 -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제고를 중심으로 / 김승경·백혜정
- 연구보고23-수탁05-01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 정책자료집 / 김승경·백혜정
- 연구보고23-수탁06 디지털기반 인성교육 - 존중과배려 메타버스 체험학습 플랫폼 개발 / 임지연·황여정·이미영
- 연구보고23-수탁07 디지털기반 인성교육 - 존중과배려 메타버스 체험학습 교실 - 교사용 수업활용 안내서 / 임지연·황여정·이미영
- 연구보고23-수탁08 학교-지역사회-민간연계를 통한 우수인성교육프로그램 발굴확산 사업 결과보고서 / 이창호·주예찬·이슬기
- 연구보고23-수탁09 인성교육 프로그램 비인증제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김봉제·신현우·곽현석
- 연구보고23-수탁10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사업보고서 / 김영자·김지연·서고운·이정만·최홍일
- 연구보고23-수탁10-01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이미숙·양소현·고혜정·최진혁·한송아·문미혜·윤애영·김주아·조성윤·박유정
- 연구보고23-수탁11 2023년 자치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영역 / 최용환, 이동성, 장혜윤, 임채홍
- 연구보고23-수탁12-01 2023년 교과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초등 / 최용환·김동일·임지영
- 연구보고23-수탁12-02 2023년 교과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중고등 / 최용환·김동일·임지영

연구보고23-수탁13	2023년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 최용환·김동일·박윤수·김보경·장혜윤·임지영
연구보고23-수탁14	2023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관리 보고서 / 최용환·임지영, 서기희, 김성혜
연구보고23-수탁15	2022년 중앙정부 및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인성교육정책 분석평가 / 최용환·박윤수·김보경·장혜윤·김수진, 오지혜
연구보고23-수탁16	2023년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결과보고서 / 최용환·서기희·오지혜
연구보고23-수탁17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희진·임희진·김정숙·박소영
연구보고23-수탁18	2023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황진구·김영지·모상현
연구보고23-수탁19	2023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서정아·조아미
연구보고23-수탁20	신 소외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 / 서정아·조아미
연구보고23-수탁21	청소년활동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현황 연구 / 서정아·김정울·김지수
연구보고23-수탁22	글로벌 K-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성과측정체계 연구 / 양계민·권오영
연구보고23-수탁23	레인보우스쿨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 양계민·이영신
연구보고23-수탁24	지방소멸시대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 장근영·김기현·이상준·황성수·이규용·윤석천·최성은·조양진
연구보고23-수탁25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김지경·송현주·김균희
연구보고23-수탁26	청소년동반자 사업운영 효율화 방안연구 / 김윤희·황진구·이상현·김태성·정유미
연구보고23-수탁27	2023년 청년정책 성과자료 제작 / 김기현·김형주·김지민
연구보고23-수탁28	청년문제 대응 자원 조성방안 연구 / 김기현·이윤주·조양진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3-학폭01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저학년)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2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고학년)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3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중학교)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4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고등학교)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5	2022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발간 모음집 / 모상현·김예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6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 안내서 / 모상현·김창겸·김예원
연구보고23-학폭07	2022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모상현·이경상·남지영·송채원·장원빈
연구보고23-학폭08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보고서 / 모상현·남지영·장원빈

<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3-대안01	대안학교(각종학교) 운영실태조사 / 최홍일·김세광·오해성
연구보고23-대안02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기초 연구 / 최인재·송원일

자 료 집

< 세 미 나 >

세미나23-01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세미나 (23.7.19.)
세미나23-02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 데이터 설명회 및 방법론 특강 (23.8.24.)
세미나23-03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의 역사와 전망」 (23.9.12.)

< 워 크 슝 >

워크숍23-01	2022년 하반기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 (23.2.8.)
워크숍23-02	2022 하반기 학교민주시민교육 배움 공유회 (23.1.16.)
워크숍23-03	2023 꿈지락 운영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워크숍 (23.5.2.)
워크숍23-04	2023년 학생 참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및 중립성 원칙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23.5.3.)
워크숍23-05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_기본과정 (23.7.27.~7.28.)
워크숍23-06	2023년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협의회 (23.7.19.)
워크숍23-07	2023년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재구조화 집필진 워크숍 참고자료 (23.8.5.)
워크숍23-08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_심화과정 (23.11.2.~23.11.3.)

< 포럼 >

- 포럼23-01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 생애주기 시각에서의 사회적 고립 대응(23.4.25.)
- 포럼23-02 챗GPT 알고리즘 이해와 청소년 시민성증진을 위한 활용방안 모색 (23.7.4.)
- 포럼23-03 2023년 다문화 청소년 포럼: 초·중 전환기 다문화 청소년의 성장과 지원방안 (23.8.24.)
- 포럼23-04 보호소년 특성에 대한 이해 및 보호처분제도 개선 방향 모색 (23.8.25.)
- 포럼23-05 대안교육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 (23.9.20.)
- 포럼23-06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 (23.9.21.)
- 포럼23-07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포럼 (23.10.25.)
- 포럼23-08 청년종합연구 포럼: 협동연구 연구성과 보고 (23.11.14.)
- 포럼23-09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적 대응 (23.11.21.)
- 포럼23-10 청소년정책포럼 '도시를 만드는 아이들' (23.12.7.)

< 콜로키움 >

- 콜로키움23-01 행정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처리의 이해 (23.4.19.)
- 콜로키움23-02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1차 콜로키움 "SDGs 시대의 청소년정책" (23.6.19.)
- 콜로키움23-03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2차 콜로키움 "학습 회복(Learning Recovery)에서 교육 혁신(Education Transformation)으로:코로나 이후 해외 교육 사업의 변화" (23.7.20.)
- 콜로키움23-04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3차 콜로키움 "청소년 사이버범죄 양상 파악을 위한 연구 방법: ATLAS.ti 23을 이용한 주제 분석(원제: Using Thematic Review with ATLAS.ti 23 to Identify Patterns of Cybercrime among Youths from Literature)" (23.8.18.)
- 콜로키움23-05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4차 콜로키움 "청소년과 국제개발협력 : 웰드비전의 전략과 사례를 중심으로" (23.8.28.)
- 콜로키움23-06 교육 혁신 도구로서의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방향과 현황 (23.9.18.)
- 콜로키움23-07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5차 콜로키움 "세계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 : 도전과 기회를 중심으로" (23.11.13.)
- 콜로키움23-08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6차 콜로키움 "공존과 상생을 위한 세계시민의식" (23.12.01.)

〈 기 타 자 료 집 〉

자료23-01	2022 공교육 안팎 대안교육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정책설명회 및 연수 보고서
자료23-02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자료23-03	인성교육 재정립 및 학교인성교육 추진방향
자료23-04	학교 시민교육과 시민성 개념의 재구조화
자료23-05	민주적 학교 운영 길잡이
자료23-06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자료23-07	2023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위촉식 및 연수
자료23-08	2023년 학생참여교육 실천 프로젝트 전문가 특강 자료집
자료23-09	2023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자료집
자료23-10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가이드북
자료23-11	제12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23-12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 적용평가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1호(통권 제10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2호(통권 제109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3호(통권 제11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4호(통권 제111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 145호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146호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
- 147호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 보완 연구 I
- 148호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구축방안 연구 II
- 149호 다양한 가족 메타버스 상담·활동·교육 플랫폼 설계구축 및 효과 연구
- 150호 메타버스의 활용경험이 청소년의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

〈 NYPI Bluenote 통계 〉

- 74호 후기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실태 조사결과
- 75호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 76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5차 조사(2022년) 주요 조사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협동연구총서 23-87-01
연구보고23-일반04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시민권과 참여-총괄보고서**

인 쇄 2023년 12월 22일

발 행 2023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406-7 94330

979-11-5654-405-0 (세트)

연구보고 23-일반04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시민권과 참여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406-7
ISBN 979-11-5654-405-0(세트)